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722-01

2020. 12.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5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 담당

정학균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 2, 6, 7장 집필

성재훈 | 부연구위원 | 제1, 2, 6장 집필

임영아 | 부연구위원 | 제 4장 집필

추성민 | 연구원 | 제2, 3, 4장 집필

이현정 | 연구원 | 제2장 집필

수탁연구보고 C2020-70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2.

발행인 | 김홍상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정 학 균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성 재 훈 (부연구위원)

임 영 아 (부연구위원)

추 성 민 (연구원)

이 현 정 (연구원)

연구 목적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농업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음. 친환경농업은 노동력 투입 증가, 수량감소, 기술적 불확실성 등이 애로 요인임.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경지면적 비중이 7.3%까지 확대되었으나 20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농업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되돌아보고 효과적인 친환경농업 발전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인 제4차 5개년 계획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16~2020)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생산 실태 분석, 생산자·소비자 인식조사 분석, 해외 선진국의 유기농업 관련 정책 조사 분석 등을 기초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21~2025) 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연구 방법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위탁원고 추진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먼저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생산 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함. 또 생산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산 및 판매 현황, 친환경농업 실천의 애로사항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를 조사·분석함.

-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 구입처, 소비의향, 지불의향 가격 등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함.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친환경농업 비전기획단 TF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였는데 KREI는 이 기획단을 지원하면서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해외 유기농업정책 동향 관련 전문가(서울대학교 유도일 교수)에게 원고 위탁을 추진하여 EU와 미국의 유기농식품산업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 결과

- 첫째,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을 살펴본 결과, 2013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2015~2019)에는 유기농산물이 13.1%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2015~2019) 인증 건수와 출하량도 각각 2.1%,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식품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 모두에 대해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의향이 있지만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74~96%, 적정 프리미엄은 44~56%로, 약 35%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낮춘다면 소비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년 전 조사에 비해 가격프리미엄과 적정프리미엄 격차가 15%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와 소비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비중보다 6.2%p 높게 나타난 반면 친환경가공식품의 경우 증가했다는 비중이 18.0%p 높게 나타나 향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량 증가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구입장소로 대형할인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조사치와 비교할 경우 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백화점의 비중은 줄어들고, 농협계통, 인터넷 및 홈쇼핑, 일반 슈퍼마켓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특히 인터넷 및 홈쇼핑, 일반 슈퍼

마켓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유통, 비밀집 장소를 선호한 결과로 보임.

- 향후 구입을 확대할 의사가 가장 큰 친환경 가공식품은 ‘신선반찬류’(33.2%), ‘밀 가공식품’(23.0%), ‘쌀 가공식품’(12.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37.2%), ‘인증제도 관리 강화로 신뢰 제고’(3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비식용 유기가공품 평균 구입 빈도는 5년 전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했으며, 비식용 유기가공품별 구입 경험은 ‘치약, 비누, 세제’(56.8%), ‘화장품’(50.6%), ‘섬유, 의류’(37.4%) 등의 순으로 많았음. 구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가격(43.2%)을 꼽았으며, 이어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저하’(24.0%)를 선택함.

○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반응조사 결과, 친환경농업 실천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의 어려움’(48.8%),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18.3%) 등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보급, 판매 촉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 수익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5.9%로 (매우)증가했다는 비율(1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54.0%), ‘낮은 판매가격’(33.8%) 등으로 나타남.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함.

-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교육 확대’(27.5%), ‘판매처의 확대 및 판로 다양화’(25.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17.8%),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 확대(도농 교류 확대)’(14.6%) 등이 제시됨.
- 친환경농업 교육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농민 의식전환(38.3%), 영농기술 습득(29.2%),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23.1%) 등으로 나타남. 교육체계 정비를 통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농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친환경농업 인증, 소비, 생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인증범위 확대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유통 역량 증대, 공공소비 활성화로 인증농가에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강화여건 조성,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개선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음.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2017), 상습 위반사업자·부실 인증기관 제재처분 강화(2020)
 - 반려동물 사료·별꿀 유기인증제(2017)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2020) 도입
 - 2020년까지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7개소를 만들었고, 2017년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1개소(나주) 조성함.
 - 전국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도입함.
 -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2016)하여 예산을 확보함. 확보된 예산은 2017~2020

년까지 총 5,431백만 원임.

-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영구 지급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관리시스템 통합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투입재 중심 생산시스템, 농업환경관리에 불리한 소규모 분산된 인증 농지, 공적 소비 내 학교급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인증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부족, 민간 차원의 유통·소비 활성화 미흡,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및 소비자 인식 저조 등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됨.

○ EU, 미국 등 유기농식품산업에 대한 선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 EU, 미국 모두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증대되어 왔고, 서로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와 미국 모두 지속적으로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증대되어 옴. 다만 수요 측면의 성장 속도에 비해 공급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식품산업 지원정책을 비교하면 EU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생태적 관점 등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직불금 및 지원금이 제공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상기 가치보다는 대출, 서비스, 등 시장지향적인 지원정책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됨. 미국의 경우 연구, 데이터, 마케팅 등 유기농식품산업의 전·후방산업에 해당하는 전 분야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점은 전주기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됨.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의 비전으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으로 설정하고,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분야별 핵심과제 등을 제시함.

-
-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과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으로 설정됨.
 - 정책목표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임산부, 학교급식, 군대급식 등 공공수요 증가 시나리오, 그리고 COVID-19의 영향, 가치 소비, 유통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가공소비 등 민간수요 증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9년 5.2%에서 2025년 10%로 제시됨.
 - 분야별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젊은 인력 유입 촉진,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확대 등이 요구됨.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소비 문화 조성,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 시장 확대,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친환경 외식·가공산업 활성화 등이 요구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및 범위	10

제2장 분야별 실태

1. 생산 분야	13
2. 유통 분야	26
3. 가공 분야	34
4. 인증 분야	53
5. 자재 분야	61

제3장 소비자·생산자 인식조사

1. 소비자 인식조사	73
2. 생산자 인식조사	99

제4장 제4차 5개년 계획 평가

1.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Ⅱ
2. 생산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125
3. 유통·소비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131
4. 가공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143
5. 인증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150
6. 자재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161
7. 종합평가	166

제5장 주요국 유기농업 정책	
1. EU 및 주요 회원국	173
2. 미국	207
3. 시사점	219
제6장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1. 비전 설정 배경	221
2. 기본방향	225
3. 정책목표 설정	227
4. 분야별 추진 방향	228
제7장 요약 및 결론	㉞
부록 1	269
부록 2	271
참고문헌	273

제2장

<표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 변화 추이4· 1

<표 2-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5· 1

<표 2-3>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7· 1

<표 2-4>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9· 1

<표 2-5>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출하량 현황1· 2

<표 2-6>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 변화 추이2· 2

<표 2-7> 친환경인증 농가 연령분포4 2

<표 2-8> 법정리 기준 인증 면적과 인증 비중 대차표5· 2

<표 2-9> 친환경 쌀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7· 2

<표 2-10> 친환경 감자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8· 2

<표 2-11> 친환경 고구마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8· 2

<표 2-12> 친환경 딸기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9· 2

<표 2-13> 친환경 오이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0· 3

<표 2-14> 친환경 양파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0· 3

<표 2-15>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마진을 비교(비율)1· 3

<표 2-16>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 유통규모(2019)3· 3

<표 2-17>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추정(2015~2019)3· 3

<표 2-18>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추정(2015~2019)4· 3

<표 2-19> 최근 5년간 유기농식품 인증 현황5· 3

<표 2-20> 유기농식품 수입현황5· 3

<표 2-21> 유기농식품 수출현황5· 3

<표 2-22> 동등성 인정 국가 유기농식품 수출입 현황6· 3

<표 2-23> 조사대상 유기농식품 사업체 응답자 특성7· 3

<표 2-24> 미국의 유기농 판매액05

<표 2-25> 연도별 인증 기관 수 및 평균 인증 사업자 수의 변화3· 5

<표 2-26> 인증 종류별 인증 현황의 연도별 변화	4· 5
<표 2-27> 연도별 인증 취소 현황	6· 5
<표 2-28> 처분 원인별 인증취소 원인	6· 5
<표 2-29> 연도별 친환경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황	7· 5
<표 2-30> 농식품 인증제도 구입 여부 및 구입/미구입 이유	1· 6
<표 2-31> 공시사업자 수 변화	2· 6
<표 2-32> 유기농업자재 현황	2· 6
<표 2-33> 유기농업자재 생산량 및 판매량	3· 6
<표 2-34>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평균 매출액 추이 및 전망	5· 6
<표 2-35> 영업이익률 적자 업체 비율	6· 6
<표 2-36> 영업이익률 적자 업체 비율	6· 6
<표 2-37> 2019년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평균 유효 종사자 현황	7· 6
<표 2-38>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8· 6
<표 2-39> 효능·효과 표시제에 대한 평가 결과	8· 6
<표 2-40> 효능·효과 표시제에 따른 가격 차이의 충분 정도	9· 6
<표 2-41> 효능·효과 표시제의 개선 방향	9· 6
<표 2-42> 효능·효과 표시제에 대한 평가 결과	0· 7

제3장

<표 3-1>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4· 7
<표 3-2>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현재 가격 및 적정 가격	3· 8
<표 3-3> 친환경 가공식품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7· 8
<표 3-4> 친환경 가공식품 구매 빈도	1· 9
<표 3-5>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 시 품질 속성별 고려 정도	1· 9
<표 3-6> 향후 구입확대 의향 품목	3· 9
<표 3-7>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 구입가격	4· 9

<표 3-8> 비식용 유기가공품 평균 구입 빈도	6·9
<표 3-9> 비식용 유기가공품 품목별 적정 가격	7·9
<표 3-10> 친환경 농가의 일반적 특성	9·9
<표 3-11> 친환경농업 개념에 대한 인식	11
<표 3-12>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
<표 3-13> 친환경농법 전환 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201
<표 3-14> 친환경농업 실천 시 가장 큰 어려움	31
<표 3-15> 최근 3년간 과거 대비 친환경농업 수익성 변화	31
<표 3-16> 향후 친환경농업 수익성 전망	4
<표 3-17> 생협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여부	41
<표 3-18> 자주인증제도 참여 여부 및 이유	41
<표 3-19> 친환경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5
<표 3-20>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관행농산물 출하 여부 및 비중	501
<표 3-21> 친환경농산물 출하방법	0
<표 3-22> 출하차별 출하 비중	16
<표 3-2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희망 수취 가격	71
<표 3-24>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701
<표 3-25>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여부 및 기관	81
<표 3-26>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동기	8
<표 3-27>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만족도	0
<표 3-28> 친환경농업 교육이 도움이 된 분야	01
<표 3-29> 친환경농업 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 기관	011
<표 3-30> 친환경농업 관련 실천기술 및 정보 취득 경로	011
<표 3-31> 친환경농업 교육 중 보완 필요 분야	111
<표 3-32> 유기농업자재 종류 및 지출 비중	31
<표 3-33> 유기농업자재 사용 이유	4

<표 3-34>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41
<표 3-35>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51
<표 3-36>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61
<표 3-37>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71
<표 3-38> 부산물비료 또는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여부의 구매 영향 여부 및 이유 7·1 1	
<표 3-39>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81
<표 3-40>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도 및 효능·효과 표시제 인식도	811
<표 3-41>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의 상대적 효과	911
<표 3-42> 효능·효과 표시가 유기농업자재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911
<표 3-43> 효능·효과 표시 제품과 일반 제품 간 품질 차이 대비 가격 차이의 적절성 2 1	
<표 3-44> 효능·효과 표시 제품이 비싸더라도 효능·효과 표시 제품을 구매할 의향 2 1	
<표 3-45>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 방향	1
<표 3-46>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인식 비율 및 만족도	121
<표 3-47>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	221

제4장

<표 4-1> 친환경농업지구 성과	1
<표 4-2>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목표 대비 실적	721
<표 4-3>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물량 목표 및 실적	821
<표 4-4> 산지유통주체 육성 계획 매뉴얼(안)	231
<표 4-5> 산지유통주체 육성 계획 매뉴얼(안)	431
<표 4-6>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3
<표 4-7>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 조사 개요	241
<표 4-8>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지원 대상 및 용자 조건 9·4 1	
<표 4-9>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지원 대상 및 용자 조건 9·4 1	
<표 4-10> 친환경농업 직불제 변화	8

<표 4-11> 친환경농업지구 성과	8
<표 4-12>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운영현황	9

제5장

<표 5-1> 2000~2018년 유기농 관련 주요 지표별 CAGR	71
<표 5-2>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181
<표 5-3>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581
<표 5-4>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981
<표 5-5> CAP 2021-2027 분야별 정책 목표	61
<표 5-6>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102
<표 5-7>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관련 주요 지표별 CAGR	902
<표 5-8> USDA 유기농 지원 프로그램 분류	22
<표 5-9> 2018년 미국 및 EU 회원국 주요 지표별 비교	022

제6장

<표 6-1> 4차 계획과 5차 계획의 주요 차이	72
<표 6-2> 집적지구 단계별 목표 및 지원내용	132
<표 6-3> 시장에 미치는 효과	2
<표 6-4> 농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12
<표 6-5> 친환경농업 관측시스템 도입 추진 일정	42
<표 6-6> 비식용 유기가공품 평균 구입 빈도(2015년과 2020년 비교)	152
<표 6-7> 지자체별 먹거리 기본권 및 지역 푸드플랜 선언의 주요 정책	552
<표 6-8>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시스템 개선점	12

제1장

<그림 1-1> 연구 흐름도	21
-----------------------	----

제2장

<그림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 변화 추이	4	1
<그림 2-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6	1
<그림 2-3>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8	1
<그림 2-4> 2015년, 2019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출하량 비중	8	1
<그림 2-5>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0	2
<그림 2-6>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 변화 추이	3	2
<그림 2-7> 친환경농업지 밀도 분석 결과	4	2
<그림 2-8>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조사	6	2
<그림 2-9>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 기업의 대표품목	8	3
<그림 2-10>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 기업 총 매출액 및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비율	3	3
<그림 2-11>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유기가공식품 첫 생산년도	9	3
<그림 2-12>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유기가공식품 품목 수	9	3
<그림 2-13>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유기가공식품 주요품목	0	4
<그림 2-14>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인증 최근년도	0	4
<그림 2-15>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대표 유기가공식품 원료명	1	4
<그림 2-16>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국산원료 조달 경로 비중	2	4
<그림 2-17>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유통경로별 판매량 비중	2	4
<그림 2-18>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수출 품목	3	4
<그림 2-19>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상품 수출 국가	3	4
<그림 2-20>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 이유	5	4
<그림 2-21>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6	4
<그림 2-22>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인증 시 애로사항	6	4

<그림 2-23>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개선 요구사항7· 4
 <그림 2-24>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 도형8· 4
 <그림 2-25> 표시제도별 인지도 변화 추이8· 5
 <그림 2-26> 표시제도별 인지도와 이해도 수준 비교9· 5
 <그림 2-27> 표시제도별 인지도와 이해도 수준 비교0· 6
 <그림 2-28> 유기농업자재 시장 유통구조4· 6
 <그림 2-29> 2019년 경영비 항목별 비율5· 6
 <그림 2-30>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1· 7

제3장

<그림 3-1> 친환경농산물 인식 조사 결과5· 7
 <그림 3-2>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조사 결과7· 7
 <그림 3-3>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방안8· 7
 <그림 3-4>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조사 결과0· 8
 <그림 3-5> 친환경농산물 구입패턴 조사결과2· 8
 <그림 3-6> 친환경농산물 가격부문 조사결과4· 8
 <그림 3-7>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교육부문 조사 결과5· 8
 <그림 3-8> 친환경 인증 관련 정책부문 조사 결과6· 8
 <그림 3-9> 친환경 가공식품 인식 조사 결과9· 8
 <그림 3-10>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 경험 조사 결과0· 9
 <그림 3-11> 친환경 가공식품 만족도 및 향후 구매의향 조사결과2· 9
 <그림 3-12> 친환경 가공식품 가격부문 조사 결과5· 9
 <그림 3-13> 비식용 유기가공품 부문 조사 결과6· 9

제4장

<그림 4-1>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421
<그림 4-2>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추진체계	131
<그림 4-3> 유통체계 개선안	133
<그림 4-4>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 간 관계 설정안	451
<그림 4-5>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	3

제5장

<그림 5-1> 2000~2018년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	41
<그림 5-2> 2000~2018년 유기농 생산자 추이	51
<그림 5-3> 2000~2018년 유기농 소매 판매액 추이	61
<그림 5-4> 2000~2018년 독일 및 스위스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	771
<그림 5-5> 2000~2018년 독일 및 스위스 유기농 생산자 추이	871
<그림 5-6> 2000~2018년 독일 및 스위스 소매 판매액 생산자 추이	971
<그림 5-7> CAP 전략 계획(CAP Strategic Plans)	2
<그림 5-8> CAP 2021~2027 9대 목표(The 9 CAP OBJECTIVES)	491
<그림 5-9> EU 회원국의 CAP 2021-2027 새로운 녹색 건축(new green architecture) 예시: 기후 변화	202
<그림 5-10> CAP 2021-2027의 단순화(simplification) 예시: 작물 다각화	302
<그림 5-11>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	702
<그림 5-12>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생산자 추이	802
<그림 5-13>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소매 판매액 추이	902
<그림 5-14> 2018년 미국 농업법에 따른 2019~2023년 항목별 예산 지출 전망	512
<그림 5-15>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무지출액 추이	612

제6장

<그림 6-1> 한반도 연평균 기온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222

<그림 6-2>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322

<그림 6-3>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822

<그림 6-4> 영국과 미국의 Cool Food 위원회 4

<그림 6-5> 플랫폼 구성 예시 8

<그림 6-6> Certified Naturally Grown의 농업인,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8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농업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음.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주요 애로 요인은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 투입과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농법 도입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 등임.
- 정부는 그동안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의 증가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농업 재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되돌아보고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인 제4차 5개년 계획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된 법정 계획, 제7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 우선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에 대한 심층적 평가 필요함. 또한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생산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관련 후방산업의 실태 조사, 생산자·소비자 인식 및 애로사항 파악,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실태조사가 요구됨. 또한 해외 선진국의 유기농업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의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농정을 환경·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친환경농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농업 육성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신선 및 공공수요 위주의 시장과 친환경 농업인의 고령화 등 국내 친환경농업의 자생력 약화로 수요 및 생산이 확대되지 않고 있었음. 따라서 친환경농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등 후방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미래 친환경농업을 이끌 차세대 친환경 농업인 확보방안이 필요함. 또한 기존 생산 위주의 지원 중심에서 유통·소비 기반 확보를 위한 新사업 체계 구축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친환경농업 및 관련 후방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현 정부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농정기조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며, 친환경농업 제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친환경농업 국내외 여건을 진단함.
 -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2016~2020) 계획 추진 실적 평가
 -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생산 실태 분석,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 파악, 친환경농업 관련 후방산업의 실태 조사
 - 생산자·소비자 인식 및 애로사항 파악,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해외 선진국의 유기농업 관련 정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나아가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제시를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함.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21~2025) 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분야별 핵심과제 제시
 - 친환경농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등 후방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미래 친환경농업을 이끄는 차세대 친환경 농업인 확보, 기존 생산 위주의 지원 중심에서 유통·소비 기반 확보를 위한 新사업 체계 구축 지원 확대 방향 도출

2. 선행연구 검토

2.1. 국내 연구 동향

2.1.1.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 윤석원 외(1999)는 쌀, 상추, 배추, 고추, 감자, 포도, 배 등 7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 소비, 유통,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생산부문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품목별 수익성을 분석하였음. 소비 및 유통 부문에서는 품질인증과 표시제도의 정비 및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 판매경로 및 판매방식의

다양화, 유기농산물 가격 결정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함을 주장함.

- 김창길 외(2016)는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2011~2015)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여건을 진단한 후 생산 내실화, 유통 효율화,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농업환경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 이를 바탕으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비전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정착’으로 설정하였으며,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는 환경친화적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통한 농업 전반의 지속가능농업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함.
- 임영아 외(2018)는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업 정책 및 관련 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정책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적인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함.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업 패러다임 전환과 장·단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개념과 위상 재정립, 친환경농업 육성의 질적 전환 및 육성정책 추진 체계, 인증 체계의 전환,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의 전환, 생애주기별 소비와 연계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 착한소비·가치소비의 확대를 제시하였음.
- 서환석 외(2019)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통체계 및 공공급식 측면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영체 확보,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체계 활성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보급 및 고소득 품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함.

2.1.2. 생산기반 확충, 소비, 유통에 관한 연구

- 전태갑 외(2000)는 수도작, 과실류 및 채소류를 대상으로 유기재배, 저투입재배, 일반재배 등의 재배조건별 생산비 및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였음.
- 오호성 외(2000)는 10종류(쌀, 배추, 상추, 시금치, 치커리, 케일, 고추, 오이, 당근, 감자)의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농가 150호, 소비자 250가구, 유통업자 50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 등을 분석하였음.
- 김창길 외(2003)는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인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성과평가를 제시함.
- 김창길·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일반농가의 소득 및 생산비 비교를 통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조정의 근거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의 연차별 차별화 방안 등을 제시함.
- 박동규 외(2004)는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의 기본 개념, 도입의 필요성,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적 평가, 단계적 추진 방안 및 직불제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2005)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실천농가의 반응조사를 기초로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단가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였음.
- 이규천 외(1998)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찬반 논의 검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 분석을 통한 직불제 지원단가 제시, 직불제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함.

- 김창길(2005)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성과평가와 관련 직불제의 이론적 배경 검토, 추진실태, 직불제 정책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직불금 지원단가의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함.
- 김창길 외(2009)는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격차의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또, 주요국의 다양한 환경기준 준수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 환경적 상호준수(ECC) 정책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태곤 외(2010)는 직불제에 의하여 공익적 기능이 발휘되고 농산물 가격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수혜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음.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직불제 도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양성범 외(2015)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개선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관리 강화,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강화, 인증 농가 및 취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현행 대비 단속 횟수 강화, 처벌규정 강화,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지수 개발 등을 제시함.

2.1.3. 친환경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태곤 외(2009)는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직불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때,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직불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자원의 유지, 환경보전,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의 확충을 강조하였음.

- 김창길 외(2012)는 저탄소농업의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경제성공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저탄소농업 기술적용의 경제성을 평가한 후 저탄소농업 직접지불금 산정, 메뉴방식의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방안 등 저탄소 직접지불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유진채 외(2010)는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환경오염 감소, 자연생태계 복원,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역사회 유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 경관 개선으로 구분하여 정립하고,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음. 추정결과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총편익은 최대 1조 9,605억 원으로 나타남.
- 허승욱 외(2011)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따른 의식변화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지불의사가격 등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행태별 지불의사가격의 차이를 분석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계측하였음. 이 연구는 서울 시민들을 기준으로 연간 8,057억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제시하였음.
- 정학균 외(2014)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 분석과 주요 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함.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 기간 조정, 품목별 차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정학균 외(2015)는 가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한 기능별 지불의사금액을 평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음. 분석결과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기능에서 항목별 지불의사액은 토양·물 관련 6,145원(월/가구당), 생물다양성 유지 5,225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4,965원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ha당 209만 원의 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됨.
- 임영아 외(2018)는 환경 영향을 고려한 국내 농업정책을 설계를 위한 지역 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요국 농업환경 관리 정책 및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의 효과성 및 동반 편익·상충관계를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추진체계, 국내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농업환경 지표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필요함을 주장함.

2.2. 국외 연구 동향

- Hanson et al.(1997)은 미국 중부의 소맥, 옥수수, 대두를 대상으로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간의 자료를 기초로 일반농가와 유기농가의 경영성과 비교하여 제시함. 특히 생산비목별로 유기농가와 일반농가 간에 명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고용노임, 비료비용, 농기계비용 등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
- Lohr and Salonmonsson(2000)은 스웨덴의 사례를 기초로 효용차이 모델(utility 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기전환 보조금(organic conversion subsidies)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국의 유기농업의 경우 시장 지향적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기전환 보조금 도입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함.
- O'Riodan et al.(2001)은 일반농업으로부터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환경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경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기농업의 경우 일반농업에 비해 실천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산비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수익성에 있어서 약 30% 차이가 발생하므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익성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직불금과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함.
- Verschurr and van Well(2001)은 EU 15개국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적·재정적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함. 특히 유기농업을 상호준수(cros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준수요건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등을

위해 소요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짐.

- Sandhu et al.(2007)은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뉴질랜드 캔터베리 주에서 이행되고 있는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하여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고 비교하였음. 분석결과 비시장가치는 관행농업의 경우 ha당 연간 670달러, 유기농업의 경우 1,480달러로 유기농업이 2배 이상 높았음.
- Schader(2009)는 스위스의 농업환경 정책 수단으로서의 유기농업지지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음. 농업환경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성은 정책 활용, 환경적 효과, 공공지출의 함수로 추정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특정 농업환경 정책 수단은 유기농 실천 농가에 적용되었을 때 비유기농 실천 농가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Śpiewak(2016)은 2013년에 폴란드 남부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유기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공, 비시장재화 생산, 해당 지역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시장 유기농업(market organic farming)이 특정 조건과 특정 농법에서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혀냄. 또한, 지역 내 강력한 통합 유기농업이 존재할 경우 이는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 개선을 통해 농업인간 유대를 강화하고, 유기농업인의 경제적 후생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후생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2.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선행연구는 친환경농업의 생산, 소비, 유통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산, 소비, 유통 실태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부족함.
- 이 연구는 과거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생산, 소비, 유통과 함께 가공, 농자재, 기술개발,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종합화하여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음.

3. 연구방법 및 범위

3.1.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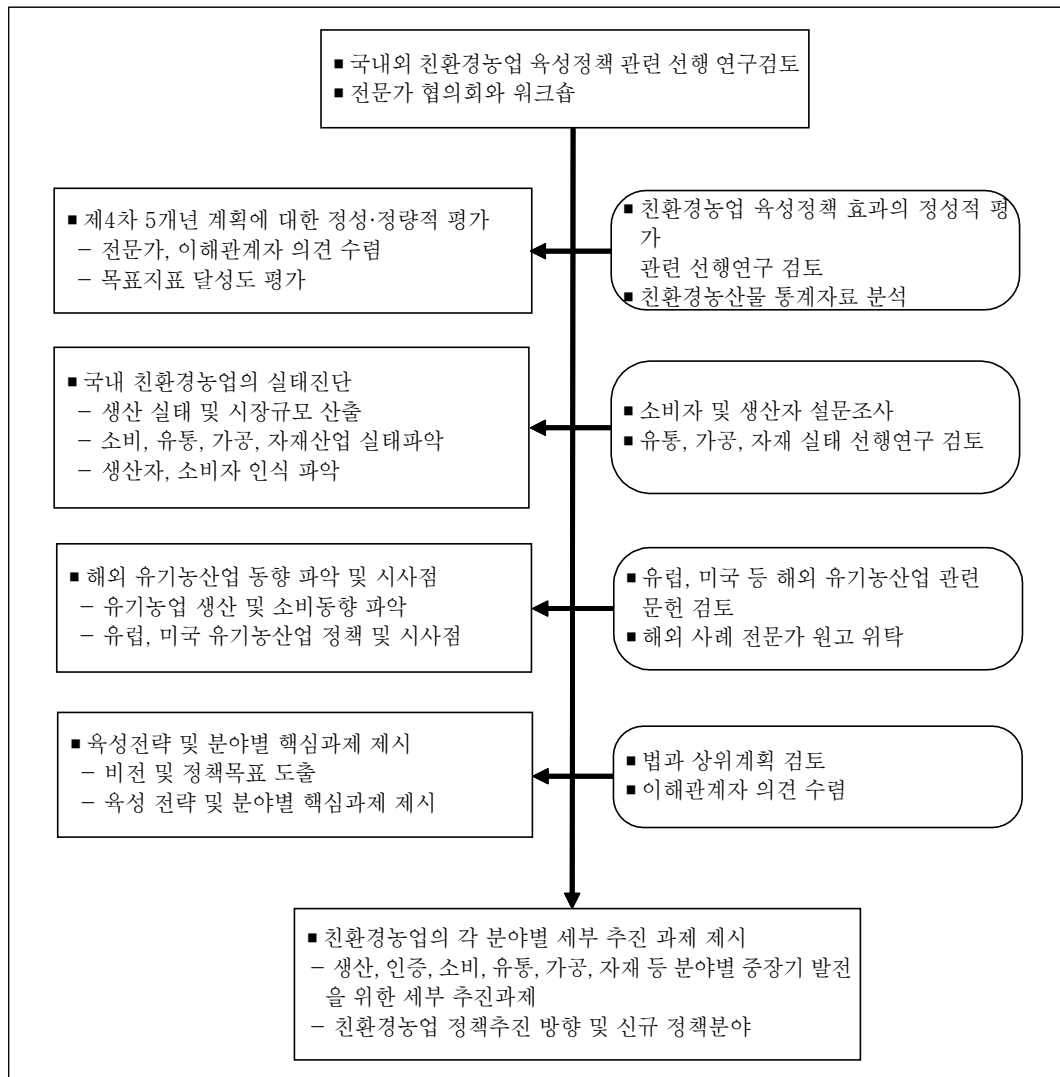
- 관련 문헌 및 기존 연구자료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학술지의 선행연구 결과물 검토
- EU(독일, 스위스), 미국 등의 유기농업 육성관련 문헌 검토
- 통계자료 분석 및 계량 분석
-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생산 실태 관련 통계자료 분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면적, 인증량, 인증 농가수 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판매가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장규모 등
-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 파악, 친환경농업 관련 후방산업의 실태 파악 및 시장현황
 -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시장규모
 - 유기농업 자재산업의 실태 파악 및 시장현황 제시
- 설문조사 및 현지방문 면담조사
- 생산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산 및 판매 현황, 친환경농업 실천의 애로사항, 정책 건의 사항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 조사·분석
-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 구입처, 소비의향, 비식용유기가공품 소비 실태, 정책 건의 사항 등 친환경농식품 소비실태 조사·분석

- 정책담당자, 전문가 그룹,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부터 4차 5개년 계획의 평가, 5차 5개년의 계획의 비전, 추진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친환경농업 비전기획단 TF 운영
- 정책 비전·목표 설정, 제도개선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 한시적 구성 및 운영
- (운영) 정책반별 수시 회의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기획단 운영 지원(2020. 6.~9.)
- 해외 유기농업정책동향 관련 전문가(서울대학교 유도일 교수) 원고 위탁 추진
- EU(스위스, 독일), 미국의 유기농식품산업 정책동향

3.2. 연구범위

- 연구대상 친환경농업은 유기재배, 무농약재배로 함.
- 연구대상 품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과 유통량이 많은 쌀, 풋고추, 무, 배추, 상추, 토마토, 딸기, 오이, 양파, 사과, 배, 감귤, 감자, 고구마, 팽이버섯 등 15대 품목을 중심으로 함.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2

분야별 실태

1. 생산 분야

1.1. 친환경농업 인증실적

○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실적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 2년간 감소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2001~2019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건수는 연평균 23.8%(유기농산물 26.2% 증가, 무농약 22.8% 증가) 증가함.

–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2015년~2019년¹⁾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건수는 연평균 2.1%(유기농산물 13.1% 증가, 무농약 2.3% 감소) 증가함.

1) 4차 5개년 계획기간의 실적을 보고서 2015~2019년으로 시점을 설정함.

<표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 변화 추이

단위: 건, %

연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계(유기+무농약)	계
2001	183	441	504	624	1,128
2002	437	1,370	1,112	1,807	2,919
2003	713	1,999	2,180	2,712	7,892
2004	781	2,494	2,545	3,275	5,820
2005	1,166	3,599	3,952	4,765	8,717
2006	1,576	4,723	5,182	6,299	11,481
2007	1,778	6,514	7,895	8,292	16,187
2008	2,135	8,255	9,287	10,390	19,677
2009	2,520	10,880	10,728	13,400	24,128
2010	2,962	12,602	8,724	15,564	24,288
2011	3,257	13,694	6,703	16,951	23,654
2012	4,007	14,659	5,229	18,666	23,895
2013	3,773	17,621	3,916	21,394	25,310
2014	3,753	16,586	3,127	20,339	23,466
2015	3,951	16,591	1,711	20,542	22,253
2016	4,472	18,482	0	22,954	22,954
2017	4,920	19,336	0	24,256	24,256
2018	5,574	19,517	0	25,091	25,091
2019	6,579	20,049	0	26,628	26,628
'01-'19 연평균 증감률	22.0	23.6	-	23.2	19.2
'15-'19 증감률	13.6	4.8	-	6.7	4.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그림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1.2.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09년에 2,358천 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임. 이는 2016년 저농약농산물 인증제의 폐지 및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 2000~2019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출하량은 연평균 17.5%(유기농산물 16.5% 증가, 무농약 17.9% 증가) 증가함.

- 2015년~2019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연평균 1.8%(유기농산물 7.8% 증가, 무농약 0.1% 증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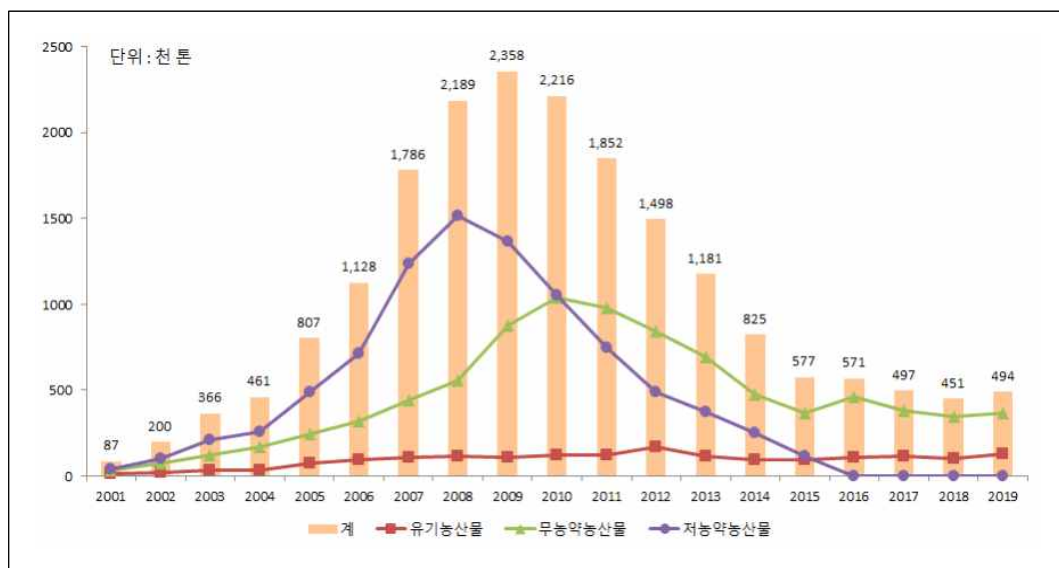
<표 2-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연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계(유기+무농약)	계
2000	7	16	13	23	35
2001	11	32	44	43	87
2002	21	77	102	98	200
2003	34	120	212	154	366
2004	37	167	257	204	461
2005	77	242	488	319	807
2006	95	320	712	415	1,128
2007	107	444	1,235	551	1,786
2008	115	555	1,519	670	2,189
2009	109	880	1,369	989	2,358
2010	122	1,040	1,054	1,162	2,216
2011	123	980	749	1,103	1,852
2012	168	842	488	1,010	1,498
2013	117	693	371	810	1,181
2014	96	479	250	575	825
2015	94	366	117	460	577
2016	110	461	0	571	571
2017	114	383	0	497	497
2018	105	346	0	451	451
2019	127	367	0	494	494
'00-'19 연평균 증감률	16.5	17.9	-	17.5	14.9
'15-'19 증감률	7.8	0.1	-	1.8	-3.8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그림 2-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10년에 기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표 2-3>). 그러나 저농약농산물 인증제 폐지 이후 모든 품목에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16년에 곡류의 출하량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5년 이후 모든 품목에서의 생산량은 증감추세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2019년의 품목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생산량은 서류가 연평균 16.3%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곡류가 2.5%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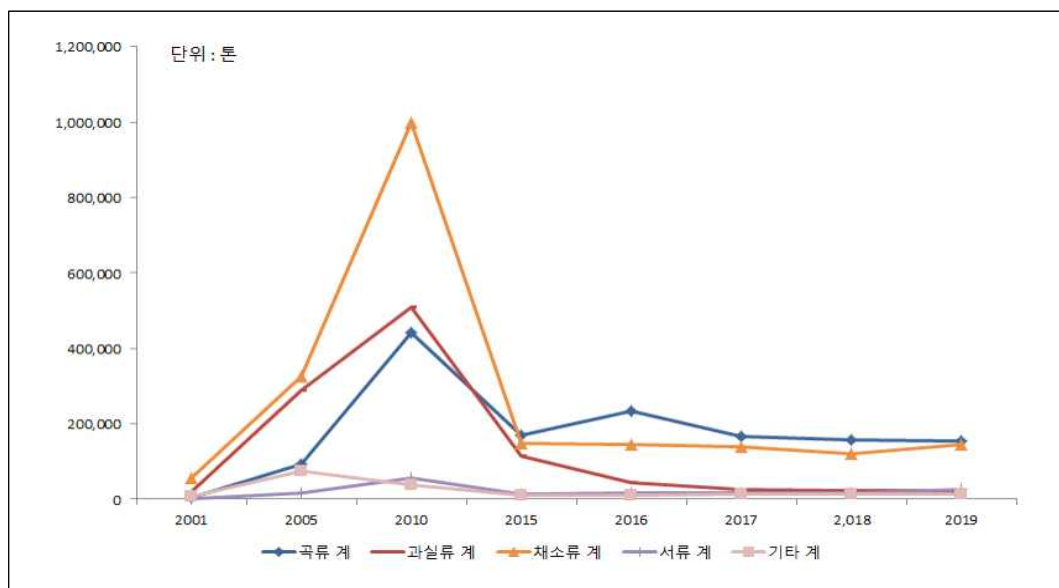
<표 2-3>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단위: 톤, %

구분	2001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15-'19 증감률	
곡류	유기	547	28,996	43,538	49,247	49,823	56,396	60,795	8.7
	무농약	1,413	267,131	126,191	184,156	118,155	99,623	92,617	-7.4
	저농약	1,817	145,983	493	0	0	0	0	-
	계(유+무)	1,960	296,127	169,729	233,403	167,978	156,019	153,412	-2.5
	계	3,777	442,110	170,222	233,403	167,978	156,019	153,413	-2.6
과실류	유기	517	7,912	7,874	12,146	8,860	7,283	8,077	0.6
	무농약	957	40,577	15,361	32,815	18,411	15,935	15,492	0.2
	저농약	16,977	461,728	92,786	0	0	0	0	-
	계(유+무)	1,474	48,489	23,235	44,961	27,271	23,218	23,569	0.4
	계	18,451	510,217	116,021	44,961	27,271	23,218	23,569	-32.9
채소류	유기	9,014	58,113	31,278	36,458	37,258	31,471	37,862	4.9
	무농약	23,093	519,779	95,082	109,393	101,647	90,442	106,426	2.9
	저농약	23,988	419,570	23,523	0	0	0	0	-
	계(유+무)	32,107	577,892	126,360	145,851	138,905	121,913	144,288	3.4
	계	56,095	997,462	149,883	145,851	138,905	121,914	144,288	-0.9
서류	유기	582	5,438	2,844	2,848	3,002	3,594	6,901	24.8
	무농약	797	36,884	11,295	13,252	13,210	13,553	18,990	13.9
	저농약	1,252	15,298	403	0	0	0	0	-
	계(유+무)	1,379	42,322	14,139	16,100	16,212	17,147	25,891	16.3
	계	2,631	57,620	14,542	16,100	16,212	17,148	25,892	15.5
기타	유기	10	14,853	5,817	5,064	5,023	3,464	6,809	4.0
	무농약	6,015	18,367	4,409	4,984	8,261	9,191	7,127	12.8
	저농약	300	5239	181	0	0	0	0	-
	계(유+무)	6,025	33,220	10,226	10,048	13,284	12,655	13,936	8.0
	계	6,325	38,459	10,407	10,048	13,284	12,655	13,936	7.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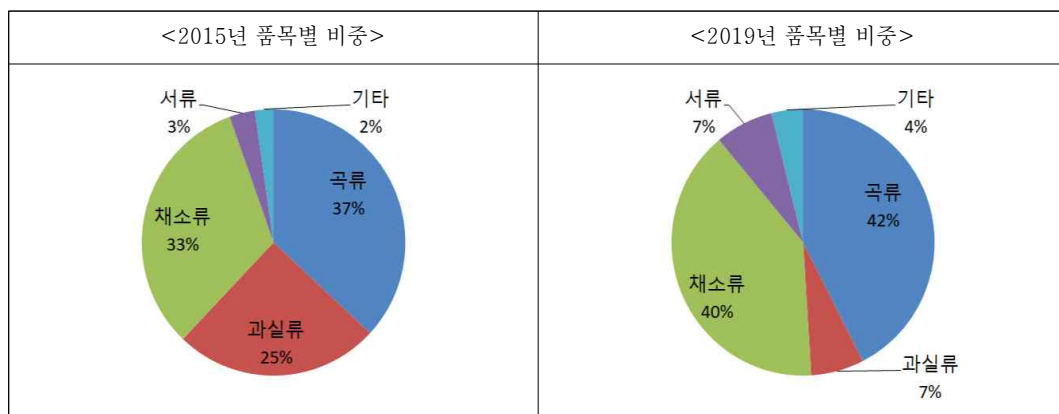
<그림 2-3>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 한편, 2015년과 2019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출하량 비중을 살펴보면, 과실류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는 과실류가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농약, 유기인증을 받아 재배하기가 어려워 저농약 인증에 많이 의존했던 품목이기 때문으로 사료됨.

- 2019년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포함함.
- 2015년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포함함.

<그림 2-4> 2015년, 2019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출하량 비중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1.3.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2012년 127,124ha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2015~2019년 사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1~2019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연평균 23.8%(유기농산물 26.2% 증가, 무농약 22.8% 증가) 증가함.

- 2015년~2019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13.1% 증가한 데 반해 무농약은 2.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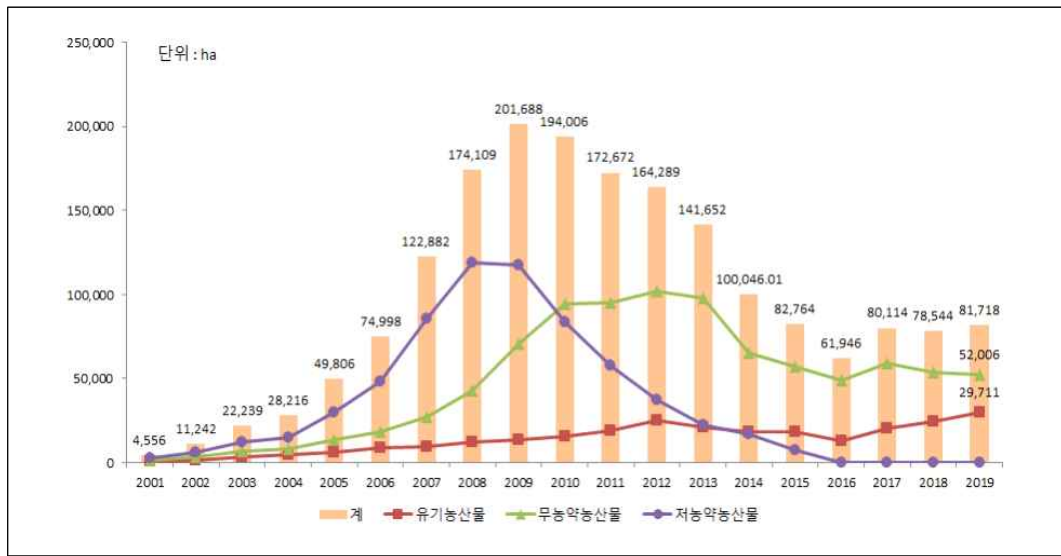
<표 2-4>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단위: ha

연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계(유기+무농약)	계
2001	450	1,295	2,811	1,745	4,556
2002	1,602	3,728	5,912	5,330	11,242
2003	3,325	6,757	12,157	10,082	22,239
2004	4,622	8,440	15,154	13,062	28,216
2005	6,094	13,803	29,909	19,897	49,806
2006	8,560	18,067	48,371	26,627	74,998
2007	9,729	27,288	85,865	37,017	122,882
2008	12,035	42,938	119,136	54,973	174,109
2009	13,343	71,039	117,306	84,382	201,688
2010	15,517	94,533	83,956	110,050	194,006
2011	19,311	95,253	58,108	114,564	172,672
2012	25,467	101,657	37,165	127,124	164,289
2013	21,210	98,233	22,209	119,443	141,652
2014	18,306	65,061	16,679	83,367	100,046
2015	18,136	56,999	7,629	75,135	82,764
2016	12,896	49,050	0	61,946	61,946
2017	20,673	59,441	0	80,114	80,114
2018	24,666	53,878	0	78,544	78,544
2019	29,711	52,006	0	81,717	81,718
'01-'19 연평균 증감률	26.2	22.8	-	23.8	17.4
'15-'19 증감률	13.1	-2.3	-	2.1	-0.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그림 2-5>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1.4.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출하량

○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7.5%인 47,020ha가 전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경기와 전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각각 6,020ha, 5,707ha로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전남, 강원, 제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각각 전년 대비 7.3%, 4.9%, 3.8%씩 증가한 반면, 충북, 경북, 전북 지역은 2018년 대비 4.3%, 3.5%,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의 감소(3.4%)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의 증가(37.2%)로 인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충북 지역은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의 증가(17.2%)에도 불구하고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의 감소(15.5%) 역시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음. 경북 지역도 충북 지역과 유사하게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증가(3.8%)하였지만,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의 감소(6.1%)로 인해 감소 양상을 보임.

○ 전남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경지면적 비중은 1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제주(4.0%), 강원(3.8%), 경기(3.4%) 순으로 나타남.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 경지면적 비중은 5.3%로 나타나 작년 4.9%²⁾에 비해 0.4%p 증가하였음.

<표 2-5>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출하량 현황

단위: ha, 톤, %

구분		유기	무농약	계	전년 대비 인증면적 증감률			인증면적 비중	경지면적 비중
					유기	무농약	계		
강원	면적	1,430	2,239	3,670	10.9	1.4	4.9	4.5	3.8
	출하량	8,255	13,352	21,606					
경기	면적	1,671	4,349	6,020	-1.3	-1.8	-1.7	7.4	3.4
	출하량	9,959	72,637	82,596					
경남	면적	1,908	3,158	5,066	5.8	1.8	3.3	6.2	3.3
	출하량	8,718	32,018	40,736					
경북	면적	1,077	2,701	3,777	3.8	-6.1	-3.5	4.6	1.5
	출하량	7,520	63,781	71,301					
전남	면적	15,783	31,236	47,020	37.2	-3.4	7.3	57.5	16.4
	출하량	40,859	86,064	126,922					
전북	면적	2,283	3,424	5,707	7.4	-8.3	-2.6	7.0	3.0
	출하량	12,604	21,570	34,174					
충남	면적	2,999	2,347	5,346	4.2	-1.3	1.7	6.5	2.5
	출하량	15,134	29,419	44,553					
충북	면적	1,218	1,689	2,907	17.2	-15.5	-4.3	3.6	2.9
	출하량	11,197	32,608	43,805					
제주	면적	1,341	863	2,204	3.2	4.9	3.8	2.7	4.0
	출하량	13,194	15,417	28,612					
계	면적	29,710	52,006	81,717	20.4	-3.5	4.0	100	5.3
	출하량	127,440	366,866	494,305					

주: 광역시 자료는 도별 실적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2) 정학균 외(2019), 2019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실태와 향후 과제의 수치를 참고하였음.

1.5.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는 2009년 198,891호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서 2019년에 매우 소폭 상승함.

- 2001~2019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생산 농가 수는 연평균 20.3%(유기농산물 22.9% 증가, 무농약 19.4% 증가) 증가함.

- 2015~2019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는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 수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0.8%(유기농산물 11.9% 증가, 무농약 4.7% 감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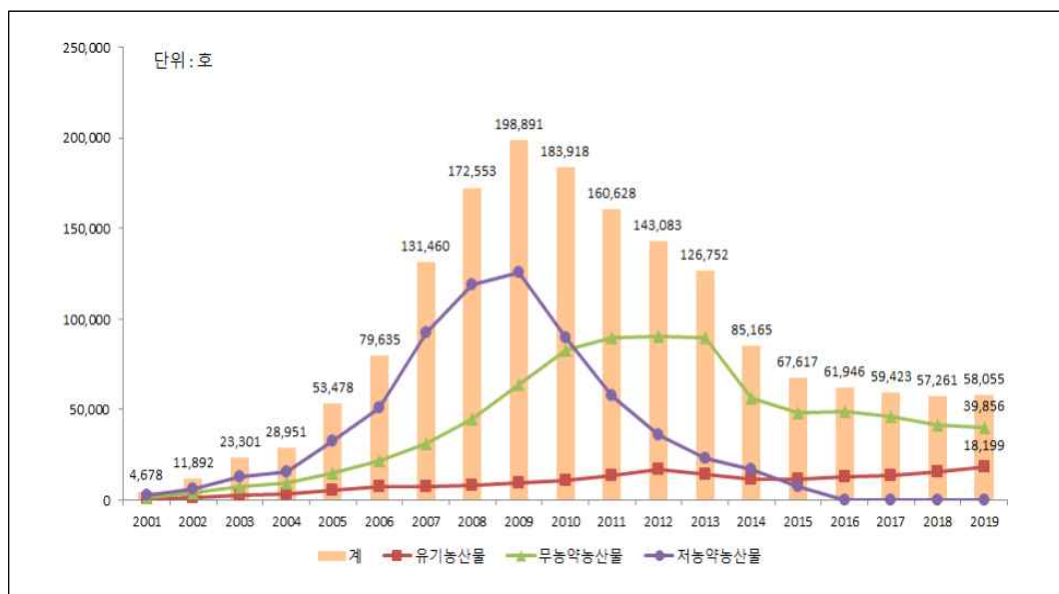
<표 2-6>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 변화 추이

단위: 호

연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계(유기+무농약)	계
2001	442	1,645	2,591	2,087	4,678
2002	1,505	4,084	6,303	5,589	11,892
2003	2,748	7,426	13,127	10,174	23,301
2004	3,283	9,776	15,892	13,059	28,951
2005	5,403	15,278	32,797	20,681	53,478
2006	7,167	21,656	50,812	28,823	79,635
2007	7,507	31,540	92,413	39,047	131,460
2008	8,460	45,089	119,004	53,549	172,553
2009	9,403	63,653	125,835	73,056	198,891
2010	10,790	83,136	89,992	93,926	183,918
2011	13,376	89,765	57,487	103,141	160,628
2012	16,733	90,325	36,025	107,058	143,083
2013	13,963	89,992	22,797	103,955	126,752
2014	11,633	56,756	16,776	68,389	85,165
2015	11,611	48,407	7,599	60,018	67,617
2016	12,896	49,050	0	61,946	61,946
2017	13,379	46,044	0	59,423	59,423
2018	15,528	41,733	0	57,261	57,261
2019	18,199	39,856	0	58,055	58,055
'01-'19 연평균 증감률	22.9	19.4	-	20.3	15.0
'15-'19 증감률	11.9	-4.7	-	-0.8	-3.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그림 2-6>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접속일: 2020. 6. 2.

1.6.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연령³⁾

- 2015년과 2019년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균 연령 또한 1.0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2015년 2.9%에서 2019년 3.3%로 0.4%p 증가 하였으나, 40대는 11.2%에서 9.4%로 1.8%p 감소함. 50대는 2015년 26.2%에서 2020년 23.8%로 2.4%p 감소하였으며, 60대는 29.9%에서 31.1%로 1.2%p 증가함.

3)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구득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표 2-7> 친환경인증 농가 연령분포

구분	2015	2019	차이
30대 이하	2.9	3.3	0.4
40대	11.2	9.4	- 1.8
50대	26.2	23.8	- 2.4
60대	29.9	31.1	1.2
70대 이상	29.8	32.4	2.6
평균연령(세)	62.3	63.3	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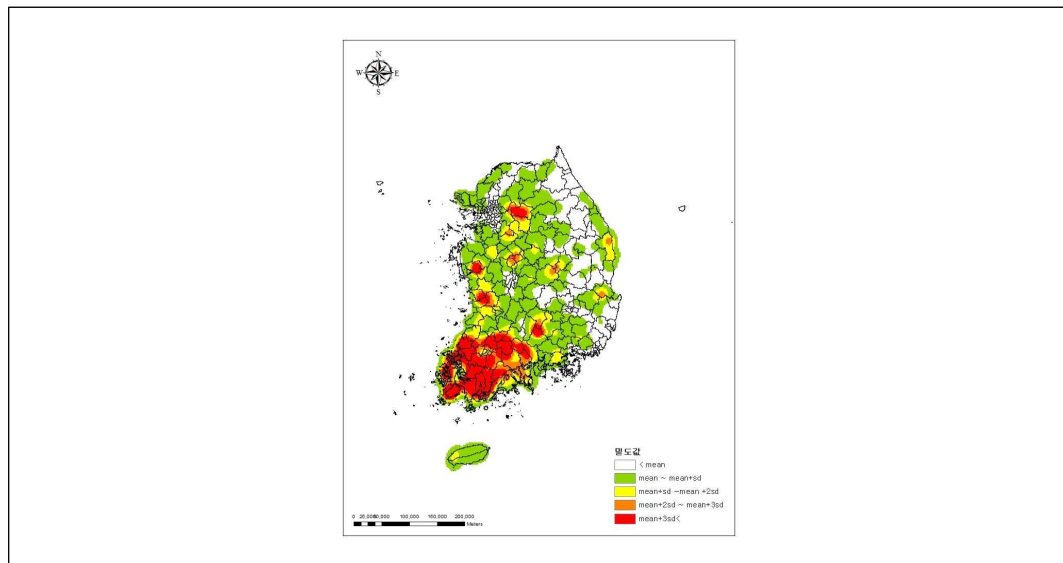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1.7. 집적화 정도

○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의 집적화는 매우 중요함.

<그림 2-7>은 친환경농업지의 커널 밀도(kernel density) 분포를 나타낸 것임.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밀도 값이 높음을 의미함. 경기도 양평, 충청남도 홍성·서천, 전북 익산·군산, 경남 산청·거창·함양·합천, 경북 울진·포항북구, 전라남도 전역(광주 제외)의 밀도가 높게 산출되었음⁴⁾. 이 연구결과는 친환경농업지의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친환경농업 필지가 분포하지 않은 농지가 확장 대상임.

<그림 2-7> 친환경농업지 밀도 분석 결과



자료: 김창길 외(2016).

4) 커널 밀도 값이 평균에 표준편차를 두 배 더한 것보다 큰 경우로 한정하였음.

○ 법정리 단위 경지면적과 인증면적의 비중을 대차표로 분류하면 법정리 기준 인증면적과 해당 법정리 면적 대비 인증 비중을 통해 집적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음(송기선 외 2019). 법정동(리) 단위에서 10ha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고, 법정리 전체 경지면적 대비 10% 이상인 곳은 1,584개소이며, 110ha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고 법정리 전체 경지면적 대비 90% 이상 집적화된 곳은 13개소임(<표 2-8>). 친환경인증 수준이 30ha 이상 이면서, 친환경인증 비중이 50%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법정리 190개소임. 이를 적정 수준의 집적화로 볼 경우 전체 법정리 14,109개소(경지면적 30ha 이하 제외) 가운데 1.35% 수준으로 매우 낮음.

<표 2-8> 법정리 기준 인증 면적과 인증 비중 대차표

단위: 개소

구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10ha (1,911)	1,584	1,014	661	423	255	151	96	67	55
20ha (1,002)	941	739	537	359	222	133	85	60	51
30ha (631)	609	526	412	292	190	118	78	55	47
40ha (410)	401	359	294	220	151	101	70	50	44
50ha (288)	283	258	211	162	111	74	52	37	34
60ha (219)	216	199	166	130	91	65	44	31	30
70ha (163)	162	151	129	105	78	55	36	23	22
80ha (116)	116	111	94	77	56	38	22	17	16
90ha (97)	97	92	79	65	48	33	19	15	15
100ha (77)	77	72	59	47	38	26	16	13	13
110ha~ (64)	64	59	53	43	35	23	14	13	13

자료: 송기선 외(2019).

2. 유통 분야

2.1.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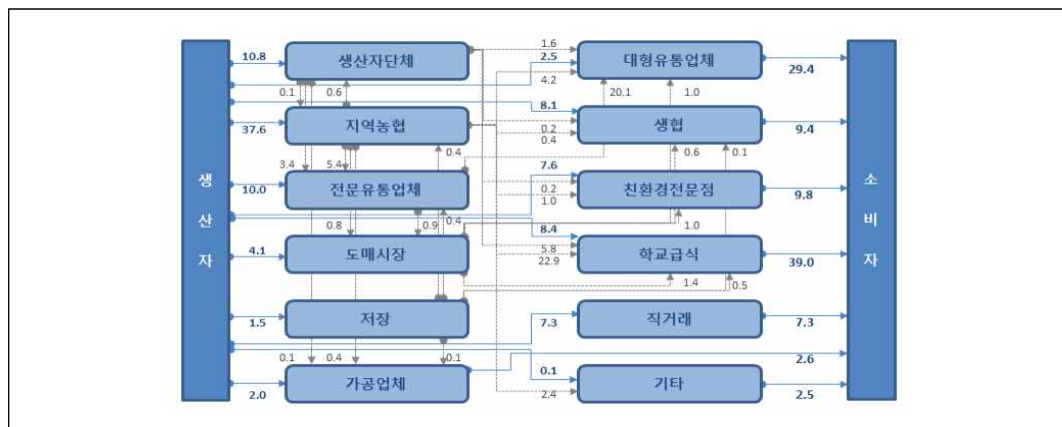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생산자 출하처는 지역농협이 3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자단체 (10.8%), 전문유통업체(10.0%), 도매시장(4.1%), 저장(1.5%) 순이며, 전체의 64.0%가 유통단계로 출하됨. 소비단계로 직접 출하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36.0%로 나타났다으며, 학교급식 (8.4%), 생협(8.1%), 친환경전문점(7.6%), 직거래(7.3%) 순이었음.
- 최종 소비단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형유통업체가 29.4%로 전체 68.4%를 차지함. 이어서 친환경전문점(9.8%), 생협(9.4%), 직거래(7.3%), 가공업체(2.6%) 등이었음.

* 대형유통업체에서 소비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전문유통업체가 공급하는 비율이 20.1%로 가장 높음. 학교급식에서 소비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지역농협이 공급하는 비율이 22.9%로 가장 높음.

<그림 2-8>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조사

단위: %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2018).

5)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2020년 1월에 발표한 「2019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용역」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2.2.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용

2.2.1. 품목별 유통비용

가. 쌀

○ 전체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60.9%, 평균 유통마진은 39.1%로 나타남.

– 비용별 전체 평균은 직접비 10.0%, 간접비 19.2%, 이윤 9.9%이며, 단계별 전체 평균은 출하단계 2.0%, 도매단계 18.4%, 소매단계 18.7%로 나타남.

– 전체 평균 생산자수취가격은 2,541.3원/kg, 소비자가격 4,383.2원/kg임.

<표 2-9> 친환경 쌀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

단위: %, 원/kg

구분		전체평균	친환경전문점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생산자수취율		60.9	54.5	50.3	72.6
유통마진		39.1	45.5	49.7	27.4
비용별	직접비	10.0	5.1	5.2	17.2
	간접비	19.2	25.9	25.7	9.2
	이윤	9.9	14.4	18.7	1.0
단계별	출하단계	2.0	1.1	1.1	3.5
	도매단계	18.4	12.9	23.6	21.2
	소매단계	18.7	31.5	25.0	2.7
가격	생산자수취가격	2,541.3	2,728.5	2,571.0	2,339.3
	소비자가격	4,383.2	5,154.6	5,106.7	3,250.0

주: (생산자)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해남, (유통관계자) 서울, 경기, 충남의 조사지역 평균임.
자료: 정상택 외(2020).

나. 감자

○ 전체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45.6%, 평균 유통마진은 54.4%로 나타남.

– 비용별 전체 평균은 직접비 8.9%, 간접비 및 이윤 45.5%이며, 단계별 전체 평균은 출하단계 5.8%, 도매단계 23.0%, 소매단계 25.6%로 나타남.

– 전체 평균 생산자수취가격은 1,640.5원/kg, 소비자가격 3,647.7원/kg임.

<표 2-10> 친환경 감자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

단위: %, 원/kg

구분	전체평균	친환경전문점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도매시장	
생산자수취율	45.6	55.5	43.7	44.7	31.6	
유통마진	54.4	44.5	56.3	55.3	68.4	
비용별	직접비	8.9	7.2	1.6	16.6	11.6
	간접비 및 이윤	45.5	37.3	54.7	38.7	56.8
단계별	출하단계	5.8	9.2	5.6	1.9	7.0
	도매단계	23.0	11.3	20.8	41.6	13.6
	소매단계	25.6	24.0	30.0	11.8	47.7
가격	생산자수취가격	1,640.5	1,703.4	1,649.0	1,800.0	1,179.0
	소비자가격	3,647.7	3,024.4	3,852.4	4,025.0	3,730.0

주: (생산자) 경기 양평·안성, 충남 서산·당진, 전남 보성, 경북 군위, (유통관계자) 서울, 광주, 경기, 충남의 조사지역 평균임.
자료: 정상택 외(2020).

다. 고구마

○ 전체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52.3%, 평균 유통마진은 47.7%로 나타남.

- 비용별 전체 평균은 직접비 8.5%, 간접비 및 이윤 39.3%이며, 단계별 전체 평균은 출하단계 7.5%, 도매단계 14.6%, 소매단계 25.6%로 나타남.

- 전체 평균 생산자수취가격은 3,234.5원/kg, 소비자가격 6,338.4원/kg임.

<표 2-11> 친환경 고구마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

단위: %, 원/kg

구분	전체평균	친환경전문점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도매시장	
생산자수취율	52.3	58.4	45.7	61.8	34.0	
유통마진	47.7	41.6	54.3	38.2	66.0	
비용별	직접비	8.5	5.8	1.5	16.9	10.8
	간접비 및 이윤	39.3	35.7	52.8	21.3	55.2
단계별	출하단계	7.5	8.3	3.6	11.3	6.3
	도매단계	14.6	8.3	20.8	15.0	14.2
	소매단계	25.6	25.0	30.0	11.8	45.5
가격	생산자수취가격	3,234.5	3,548.2	3,331.3	3,265.0	2,352.5
	소비자가격	6,338.4	5,995.2	7,442.3	5,286.0	6,922.0

주: (생산자) 경기 여주, 충남 논산·당진, 전남 해남, (유통관계자) 서울, 광주, 경기, 충남의 조사지역 평균임.
자료: 정상택 외(2020).

라. 딸기

○ 전체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56.2%, 평균 유통마진은 43.8%로 나타남.

- 비용별 전체 평균은 직접비 11.0%, 간접비 및 이윤 32.8%이며, 단계별 전체 평균은 출하단계 6.5%, 도매단계 16.7%, 소매단계 20.6%로 나타남.

- 전체 평균 생산자수취가격은 9,209.1원/kg, 소비자가격 15,888.0원/kg임.

<표 2-12> 친환경 딸기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

단위: %, 원/kg

구분	전체평균	친환경전문점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도매시장	
생산자수취율	56.2	59.8	41.4	73.1	51.7	
유통마진	43.8	40.2	58.6	26.9	48.3	
비용별	직접비	11.0	5.4	4.0	17.3	10.9
	간접비 및 이윤	32.8	34.9	54.6	9.6	37.4
단계별	출하단계	6.5	7.4	7.8	1.4	10.2
	도매단계	16.7	8.4	20.8	13.7	21.5
	소매단계	20.6	24.5	30.0	11.8	16.7
가격	생산자수취가격	9,209.1	14,141.1	5,331.3	13,750.0	5,596.0
	소비자가격	15,888.0	23,524.4	13,140.0	18,750.0	10,830.0

주: (생산자) 경기 양평, 충남 논산·아산·부여, 전남 담양, (유통관계자) 서울, 광주, 경기, 충남의 조사지역 평균임.
자료: 정상택 외(2020).

마. 오이

○ 전체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57.7%, 평균 유통마진은 42.3%로 나타남.

- 비용별 전체 평균은 직접비 8.0%, 간접비 및 이윤 34.3%이며, 단계별 전체 평균은 출하단계 4.4%, 도매단계 14.7%, 소매단계 23.2%로 나타남.

- 전체 평균 생산자수취가격은 3,563.4원/kg, 소비자가격 6,399.9원/kg임.

<표 2-13> 친환경 오이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

단위: %, 원/kg

구분	전체평균	친환경전문점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도매시장	
생산자수취율	56.8	58.1	46.8	72.0	50.2	
유통마진	43.2	41.9	53.2	28.0	49.8	
비용별	직접비	8.3	5.8	0.7	16.4	10.1
	간접비 및 이윤	35.0	36.2	52.5	11.6	39.6
단계별	출하단계	4.0	9.1	2.4	2.9	1.6
	도매단계	15.1	8.4	20.8	13.2	18.1
	소매단계	24.1	24.5	30.0	11.8	30.1
가격	생산자수취가격	3,557.3	2,621.0	4,065.0	4,028.5	3,514.5
	소비자가격	6,474.9	4,450.5	8,859.2	5,590.0	7,000.0

주: (생산자) 경기 평택, 충남 천안, 전남 순천, (유통관계자) 서울, 광주, 경기, 충남의 조사지역 평균임.
 자료: 정상택 외(2020).

바. 양파

○ 전체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50.3%, 평균 유통마진은 49.7%로 나타남.

- 비용별 전체 평균은 직접비 10.3%, 간접비 및 이윤 39.3%이며, 단계별 전체 평균은 출하단계 5.5%, 도매단계 21.0%, 소매단계 23.1%로 나타남.
- 전체 평균 생산자수취가격은 1,780.5원/kg, 소비자가격 3,581.9원/kg임.

<표 2-14> 친환경 양파의 출하주체별·경로별 유통비용

단위: %, 원/kg

구분	전체평균	친환경전문점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도매시장	
생산자수취율	50.3	53.7	46.6	50.0	51.1	
유통마진	49.7	46.3	53.4	50.0	48.9	
비용별	직접비	10.3	7.8	2.6	17.6	13.3
	간접비 및 이윤	39.3	38.6	50.8	32.5	35.6
단계별	출하단계	5.5	13.5	2.6	2.4	3.5
	도매단계	21.0	8.4	20.8	35.8	19.3
	소매단계	23.1	24.5	30.0	11.8	26.1
가격	생산자수취가격	1,780.5	1,406.4	2,022.5	1,605.0	2,088.3
	소비자가격	3,581.9	2,593.9	4,429.6	3,220.0	4,084.0

주: (생산자) 경기 안성·양평, 전북 김제, 전남 무안, 경남 창원, (유통관계자) 서울, 광주, 경기, 충남의 조사지역 평균임.
 자료: 정상택 외(2020).

2.2.2.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마진을 비교⁶⁾

○ 일반 농산물과 유통마진을 비교하여 보면, 쌀이 34.9%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감자의 경우는 8.0%p로 비교적 적은 비율 차이를 보임.

<표 2-15>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마진율 비교(비율)

단위: %, %p

구분	쌀	감자	오이	사과
일반 농산물(A)	22.0	55.3	40.5	42.6
친환경농산물(B)	56.9	63.3	49.1	53.6
차이	-34.9	-8.0	-8.6	-11.0

자료: 김창길 외(2016).

○ 일반농산물과의 유통 마진이 차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유통비용이 커지기 때문임(노컷뉴스, 2016. 7. 17.). 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최초에 중간유통업체에 32.8%, 지역농협에 27.4% 등으로 출하함. 이렇게 출하된 친환경농산물은 다단계를 거쳐 유통됨. 예를 들어 농가가 1차 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한 친환경농산물은 다시 2차와 3차 중간상인,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됨. 지역농협을 통한 유통 구조는 최소 1단계가 더 늘어남. 왜냐하면 지역농협은 농가가 출하한 물량 가운데 50%를 도매시장 및 1차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복잡한 유통단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품목 소량생산과 관계됨. 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중간에 전문 도매시장과 같은 큰 규모의 유통채널 없이 주로 중간유통업체를 활용한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계약재배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주로 전문점과 대형마트에서 크게 발생함. 이는 중간유통업체 중심의 조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농가들이 일반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일반 농산물로 판매할 경우 중간유통업체는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므로 관리비용 차원에서 중간유통업체가 수수료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임.

⁶⁾ 김창길 외(2016)의 자료를 인용하였음(pp.47~49).

- 셋째, 운송비의 경우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유통과정의 규모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소포장으로 더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포장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마크 스티커 등도 포장재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됨.
- 다섯째,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감모비가 매우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높게 나타남.

2.3.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2019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규모는 1조 4,5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법별 재배면적에 단수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농법별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을 추정한 후, 유통업체의 수수료,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고 출하량도 9.6% 증가하여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무농약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으나 유기인증면적이 20.5%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인증면적은 4.0% 증가함. 유기인증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2018년부터 시행된 지속직불금(기한 폐지)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유기인증면적은 재배가 비교적 쉬운 쌀을 중심으로 증가함. 한편, 유기인증면적은 증가하였지만 출하량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일반 쌀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글상자 1> 시장규모 추정방법

- 친환경농산물 시장유통규모는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서 산출됨.
 - 시장규모 = ∑ 품목별 실제시장유통량 x 품목별 시장가격(유통비용 등 포함)
 - 위에서 품목별 실제시장유통량은 인증량에 시장유통비율을 곱해서 산출함(시장유통비율의 경우 쌀을 예로 들어 75%임).
 - 품목별 시장가격은 품목별 농가판매가격에 유통비용, 유통업체의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며, 통상적으로 유통공사에서 조사하는 시장판매가격을 사용함.
- 인증량의 경우 15개 주요품목의 인증량, 품목류별 인증량을 이용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사용하였음. 대표 15개 품목은 쌀, 콩고추, 무, 배추, 상추, 토마토, 딸기, 오이, 양파, 사과, 배, 감귤, 감자, 고구마, 그리고 팽이버섯임.
- 시장판매가격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가격 자료를 활용함. 각 품목의 가격 단위를 원/kg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추 1포기는 3kg, 무 한개 0.8kg, 감귤 10개 1kg, 배 10개 3kg, 오이 10개 1.5kg이라 가정함.
- 15개 주요품목 이외의 품목은 기타품목으로 산정하며, 각 품목별 기타 작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각 품목에 속한 대표작물 3개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였으며, 3개의 대표 작물은 출하량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 2019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유기농이 33.5%인 4,861억 원, 무농약이 66.5%인 9,646억 원으로 추정됨.

<표 2-16>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 유통규모(2019)

단위: 억 원, %

구분	2019년 유기농	2019년 무농약	2019년 계	2018년 계	증감률
곡류	2,538	3,095	5,633	5,289	6.5
쌀	2,413	2,948	5,362	4,894	9.6
기타	124	147	271	395	-31.4
채소류	957	2,354	3,311	2,890	14.6
과실류	365	565	930	933	-0.3
서류	359	782	1,141	821	39.0
특작기타	642	2,849	3,491	2,934	19.0
계	4,861	9,646	14,506	12,868	12.7

자료: 저자 작성.

○ 2015~2019년 시장 규모는 출하량이 소폭 증가하여 연평균 5.3% 증가하였음.

<표 2-17>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추정(2015~2019)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곡류	4,843	5,217	4,627	5,289	5,633
채소류	2,754	3,617	3,295	2,890	3,311
과실류	1,021	1,834	1,103	933	930
서류	544	607	628	821	1,141
특작·기타	2,960	3,387	3,956	2,934	3,491
총계	12,121	14,665	13,608	12,868	14,506

자료: 저자 작성.

2.4. 공공소비 시장규모

- 학교급식 시장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9,06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량의 55.4%를 차지함.

<표 2-18>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추정(2015~2019)

단위: 억 원, %			
구분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비중
시장규모	9,064	5,024	55.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군대 급식의 경우는 2018년을 기준으로 친환경벼 정부수매량이 2,485톤이므로 kg당 가격 3,413원(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추정가격)을 적용하면 약 84억 원으로 추정됨⁷⁾.

3. 가공 분야

3.1. 유기가공식품 기본 현황

3.1.1.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현황

- 최근 5년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 수는 2015년에서 2016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제품 수의 경우 2016년에서 2017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음.

⁷⁾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9)를 기초로 저자 추정함.

<표 2-19> 최근 5년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기가공식품	업체 수	650	730	742	738	742
	제품 수	4,083	5,814	5,325	5,799	6,445
비식용 유기가공품	업체 수	5	3	7	14	19
	제품 수	45	39	50	176	2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3.1.2. 유기식품 수입 및 유기가공식품 수출 현황

○ 유기식품 수입 건수 및 중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수입금액의 경우 2017년에 140,038 천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수입 주요 품목의 경우 품목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유기농식품 수입현황

단위: 개, 건, 톤, 천달러

연도	제조국가	수입 건수	중량	금액	주요 품목(금액순)
2019	56	7,557	58,259	144,050	과채가공품, 바나나, 치즈
2018	51	6,788	52,318	130,611	바나나, 과채가공품, 치즈, 설탕
2017	50	6,133	50,104	140,038	과채가공품, 치즈, 바나나, 밀
2016	53	5,569	45,634	129,484	과채가공품, 치즈, 바나나
2015	48	4,297	39,619	103,966	과채가공품, 바나나, 갈색설탕
2014	40	3,251	33,911	86,171	과채가공품, 바나나, 당류가공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2019).

○ 지난 3년간 유기가공식품 수출금액 및 중량, 국가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음. 업체 수는 2017년에서 2018년에 1개가 줄었으나, 2018년에서 2019년에 약 1.8배 증가하였음.

<표 2-21> 유기가공식품 수출현황

단위: 개, 톤, 천달러

연도	업체 수	국가 수	중량	금액	주요 품목
2019	64	63	3,259	9,287	음료류, 녹차 등 다류, 당류
2018	35	59	2,917	8,109	녹차 등 다류, 음료류, 과자류
2017	36	54	2,575	6,584	녹차 등 다류, 음료류, 과자류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사업자 수출내역 조사자료(2020; 2019).

○ 동등성인정 체결국(미·EU)이 존재하는 유럽·북미지역으로부터의 유기가공식품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2017년 유럽·북미 수입 비중이 전체의 74.8%(11.6백만 달러)이며, 협정체결 이전(2013년) 대비 수입 비중은 약 22%p, 수입액은 약 5.3배 증가하였음.

- 동등성인정협정 전후 비교(2013년 대비 2017년) 시 북미 수입액은 2배(10백만 달러 → 20), 유럽수입액은 3.6배(11백만 달러 → 41) 증가함.

<표 2-22> 동등성 인정 국가 유기가공식품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연도	구분	수입		주요품목	수출		주요 품목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19	미국	7,348	39,296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유가공품류	1,987	2,507	다류, 음료류, 과자류
	EU	9,140	40,963		326	1,329	
	합계	16,488	80,259		2,313	3,836	
2018	미국	6,883	32,200	과채가공품· 음료류, 알로에겔, 아몬드	2,055	4,329	다류, 음료류, 과자류
	EU	7,897	35,555		153	761	
	합계	14,780	67,755		2,208	5,090	
2017	미국	5,019	26,003	과채가공품· 음료류, 알로에겔, 아몬드	1,642	3,799	다류, 음료류, 과자류
	EU	8,880	55,053		311	1,053	
	합계	13,899	81,056		1,953	4,85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 실적(2019년은 잠정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사업자 수출내역 조사자료(2020: 2019).

3.2. 유기가공식품기업 현황

3.2.1. 유기가공식품 사업체 기초 현황

○ 전체 305개의 사업체 중 사업 형태는 법인이 5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개인이 24.3%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는 1~4명이 35.1%, 10~19명이 21.0%, 30~99명이 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매출액의 경우 1천만 원~1억 원 미만이 2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1억~10억 원 미만이 28.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음.

<표 2-23>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 사업체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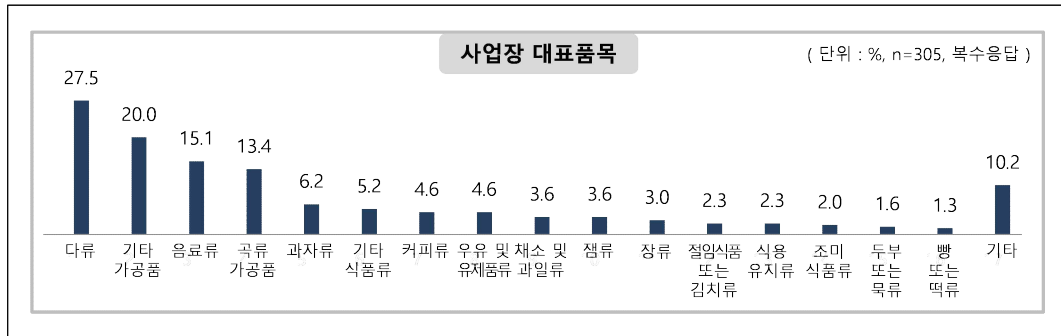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305	100.0	
사업 형태	단체	39	12.8
	법인	182	59.7
	개인	74	24.3
	기타	7	2.3
	무응답/모름	3	1.0
지역	서울/5대광역시/세종	27	8.9
	경기도	72	23.6
	충청도	44	14.4
	전라도	83	27.2
	경상도	46	15.1
	강원/제주	33	10.8
규모별	1~4명	107	35.1
	5~9명	40	13.1
	10~19명	64	21.0
	20~29명	21	6.9
	30~99명	48	15.7
	100~300명	19	6.2
	300명 이상	2	0.7
	무응답/모름	4	1.3
매출액	1천만 원 미만	41	13.4
	1천만 원~1억 원 미만	91	29.8
	1억~10억 원 미만	86	28.2
	10억 원 이상	28	9.2
	무응답/모름	59	19.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 국내 유기가공식품 기업의 대표품목으로는 ‘다류(27.5%)’, ‘기타가공품(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 기업의 대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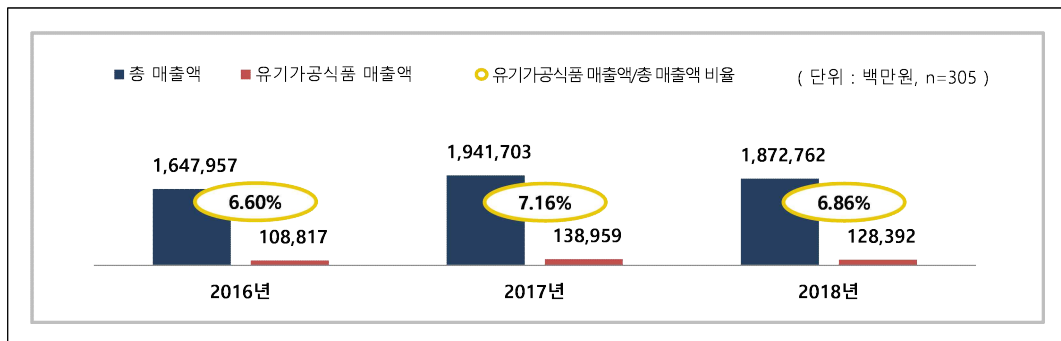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2018년도 국내 유기가공식품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비율은 6.86%로 나타남.

- 2018년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비율은 2016년 대비 0.26%p 증가하였고, 2017년 대비 0.30%p 감소함.

<그림 2-10>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 기업 총 매출액 및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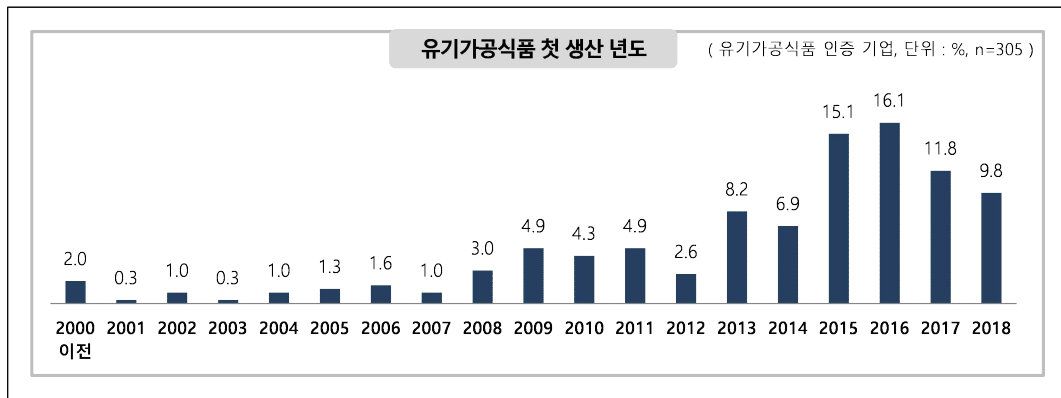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유기가공식품 첫 생산연도로는 ‘2016년(16.1%)’, ‘2015년(15.1%)’, ‘2017년(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응답 기업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이 ‘1천만 원 미만(22.0%)’이, 대표 품목별로는 ‘채소 및 과일(1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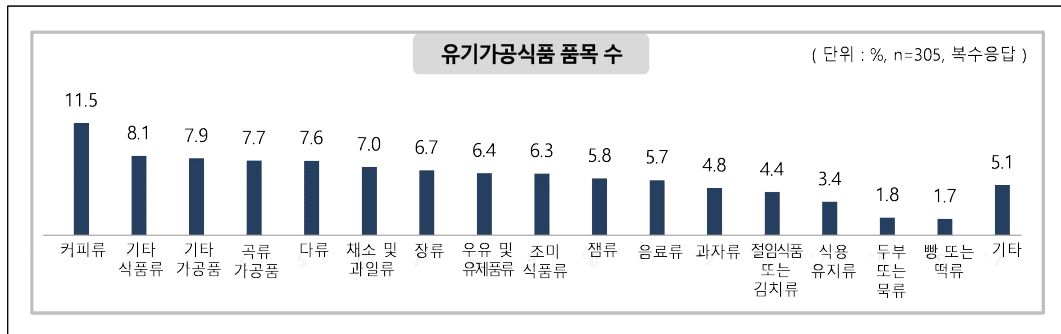
<그림 2-11> 조사대상 유기농식품기업의 유기농식품 첫 생산년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대표 품목별 유기농식품 품목 수는 커피류(11.5%), 기타식품류(8.1%), 기타가공품(7.9%), 곡류가공품(7.7%), 다류(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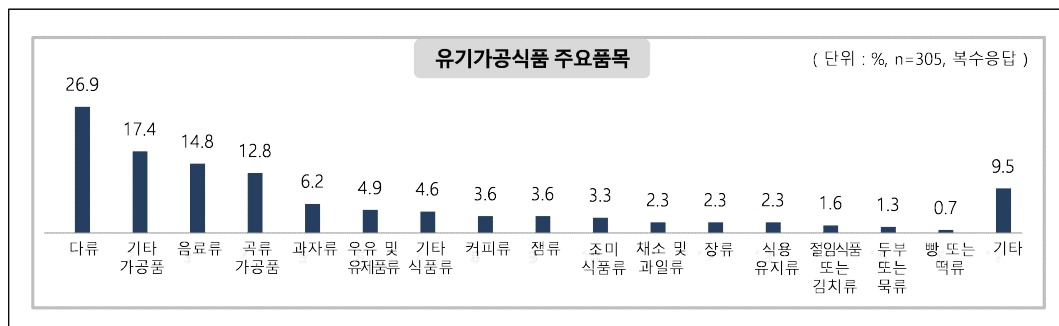
<그림 2-12> 조사대상 유기농식품기업의 유기농식품 품목 수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유기농식품 주요품목으로는 ‘다류(26.9%)’, ‘기타가공품(17.4%)’, ‘음료류(14.8%)’, ‘곡류가공품(12.8%)’, ‘과자류(6.2%)’, ‘우유 및 유제품류(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류’ 응답 기업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식품 매출액이 ‘1억~10억원 미만(32.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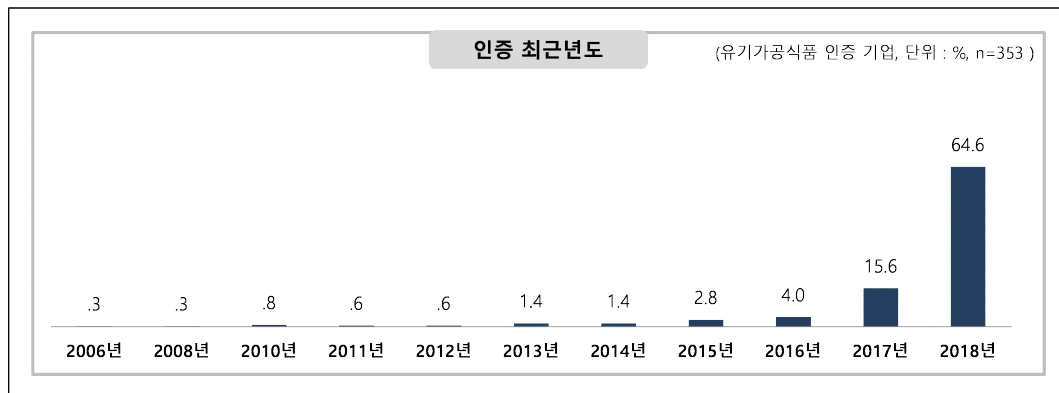
<그림 2-13>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유기가공식품 주요품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최근 인증연도는 ‘2018년(64.6%)’, ‘2017년(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4>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인증 최근연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3.2.2.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원료 조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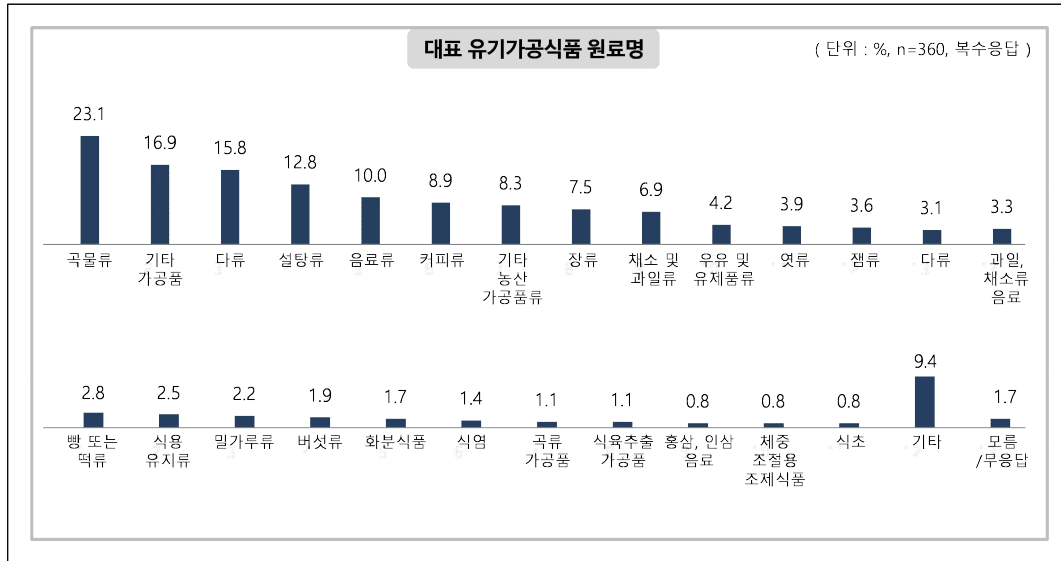
○ 대표 유기가공식품 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79.1%, 수입산 원료 비중은 20.9%로 나타남.⁸⁾

– ‘수입산’에 대해 응답 기업 특성별 분석 결과,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억~10억 원 미만(28.6%)’이, 대표품목별로는 ‘커피류(8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8) 수입산 원료명칭의 경우 원료의 양이 아닌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지 대한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됨.

○ 대표 유기가공식품 원료 산지는 ‘국내산(70.3%)’, ‘남미(9.1%)’, ‘유럽(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표 유기가공식품 원료명은 ‘곡물류(23.1%)’, ‘기타가공품(16.9%)’, ‘다류(15.8%)’ 등의 순임.⁹⁾

<그림 2-15>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대표 유기가공식품 원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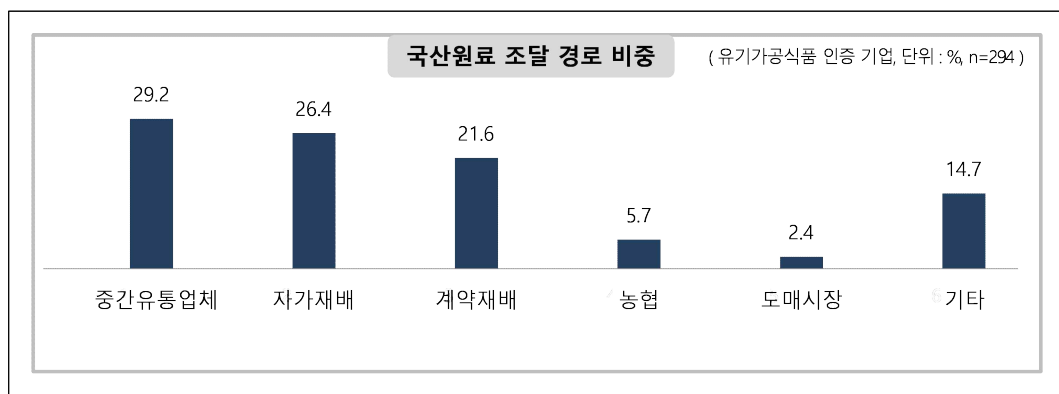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국산원료 조달경로 비중은 ‘중간유통업체(29.2%)’, ‘자가재배(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간유통업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 결과,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억~10억 원 미만(32.0%)’이, 대표품목별로는 ‘과자류(6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가재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천만 원~1억 원 미만(39.9%)’이, 대표품목별로는 ‘조미식품류(4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9) ‘기타’에는 ‘기타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분유류’, ‘과자류’(0.6%) 등 26개 품목이 포함됨.

<그림 2-16>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국산원료 조달 경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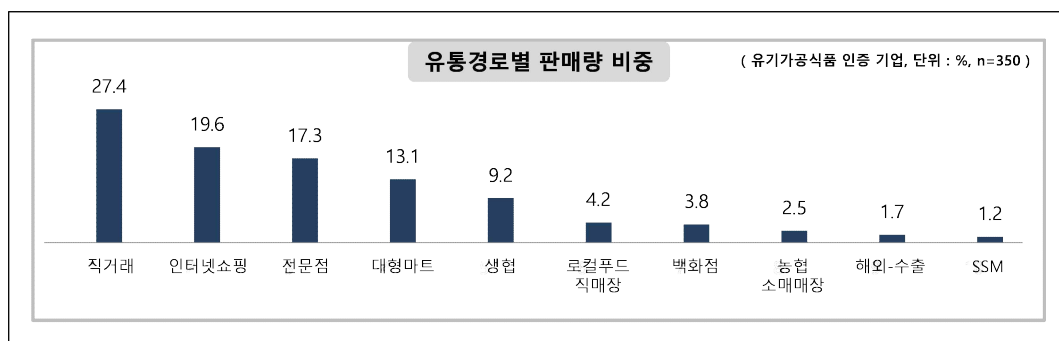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3.2.3.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유통·판매 현황

○ 유통경로별 판매량 비중으로는 ‘직거래(27.4%)’, ‘인터넷쇼핑(19.6%)’, ‘전문점(17.3%)’, ‘대형마트(13.1%)’, ‘생협(9.2%)’, ‘로컬푸드직매장(4.2%)’, ‘백화점(3.8%)’, ‘농협소매매장(2.5%)’ 등의 순임.

– ‘직거래’에 대한 응답 기업 특성별 분석 결과,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억~10억 원 미만(31.9%)’이, 대표 품목별로는 ‘절임식품 또는 김치류(5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17>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유통경로별 판매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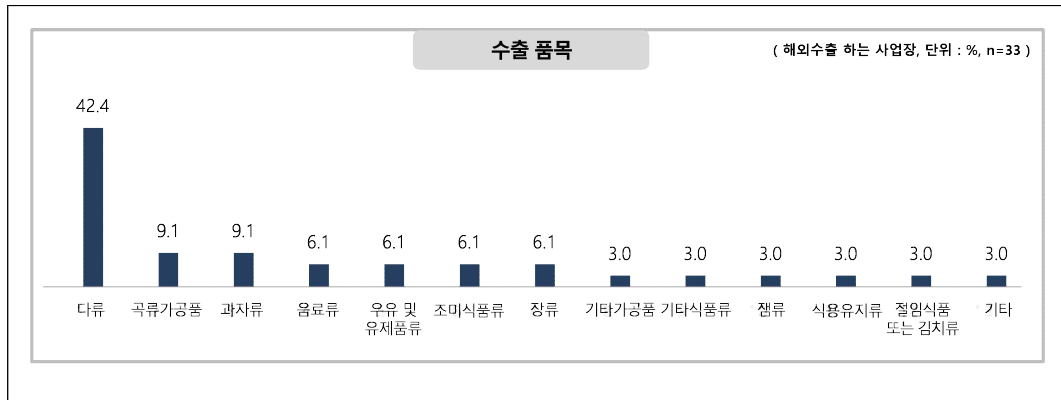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유기가공식품 품목의 해외 수출 여부에 ‘수출한다’가 10.8%, ‘수출하지 않는다’가 86.9%로 나타남.

○ 해외 수출 품목으로는 ‘다류’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곡류가공품, 과자류(9.1%)’, ‘음료류, 우유 및 유제품류, 조미식품류, 장류(6.1%)’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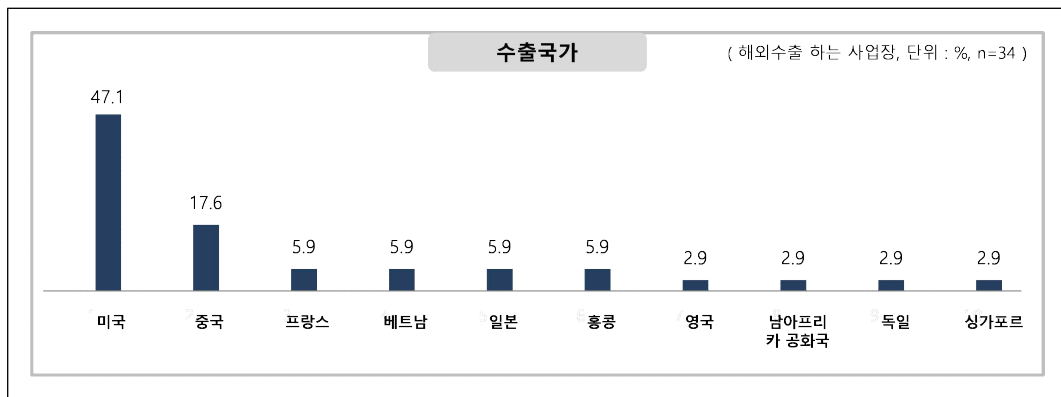
<그림 2-18>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수출 품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해외 수출 국가로는 ‘미국’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17.6%)’, ‘유럽(11.8%)’ 등의 순임.

<그림 2-19>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상품 수출 국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수출 물량으로는 ‘곡류가공품(32.0%)’, ‘장류(24.2%)’, ‘조미식품류(24.0%)’ 등의 순이며, 수출물량 평균은 18,396kg으로 나타남.
- 기회가 된다면 향후 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수출하고 싶다’가 46.6%, ‘수출하고 싶지 않다’가 22.0%로 나타남.
 -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매출 신장을 위해서(46.5%)’, ‘소비시장 확대/판로 개척을 위해서(43.7%)’ 등으로 나타남.
 -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소규모 생산이라서(40.3%)’, ‘내수에 집중하기 위해서(31.3%)’,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서(26.9%)’ 등으로 나타남.

3.2.4.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산업에 대한 인식

- 향후 5년간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전망에 대해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이 92.2%로 나타남.
 - 유기가공식품 산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66.7%)’,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가 많이 찾아서(39.9%)’,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라서(37.7%)’ 등으로 나타남.
- 유기가공식품기업 인증이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대해 ‘영향 있음’이 55.4%, ‘영향 없음’이 21.3%로 나타남.
- 유기가공식품인증 받은 기업 중 41.3%가 전반적으로 투자 확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투자 확대 항목 중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이 100점 만점에 6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료조달 기반 확충(57.8점)’, ‘생산설비(55.7점)’, ‘R&D(55.3점)’, ‘인력(52.8점)’ 순으로 나타남.
-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업 중 해외인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60.7%, 미인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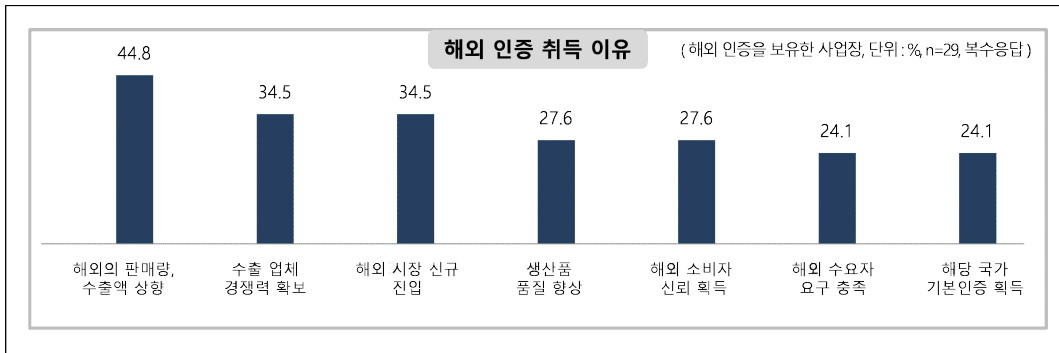
은 38.4%로 나타났으며, 해외인증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5.1%임.

○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인증 국가는 ‘미국’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럽(20.0%)’, ‘일본(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¹⁰⁾

○ 해외인증을 취득한 이유로는 ‘해외의 판매량, 수출액을 늘리기 위해’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출업체로서 경쟁력 확보, 해외 시장 신규 진입을 위해 (3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외의 판매량, 수출액을 늘리기 위함’에 대해 응답 기업 특성별로 분석 결과, 유기 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천만 원~1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57.1%)’이, 대표품목별로는 ‘과자류(10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0>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 이유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향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거나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30.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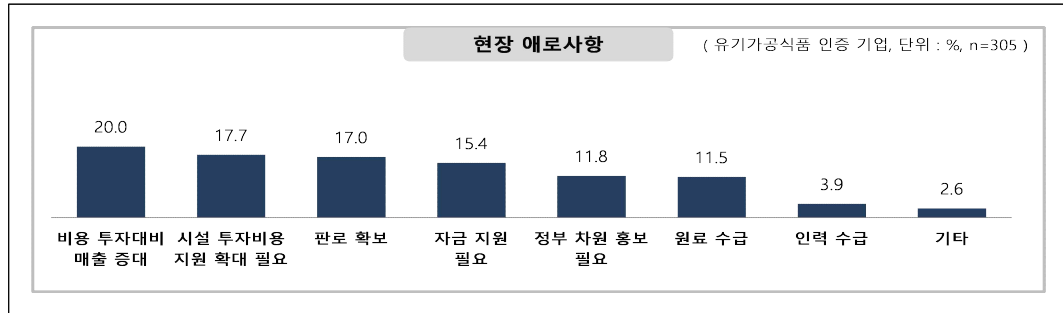
– ‘의향 있음’에 대한 응답 기업 특성별 분석 결과,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천만 원 미만(48.8%)’이, 대표품목별로는 ‘채소 및 과일(45.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0)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 NOP, EU, 유기가공식품인증, JAS, IFOAM, 중국유기가공인증, CCOF
 해외 비유기가공식품 인증 : ISO22000, HALAL, FDA

3.2.5.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

- 현장 애로사항으로 ‘비용 투자 대비 매출 증대의 어려움’이 2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설 투자비용 지원 확대 필요(17.7%)’, ‘판로 확보의 어려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1>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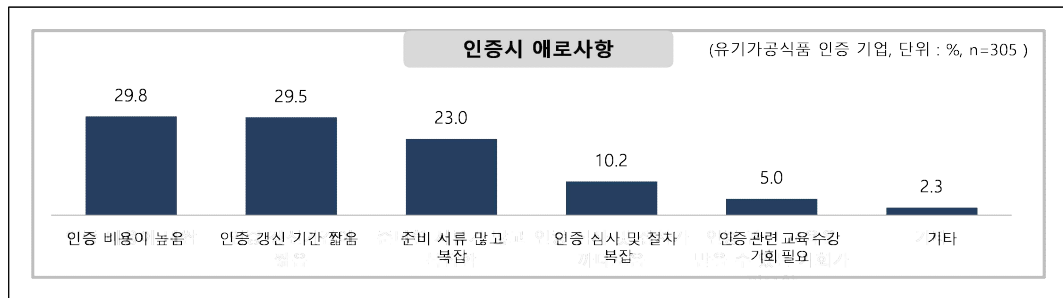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애로사항으로 ‘인증 비용이 비쌈’이 2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증 갱신기간이 짧음(29.5%)’, ‘준비할 서류가 많고 복잡함(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증 비용이 비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결과,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천만 원 미만(51.2%)’이, 대표품목별로는 ‘장류, 조미식품류(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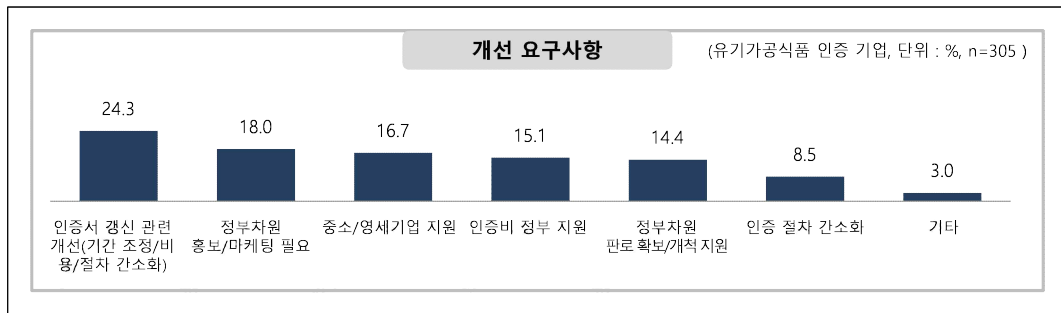
<그림 2-22>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인증 시 애로사항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추가 건의사항으로 ‘인증서 갱신 관련 개선’이 2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홍보/마케팅 필요(18.0%)’, ‘중소/영세기업 지원(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증서 갱신 관련 개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결과,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에서는 ‘1억~10억 원 미만(29.1%)’이, 대표품목별로는 ‘잼류(4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3> 조사대상 유기가공식품기업의 개선 요구사항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3.4. 친환경가공식품 관련 제도 현황

3.4.1.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¹¹⁾

-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9호, 2017. 6. 3. 발령·시행) 제2조제1호).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www.enviagro.go.kr>)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go.kr)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 할 수 있음. 또한,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의 로고를 함께 혹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음.

<그림 2-24>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 도형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 <<https://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검색일: 2020. 11. 7.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한·미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4. 7. 1.부터 발효됨.
 - 한국 유기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 작성요령)를 첨부해야 하며, 미국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한·유럽연합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역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한·유럽연합간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5. 2. 1.부터 발효됨.

- 한국 유기제품의 유럽연합 수출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작성요령)를 EU TRACES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해야 하며, EU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동등성인정 체결국(미·EU)이 존재하는 유럽·북미지역으로부터의 유기농식품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3.4.2.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¹²⁾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을 새로이 공포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을 추진하였음.

-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의미함.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¹²⁾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8.26.)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2020.08.28.)부터 시행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추진체계를 마련함.

3.5. 비식용 유기가공품 현황

3.5.1. 시장규모(미국 사례)

- 비식용 유기가공품에는 섬유, 의류, 화장품, 치약, 비누, 세제 등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기사료만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증량은 미미한 수준임. 다른 비식용 유기가공품들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유기농 표시가 되어 유통되거나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유기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경우 전체 유기농 판매액이 2018년 479억 US달러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하였음. 비식용 유기농 판매액의 경우는 46억 US달러로 전년에 비해 10.6% 증가하였음. 한편 전체 비식용 판매액은 3.7% 증가에 그침(IFOAM 2020).

<표 2-24> 미국의 유기농 판매액

단위: 10억 US달러, %

구분	식용 유기농	비식용 유기농	전체 유기농
2017년	45.2	4.2	49.4
2018년	47.9	4.6	52.5
증감률	5.9	10.6	6.3

자료: IFOAM(2020).

- 향후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섬유, 유기농 의류 등으로 인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5.2. 인증제도(미국 사례)

가) 유기섬유(Organic Textile)¹³⁾

○ 미국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에 의해 생산과 가공이 인증된 섬유제품만 “100% 유기(100 percent organic)” 또는 “유기(organic)”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100% 유기: 1) 100% 유기 섬유 포함, 2) 유기 가공, 3)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만 USDA Organic 마크 표시 가능, 4) 원재료 생산, 가공,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 인증 필요

– 유기: 최소 95% 유기 섬유 포함, 2) 5% 비유기 물질은 국가유기농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물질 사용, 3) 비유기 섬유 사용 금지, 4) 인증 제품에 대해 USDA Organic 마크 표시 가능, 4) 4) 원재료 생산, 가공,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 인증 필요

○ 미국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은 70% 이상 유기 섬유가 사용되거나 유기 인증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에 “유기섬유로 생산(made with organic..)”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 생산 시설 등을 통한 섬유 제품

–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기준에 따라 유기로 생산된 특정 섬유를 표시할 수 있음.

– 최종 제품에 포함된 유기 섬유 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 USDA Organic 마크는 표시할 수 없음

– 최종 제품이 유기 인증을 받았다고 소비자가 착오하도록 할 수 없음

¹³⁾ USDA(2008). “Labeling of Textiles Under National Organic Program (NOP) Regulations”을 참고함.

나) 유기화장품 등(Organic Costmetics, Body Care Products, and Personal Care Products)¹⁴⁾

○ 화장품, 몸 관리 제품, 개인 관리 제품 등이 농산물로 생산되고, 국가유기농프로그램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 또한 국가유기농프로그램 하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화장품 등이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산물 함량 등에 따라 아래 4가지 분류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100% 유기(100 percent organic)”: 해당 제품은 유기농 원료를 100% 포함해야 함. USDA Organic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certifying agent)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유기(organic)”: 해당 제품은 물, 소금을 제외하고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포함해야 함. 나머지 원료는 국가 리스트(National List)의 비농산물 원료나 유기농 원료를 구할 수 없는 비유기농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USDA Organic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certifying agent)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유기 원료로 생산됨(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물, 소금을 제외하고 70% 이상 유기농 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품은 최대 3개 유기농 원료나 식품 그룹(food group)을 주요 표시면에 제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라벤더, 로즈마리, 카모마일을 70% 이상 포함한 바디로션은 “유기 라벤더, 로즈마리, 카모마일로 생산된 바디로션” 또는 “유기 허브로 생산된 바디로션”으로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USDA Organic 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 인증기관(certifying agent)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70% 미만 유기 원료 함량 제품: 주요 표시면에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원료 표시란이나 정보 제공면에 유기로 생산된 원료를 특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USDA Organic 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certifying agent)의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지 않음.

¹⁴⁾ USDA(2008). “Cosmetics, Body Care Products, and Personal Care Products”을 참고함.

4. 인증 분야

4.1. 친환경인증 현황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와 농가 수(이하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인증 신청 건수와 인증 기관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 수는 2015년 32,905(저농약 제외)개에서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9년 41,322개에 이룸.

- 이에 반해 인증 건수는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증기관의 수 역시 2015년 72개에서 2019년 54개로 감소하였음.

-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 수의 증가와 인증 건수의 감소로 인해 인증 건당 평균 사업자 수는 2015년 2.3개에서 2019년 1.6개로 감소하였음. 이는 단체 인증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체 인증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인증기관의 감소가 인증 건수의 감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증기관당 평균 인증 건수는 연평균 13.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인증 신청 사업 수의 증가는 인증기관당 평균 인증 신청 사업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킴.

<표 2-25> 연도별 인증 기관 수 및 평균 인증 사업자 수의 변화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율
인증 업체 혹은 농가 수(개, A)	32,905	37,816	38,496	38,845	41,322	5.9%
인증 건수(건, B)	70,539	73,198	70,120	66,392	67,295	-1.2%
인증 기관수(개, C)	72	65	64	62	54	-6.9%
인증 건당 평균 인증 업체 혹은 농가 수 (B/A)	2.1	1.9	1.8	1.7	1.6	-6.6%
인증기관 당 평균 인증 업체 혹은 농가수(A/C)	979.7	1126.1	1095.6	1070.8	1246.2	6.2%
인증기관 당 평균 인증 건수(B/C)	457.0	581.8	601.5	626.5	765.2	13.8%

주: 2015년 자료는 저농약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표 2-26> 인증 종류별 인증 현황의 연도별 변화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율	
농산물	건수 (건)	유기	3,951	4,472	4,920	5,574	6,579	13.6%
		무농약	16,591	18,482	19,336	19,517	20,049	4.8%
		저농약	1,711	-	-	-	-	-
		소계	22,253	22,954	24,256	25,091	26,628	4.6%
	농가 수 (호)	유기	11,611	12,896	13,379	15,528	18,199	11.9%
		무농약	48,407	49,050	46,044	41,733	39,856	-4.7%
		저농약	7,599	-	-	-	-	-
	인증면적 (ha)	유기	18,143	19,862	20,673	24,666	29,711	13.1%
		무농약	56,996	59,617	59,441	53,878	52,006	-2.3%
		저농약	7,629	-	-	-	-	-
	출하량 (ton)	유기	94,429	110,054	113,526	105,073	127,440	7.8%
		무농약	365,635	461,163	382,855	345,813	366,866	0.1%
		저농약	117,386	-	-	-	-	-
소계		577,450	571,217	496,380	450,886	494,306	-3.8%	
축산물	건수 (건)	유기	78	85	92	93	92	4.2%
		무항생제	6,092	6,628	6,500	5,432	5,626	-2.0%
		소계	6,170	6,713	6,592	5,525	5,718	-1.9%
	농가 수 (호)	유기	98	101	105	101	106	2.0%
		무항생제	7,701	8,122	7,570	6,024	6,087	-5.7%
		소계	7,799	8,223	7,675	6,125	6,193	-5.6%
	출하량 (ton)	유기	27,518	33,986	38,671	41,445	45,858	13.6%
		무항생제	804,120	1,024,264	1,290,079	914,777	956,956	4.4%
		소계	831,638	1,058,250	1,328,750	956,222	1,002,814	4.8%
	사육두수(천)		145,342	166,176	168,431	155,236	171,987	4.3%
취급자	건수(건)	2,065	2,296	2,273	2,254	2,286	2.6%	
	업체수(개소)	2,067	2,296	2,273	2,254	2,286	2.5%	
	작업장면적(ha)	201	191	247	199	185	-2.1%	
	출하량(ton)	695,051	1,094,705	741,115	827,072	749,914	1.9%	
	사육두수(천)		145,342	166,176	168,431	155,236	171,987	4.3%
유기 가공식품	업체수(개소)	650	730	742	738	742	3.4%	
	제품수(개)	4,083	5,814	5,325	5,799	6,445	12.1%	
	출하량(ton)	-	-	-	80,356	90,741	-	
비식용 유기가공품	업체수(개소)	5	3	7	14	19	39.6%	
	제품수(개)	45	39	50	176	245	52.8%	
	출하량(ton)	-	-	-	14,316	24,835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 인증 종류별로는 인증 현황은 <표 2-10>과 같음. 분석 결과 인증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표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인증 종류별 출하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인증 종류에 관계없이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증 건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건수를 제외하곤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반해 무농약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 수, 무농약농산물 재배면적, 무항생제 인증 건수는 감소 추세임.

- 특히, 무농약 농산물은 인증 신청 농가수가 재배면적에 비해 더욱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인증 건수와 출하량이 증가함. 이는 무농약 농산물 재배가 규모화 되고 있음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은 인증 신청 농가와 인증 신청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그 출하량은 증가함. 이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건당 출하량과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당 출하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과 인증이 규모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4.2. 친환경인증 사후관리 실적

○ 친환경인증 인증 취소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연도별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농산물 인증 취소 건수는 2015~2019년 연평균 약 6.2%씩 감소하였으나, 연도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을 제외한 축산물, 취급자,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 취소 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축산물(유기가공품)의 경우, 2019년 인증 취소 건수가 173건(15건)으로 2018년 385건(21건)에 비해 감소하긴 하였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25.8%(25.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연도별 고발 및 형사 입건 건수는 2019년 61건으로 2018년(42건) 크게 감소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음.

<표 2-27> 연도별 인증 취소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율
농산물	3,126	2,734	2,474	2,868	2,422	-6.2
축산물	69	60	93	385	173	25.8
취급자	22	11	16	16	25	3.2
유기가공품	6	1	9	21	15	25.7
계	3,223	2,806	2,592	3,290	2,635	-2.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 인증 취소 원인으로는 농약 사용 기준 위반과 기타 기준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8>). 구체적으로 2019년 인증 취소 건수 중, 농약 사용 기준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8> 처분 원인별 인증취소 원인

단위: 건,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유기가공품	계	연평균 증감율
농약사용 기준위반	1,197	29	-	5	1,231	-6.2
경영관련자료 기준위반	4	-	1	-	5	25.8
동물약품사용 기준위반	-	80	-	-	80	3.2
기타 기준위반	1,221	64	24	10	1,319	25.7
계	2,422	173	25	15	2,635	-2.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 2018년을 제외한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업무 정지 3개월은 2015년 10건에서 2019년 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업무 정지 6개월은 2015년 7건에서 2019년 2건으로 감소하였음.
- 폐업으로 인한 지정 취소를 제외할 경우, 2019년 지정 취소 건수는 2015년과 같은 2건으로 나타남.

<표 2-29> 연도별 친환경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고	1	-	-	-	-
업무정지 1.5월	-	-	1	-	1
업무정지 2월	-	-	-	-	-
업무정지 3월	10	6	4	7	1
업무정지 4.5월	-	-	-	-	-
업무정지 6월	7	2	1	6	2
지정취소	2	1	3	1(1)	5(3)
계	20	9	9	14	9

주: ()는 폐업으로 인한 지정 취소를 의미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4.3.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관한 소비자 인식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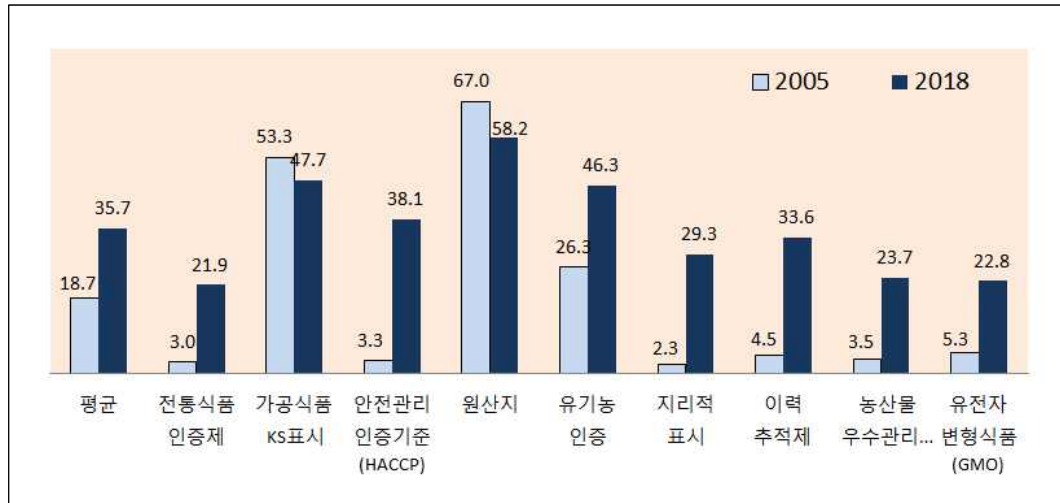
○ 유기농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유기농 인증에 관해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잘 알고 있다”라 응답한 응답자는 2005년 26.3%에서 2018년 46.3%로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유기농 인증에 대한 인지는 원산지와 가공식품 KS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5) 해당 부문은 김상효 외(2018)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방안」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그림 2-25> 표시제도별 인지도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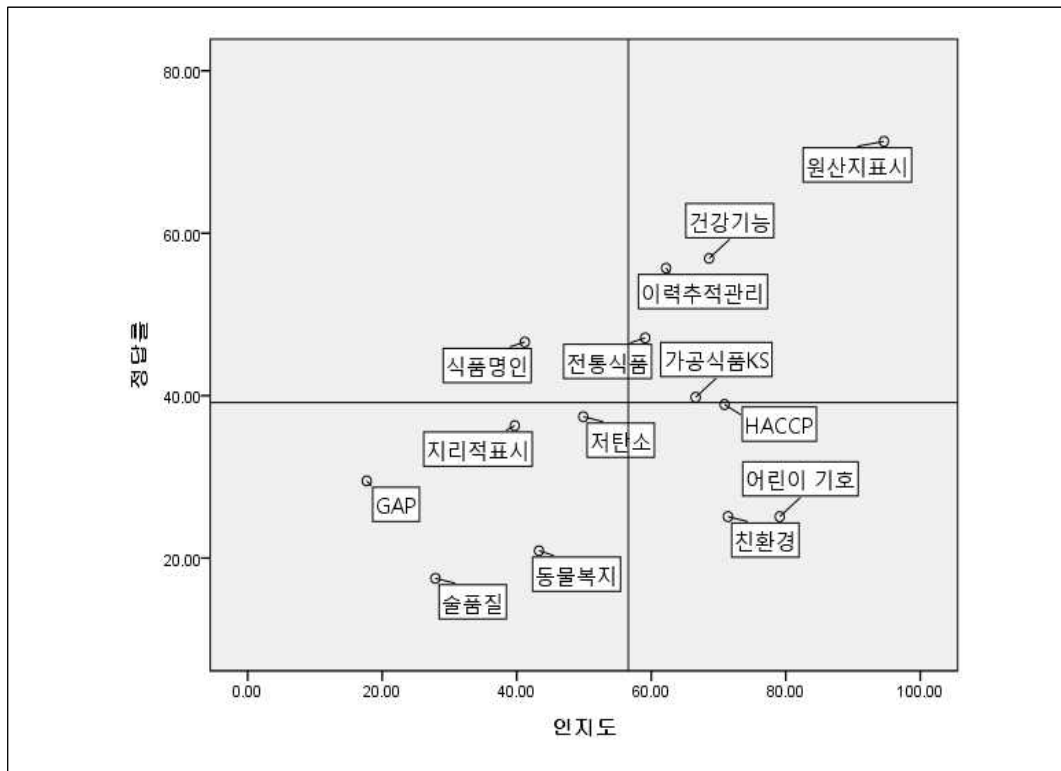


주: 각 제도별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임. 2005년 조사는 유기농인증 대신 친환경 인증으로 표현하여 질문함.
 자료: 김상효 외(2018).

○ 높은 인지도에 비해 친환경인증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에 관한 O/X 퀴즈의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오직 25.1%의 응답자만이 정답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높은 인지도를 차지한 원산지 인증(71.3%), 가공식품 KS(39.8%)의 이해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 이러한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이해도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의미함.

<그림 2-26> 표시제도별 인지도와 이해도 수준 비교



주: 정답률은 각 표시제도에 관한 O/X 퀴즈 정답률을 나타냄.
 자료: 김상효 외(2018).

○ 각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후, 인증정보의 필요성과 구입의사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27>과 같음.

- 분석 결과, 인증정보의 필요성과 구입의사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등에 대한 필요성과 구입의사는 모두 3.8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증 정보의 확산이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함.

<표 2-30> 농식품 인증제도 구입 여부 및 구입/미구입 이유

인증제도 명칭	가급적 인증품 으로만 사려고 노력한다	구입 이유(상위 3가지)	미구입 이유(상위 2가지)
HACCP	26.6%	안전(46.5%), 품질(39.2%), 건강/영양(9.1%)	몰라서(50.8%), 중요치 않아서(20.6%)
GAP	12.0%	품질(43.0%), 안전(36.0%), 건강/영양(9.7%)	몰라서(48.7%), 판매처 부재(19.9%)
건강기능	15.0%	건강/영양(49.8%), 품질(25.6%), 안전(19.3%)	몰라서(42.5%), 중요치 않아서(25.1%)
어린이 기호식품	13.9%	품질(59.4%), 안전(26.2%), 건강/영양(7.8%)	몰라서(51.0%), 판매처 부재(22.9%)
유기농산물	16.1%	안전(38.0%), 건강/영양(31.4%), 품질(21.6%)	가격이 비싸서(36.1%), 몰라서(27.7%)
유기축산물	14.9%	안전(37.8%), 건강/영양(27.7%), 품질(25.2%)	가격이 비싸서(33.8%), 몰라서(26.9%)
유기가공식품	15.6%	안전(39.7%), 건강/영양(28.6%), 품질(25.7%)	가격이 비싸서(36.4%), 몰라서(27.1%)
무농약	17.5%	안전(50.2%), 건강/영양(26.1%), 품질(15.4%)	가격이 비싸서(24.7%), 몰라서(23.4%)
무항생제	20.0%	안전(47.4%), 건강/영양(30.1%), 품질(16.7%)	몰라서(39.1%), 판매처 부재(18.8%)
동물복지	10.6%	환경보호/보전(28.5%), 안전(26.3%), 품질(21.0%)	몰라서(39.1%), 판매처 부재(30.4%)
저탄소	6.8%	환경보호/보전(50.6%), 품질(16.0%), 안전(16.0%)	몰라서(42.8%), 판매처 부재(27.4%)
전통식품	8.2%	품질(36.2%), 맛(21.3%), 농업에 도움(16.1%)	몰라서(32.8%), 판매처 부재(31.6%)
술 품질	5.4%	품질(45.8%), 안전(22.0%), 맛(11.4%)	몰라서(53.1%), 판매처 부재(23.3%)
식품명인	6.6%	품질(38.4%), 맛(28.1%), 건강/영양(12.4%)	몰라서(36.6%), 판매처 부재(28.7%)
가공식품 KS	15.6%	품질(54.2%), 안전(33.3%), 건강/영양(5.0%)	몰라서(53.2%), 판매처 부재(22.5%)
지리표적표시	8.0%	품질(42.7%), 농업에 도움(25.5%), 안전(15.2%)	몰라서(48.3%), 판매처 부재(26.2%)
이력추적관리	10.4%	품질(45.1%), 안전(36.4%), 건강/영양(7.1%)	몰라서(42.7%), 판매처 부재(27.1%)

자료: 김상효 외(2018).

5. 자재 분야¹⁶⁾

5.1. 산업 현황

○ 공시사업자 수는 2018년 기준 640개로 2007년 36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16) 이 절은 성재훈 외(2020)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2-31> 공시사업자 수 변화

단위: 개

구분	2007	2010	2015	2016	2017	2018
공시사업자 수	36	394	562	603	629	6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 2020년 1월 31일 기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수는 총 1,697개로 조사됨. 이 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는 1,141개, 병해충 관리용은 556개로 나타남.

○ 유기농업자재 중 효능·효과 표시가 된 제품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는 307개,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는 52개로 조사되어 각각 26.9%,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2> 유기농업자재 현황

단위: 개

구분	공시	효능·효과 표시	합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834	307	1,141
병해충관리용	504	52	556
합계	1,334	359	1,697

자료: 성재훈 외(2020) 재인용.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1,697개 중 1,473개는 국내에서 생산되며, 나머지 224개 제품은 중국, 필리핀, 일본,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음(성재훈 외 2020).

○ 유기농업자재 생산량 및 판매량은 2019년 각각 170만 톤, 125만 톤 수준으로 조사됨. 2019년 생산량은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 대비 약 16.6% 감소하여 시장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3> 유기농업자재 생산량 및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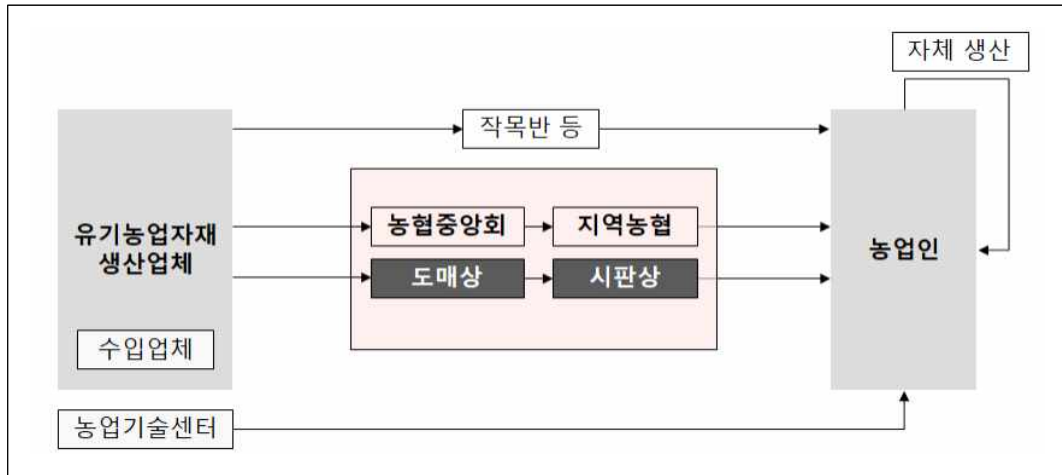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연도	생산량			판매량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합계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합계
2017	2,026	13	2,039	1,429	13	1,442
2018	1,680	10	1,690	1,228	9	1,237
2019	1,685	15	1,700	1,237	15	1,252

자료: 성재훈 외(2020) 개인용.

-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보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비중이 크며, 2019년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99.1%를 차지함.
- 유기농업자재의 시장 규모는 2019년 판매액 기준 약 6,672억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가 5,908억 원, 병해충용 유기농업자재는 764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성재훈 외 2020).
- 유기농업자재 시장의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낮으며 주로 시판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주요 이유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본부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생산업체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농업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통계에서 파악되지 않음.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보급 등이 시장의 원활한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2-28> 유기농업자재 시장 유통구조



자료: 성재훈 외(2020).

5.2.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조사 결과

5.2.1. 조사 개요

-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 부산물비료, 2) 천연식물보호제, 3)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총 25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이중 유기농업자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총 84개로, 이 자료에서는 84개 업체의 응답 내용을 조사 결과로 정리·제시함.
-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임. 조사는 한국기업데이터(주)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방문조사, 이메일/팩스 조사가 병행되어 이루어짐.
- 주요 조사내용은 1) 경영 현황, 2) 생산 및 판매 현황, 3)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으로 구성됨.
 - 이 자료에서는 경영 현황,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함.

5.2.2. 경영 현황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2019년 평균 매출액은 약 146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약 156억 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생산업체들은 2020년에는 2019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34>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평균 매출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망
평균 매출액	15,551	14,858	14,606	14,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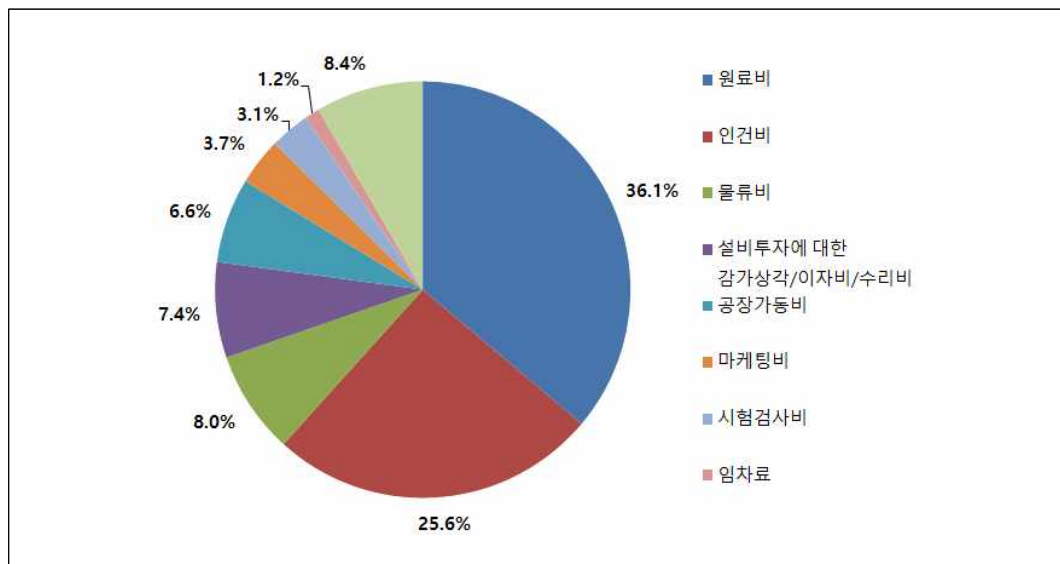
주1: 전체 업체 수 = 84.

주2: 이 표의 평균 매출액은 유기농업자재 판매를 통한 매출액 외에도 다른 사업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성재훈 외(2020).

○ 2019년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원료비’(36.1%)로 조사되었으며, ‘인건비’(25.6%), ‘물류비’(8.0%),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자비/수리비’(7.4%), ‘공장가동비’(6.6%), ‘마케팅비’(3.7%), ‘시험검사비’(3.1%), ‘임차료’(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9> 2019년 경영비 항목별 비율



자료: 성재훈 외(2020).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중 2019년 적자를 기록한 업체의 비율은 20.2%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15.9%, 2018년 16.7%에서 약 3~4%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35> 영업이익률 적자 업체 비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적자 기록 업체	15.9	16.7	20.2

주: 2017년 업체 수 = 82, 2018, 2019년 업체 수 = 84.

자료: 성재훈 외(2020).

○ 2019년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거나 적자를 기록한 이유로는 ‘판매량 감소’(33.3%)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후 ‘원재료의 높은 가격 및 변동성’(27.1%),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인력 활용의 어려움’(16.7%), ‘낮은 판매가격 및 변동성’(14.6%) 순으로 나타남.

<표 2-36> 영업이익률 적자 업체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판매량 감소	33.3
원재료의 높은 가격 및 변동성	27.1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인력 활용의 어려움	16.7
낮은 판매가격 및 변동성	14.6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6.3
기타	3.2
합계	100.0

주: 응답 업체 수 = 48.

자료: 성재훈 외(2020).

○ 2019년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평균 유효 종사자 수는 14.8명으로 조사되었음. 외국인, 비정규직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 내국인 정규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2-37> 2019년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평균 유효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평균 유효 종사자 수
내국인 정규직	14.5
내국인 비정규직	0.1
외국인 정규직	0.2
외국인 비정규직	0.0
합계	14.8

주1: 응답 업체 수 = 84.

주2: 유효 종사자 수는 종사자 수와 친환경농자재 사업 투입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값으로 유기농업자재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종사자 수를 나타냄.

자료: 성재훈 외(2020).

5.2.3.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 유기농업자재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크게 1) 공시 기준, 2) 효능·효과 표시제, 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가. 공시 기준

- 설문에 응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중 53.6%는 까다로운 공시기준 및 절차, 높은 공시비용이 유기농업자재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허용물질이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해당 항목에 대한 평균 동의 수준 또한 각각 3.69점, 3.5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설문에 응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중 53.6%는 까다로운 공시기준 및 절차, 높은 공시비용이 유기농업자재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까다로운 공시 기준으로 인해 유기농업자재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도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44.0%) 또한 높게 나타남.

- 제한적인 허용물질은 유기농업자재 시장 확대를 저해한다는 의견(53.6%)이 많았으며,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은 29.8%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2-38>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평균 동의 정도	단위: 점, %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
까다로운 공시 기준으로 인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가능함	3.30	44.0
까다로운 공시 기준 및 절차, 높은 공시비용은 유기농업자재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	3.69	53.6
제한적인 허용물질은 유기농업자재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함	3.56	53.6
엄격한 허용물질 관리로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함	3.18	29.8

주1: 응답 업체 수 = 84.

주2: 평가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에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자료: 성재훈 외(2020).

나. 효능·효과 표시제

○ 효능·효과 표시제가 유기농업자재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에 응답 업체의 각각 50.0%, 47.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동의 정도는 3.45점, 3.42점으로 조사됨. 이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효능·효과 표시제의 긍정적 역할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수의 생산업체(47.6%)가 까다로운 표시 기준 및 절차, 높은 인증비용이 효능·효과 표시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음.

<표 2-39> 효능·효과 표시제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평균 동의 정도	단위: 점, %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에 기여함	3.45	50.0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유기농업자재 시장 확대에 기여함	3.42	47.6
까다로운 표시 기준 및 절차와 높은 인증비용은 효능·효과 표시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함	3.52	47.6

주1: 응답 업체 수 = 84.

주2: 평가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에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자료: 성재훈 외(2020).

○ 효능·효과 표시를 얻은 제품과 일반 공시된 제품 간 가격 차이가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 가격 차이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38.1%의 응답자는 가격 차이가 부족하다고 답하여 효능·효과 표시를 받을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0> 효능·효과 표시제에 따른 가격 차이의 충분 정도

단위: %

평가	응답 비율
차이가 부족하다	38.1
충분하다	44.0
차이가 너무 크다	3.6
잘 모르겠다	14.3
합계	100.0

주: 응답 업체 수 = 84.
자료: 성재훈 외(2020).

○ 효능·효과 표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69.0%의 응답자가 효능·효과 표시제를 폐지하고 자율보증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26.2%의 응답자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 및 세분화된 효능·효과 등급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 인증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하였음.

<표 2-41> 효능·효과 표시제의 개선 방향

단위: %

평가	응답 비율
효능·효과 표시제 폐지 및 자율보증제로의 전환	69.0
원료별 구체적인 판정 기준 및 보다 세분화된 효능·효과 등급 마련	26.2
보다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인증제 전환	1.2
기타	3.6
합계	100.0

주: 응답 업체 수 = 84.
자료: 성재훈 외(2020).

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경우, 긍정적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먼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시장 확대 기여, 질적 향상, 관측활동 감소 등의 효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32.1%, 28.6%, 20.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이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제품 및 기술 개발 유인을 감소시키며(48.8%) 수수료 및 대금 결제 간 시차로 인해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56.0%)는 의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사업 규모가 작아 농업인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2-42> 효능·효과 표시제에 대한 평가 결과

단위: %

평가	평균 동의 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신제품 혹은 신기술 개발 유인을 감소시킴	3.40	48.8
농업인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유기농업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기여함	3.17	32.1
까다로운 지원 기준은 유기농업자재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함	3.11	28.6
유기농업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2.94	21.4
계통출하로 인해 관측활동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음	3.10	20.2
많은 수수료와 판매와 대금 결제 간 시차는 유기농업자재 사업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3.64	56.0

주1: 응답 업체 수 = 84.

주2: 평가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에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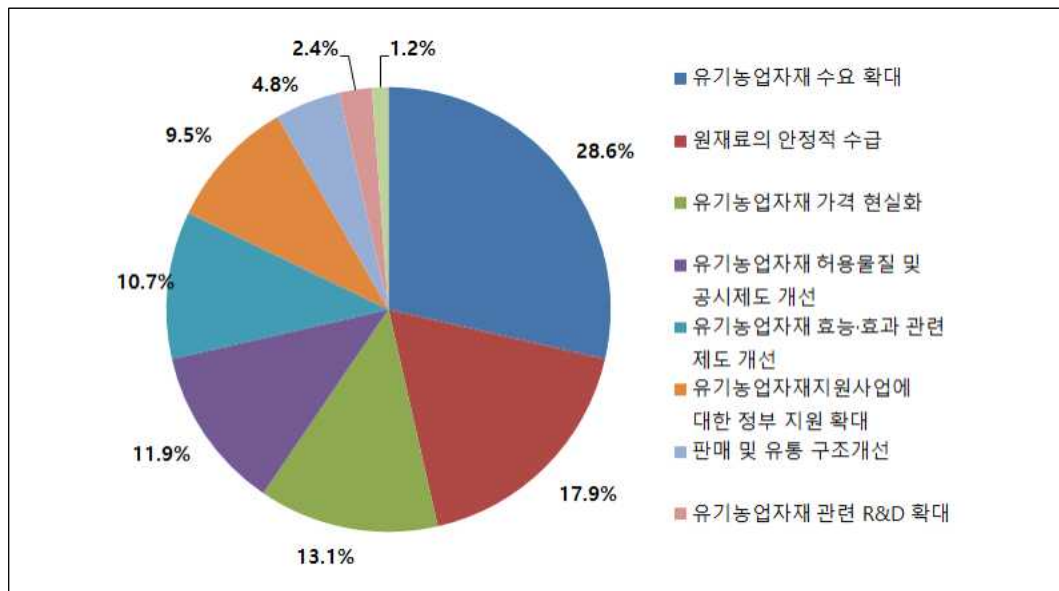
자료: 성재훈 외(2020).

라.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정체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임. 다음으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17.9%), 유기농업자재 가격 현실화(13.1%)에 대한 의견이 높았음.

○ 이외에도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및 공시제도 개선(11.9%),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10.7%),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확대(9.5%)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0>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1: 응답 업체 수 = 84.
 주2: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성재훈 외(2020).

3

소비자·생산자 인식조사

1. 소비자 인식조사

1.1. 친환경농산물 소비 실태

1.1.1. 조사개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 19일에서 2020년 11월 16일까지임. 조사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자 총 500명으로 하였음.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30대가 114명(22.8%), 40대가 141명(28.2%), 50대가 130명(26.0%), 60대 이상이 84명(16.8%) 등으로 나타났음.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8.4%,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1.6%를 차지함.
-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200만 원 미만이 10.2%, 200만 원대 17.2%, 300만 원대 19.2%, 400만 원대 19.4%, 500만 원 이상이 34.0%를 차지하였음. 조사대상자의 거주 가족 수

는 4인이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응답자의 성장지역은 대도시 출신이 55.4%로 많았으며, 농촌 출신은 10.0%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3-1>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중
거주지역	수도권	195 39.0
	수도권 외	305 61.0
연령대	20대	31 6.2
	30대	114 22.8
	40대	141 28.2
	50대	130 26.0
	60대 이상	84 16.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8 21.6
	대학교 졸업	343 68.6
	대학원 졸업 이상	49 9.8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1 10.2
	200만원대	86 17.2
	300만원대	96 19.2
	400만원대	97 19.4
	500만원 이상	170 34.0
성장지역	대도시	277 55.4
	중소도시	173 34.6
	농촌	50 10.0
거주 가족 수	1인	61 12.2
	2인	122 24.4
	3인	138 27.6
	4인 이상	179 35.8
거주 자녀 유무	있다	157 31.4
	미취학 및 초등학생	105 -
	중학생 및 고등학생	83 -
	없다	343 68.6
계	5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1.1.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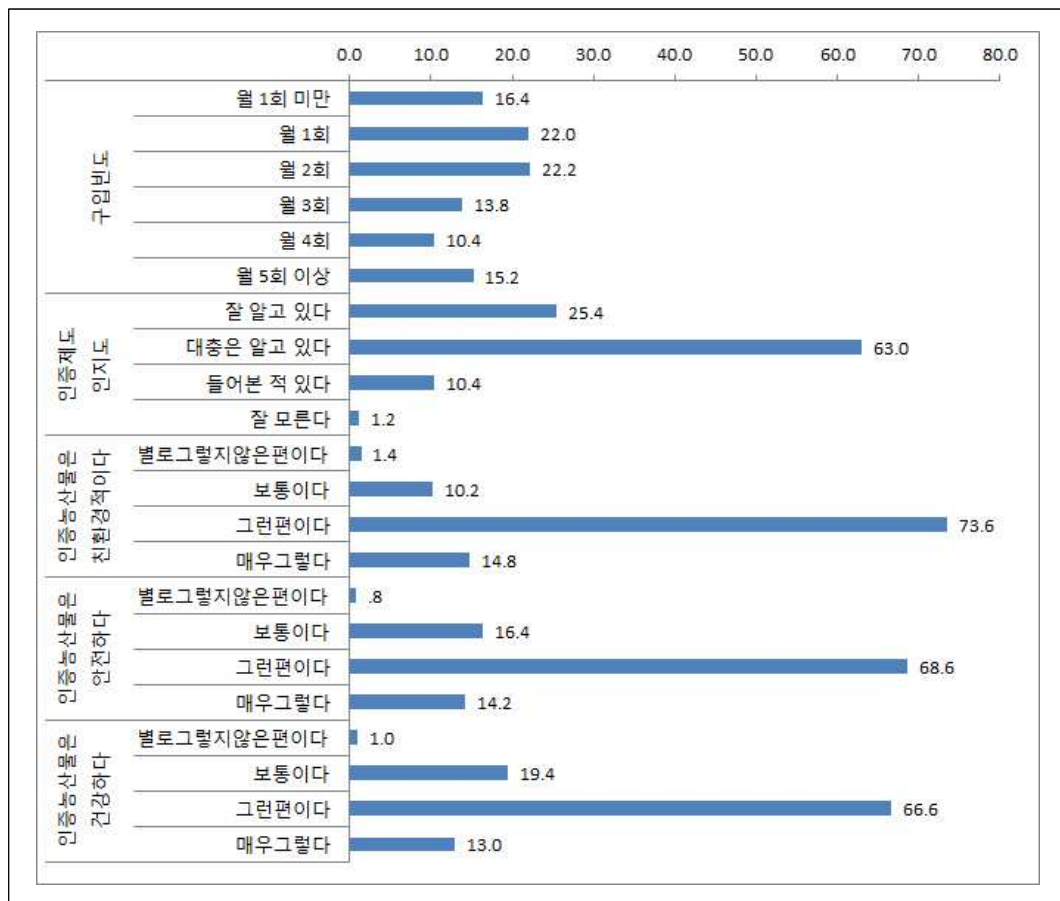
가. 친환경농산물 인식

○ 친환경농산물을 매월 지속적으로 구입한 그룹은 83.6%이며, 월 평균 구입 빈도는 월 2회는 22.2%, 월 1회는 22.0%, 월 5회 이상은 15.2% 순으로 나타남.

○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88.4%이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82.8%,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9.6%로 나타남.

<그림 3-1> 친환경농산물 인식 조사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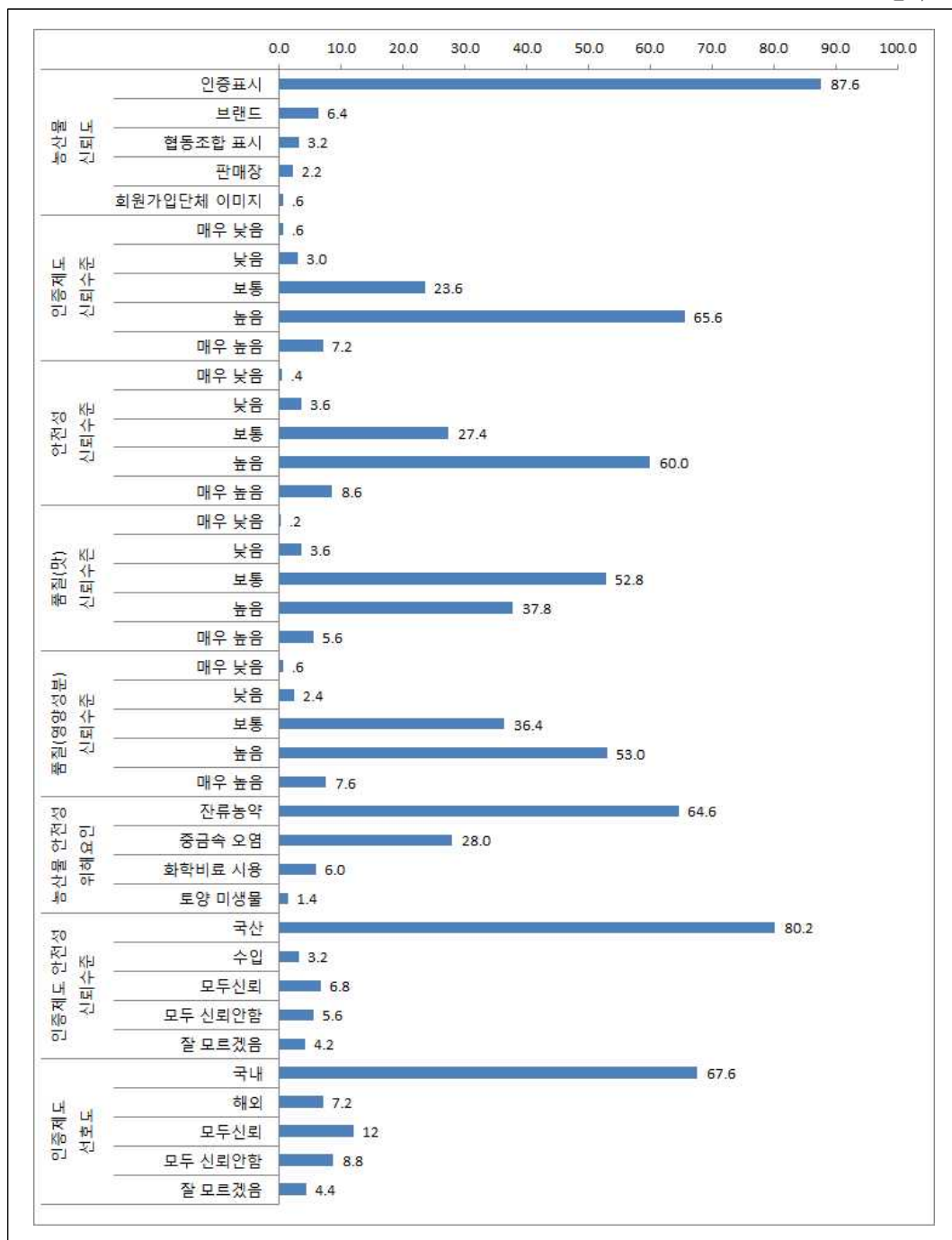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되는 요소 1순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87.6%, ‘브랜드(상표명)’ 6.4%, ‘농협 등 협동조합 표시’ 3.2%, ‘판매장(유통업체)’ 2.2%, ‘회원가입 단체(소비자 단체)’ 0.6% 등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안전성, 품질(영양성분)에 대한 신뢰도는 ‘높음’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품질(맛)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이 가장 많은 응답 비중으로 나타남.
- 일반농산물의 안전성, 품질(맛), 품질(영양성분)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보통’이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안전성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 비중은 잔류농약이 64.6%, 중금속 오염이 28.0%였으며, 화학비료 사용 6.0%, 토양 미생물 1.4%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국산 유기농산물과 수입 유기농산물의 안전성 신뢰도는 국산이 80.2%, 모두 신뢰가 6.8%로 국산농산물의 안전성 신뢰도 합은 87.0%로 나타남.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도는 국내가 67.6%, 해외가 7.2%로 나타남.

<그림 3-2>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조사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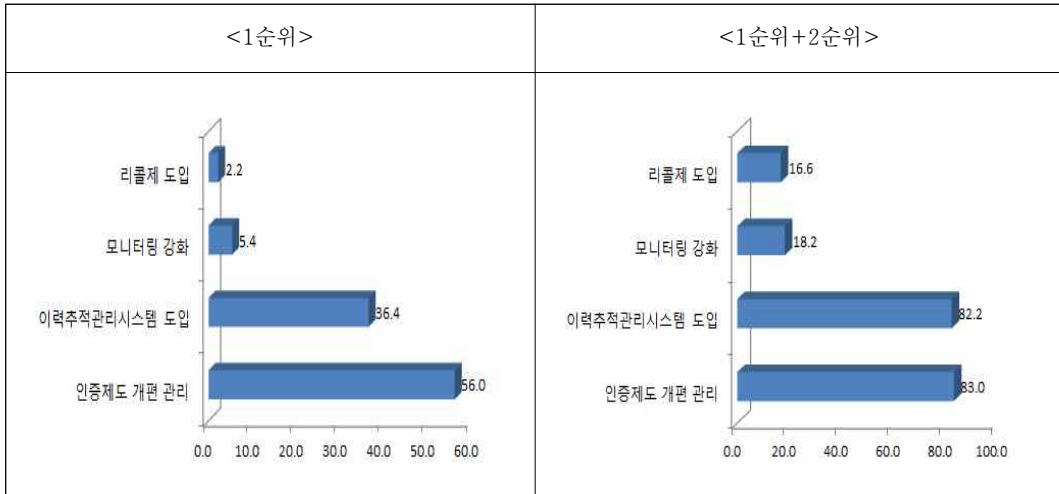
주: 구입 동기는 1~3순위, 구입 애로사항은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나 1순위 결과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결과 1순위로 ‘인증 기준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편을 통한 엄격한 관리’가 56.0%,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36.4%로 대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방안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다.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 평가 및 향후 구매의향

○ 친환경농산물 구입 동기(1순위)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 및 가족건강’이 84.8%로 대다수가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 4.0%, ‘인증제도 신뢰’ 3.4%, ‘구색(품목, 포장 등)’ 2.0%, ‘영양가’ 1.6%, ‘홍보와 추천’ 1.4%, ‘판매자 신뢰’ 1.2%, ‘농업 지속가능성’과 ‘생산자 신뢰’ 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대비 제품(품질)의 만족도는 ‘만족’이 56.8%로 절반이상 수준이며, ‘보통’은 35.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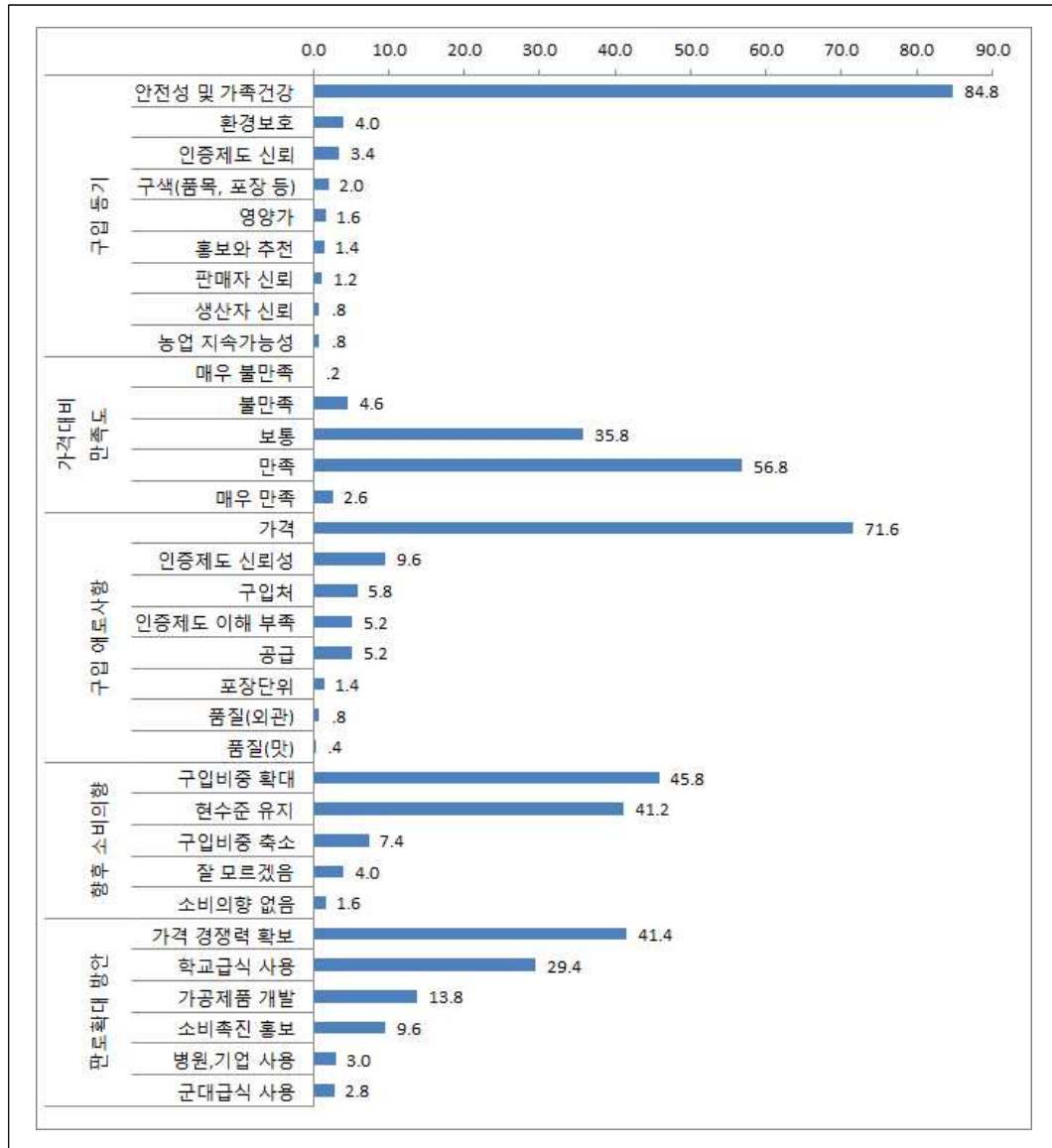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1순위는 ‘가격이 비싸서’가 7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저하(생산, 유통 정보 등)’

9.6%, '적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 5.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이해 부족'과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없거나 지속적인 공급이 되지 않아서' 5.2%, '적당한 포장단위(용기)가 없어서' 1.4%, '모양, 색상 등 외관이 기존 농산물에 비해 나빠서' 0.8% 등으로 나타남.

- 향후 친환경농산물 소비의향은 '지속적으로 소비할 예정이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구입 비중도 확대할 것이다'가 45.8%로 가장 많으며, '구입비중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입할 것이다'가 41.2%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수요처의 발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41.1%, '초·중·고 학교단체 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사용'이 29.4%,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확대'가 13.8%로 나타남.

<그림 3-4>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조사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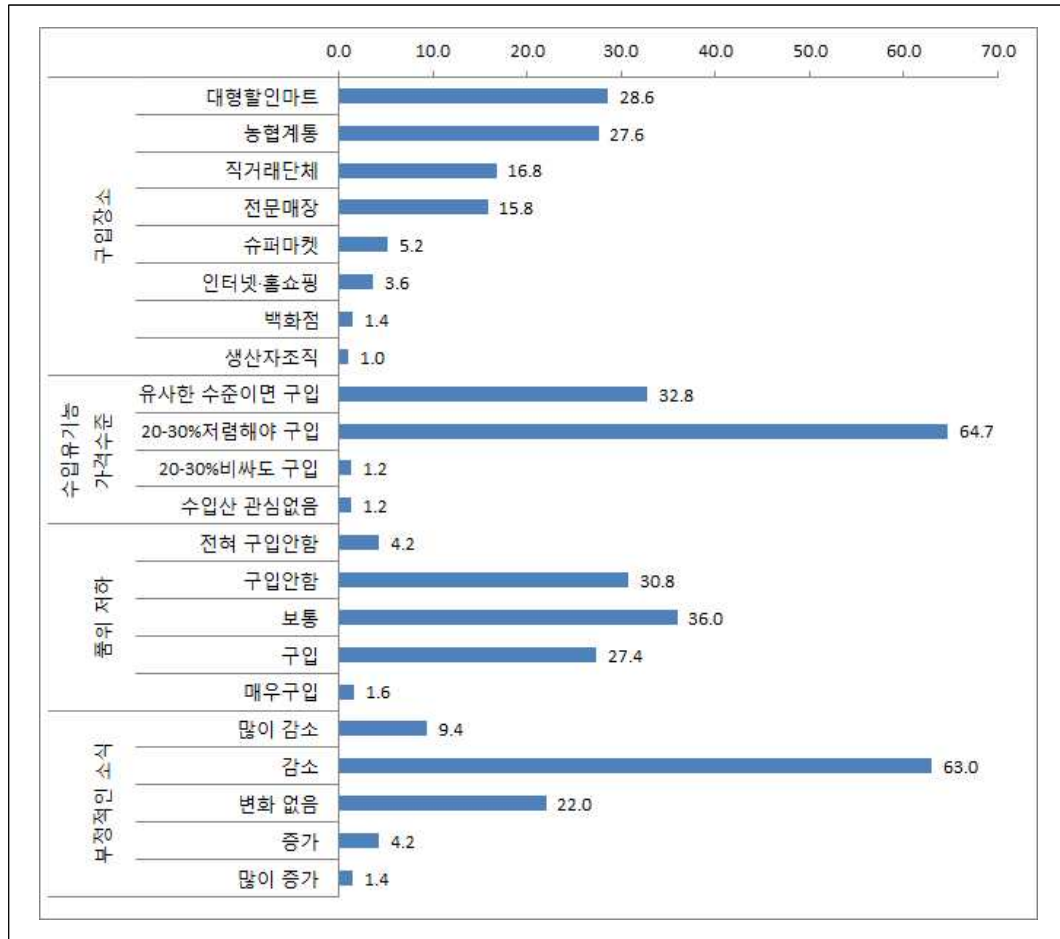
주: 구입 동기는 1~3순위, 구입 애로사항은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나 1순위 결과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라. 친환경농산물 구입패턴

-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 1순위는 ‘대형할인마트’ 28.6%,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27.6%, ‘직거래단체(한살림, 한국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 등)’ 16.8%, ‘전문매장(초록마을, 유기농하우스 등)’ 15.8%, ‘슈퍼마켓(기업형, 일반형)’ 5.2% 등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의 전문유통업체(풀무원 올가, 한살림 초록마을, 아이쿱생협 자연드림, 농협 아침마루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가 91.8%이며, 이 전문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정도는 안전성 3.77점, 품질(영양성분) 3.64점, 품질(맛) 3.53점 순으로 나타남.
-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구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있다’로 응답한 비중이 48.2%, ‘없다’로 응답한 비중이 51.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외국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구입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은 외국농산물 가격수준이 국내 유기농산물 대비 ‘20-30% 저렴해야 구입’이 64.7%, ‘유사한 수준이면 구입’이 32.8%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거나 볼품이 없어 품위가 좋지 않아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편인지에 대해서 ‘구입안함(30.8%)’과 ‘전혀 구입안함(4.2%)’이 ‘매우 구입(1.6%)’과 ‘구입(27.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언론보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접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대한 반응을 질문한 결과 ‘감소’가 63.0%, ‘많이 감소’가 9.4%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친환경농산물 구입패턴 조사결과

단위: %



주: 구입 장소는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나 1순위 결과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마. 친환경농산물 가격부문

○ 일반농산물 가격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가격 수준은 품목과 인증단계에 따라 다르나 가격 프리미엄¹⁷⁾은 유기농산물 74~96%, 무농약 62~82% 수준임.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프리미엄은 유기농산물 44~56%, 무농약 36~47% 수준 등으로 나타남(<표 3-2>).

- 적정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을 확실히 신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한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 프리미엄은 유기농산물 47~60%, 무농약 38~50%로 가정 전과 후의 가격 프리미엄 차이가 거의 없음.

<표 3-2>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현재 가격 및 적정 가격

단위: 원

구 분	현재 가격(체감금액)				적정 가격				적정 가격(확실한 신뢰)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곡류	1,832	(183)	1,719	(172)	1,545	(155)	1,451	(145)	1,593	(159)	1,500	(150)
엽채류	1,737	(174)	1,617	(162)	1,439	(144)	1,364	(136)	1,470	(147)	1,383	(138)
과채류	1,959	(196)	1,822	(182)	1,562	(156)	1,472	(147)	1,591	(159)	1,490	(149)
과실류	1,928	(193)	1,814	(181)	1,562	(156)	1,473	(147)	1,598	(160)	1,490	(149)
평균	1,864	(186)	1,743	(174)	1,527	(153)	1,440	(144)	1,563	(156)	1,466	(147)

주: ()는 일반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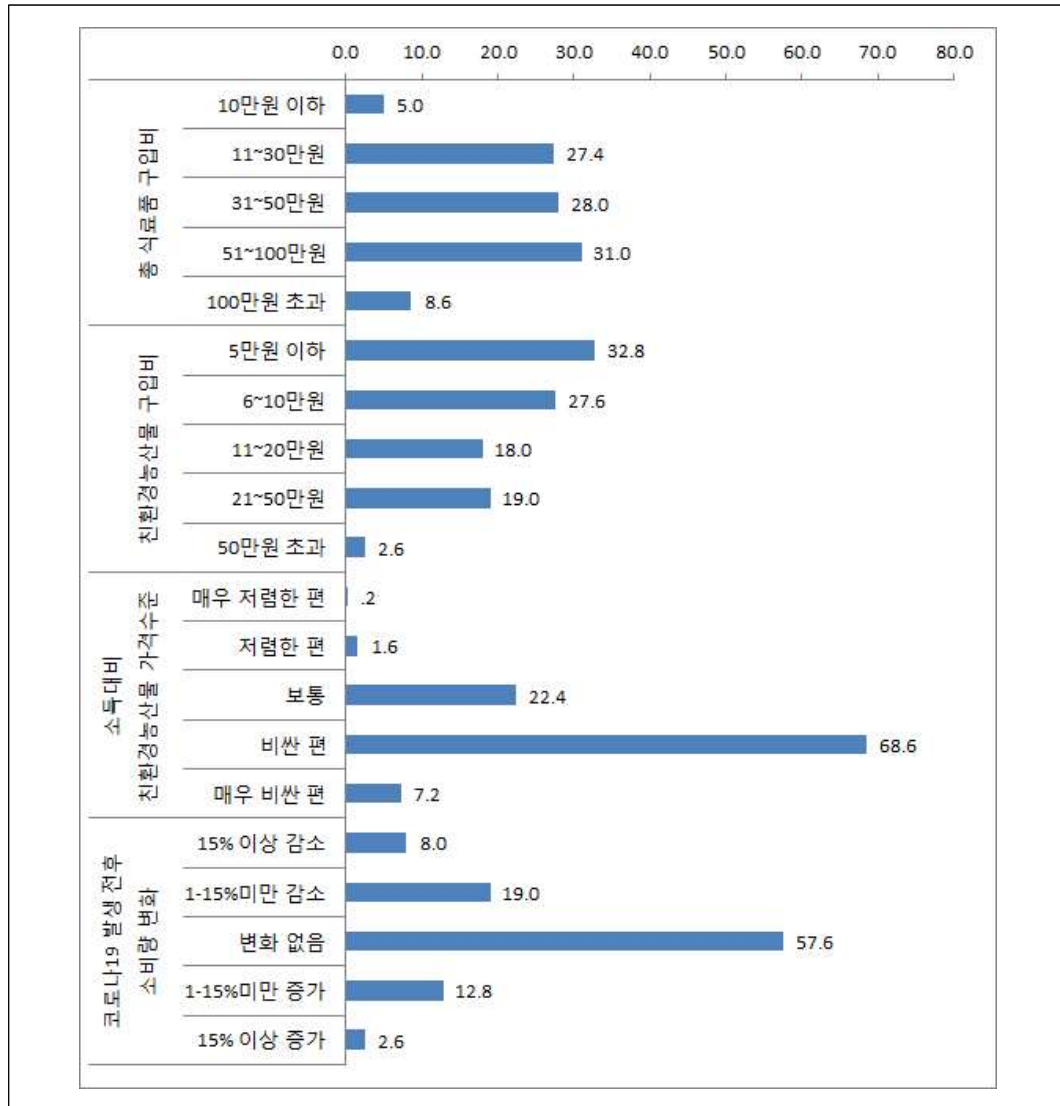
○ 한 달 평균 총 식료품의 구입비용은 ‘50~100만 원 미만’이 31.0%, ‘31~50만 원 미만’이 28.0%로 나타남. 이 중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1~5만 원 미만’이 32.8%, ‘6~10만 원’이 27.6%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친환경농산물 소비량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57.6%, ‘1~15% 미만 감소’ 19.0%, ‘1~15% 미만 증가’ 12.8% 순으로 나타남.

17) 할증금으로 일정한 가격, 급료 따위에 여분을 더하여 주는 금액을 말함.

<그림 3-6> 친환경농산물 가격부문 조사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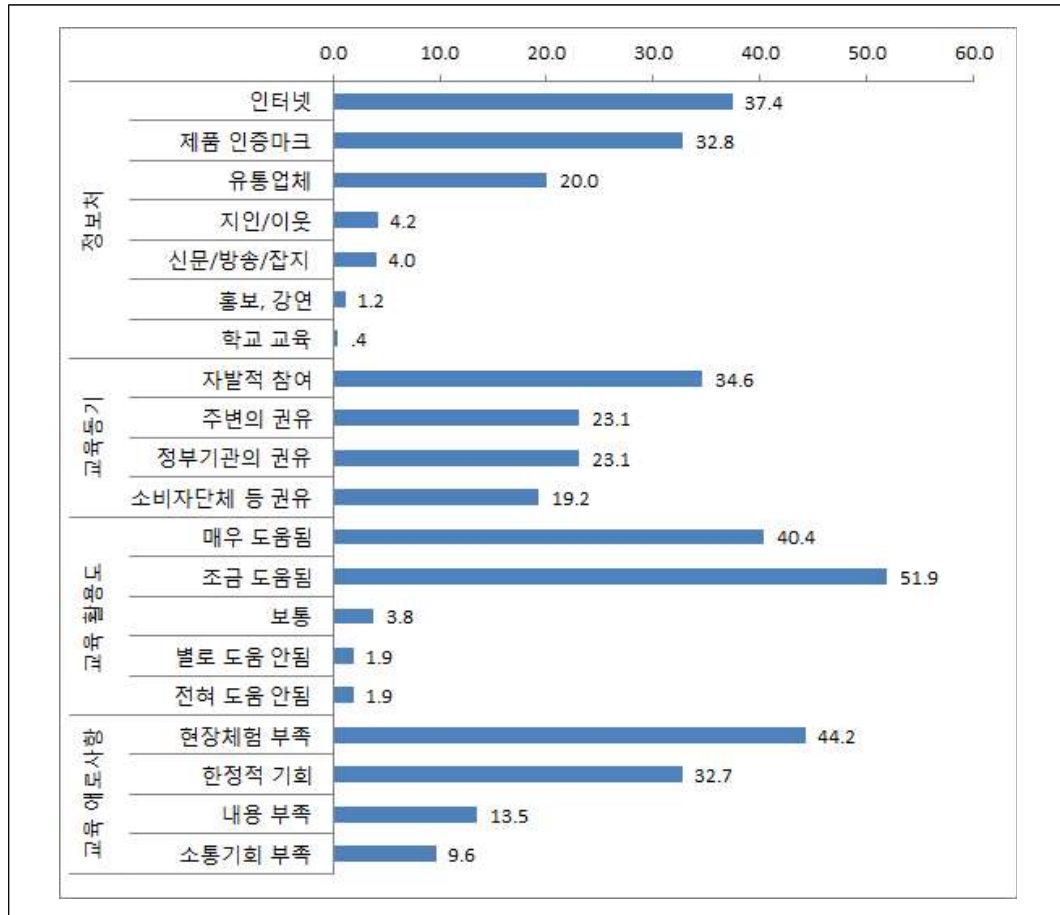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교육

○ 친환경농산물 관련 정보처 1순위는 ‘인터넷’이 37.4%, ‘제품에 친환경 인증 마크를 보고’ 32.8%, ‘유통업체’ 20.0%, ‘지인/이웃’ 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순위의 가중 평균도 결과 ‘제품의 친환경 인증 마크를 보고’가 61.4%, ‘인터넷’ 56.6%, 유통업체 43.0%, ‘지인/이웃’ 17.8%로 나타남.

<그림 3-7>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교육부문 조사 결과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4%였으며, 참석 동기는 자발적 참여가 34.6%, 주변 및 정부기관의 권유 23.1%, 소비자단체 혹은 환경단체의 권

유가 19.2%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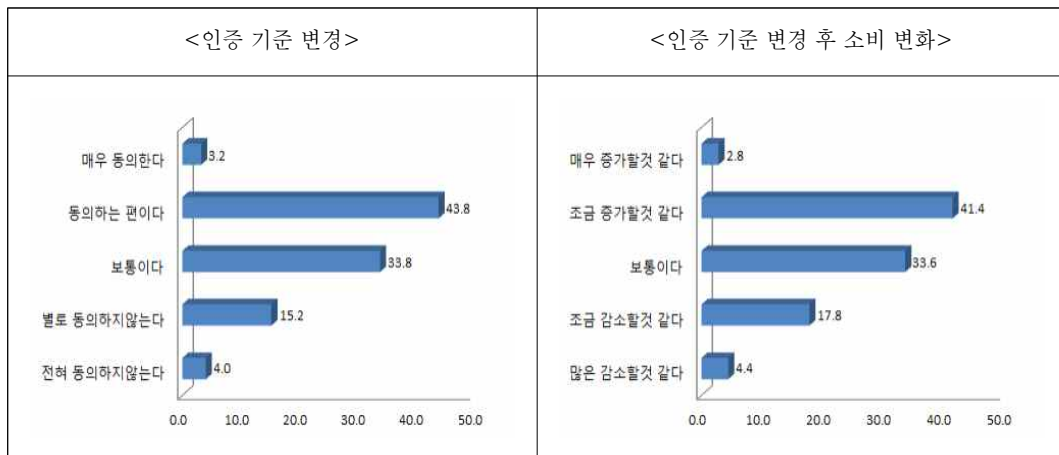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 교육 활용도는 ‘조금 도움됨’ 51.9%, ‘매우 도움됨’이 40.4%로 대부분이 교육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남. 반면 친환경농업 교육 관련 애로사항은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이며, 생산현장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다’ 44.2%, ‘친환경농업 교육 기회가 한정적이다’ 32.7%,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 13.5%, ‘생산자들과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 9.6% 등의 의견이 있었음.

사. 친환경 인증 관련 정책 - 과정 중심의 인증

- 현재 논의 중인 친환경 인증 기준 변경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는 43.8%, ‘매우 동의한다’ 3.2%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3.8%로 인증 기준 변경에 공감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친환경 인증 기준 전환이 일어난 후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 변화는 ‘조금 증가할 것 같다(41.4%)’, ‘매우 증가할 것 같다(2.8%)’가 ‘조금 감소할 것 같다(17.8%)’, ‘매우 감소할 것 같다(4.4%)’ 보다 높은 44.2%로 나타남.

<그림 3-8> 친환경 인증 관련 정책부문 조사 결과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19. ~ 2020. 11. 16.).

1.2. 친환경 가공식품 소비 실태

1.2.1. 조사개요

○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조사기간: 2020. 10. 26. ~ 2020. 11. 25.). 조사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경험자 총 500명으로 하였음.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30대가 114명(22.8%), 40대가 141명(28.2%), 50대가 130명(26.0%), 60대 이상이 84명(16.8%)으로 나타났음.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79.0%, 고졸 이하가 21.0%를 차지함.

○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9.4%, 200만 원대 18.8%, 300만 원대 17.6%, 400만 원대 16.8%, 500만 원 이상이 37.4%를 차지하였음. 조사대상자의 거주 가족 수는 4인 이상이 36.0%였으며, 거주 자녀가 없는 가족은 68.4%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성장지역은 대도시 출신이 55.6%로 많았으며, 농촌 출신은 8.6%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3-3> 친환경 가공식품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구분	응답자 수	비중
거주지역	수도권	200	40.0
	수도권 외	300	60.0
연령대	20대	31	6.2
	30대	114	22.8
	40대	141	28.2
	50대	130	26.0
	60대 이상	84	16.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5	21.0
	대학교 졸업	340	68.0
	대학원 졸업 이상	55	11.0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47	9.4
	200만 원대	94	18.8
	300만 원대	88	17.6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비중
소득수준	400만 원대	84	16.8
	500만 원 이상	187	37.4
성장지역	대도시	278	55.6
	중소도시	179	35.8
	농촌	43	8.6
거주 가족 수	1인	43	8.6
	2인	128	25.6
	3인	149	29.8
	4인 이상	180	36.0
거주 자녀 유무	있다	158	31.6
	미취학 및 초등학교	108	-
	중학생 및 고등학교	73	-
	없다	342	68.4
계		5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1.2.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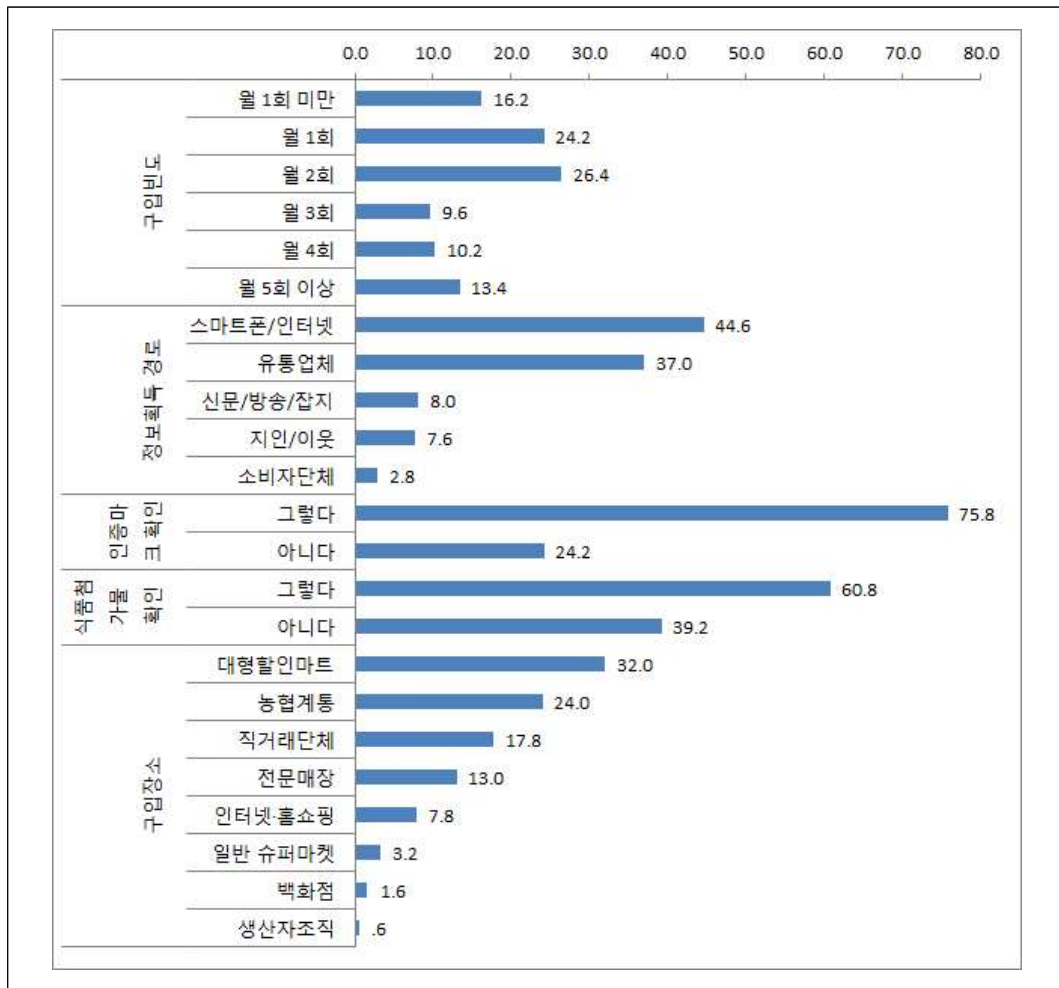
가. 친환경 가공식품 인식

- 친환경 가공식품을 매월 지속적으로 구입한 그룹은 83.8%이며, 월 평균 구입 빈도는 월 2회는 26.4%, 월 1회는 24.2%, 월 5회 이상은 13.4% 순으로 나타남. 친환경 가공식품 정보획득 경로는 주로 ‘스마트폰·인터넷(44.6%)’과 ‘유통업체(37.0%)’이었으며, ‘신문·방송·잡지(8.0%)’, ‘지인·이웃(7.6%)’, ‘소비자단체(2.8%)’ 순으로 나타남.
-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75.8%,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24.2%이며,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는 60.8%로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 39.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 중 제품 포장 겉면의 “유기” 혹은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보고 구입하는 소비자는 66.9%로 나타남.
-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장소 1순위는 ‘대형할인마트’ 32.0%, ‘농협계통(하나로클럽)

립, 하나로마트)’ 24.0%, 직거래단체(한살림, 한국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 등)’ 17.8%, ‘전문매장(초록마을, 유기농하우스 등)’ 13.0%, ‘인터넷 또는 홈쇼핑(온라인)’ 7.8% 등으로 나타남.

<그림 3-9> 친환경 가공식품 인식 조사 결과

단위: %



주: 구입장소는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나 1순위 결과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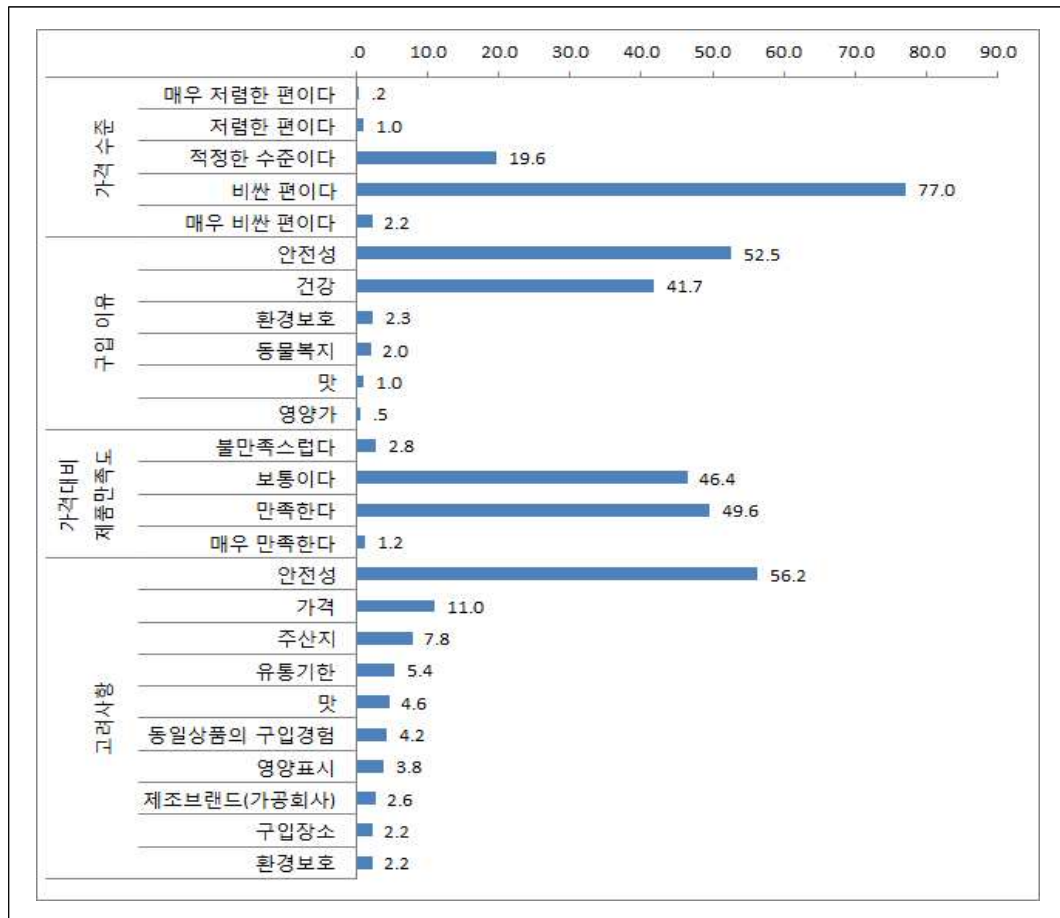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나. 구입 경험 평가 및 향후 구매 의향

- 친환경 가공식품의 가격 수준은 ‘비쌌’이 77.0%로 대다수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적정’은 19.6%로 나타남. 비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입한 이유는 ‘안전성’이 52.5%, ‘건강’이 41.7%로 나타남.
- 친환경 가공식품의 가격대비 제품(품질)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9.6%, ‘보통이다’가 46.4%로 ‘불만족스럽다’ 2.8%보다 높게 나타남.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 1순위에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안전성’이 56.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임.

<그림 3-10>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 경험 조사 결과

단위: %



주: 고려사항은 1~3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나 1순위 결과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 친환경 가공식품의 구매빈도에 대해 ‘월 1회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품목류는 쌀가공식품, 유가공품, 밀가공식품, 신선반찬류, 조미양념류로 나타남. 구입 시 품질 속성별 고려 정도를 살펴본 결과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항목은 원산지, 가격, 영양소, 맛, 농도/たく도, 첨가물 등이었음.

<표 3-4> 친환경 가공식품 구매 빈도

단위: %

구분	월 0회	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월 5회 이상
쌀가공식품 (떡류, 죽류 등)	41.8	43.8	8.6	2.6	1.8	1.4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16.4	28.2	22.8	10.6	10.0	12.0
밀가공식품 (밀가루, 면류, 빵류 등)	23.8	39.8	16.4	8.8	6.0	5.2
유아식 / 분유	87.4	5.6	2.4	1.2	1.6	1.8
신선반찬류 (김치, 두부, 장아찌 등)	28.2	28.2	19.8	10.2	7.8	5.8
조미양념류 (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40.6	44.6	9.8	3.4	1.0	0.6
다류 (녹차, 등글레차 등)	53.0	36.2	6.6	2.4	.8	1.0
음료류 (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41.4	32.0	13.8	5.8	4.0	3.0
과자류 (쿠키, 스낵, 시리얼 등)	41.8	24.8	13.8	9.6	4.6	5.4
기타 (잼류, 유가공품 등)	54.6	35.6	6.4	1.8	0.8	0.8

주: ()는 일반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표 3-5>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 시 품질 속성별 고려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원산지	0.6	1.4	11.4	56.0	30.6
가격	0.2	0.8	9.8	66.0	23.2
영양소	0.2	0.6	15.0	60.6	23.6
맛	0.4	0.6	11.2	61.8	26.0
색깔	0.8	10.4	49.2	33.2	6.4
용기	1.0	9.4	47.8	34.8	7.0
제품브랜드	1.0	4.4	44.2	42.0	8.4
농도/たく도	0.6	5.0	42.2	44.2	8.0
첨가물	0.8	0.6	14.8	47.6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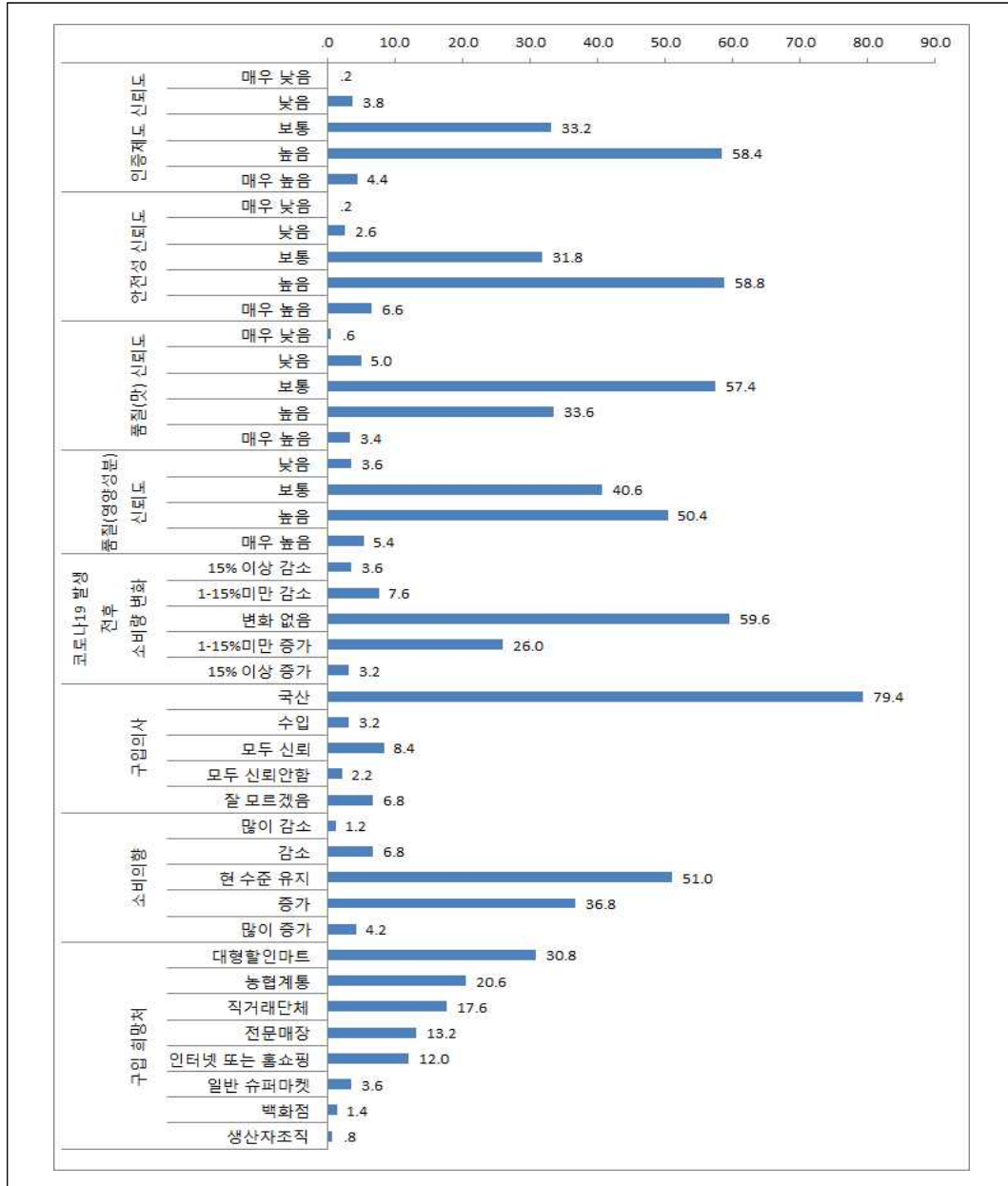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 친환경 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전성, 품질(영양성분)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높음’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품질(맛)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친환경 가공식품 소비량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59.6%, ‘1~15% 미만 증가’ 26.0%, ‘1~15% 미만 감소’ 7.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 친환경 가공식품 만족도 및 향후 구매의향 조사결과

단위: %



주: 구입 희망처는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나 1순위 결과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 중 안전성 면에서 ‘국산을 더 신뢰’가 79.4%, ‘모두 신뢰’가 8.4% 비중으로 응답하여 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87.8%로 나타남. 또한,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선호도 결과 역시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가 75.4%였으며, ‘품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는 22.8%로 나타남.
 - 향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가 확대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가 63.4%, ‘품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가 35.4%로 나타남.
- 친환경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6.2%, ‘차이가 없는 것 같음’이 23.8% 등으로 분석되었음. 소비의향은 ‘현 수준 유지’가 51.0%, ‘증가’가 41.0%로 나타남.
- 향후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입하기로 희망하는 곳(1순위)은 ‘대형할인마트 30.8%’, ‘농협계통’ 20.6%, ‘직거래단체’ 17.6%, ‘전문매장’ 13.2%, ‘인터넷 또는 홈쇼핑’ 12.0% 등으로 나타남.
- 향후 구입을 확대할 의사가 가장 큰 품목은 ‘신선반찬류’가 33.2%, ‘밀가공식품’이 23.0%, ‘쌀가공식품’이 12.8% 등으로 나타남.

<표 3-6> 향후 구입확대 의향 품목

구분	비율	단위: %
신선반찬류 (김치, 두부, 장아찌 등)	33.2	
밀가공식품 (밀가루, 면류, 빵류 등)	23.0	
쌀가공식품 (떡류, 죽류 등)	12.8	
조미양념류 (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9.0	
음료류 (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7.2	
유아식 / 분유	4.0	
다류 (녹차, 등글레차 등)	4.0	
과자류 (쿠키, 스낵, 시리얼 등)	3.8	
기타 (잼류, 유가공품 등)	3.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다. 친환경 가공식품 가격부문

- 일반 가공식품 가격 대비 친환경 가공식품의 시장가격 수준은 품목과 인증단계에 따라 다르나 가격 프리미엄은 국산 유기가공식품 30~44%, 국산 무농약가공식품 37~56% 수준임.

<표 3-7>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 구입가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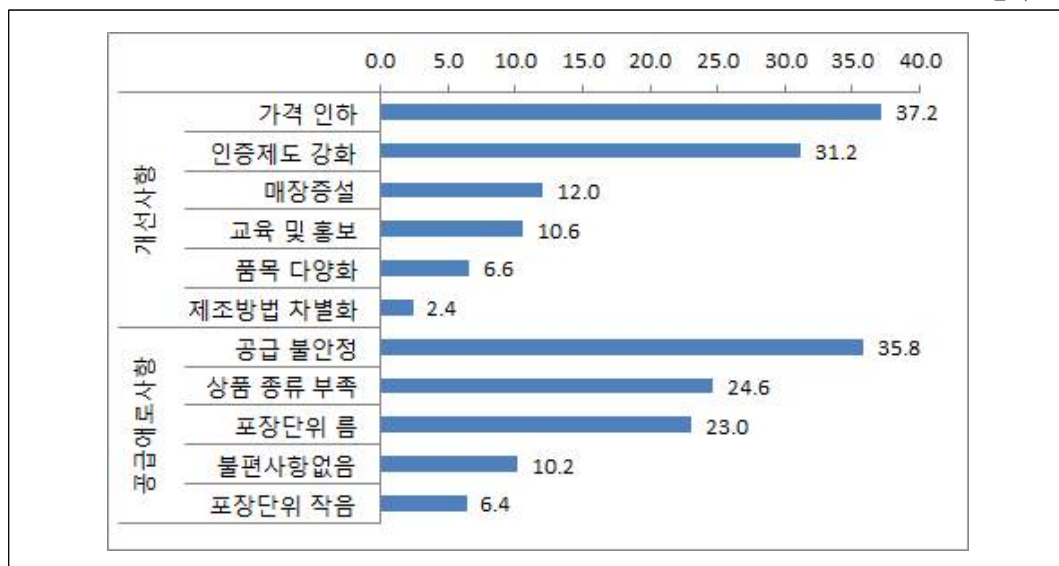
구분	일반 가공식품	국산 유기가공식품		국산 무농약가공식품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	1,391	(139)	1,499	(149)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1,333	(133)	1,425	(143)
유아식 / 분유		1,441	(144)	1,562	(156)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1,355	(136)	1,453	(145)
조미양념류(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1,332	(133)	1,434	(143)
다류(녹차, 동글레차 등)		1,296	(130)	1,391	(139)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1,323	(132)	1,429	(143)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279	(128)	1,374	(137)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323	(132)	1,424	(142)
평균		1,341	(134)	1,444	(144)

주: ()는 일반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은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37.2%, ‘인증제도 관리강화로 신뢰 제고’가 31.2%로 나타남.
- 친환경 가공식품의 상품단위 또는 공급과 관련한 빈번한 애로사항으로는 ‘원하는 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상품이 있다가 없는 경우)’가 35.8%,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24.6%, ‘원하는 상품은 있으나 포장단위(용량)가 너무 큰 경우’가 23.0%로 나타남.

<그림 3-12> 친환경 가공식품 가격부문 조사 결과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라. 비식용 유기가공품 부문

○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현재 유기사료만 국내 인증을 하고 있으며, 다른 가공품들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유기농 표시가 되어 유통되거나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18.4%에 불과함. 비식용 유기가공품별 구입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치약, 비누, 세제’가 56.8%, ‘화장품’이 50.6%, ‘섬유, 의류’가 37.4%, ‘유아용품’이 27.4%로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을 평균적으로 구입하는 빈도는 유아용품은 ‘불규칙한 구입’이 44.5%로 나타났으며, 섬유·의류와 화장품은 ‘6개월마다 1회’로 각각 26.2%, 30.0%, 치약·비누·세제와 애완견사료는 ‘2~3개월마다 1회’로 각각 38.4%, 42.6%의 응답비율을 보임.

<표 3-8> 비식용 유기가공품 평균 구입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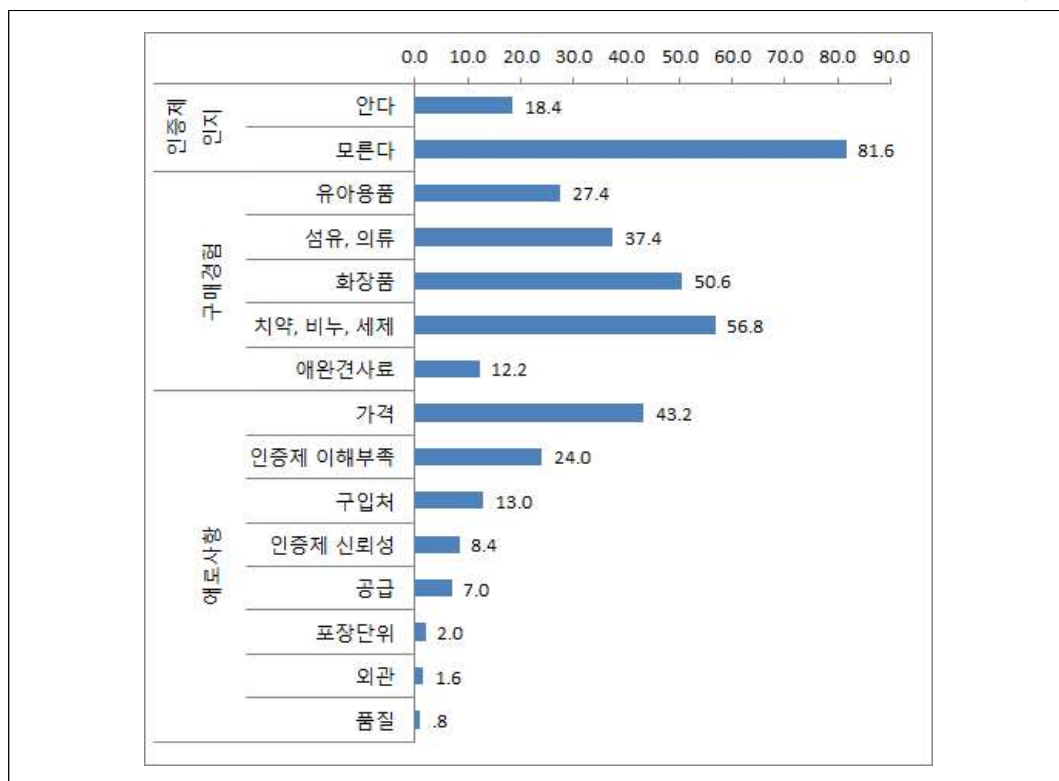
구분	월 1~2회 이상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이하	불규칙한 구입
유아용품	18.2	21.9	5.1	10.2	44.5
섬유·의류	10.2	25.1	26.2	13.4	25.1
화장품	7.5	25.7	30.0	18.6	18.2
치약·비누·세제	10.6	38.4	26.4	9.2	15.5
애완견사료	8.2	42.6	14.8	16.4	18.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 비식용 유기가공품 구입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구입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 1순위는 ‘가격이 비싸서’가 43.2%,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저하’가 24.0%로 나타남.

<그림 3-13> 비식용 유기가공품 부문 조사 결과

단위: %



주: 애로사항은 1~2순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나 1순위 결과만 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 비식용 일반가공품의 가격을 10,000원으로 보았을 때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적정 가격은 평균 12,415원으로 나타남. 화장품이 12,92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애완견사료가 11,916원으로 가장 낮음.

<표 3-9> 비식용 유기가공품 품목별 적정 가격

단위: 원

구분	비식용 일반가공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유아용품	10,000	12,645
섭유·의류		12,602
화장품		12,923
치약·비누·세제		11,988
애완견사료		11,916
평균		12,41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0. 26. ~ 2020. 11. 25.).

1.3. 친환경농식품 소비 실태 조사의 시사점

- 첫째, 향후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 모두에 대해 향후 소비 증가를 응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경우 소비량의 증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 둘째, 코로나19와 소비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비량이 감소했다는 비중(19.0%)이 증가했다는 비중(12.8%)보다 6.2%p 높았음. 친환경가공식품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응답비중(29.2%)이 감소했다는 비중(11.2%)보다 18.0%p 높았음. 향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량 증가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셋째, 구매경험자들은 친환경농식품의 가격을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구입 애로사항으로 가격관련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74~96%, 적정 프리미엄은 44~56%로, 약 35%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낮춘다면 소비

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년 전 조사에서는 가격프리미엄과 적정프리미엄 격차가 약 20%이었으나 15%p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기농산물 가격 프리미엄이 상승했기 때문임.

- 넷째, 구입장소로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대형할인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년 전과 비교하면, 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백화점의 비중은 줄어들고, 농협계통, 인터넷 및 홈쇼핑, 일반 슈퍼마켓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특히 인터넷 및 홈쇼핑, 일반 슈퍼마켓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유통, 비밀집 장소를 선호한 결과로 보임.
- 다섯째, 향후 구입을 확대할 의사가 가장 큰 친환경 가공식품은 ‘신선반찬류’(33.2%), ‘밀가공식품’(23.0%), ‘쌀 가공식품’(12.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37.2%), ‘인증제도 관리 강화로 신뢰 제고’(3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여섯째, 소비자들은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상당수가 인증마크와 식품첨가물 등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함.
- 일곱째, 비식용 유기가공품 평균 구입 빈도는 5년 전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했으며, 비식용 유기가공품별 구입 경험은 ‘치약, 비누, 세제’(56.8%), ‘화장품’(50.6%), ‘섬유, 의류’(37.4%) 등의 순으로 많았음. 구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가격(43.2%)을 꼽았으며, 이어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저하’(24.0%)를 선택함.

2. 생산자 인식조사

2.1. 친환경농업 농업인 설문조사

2.1.1. 설문조사 개요

-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판매 및 생산 현황,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500명을 대상으로 함. 총 응답 수는 306명으로 집계됨.
- 설문조사에 응한 친환경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성별의 경우, 남성이 86.5%로 많았으며, 연령은 60대가 42.3%, 50대가 3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총 영농경력은 5~15년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농가의 비율도 25.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 재배면적의 경우, 1ha 미만이 49.1%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ha가 28.0%, 2ha 이상이 23.0%로 조사됨.
- 친환경농업의 유형은 유기농업만 하는 농가가 40.9%,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37.8%, 유기와 무농약을 함께 하는 농가가 21.3%로 조사됨. 친환경농업의 경력을 살펴보면, 5~15년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1.0%로 높았음. 친환경 재배면적은 0.5ha 미만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0.5~1.0ha라고 응답한 비율이 28.1%로 나타나 1.0ha 미만이 75.6%를 차지하였음.

<표 3-10> 친환경 농가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성별	남	263
	여	41
연령	30대 이하	19
	40대	26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연령	50대	98	32.1
	60대	129	42.3
	70대 이상	33	10.8
거주지역	경기	19	6.4
	강원	32	10.7
	충북	21	7.0
	충남	42	14.1
	전북	41	13.8
	전남	51	17.1
	경북	58	19.5
	경남	34	11.4
지역형태	평야지대	73	24.2
	산간지대	64	21.2
	준산간지대	117	38.7
	도시근교	48	15.9
학력	초졸 이하	3	1.0
	중졸	17	5.6
	고졸	77	25.6
	대졸	167	55.5
	대학원졸	37	12.3
영농경력	5년 미만	13	4.3
	5~15년	157	51.5
	15~25년	58	19.0
	25년~35년	41	13.4
	35년 이상	36	11.8
친환경농업 유형	유기	119	40.9
	무농약	110	37.8
	유기+무농약	62	21.3
친환경농업 경력	5년 미만	90	31.0
	5~15년	145	50.0
	15~25년	52	17.9
	25년~35년	3	1.0
	35년 이상	0	0.0
총 재배면적	0.5ha 미만	64	21.1
	0.5~1ha	85	28.0
	1~1.5ha	38	12.5
	1.5~2ha	47	15.5
	2~2.5ha	34	11.2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총 재배면적	2.5ha 이상	36	11.8
	0.5ha 미만	140	47.5
친환경 재배면적	0.5~1ha	83	28.1
	1~1.5ha	16	5.4
	1.5~2ha	22	7.5
	2~2.5ha	17	5.8
	2.5ha 이상	17	5.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2.1.2. 설문조사 결과

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관련 현황

○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약 36.8%의 응답자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25.8%는 현재 수준보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농업도 친환경농업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농법과 관련없이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농업도 친환경농업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26.5%로 높게 조사됨.

<표 3-11> 친환경농업 개념에 대한 인식

구분	단위: 명, %	
	응답 수	비율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만이 친환경농업임	111	36.8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현재보다 상당히 줄이는 저투입농업이 친환경농업임	78	25.8
어떤 농법을 적용하든 상관없이 환경을 건실하게 유지·보전하는 농업이 친환경농업임	80	26.5
친환경농업의 개념이 모호하여 규정하기 어려움	33	10.9
합계	302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농약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27.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24.1%)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음.

<표 3-12>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평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	25.4	21.5	24.1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서	2.0	4.6	2.9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8.0	22.5	32.8
개방화 시대의 미래 농업의 대안	1.7	11.3	4.9
환경직접지불금 지원	1.7	3.0	2.1
농약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26.1	30.5	27.5
지도자의 권유(주위 농가의 권유)	1.7	2.3	1.9
시·군청/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	2.6	3.3	2.9
기타	1.0	1.0	1.0
합계	100.0	100.0	100.0

주1: 1순위 n=303, 2순위 n=302.

주2: 가중평균은 (1순위x2/3 + 2순위x1/3)로 계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 시 환경 개선(43.4%)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수익성(26.2%)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비율도 높았음.

<표 3-13> 친환경농법 전환 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노동력	29	9.6
생산비	17	5.6
생산량	16	5.3
판매가격	30	9.9
소득(수익성)	79	26.2
환경 개선	131	43.4
합계	302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농업 실천 시 병해충 관리 및 제초 등 생산 기술에 대한 어려움(48.8%)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판로 확보의 어려움(18.3%), 복잡한 인증절차(11.6%)에 대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친환경농업 실천 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평균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의 어려움(병해충, 제초 문제 등)	69.1	8.3	48.8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	13.8	27.4	18.3
적당한 친환경농자재 제조 및 확보의 어려움	2.6	15.2	6.8
복잡한 인증절차	6.9	21.1	11.6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부족 및 정보획득의 어려움	2.6	9.6	4.9
정분나 지자체의 지원 부족	4.6	13.9	7.7
농민을 이끌어갈 유능한 지도자의 부재	0.0	3.3	1.1
기타	0.3	1.3	0.7
합계	100.0	100.0	100.0

주1: 1순위 n=303, 2순위 n=303.

주2: 가중평균은 (1순위x2/3 + 2순위x1/3)로 계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은 과거 대비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하였다는 비율이 45.9%로 증가 또는 매우 증가하였다는 비율(11.3%) 대비 매우 높았음. 큰 변화가 없다는 비율도 42.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3-15> 최근 3년간 과거 대비 친환경농업 수익성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매우 감소	15	5.0
감소	123	40.9
변화 없음	129	42.9
증가	33	11.0
매우 증가	1	0.3
합계	30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향후 친환경농업의 수익성 전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친환경 농가의 50.2%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2%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21.6%)보다 일부 높게 나타남.

<표 3-16> 향후 친환경농업 수익성 전망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악화	66	21.6
변화 없음	153	50.2
개선	86	28.2
합계	30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생협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친환경 농가의 비율은 10.2%로 조사됨.

<표 3-17> 생협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예	31	10.2
아니오	272	89.8
합계	30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생협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친환경 농가 중 48.4%가 자주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하는 이유는 ‘판로 확보를 위해’(40.0%)가 가장 많았으며, ‘유기나 무농약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20.0%), ‘자주인증 비용을 생협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20.0%)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음.

<표 3-18> 자주인증제도 참여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참여 여부	예	15	48.4
	아니오	16	51.6
	합계	31	100.0
참여 이유	유기나 무농약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3	20.0
	자주인증 비용 지원을 생협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3	20.0
	농자재 지원을 받기 때문에	2	13.3
	판로 확보를 위해	6	40.0
	기타	1	6.7
	합계	1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나. 친환경농산물 판매 관련 현황

-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는 데(54.0%)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판매가격(33.8%)이 낮은 것도 주요 어려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19> 친환경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평균
안정적 판매처 확보	71.9	18.2	54.0
포장/운송비용	5.3	11.9	7.5
판매대금 결제	0.7	2.1	1.1
판매가격	19.5	62.5	33.8
판매계약 불이행	0.3	4.9	1.9
기타	2.3	0.4	1.7
합계	100.0	100.0	100.0

주1: 1순위 n=303, 2순위 n=285.

주2: 가중평균은 (1순위x2/3 + 2순위x1/3)로 계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관행농산물로 출하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비율은 36.2%로 조사되었으며, 관행농산물로 출하하는 물량의 비중은 67.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관행농산물 출하 여부 및 비중

단위: %			
구분	응답 수	비율	출하 비중
예	108	36.2	67.7
아니오	190	63.8	-
합계	298	100.0	-

주: 출하 비중 n=10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소비자에 대한 직판매(38.0%)로 출하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공동출하(15.0%),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 법인을 통한 공동 출하(13.7%), 전자상거래(12.6%) 순으로 출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대형유통업체(2.9%), 대형물류센터 등에 출하(4.5%)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3-21> 친환경농산물 출하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평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을 통한 공동 출하	15.2	10.8	13.7
농협 공동출하	15.2	14.6	15.0
대형유통업체	2.7	3.3	2.9
대형물류센터(도매시장) 등에 출하	3.4	6.7	4.5
소비자단체(생협 등)를 통한 출하	6.4	9.6	7.5
소비자 직판매(농장직판, 택배)	44.3	25.4	38.0
전자상거래	9.8	18.3	12.6
기타	3.0	11.3	5.8
합계	100.0	100.0	100.0

주1: 1순위 n=296, 2순위 n=240.

주2: 가중평균은 (1순위x2/3 + 2순위x1/3)로 계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직거래(46.0%)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농협(17.1%), 도매시장(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2> 출하처별 출하 비중

단위: %

구분	비중
학교 급식	5.4
대형유통업체	4.3
생협	3.3
지역농협	17.1
중간유통업체(벤더)	4.3
도매시장	8.3
가공업체	3.2
직거래	46.0
기타	8.0
합계	100.0

주1: 물량 기준.

주2: n=29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일반 농산물을 1,000원으로 가정할 때, 유기 인증 농산물에 대한 희망 수취 가격은 1,600원에서 1,900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과채류 및 과실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경우, 희망 수취 가격이 1,500원에서 1,850원 수준으로 유

기 인증 농산물에 비해 일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희망 수취 가격 차이는 약 100원에서 150원 이었으나, 과실류의 경우 차이가 30원 수준에 불과하였음. 이는 무농약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 과실류를 재배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 3-2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희망 수취 가격

단위: 원

구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희망 수취 가격	응답자 수	희망 수취 가격	응답자 수
곡류(쌀, 잡곡 등)	1,628	161	1,493	153
채소류(상추, 배추 등)	1,693	153	1,620	135
과채류(딸기, 토마토 등)	1,707	133	1,554	124
과실류(사과, 배 등)	1,888	169	1,855	149

주: 일반 농산물 가격 기준=1,000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교육 확대’(27.5%), ‘판매처의 확대 및 판로 다양화’(25.2%)가 가장 많이 언급됨.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17.8%),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 확대(도농교류 확대)’(14.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3-24>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평균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인하	3.7	0.7	2.7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교육 확대	34.0	14.4	27.5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19.2	15.1	17.8
판매처의 확대 및 판로 다양화	24.6	26.4	25.2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 확대(도농교류 확대)	9.8	24.3	14.6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다양화 및 지속적인 공급체계 구축	8.4	18.8	11.9
기타	0.3	0.3	0.3
합계	100.0	100.0	100.0

주1: 1순위 n=297, 2순위 n=292.

주2: 가중평균은 (1순위x2/3 + 2순위x1/3)로 계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다. 친환경농업 교육 관련 현황

○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환경 농가는 79.1%로 대다수의 농가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은 주로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69.3%)를 통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5>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여부 및 기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예	238	79.1	
기술센터	165	69.3	
대학	19	8.0	
친환경단체	19	8.0	
환경학교	4	1.7	
귀농귀촌 지원단체	7	2.9	
농협	3	1.3	
품관원	8	3.4	
기타	13	5.5	
합계	238	100.0	
아니오	63	20.9	
합계	30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교육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응답(64.0%)이 가장 많았으며, 시·군청이나 기술센터의 권유로 참여하였다는 응답 비율도 24.2%로 높게 조사됨.

<표 3-26>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동기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자발적 참여	169	64.0	
시·군청/기술센터 권유	64	24.2	
주변 농가의 권유	6	2.3	
환경농업단체의 권유	19	7.2	
농협의 권유	2	0.8	
기타	4	1.5	
합계	26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73.9%)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매우 낮았음.

<표 3-27>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매우 도움됨	64	24.5
조금 도움됨	129	49.4
보통	51	19.5
별로 도움안됨	16	6.1
전혀 도움안됨	1	0.4
합계	26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농업 교육은 실질적인 영농기술 습득(47.7%)과 농가의 의식 전환(44.1%)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반해,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부분, 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8> 친환경농업 교육이 도움이 된 분야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농민 의식전환	113	44.1
지도자 양성	6	2.3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	12	4.7
영농기술 습득	122	47.7
기타	3	1.2
합계	256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농업 교육 실시기관으로는 시·군청이나 기술센터(70.7%)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는 민간기관(10.3%)이나 대학을 통한 위탁 교육(7.2%)을 선호하였음.

<표 3-29> 친환경농업 교육 시 선호하는 교육 기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시·군청/기술센터를 통한 교육	205	70.7
민간기관을 통한 교육	30	10.3
대학을 통한 위탁 교육	21	7.2
특별한 교육기관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 가능	25	8.6
기타	9	3.1
합계	29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 관련 정보를 주로 시·군청이나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영농교육 및 지도(51.9%)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농업단체(14.7%), 이웃 농가(10.2%)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음. 이에 비해, 농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3-30> 친환경농업 관련 실천기술 및 정보 취득 경로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이웃 농가	30	10.2
시·군청/기술센터의 영농교육/지도	152	51.9
농자재판매상	14	4.8
환경농업단체	43	14.7
농협	6	2.0
신문/잡지	21	7.2
인터넷, SNS, 유튜브 등	22	7.5
기타	5	1.7
합계	29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친환경 농업 중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농민 의식전환(38.3%), 영농기술 습득(29.2%),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23.1%) 순으로 나타남.

<표 3-31> 친환경농업 교육 중 보완 필요 분야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농민 의식전환	113	38.3
지도자 양성	23	7.8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	68	23.1
영농기술 습득	86	29.2
기타	5	1.7
합계	29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2.1.3. 시사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 판매, 친환경농업 교육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친환경농업 실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의 어려움(병해충, 제초 문제 등)’(48.8%)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제시했으며,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18.3%)이라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 수익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5.9%로 (매우)증가했다는 비율(1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함. 한편 향후 친환경농업의 수익성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28.2%)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중(21.6%)보다 높게 나타남.
- 생협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친환경농업인은 10.2%였으며, 이들 가운데 자주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농업인 비중은 48.4%로 나타남. 참여하는 이유로는 ‘판로 확보를 위해’(40.0%)가 가장 많았으며, ‘유기나 무농약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20.0%), ‘자주인증 비용을 생협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20.0%)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음.

-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54.0%)를 꼽았으며 ‘낮은 판매가격(33.8%) 또한 주요 어려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관행 농산물로 출하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의 비율이 36.2%로 조사 되었는바 이는 적절한 판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친환경농산물 판로 검토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교육 확대’(27.5%), ‘판매처의 확대 및 판로 다양화’(25.2%) 등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음.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17.8%),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 확대(도농교류 확대)’(14.6%) 등도 골고루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동시에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친환경농업 교육 실시기관으로는 시·군청이나 기술센터(70.7%)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친환경 농업 중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농민 의식전환(38.3%), 영농기술 습득(29.2%),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23.1%)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시·군청이나 기술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교육체계 정비를 통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농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2. 유기농업자재 이용 실태¹⁸⁾

- 친환경 농가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63.9%)에 대한 지출 비중이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36.1%)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두 종류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모두 부산물비료나 천연식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에

¹⁸⁾ 이 절은 성재훈 외(2020)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부산물비료 등록 제품의 지출 비중(52.1%)이 미등록 제품(6.1%)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의 경우,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 자재 지출 비중은 63.5%이며, 이중 부산물비료로 등록된 제품이 82.2%로 대부분을 차지함.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출 비중은 36.6% 수준이었으며,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또한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제품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관행 농가의 경우에도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지출 비중이 71.7%로 나타남.

<표 3-32> 유기농업자재 종류 및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비율
친환경 농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부산물비료 등록 제품	57.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부산물비료 미등록 제품	6.7
	[병해충관리용]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제품	28.9
	[병해충관리용] 천연식물보호제 미등록 제품	7.2
친환경+관행 농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부산물비료 등록 제품	52.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부산물비료 미등록 제품	11.3
	[병해충관리용]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제품	29.4
	[병해충관리용] 천연식물보호제 미등록 제품	7.2
관행 농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부산물비료 등록 제품	56.7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부산물비료 미등록 제품	15.0
	[병해충관리용]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제품	22.0
	[병해충관리용] 천연식물보호제 미등록 제품	6.2

주1: 친환경 농가 n=204, 친환경+관행 농가 n=134, 관행 농가 n=93.

주2: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주3: 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나타낸 값으로 가격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성재훈 외(2020).

○ 농가 유형과 관련없이 친환경농업+관행농가, 관행 농가 모두 주로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각각 41.3%, 43.8%), 양분종합관리나 병해충종합관리를 위해(각각 21.7%, 33.3%)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유기농업자재 사용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친환경+관행 농가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41.3
	양분종합관리나 병해충종합관리를 위해	21.7
	농작업시 위해성 때문에	9.8
	PLS 등에 대응하기 위해	9.1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16.8
	기타	1.4
관행 농가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43.8
	양분종합관리나 병해충종합관리를 위해	33.3
	농작업시 위해성 때문에	6.3
	PLS 등에 대응하기 위해	14.6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2.1
	기타	0.0

주1: 친환경+관행 농가 n=143, 관행 농가 n=96.

주2: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자료: 성재훈 외(2020).

○ 농가들이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효과(46.1%)로 나타났으며, 품질의 안정성(28.1%), 가격(15.1%)도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반해 원료의 종류(5.3%), 브랜드(0.6%)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농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4>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평균
효과	54.5	29.2	46.1
품질의 안정성	27.2	30.0	28.1
가격	10.4	24.3	15.1
원료의 종류	3.4	9.1	5.3
주변 추천	3.4	6.9	4.6
브랜드	0.7	0.4	0.6
기타	0.4	0.0	0.2

주1: 1순위 n=556, 2순위 n=506.

주2: 가중평균은 (1순위x2/3 + 2순위x1/3)로 계산함.

자료: 성재훈 외(2020).

- 전반적으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종류와 관계없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는 제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품질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친환경 농가는 종합적으로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만족도(3.3점)가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2.6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5>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단위: %

구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평균 점수	표본 수	평균 점수	표본 수
친환경 농가	제품 가격	2.5	310	2.1	297
	품질	2.9	302	2.7	297
	서비스	2.8	301	2.7	298
	종합	3.3	302	2.6	295
친환경+관행 농가	제품 가격	2.5	134	2.3	125
	품질	2.9	134	2.7	89
	서비스	2.7	132	2.5	121
	종합	2.8	127	2.6	120
관행 농가	제품 가격	2.5	93	2.4	80
	품질	3.0	93	3.0	56
	서비스	2.9	90	2.8	76
	종합	2.8	87	2.8	76

주1: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주2: 만족도는 1점부터 5점까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성재훈 외(2020).

- 유기농업자재는 농가 유형과 관련 없이 농협과 시판상을 통한 구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행 농가는 농협을 통한 유기농업자재 구입 비율이 54.2%에 달하였음.

<표 3-36>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고려하는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친환경 농가	행정기관	7.9
	농협	31.6
	시관상	28.4
	이장/작목반장	5.2
	제조회사	13.8
	자가 생산	9.1
	기타	4.0
친환경+관행 농가	행정기관	5.6
	농협	38.5
	시관상	23.8
	이장/작목반장	15.4
	제조회사	11.2
	자가 생산	3.5
	기타	2.1
관행 농가	행정기관	3.1
	농협	54.2
	시관상	26.0
	이장/작목반장	8.3
	제조회사	8.3
	자가 생산	0.0
	기타	0.0

주1: 친환경 농가 n=405, 친환경+관행 농가 n=143, 관행 농가 n=96.

주2: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자료: 성재훈 외(2020).

○ 농가들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를 주로 구입처나 지인으로부터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농가들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를 주로 작목반장 등 주변 지인(24.3%), 시관상(19.0%), 지역농협(17.2%)으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13.6%), 농업기술센터(11.7%), 제품에 표시된 정보(5.8%), 인쇄 매체(6.5%)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7>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평균
지역농협	18.5	14.7	17.2
시판상	19.0	19.0	19.0
농업기술센터	11.9	11.2	11.7
작목반장 등 주변 지인	24.9	23.1	24.3
인터넷	15.1	10.6	13.6
제품에 표시된 정보	3.9	9.6	5.8
인쇄 매체(잡지, 신문, 정보지 등)	4.4	10.6	6.5
기타	2.1	1.2	1.8

주1: 1순위 n=562, 2순위 n=490.

주2: 가중평균은 (1순위x2/3 + 2순위x1/3)로 계산함.

자료: 성재훈 외(2020).

○ 농가들은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부산물비료나 천연식물보호제로 등록된 여부가 상당한 영향(86.1%)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 (6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부산물비료나 천연식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의 효과성이 더 높음을 다수의 농가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8> 부산물비료 또는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여부의 구매 영향 여부 및 이유

단위: %

구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치는 이유			
		정책적 지원이 더 커서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이 용이해서	기타
응답 비율	86.1	23.8	61.7	7.7	6.8

주: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n=561, 영향을 미치는 이유 n=483.

자료: 성재훈 외(2020).

○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가격이 비싸고(38.0%),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27.4%)으로 조사됨. 가격이 비싸서 구입하지 않는 비율이 낮은 효과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인들의 가격에 대한 불만이 효과에 대한 불만보다 큰 점이 반영된 결과라 유추할 수 있음. 한편, 효과, 안정성 등 품질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농가들의 유기농업자재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39>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가격이 비싸서	38.0
효과가 높지 않아서	27.4
품질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12.0
적용 가능한 작물 수가 부족해서	11.1
사용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7.2
기타	4.3

주: n=208.

자료: 성재훈 외(2020).

2.3. 유기농업자재 관련 정책 만족도¹⁹⁾

○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도에 대해서 친환경 농가의 84.6%, 친환경+관행 농가의 53.9%, 관행 농가의 44.8%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효능·효과 표시제의 경우, 친환경+관행 농가의 인식 비율은 51.2%로 목록공시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친환경 농가와 관행 농가 비율은 각각 76.8%, 39.2%로 목록공시제도 인식도에 비해 약 5~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도 및 효능·효과 표시제 인식도

단위: %

구분	목록공시제도		효능·효과 표시제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친환경 농가	84.6	15.4	76.8	23.2
친환경+관행 농가	53.9	46.1	51.2	48.8
관행 농가	44.8	55.2	39.2	60.8

주1: 친환경 농가 목록공시제도 n=312, 친환경 농가 효능·효과 표시제 n=306, 친환경+관행 농가 목록공시제도 n=167, 친환경+관행 농가 효능·효과 표시제 n=169, 관행 농가 목록공시제도 n=145, 관행 농가 효능·효과 표시제 n=143.

주2: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자료: 성재훈 외(2020).

○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효과가 더 좋다고 인식하는 농가의 비

19) 이 절은 성재훈 외(2020)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중은 79.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농가가 효능·효과 표시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27.6%가 10~20% 효과가 더 개선되었다고 답하였으며, 0~10% 개선이 21.2%, 20~30% 개선이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1>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의 상대적 효과

단위: %					
구분	차이 없음	0~10% 개선	10~20% 개선	20~30% 개선	30% 이상 개선
비율	21.0	21.2	27.6	17.4	12.8

주: n=391.

자료: 성재훈 외(2020).

○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이 더 나은 효과를 보이면서 효능·효과 표시 여부가 대다수 (약 90%) 농가의 유기농업자재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효능·효과 표시가 유기농업자재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친환경 농가	88.3	11.7
친환경+관행 농가	90.6	9.4
관행 농가	94.5	5.5

주1: 친환경 농가 n=265, 친환경+관행 농가 n=85, 관행 농가 n=55.

주2: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자료: 성재훈 외(2020).

○ 한편, 친환경 농가는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과 일반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비해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적당하다는 의견에 비해 1.1%p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친환경+관행 농가와 관행 농가의 약 50%는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과 일반 제품의 품질 차이에 비해 가격 차이가 적당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작지 않았으며, 친환경+관행 농가가 36.5%, 관행 농가는 43.6%였음.

<표 3-43> 효능·효과 표시 제품과 일반 제품 간 품질 차이 대비 가격 차이의 적절성

단위: %

구분	너무 크다	적당하다	너무 작다
친환경 농가	45.1	44.0	10.9
친환경+관행 농가	36.5	54.1	9.4
관행 농가	43.6	49.1	7.3

주1: 친환경 농가 n=257, 친환경+관행 농가 n=85, 관행 농가 n=55.

주2: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자료: 성재훈 외(2020).

○ 약 80%의 농가는 효능·효과 표시 제품이 비싸더라도 효능·효과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여 구매 의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다수의 농가가 효과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일반 제품과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 3-44> 효능·효과 표시 제품이 비싸더라도 효능·효과 표시 제품을 구매할 의향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친환경 농가	78.8	21.2
친환경+관행 농가	84.5	15.5
관행 농가	78.2	21.8

주1: 친환경 농가 n=264, 친환경+관행 농가 n=84, 관행 농가 n=55.

주2: 친환경+관행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를 나타냄.

자료: 성재훈 외(2020).

○ 친환경 농가의 46.3%는 효능·효과 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분화된 등급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9.0%는 기준을 강화하여 인증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이는 효과성을 중시하는 농가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한편, 응답자의 20.5%는 효능·효과제를 오히려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효능·효과가 확실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성분 함량 기준 강화 등이 제시됨.

<표 3-45>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 방향

단위: %

구분	비율
무의미한 효능·효과 표시제 폐지	20.5
세분화된 효능·효과 등급 마련(예: 특등급, 1등급, 2등급 등)	46.3
보다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인증제 전환	29.0
기타	4.2

주1: 친환경 농가만을 대상으로 함.
 주2: 친환경 농가 n=259.
 자료: 성재훈 외(2020).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친환경 농가의 88.1%가 이 사업을 인식하고 있어 대부분의 친환경 농가가 지원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2.7점에 불과하여 농가들의 만족도가 평균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46>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인식 비율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식 비율	평균 만족도
친환경 농가	88.1	2.7

주1: 친환경 농가만을 대상으로 함.
 주2: 인식 비율 n=311, 만족도 n=274.
 주3: 만족도는 1점부터 5점까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성재훈 외(2020).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되는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40.7%)도 많았음.

<표 3-47>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자재의 가격이 너무 비쌌	47.5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농업자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음	40.7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농업자재 종류가 충분하지 않음	7.3
기타	4.5

주1: 친환경 농가만을 대상으로 함.

주2: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주3: n=177.

자료: 성재훈 외(2020).

4

제4차 5개년 계획 평가

1.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비전으로 설정함.

○ 목표는 크게 1)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과 2)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각 목표별로 두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 목표 1) 관련 성과지표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2015p) 4.5% → (2020) 8%

· 인증 부적합률: (2015p) 4.6% → (2020) 1%

- 목표 2) 관련 성과지표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2016~2019) 시범사업, 모델 정립 → (2020 이후) 확산

· 화학자재 사용량: (2014) 화학농약 9.3kg/ha, 화학비료 258kg/ha → (2020) 8.5kg/ha, 235 kg/ha

○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6개의 추진과제가 설정됨.

- 목표 1) 관련 추진과제

- 인증제도 개선
-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 생산기반 확충
-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 목표 2) 관련 추진과제

-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그림 4-1>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목표	<p>◇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 ('15p) 4.5% → ('20) 8(연간 15% 확대) · 인증 부적합률 : ('15) 4.6% → ('20) 1(연간 25% 감소) <p>◇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16~'19) 시범사업, 모델 정립 → ('20이후) 확산 · 화학자재 사용량 : ('14) 화학농약 9.3kg/ha/화학비료 258 → ('20) 8.5/235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	1 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인증체계 확립 / 역량 강화 ·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내여건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 비식용 유기가공품 제도 마련
		2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 소비자 판매채널 다양화 ·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의무자조금 활성화) · 가공·외식·수출산업 활성화 · 유통정보 제공 강화
		3 생산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 농가 교육 및 기술 지원
		4 유기 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용물질 및 자재 관리제도 정비 · 유기자재 지원사업 개선 ·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농업환경 보전 강화	5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 적정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6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6).

2. 생산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 세 번째 추진과제인 생산기반 확충은 1) 생산단지·지구 조성 내실화, 2) 경영비 절감 영농 시스템 구축, 3)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4) 농가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본 절에서는 각 주요 내용을 개괄하고 관련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함.²⁰⁾

2.1.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2.1.1. 주요 내용

- 생산단지·지구 내실화와 관련한 과제로 1) 신규지구 지원체계 개선, 2) 기존단지 내실화, 3)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조성·확산, 4) 친환경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 등 4개 과제가 제시됨.
- 신규지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내용 및 방식을 재설정하고 사업선정 절차와 방식을 강화 방안을 제시함.
- 기존단지 내실화의 경우, 사후관리·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집단화된 들녘, 격리된 농지구역 등을 권역화하여 단지·지구 구역을 재정비할 것을 제시함. 또한 단지에만 한정되어 있던 인센티브 사업을 지구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개편·확대하여 기존단지 내실화를 유도하도록 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단지·지구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함.
-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조성·확산을 위해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²⁰⁾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에 대한 내용은 환경 분야에서 논의함.

- 친환경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친환경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조성하도록 하였고, 임산물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하도록 함.

2.1.2. 성과 평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음. 품목에 따라 최소 제한면적 등을 구분하여 벼는 농경지 10ha, 참여농가 10호 이상, 엽근채류와 과채류는 각각 2ha, 5호 이상으로 설정함. 친환경농업지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68개소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기존단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6개소, 2개소를 선정하여 기존 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을 시행함. 친환경농업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2016년 32.0%에서 2019년 34.1%로 매년 0.5%~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이후 매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영아 외(2018)는 2014년과 2015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의 저조, 2013년 부실인증 여파와 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 2016년 저농약인증 완전 폐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친환경농업지구 성과

단위: 개, %

연도	개소 수		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신규	보완	목표	실적	달성률
2014	28	-	37.0	31.4	84.9
2015	18	3	37.2	29.9	80.4
2016	15	0	32.0	32.0	100.0
2017	13	3	32.2	32.8	101.9
2018	13	1	33.0	33.6	101.8
2019	11	6	-	34.1	-
2020	16	2	-	-	-

주: 제4차 계획에서 제시된 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저농약 인증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목표를 이용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보고서 내 목표를 이용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임영아 외(2018).

-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초지조성비,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 비용, 기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음.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개소 수는 2020년 5월 기준 40개소로 2020년 목표 100개소 대비 달성률이 4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농립사업과의 연계의 경우, 2018년부터 산지생태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4차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한편, 예산 규모는 2017년 49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7억 900만 원으로 약 85.7% 감소하여 사업이 상당히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목표 대비 실적

구분	목표	실적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 (2014) 8개소 → (2015) 40 → (2020) 100	(2020. 5.) 40개소
농립사업 연계	기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산지생태축산 진입 시 친환경축산직불금 가산 등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20% 가산하여 지급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2.2.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2.2.1. 주요 내용

-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에 대한 과제로 1) 검사비용 절감, 2) 친환경에 특화된 재해보험 도입, 3)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4) 토양·병해충 정보제공 강화가 제시됨.
- 검사비용 절감은 인증농산물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검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또한 친환경 인증심사를 GAP 안전성조사와 연계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시함.

- 친환경 재배 비의 적정 표준 가격을 재산정하고 다른 품목으로도 친환경 재배에 따른 재해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는 기존의 52개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21, 축산용 31)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15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감면세액이 큰 5개 품목(규산염, 고삼, 부식산류, 해조류추출물, 님)부터 단계별로 확대 추진할 것을 검토하도록 함.
- 끝으로 토양·병해충 정보제공 강화는 지역토양별 친환경재배 적합작물 정보 제공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 재배방법 및 실시간 전문가 진단처방서비스 제공을 포함함.

2.2.2. 성과 평가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 수를 2015년 11,500건에서 2016년 9,000건으로 감소하여 검사비용 절감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2. 29.)에 따르면, 2015년 총 12,508건에서 2016년 8,138건으로 검사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계획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표 4-3>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물량 목표 및 실적

연도	목표	실적
2015	11,500	12,508
2016	9,000	8,138
2017	-	6,814
2018	-	9,466
2019	-	8,642
2020	-	184

주1: 실적자료는 재배양식이 친환경(인증), 친환경(인증) 무농약, 친환경(인증) 유기, 친환경(인증) 저농약으로 구분된 건을 대상으로 집계함.

주2: 2020년에 대한 실적은 2020년 2월 29일까지 검사 실적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2. 29.).

- 친환경 재배 벼에 대한 재해보험료는 일반 재배에 30%를 할증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작목으로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2016년 기획재정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유기농업자재 총 50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주요 유기농업자재의 약 95%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됨(영농자재신문 기사, 2017. 1. 11.).

2.3. 농가교육 및 기술지원

2.3.1. 주요 내용

- 농가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과제로 1)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2) 친환경 기술 지원·보급, 3)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제시됨.
- 친환경 주요 품목 공통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함. 또한 주요 품목별 생산모델 개발, 토양 관리 모델 개발, 유기농업에 적합한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환경보전 효과 검증 및 증진방안 도출 등을 포함하는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을 제시함.
- 친환경 기술 지원·보급과 관련하여, 공통재배기술 교육·컨설팅, 현장보급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품목별 우수 농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공모교육에서 친환경 수준별 교육과정을 품목군별 재배기술과정을 마련하고 농가 수요에 맞춰 편성하도록 함. 관련 목표로는 2020년까지 15개 과정을 개설하고 4,000명 교육, 700백만 원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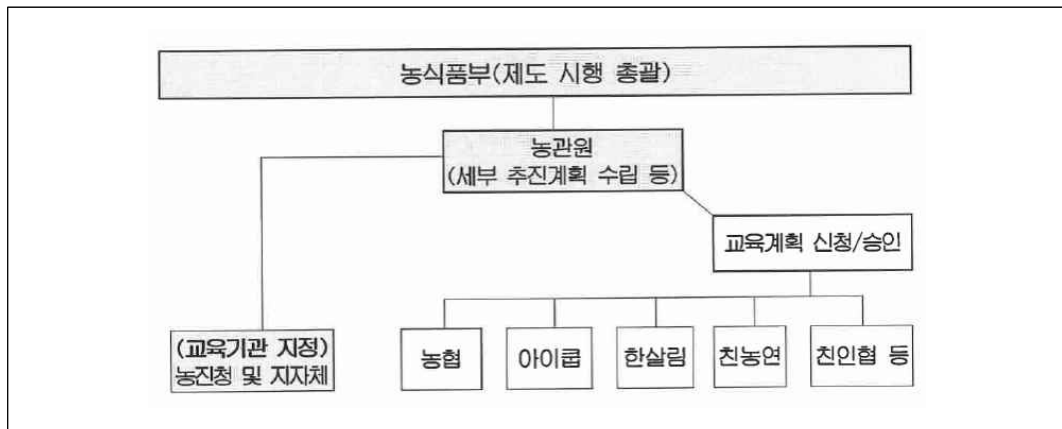
산을 확보할 것을 제시함. 또한 유기농 마이스터대학 과정 및 친환경 가공식품 관련 전문인력 과정 개설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15개 대학, 17개 품목과정, 340명을 교육할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다각화를 통해 신규 친환경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업 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을 지정·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2.3.2. 성과 평가

-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시설을 2008~2018년까지 조성함(도별 1개소).
 - 10개소 중 9개소 완공, 1개소(경기)는 금년 중 완료 예정
 - 사업기간은 3년이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국비 50%, 지방비 20~50, 자부담 30~0)
 - 사업대상자는 지자체 및 2년제 이상 대학임.
 - 운영현황을 보면 대학교 5개소, 道(농업기술원) 2개소, 시군(농기센터) 3개소임.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시설채소, 오이, 딸기, 사과, 배 등 품목의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2018년에는 45개 과정을 통해 505명을 교육하였으며, 2019년에는 29개 과정, 348명을 교육하였음. 2020년에는 18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
- 2020년 1월부터 인증사업자에 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하였음.
 - 2020년 상반기에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등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4-2>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 그러나 (가칭)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구성 및 운영은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3. 유통·소비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1)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2)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 내실화, 3)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4)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5) 유통정보 제공 강화로 구성됨.

○ 이 절에서는 4)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를 제시하고자 함.

- 4)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가공 관련 부문에서 논의함.

3.1.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3.1.1. 주요 내용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에 대한 과제로 1)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 2)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농협중앙회 간 계열화 체계 구축을 제시함.
- 이를 통해 전문화·규모화된 산지유통 및 도매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유통단계를 2~6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일 것을 목표로 제시함. 또한 소비지에는 원하는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는 제값을 받고 출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가.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

- 대형소비처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생산·판매조직을 설립할 것을 제시함.
- 생산·판매 조직은 광역단위 선별·포장, 판매, 정산 사업자로 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시장변화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직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표 4-4> 산지유통주체 육성 계획 매뉴얼(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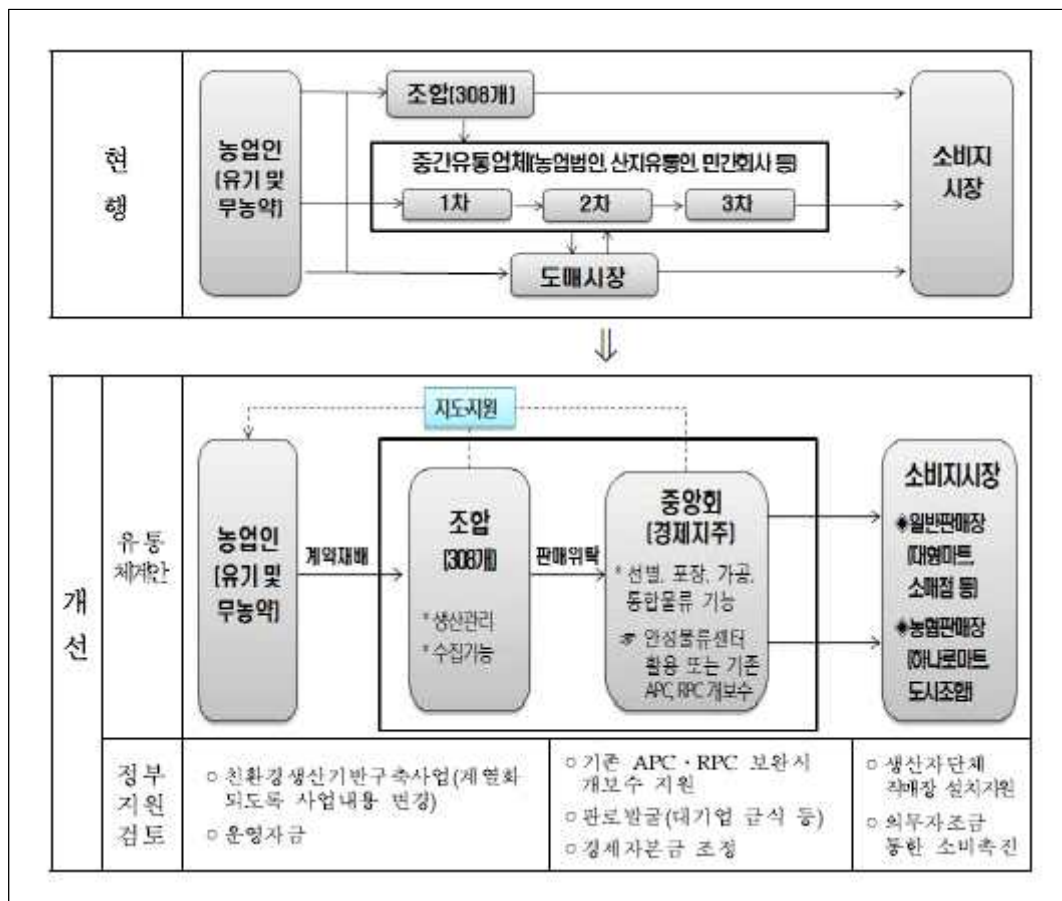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비고
필수항목	공동선별·출하·정산, 업무시스템 구축, 무점포 시장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방안, 작부체계 구축 등	심의대상
자율항목	거점유통센터 구축·운영, 판매장 개설 계획 등	
가점항목	지역조합·중간유통업체·가공업체 연계, 조직구성원 유통교육 실적·계획 등	심의대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6).

나.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농협중앙회 간 계열화 체계 구축

- 조합 및 중앙회는 친환경농산물 「공선출하회」를 구성하는 등 계약재배 방식의 산지조직을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공산출하회」를 2014년 34개소에서 2020년 100개소로 늘릴 것을 제시함.
- 또한 중앙회는 조합 출하물량의 규모화 및 통합물류(안성물류센터 등)를 통해 농협매장 및 일반매장에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하도록 함.

<그림 4-3> 유통체계 개선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6).

3.1.2. 성과 평가

가.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

○ 정부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화, 소비자 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기간은 개소당 2년이며 연간 5억 원을 지원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도(충남, 충북, 전북, 전남, 제주)가 지원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3개도(제주: 2019~2020년, 강원, 경남: 2020~2021년)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5개 사업단의 계약재배 농가·품목 수는 2017년 745개 농가, 93개 품목에서 2019년 2,397개 농가, 339개 품목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4-5> 산지유통주체 육성 계획 매뉴얼(안)

구분	충남('17~'18)	충북('18~'19)	전북('18~'19)	전남('18~'19)	제주('19~'20)
사업주체	(영)충남친환경 연합사업단	(농)농가생활 협동조합	(영)전북친환경 연합사업단	농협경제지구 전남지역본부	(영)제주친환경연합 사업단
참여법인	*참여법인(17): 보령 친농연(영) 등 15개 법인, 덕산농협 등 2개 조합	*참여법인(2): 충북 친환경농업인연합 사업단 등 2개 법인·단체	*참여법인(5): 우리(영) 등 4개 법인·조합 *협력법인: 6개 법인·조합	*참여기관(24): 해남 농협 등 15개 지역본부·농협	*참여기관(9): 생드르(영) 등 9개 법인·단체 *협력법인: 3개 법인·단체
추진성과	*총매출: 362억원 - 사업단매출: 167 - 공공급식: 92	*총매출: 47억원 - 사업단매출: 47 - 공공급식: 34	*총매출: 234억원 - 사업단매출: 19 - 공공급식: 96	*총매출: 199억원 - 사업단매출: 180 - 공공급식: 56	*총매출: 317억원 - 사업단매출: 8 - 공공급식: 1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또한 사업자 선정 시, 하기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4차 계획에서 제시하는 바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4-6>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구분	주요 내용
필수항목	공동선별출하, 업무시스템 구축, 무점포 시장 및 오프라인 판매장(직거래장터, 직매장) 개척,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작부체계 및 광역 물류체계 구축 등 생산·공급 계획 전반
자율항목	ERP시스템 및 거점유통센터 구축·운영, 판매장 개설 계획 등
실적항목	의무자조금 납부율, 계약재배품목 중 과실류·과채류 공급능력, 전체 취급액 중 공동선별출하액 비중, 전체 취급액 중 가공·수출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성, 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 계약재배 농가 확보 정도
가점항목	사업 참여법인(농협 포함) 수(1~3점), 사업 참여법인 중 학교·공공급식 참여법인 수(1~4점)와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수(1~3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6).

나.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농협중앙회 간 계열화 체계 구축

- 계열화 체계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계열화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의 최종 판매가 중요하나 자체 브랜드 제작 등의 노력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국한된 공선출화회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외에도 안성물류센터에서는 주로 일반 농산물을 다루고 있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구조 구축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3.2.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 내실화

3.2.1. 주요 내용

-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 내실화에 대한 과제로 1)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확산, 2) 단체급식 확대, 3) 직거래 확대, 4) 생협 및 전문점 판매 확대, 5) 친환경물류센터 확충을 제시함.

가.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 단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수를 2015년 4백 명에서 2016년 1만 명, 2020년 3

만 명으로 늘릴 것으로 목표를 제시함.

- 1단계: 한국형 CSA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구성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구매 희망품목을 직거래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
- 2단계: 국내 소비·생산여건에 맞는 한국형 CSA모델의 전국 주요 도시권으로 시범운영 확산
- 3단계: CSA의 원활한 추진 및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나. 단체급식 확대

- 대기업-생산자단체 간 이익공유 협약을 통해 대기업 구내식당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를 육성하도록 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지원센터 설치권자를 확대하고 현물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제시함.
-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물품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식품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함.

다. 직거래 확대

- aT 사이버거래소·농협의 친환경농산물 전용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충하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친환경 전문매장 개설자금의 지속 지원을 검토하도록 함.
- 친환경 전문매장 개설자금은 당초 2017년까지 지원할 계획임.

라. 생협 및 전문점 판매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이자율을 3%에서 1~3%로 조정하도록 하며, 사업대상자에 친환경농산물 취급 유통·식품업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친환경 인증 농식품 판매장을 확대할 것을 제시함.

- 또한 직매장 설치자금 지원 선정 시 친환경 분야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직거래 장터 장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도록 함.

마. 친환경물류센터 확충

- 경기물류센터의 입주법인을 확대하고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시설 개보수는 냉동창고 증설, 전처리시설 확충, 물류센터 차량 진입데크 개보수 등을 포함함.
- 전남물류센터는 국내 대기업 또는 생협의 운영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지 유통, 판매 및 수출 물류를 추진하도록 함.

3.2.2. 성과 평가

가.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 공동체지원농업 확산의 경우, 제4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 주요 도시권 시범사업 운영, 지원체계 구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경상남도에서 2019년 전국 최초로 공동체지원농업을 위해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적 시범사업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나. 단체급식 확대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내식당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용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전국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2017년 기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5,024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39% 차지)
- 공공급식의 일환으로 2020년에 임산부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실시

- 「학교급식법」,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도 미진한 것으로 조사됨.

다. 직거래 확대

- aT 사이버거래소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채널(포스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품목 수가 다른 온라인 몰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또한 2020년 5월 개설된 농협의 온라인농산물 거래소는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도매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도 양과에 한정된 것으로 조사되어 제4차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 생협 및 전문점 판매 확대

- 2015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의 용자조건을 연 2.0~3.0%로 인하하고 변동금리를 선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한 2016년에는 시설자금 용자 대상자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운영자금 대상자에는 유기가공식품업체를 추가하였음.

- 그러나 직매장 설치자금 지원 선정 시 친환경 분야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하는 경우에 대해 우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마. 친환경물류센터 확충

- 친환경물류센터는 경기와 전남에 설립하였으나, 기존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학교 급식을 위한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3.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3.3.1. 주요 내용

-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에 대한 과제로 1)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 2)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강화, 3)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의 통합 운영, 4) 소비자 혜택 부여를 통한 소비 확대 방안 검토, 5)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추진을 제시함.

가.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

-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대의원회 및 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함.

나.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강화

- 기존의 홍보 사업은 소비촉진보다는 환경보전가치 및 인증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을 제시함.
- 저탄소인증제와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 하도록 하였으며, ICT, SNS 등 온라인 분야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함.

다.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의 통합 운영

- 환경농업단체 주관 유기(6·2)데이 행사를 유통기업 판촉전과 연계하여 전국 규모로 개최하도록 함.

라. 소비자 혜택 부여를 통한 소비 확대 방안 검토

- 친환경 소비자에게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 포인트는 의무자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마.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추진

- 충북 청주시에 설치·운영 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생협·전문판매업체 등과 연계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3.3.2. 성과 평가

가.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

- 2016년 7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자금으로 소비촉진·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조성금액은 총 40억 원으로 2017년 23억 원에서 매년 조성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은 학교, 유치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홍보 대상을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수정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의 통합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19개 판매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9년 유기데이 행사에 2,500개 이상의 매장이 참여함. 친환경농산물 할인 및 사은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3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유기데이를 통해 군부대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해외 기업과의 1:1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등의 성과도 보인 것으로 조사됨.

라. 소비자 혜택 부여를 통한 소비 확대 방안 검토

- 그린카드를 통해 에코머니 제휴 녹색매장에서 친환경인증제품 구매 시 1~24%의 에코머니를 적립하고 에코머니가맹점 이용 시에는 1~5%의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추진

- 2015~2018년 충북 청주시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충북 충주시, 전남 구례군, 2020년에는 경기 광주시, 전북 순창군에 각각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결정함.
 - 청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는 유기농마케팅센터, 학습·체험장, 열대작물관, 이벤트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음.

3.4. 유통정보 제공 강화

3.4.1. 주요 내용

- 유통정보 제공 강화에 대한 과제로 1)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사 시스템 구축, 2) 농가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제시함.

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사 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유통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가의 출하처, 판매물량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용 또는 유통경로를 ‘농산물유통실태조사’에 포함할 것을 제시함.
- 소비지 유통실태는 자조금 등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조사하도록 함.

나. 농가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aT 가격조사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출하 정보에 대한 농가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구매가이드 제작 및 배포,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함.
- 카카오스토리, 국가인증농식품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구매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도록 함.

3.4.2. 성과 평가

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사 시스템 구축

- 2018년부터 별도의 유통·소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유통비용, 판매장 현황, 소비자 태도, 소매가격 등을 조사할 예정임.

나. 농가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2020년 4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가격 조사 품목을 기존 30품목 37종류에서 38품목 44종류로 확대하는 등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표 4-7>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 조사 개요

구분	과거	현행
조사기간	2005. 1. ~ 2020. 2.	2020. 4. ~ 현재
조사품목	(친환경농산물 : 30품목 37종류) 쌀, 고구마, 감자,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적, 청), 참외, 오이(가시, 다다기, 취청), 호박, 토마토, 딸기, 무, 당근(세척, 무세척), 고추(풋, 파리), 양파(양파, 햇), 대파, 쪽파, 가지, 미나리, 깻잎, 부추, 피망,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팽이버섯, 사과(후지, 쓰가루), 배, 포도, 감귤 (친환경축산물 : 2품목 2종류) 닭고기, 계란	(친환경농산물 : 38품목 44종류) 쌀(백미, 현미), 참쌀, 혼합곡, 고구마, 감자, 귀리, 보리, 수수, 율무,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적, 청), 호박(애호박, 단호박), 토마토, 딸기, 무, 당근, 고추(풋, 청양, 오이맛, 파리), 깻잎(국산), 양파, 대파, 가지, 깻잎, 부추, 브로콜리, 양상추, 청경채, 케일, 콩나물, 감귤, 단감, 배, 사과,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조사인증	농산물 : 유기농, 무농약 축산물 : 유기농, 무항생제	농산물 : 유기농, 무농약

(계속)

구분	과거	현행
조사시기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조사발표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 인천, 춘천, 강릉, 청주, 전주, 울산, 제주, 순천, 안동, 포항, 창원, 세종 (19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5개 도시)
조사장소	대형유통업체 27개소	생협, 친환경전문점,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SSM 등 26개소

자료: aT KAMIS. 친환경농산물 유통정보.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eco/summary.do>>. 검색일: 2020. 12. 1.

- 2015년 국가인증농식품 블로그 “우리가족 건강식탁”을 개설하여 인증샷 이벤트 등 여러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의 인증 농식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²¹⁾

4. 가공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 첫 번째 추진과제인 인증제도 개선은 1)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2) 민간 인증체계 확립, 3)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두 번째 추진과제인 생산기반 확충은 1)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2)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 내실화, 3)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4)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5) 유통정보 제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이 절에서는 두 가지 추진과제 중 친환경 가공산업에 대한 내용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²¹⁾ 국가인증농식품 블로그 “우리가족 건강식탁”. <<https://blog.naver.com/k-goodfood>>. 검색일: 2020. 12. 1.

4.1. 주요 내용 - 인증제도 개선(친환경 가공산업)

4.1.1. 국내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품 대상범위 확대 추진을 제시함.
 - 현행 규정상 제한적 유기표시 대상인 유기원료 함량 70~94% 제품을 유기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현행 규정: 유기원료 70% 이상 제품은 주표시면을 제외한 곳에 유기표시가 가능하고, 70% 이하 제품은 원재료·함량란에 유기표시가 가능함.
-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 수출용 유기원료의 수입통관 제출 서류 간소화, 2) 유기가공식품의 이중적 표시기준 개선, 3) 수출용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기준 완화 등을 개선할 것을 제시함.
- 식당 등 대량소비처에 대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함.
 - 단기: 제조·가공업, 제과점영업 등은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 대상으로 관리, 조리·판매업체는 원료사용여부만 표시하도록 유도
 - 장기: 친환경우수식당보다 관리기준이 높은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관리제도 도입
- 벌꿀, 식용 화훼, 와인 등에 대한 유기식품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함.

4.1.2.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

-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반려동물 사료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함.

○ 반려동물 사료를 제외한 비식용 유기가공품 표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가축용 유기사료의 첨가물질 제한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시함.

4.2. 주요 내용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는 1) 맞춤형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2) 무농약 농산물 사용 가공품 관리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 3) 유기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4) 유기가공식품 기술 수요를 반영한 R&D 개발 확대, 5)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등 5개 과제가 제시됨.

4.2.1. 맞춤형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맞춤형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국산 유기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지원 서비스' 및 단계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제시함.

- 단계별 컨설팅 지원은 2014년 90개소에서 2017년 200개소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제시함.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등과 연계한 가공시설의 공동 이용, 가공기술 개발 및 표준화,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또한 2016년부터 유기가공식품업체를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점진적 대출금리 인하를 협의할 것을 제시함.

4.2.2. 무농약 농산물 사용 가공품 관리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

○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 표시·인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2016년 기준,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증 기준만 마련되어 있고 무농약 가공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표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 애완사료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세제·섬유 등 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유기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것을 제시함.

○ 광역단위 산지조직과 유기가공식품업체 연계를 유도하여 해외 원료 의존도를 축소할 것을 제시함.

○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동등성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원료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시럽류, 커피, 설탕 등을 수출하는 국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4.2.3. 유기가공식품 기술 수요를 반영한 R&D 개발 확대

○ 가공식품 R&BD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 실용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시함.

○ 기술을 단기·소액과제,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함.

가.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주요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시장·통관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입 바이어 협의회를 2013년 9개에서 2017년, 20개로 확대하여 현지 소비자 및 유통업체 정보 파악을 지원하도록 함.

○ 해외 유기식품 인증 취득비용 및 샘플 통관 운송비를 지원할 것을 제시함.

4.3. 성과 평가

가. 무농약 농산물 사용 가공품 관리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

○ 2019년 8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8월 시행 예정임.

- 동법 제2조(정의) 5의2항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으로 정의함.

○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함.

- 70% 이상 유기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 향후 유기농 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2019년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시행하여 유기식품 인증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인증기준은 유기농업 기본원칙 준수, 항생제 및 농약 사용 금지, 벌통과 벌집은 천연 재료로만 사용, 벌통 위치 제한 등을 포함함.

○ 이와 같이 제도 정비에 대한 주요 세부 과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제의 도입, 벌꿀 이외 식용 화훼 및 와인 등에 대한 유기식품 인증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나.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

- 2017년 6월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를 시행 후 약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함. 이후 2019년 1월부터 인증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제4차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하여야 함.
 -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이 금지됨.

다. 맞춤형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식품의 판로개척과 수출확대 지원 및 소비자 인식 향상을 위해 유기식품의 생산·소비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기가공인증컨설팅 및 유통활성화 사업을 시행함.
 - 주요 사업 내용은 홈쇼핑 입점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행사 및 박람회 홍보관 운영, 유기가공식품인증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포함함.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기가공식품업체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20년으로 계획에서 제시한 2016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음. 용자 조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정금리 기준 2.5%~3.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부터 시설자금의 경우 생산자단체에 대해 2%로 인하된 금리로 용자를 시행하고 있음.
- 2020년 5월부터는 운영자금에 대해 생산자 단체 2.0%, 일반 2.5%로 각각 0.5%p의 금리를 인하하여 사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일정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4-8>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지원 대상 및 용자 조건

연도	지원 대상	용자 조건
20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 형태: 용자 80%, 자부담 20% 용자 조건: 연 2.5~3%, 1년 상환
20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 형태: 용자 80%, 자부담 20% 용자 조건: 연 2.5~3%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20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 형태: 용자 80%, 자부담 20% 용자 조건: 연 2.5~3%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20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운영) 지원 형태: 용자 80%, 자부담 20% 용자 조건: 일반 3%, 생산자 단체 2.5% 또는 변동금리. (시설) 지원 형태: 용자 80%, 자부담 20% 용자 조건: 일반 3%, 생산자 단체 2% 또는 변동금리.
2020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운영) 지원 형태: 용자 80%, 자부담 20% 용자 조건: 일반 3%, 생산자 단체 2.5% 또는 변동금리. (시설) 지원 형태: 용자 80%, 자부담 20% 용자 조건: 일반 3%, 생산자 단체 2% 또는 변동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서, 각 연도.

라. 유기농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미국(2014년 발효), EU(2015년 발효)와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캐나다, 스위스 등 총 8개국과 동등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음.

<표 4-9>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지원 대상 및 용자 조건

신청국	신청일	신청서 접수	서류 평가	현장평가		검증결과 협의	검증 완료	협정 체결
				한국→외국	외국→한국			
미국	'14.1월							
EU	'14.2월							
일본	'14.1월							
캐나다	'14.11월							
칠레	'14.1월				(생략)			

(계속)

신청국	신청일	신청서 접수	서류 평가	현장평가		검증결과 협의	검증 완료	협정 체결
				한국→외국	외국→한국			
호주	'14.1월				(생략)			
뉴질랜드	'14.7월				(생략)			
에콰도르	'15.4월							
인도	'16.2월							
터키	'16.5월							
스위스	'16.6월				(생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2020. 12. 22.).

- 그러나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 모범사례 발굴, 광역단위 산지조직과 유기가공식품업체 연계를 유도하여 해외 원료 의존도를 축소와 관련한 목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5. 인증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1)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2) 민간 인증체계 확립, 3)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으로 구성됨.
- 이 절에서는 3)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 마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를 제시하고자 함.

5.1.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5.1.1. 주요 내용

-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과제로 1) 국내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2)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대상 확대, 3) 농가의 인증 편의성 제고, 4)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제시함.

가. 국내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1) 농산물

- 국제기준 및 국내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행과정을 심사하는 인증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함.
- 무농약 진입을 희망하는 일반 농가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할 것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무농약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 제한 등 안전성과 관계가 적은 규정을 폐지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부실차단이 가능한 사항(예: 무농약 신규 신청 이전 1년간 영농일지 제출, 인증 취소된 경우 재진입 차단 규정 등)을 폐지할 것을 제시함. 병해충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인증기관 승인 하에 특정 필지 농약 살포를 허용하고 해당 필지만 인증을 취소한 후 익년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5ha 이상 집단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단체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함.
-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의·상습적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강화되고 비의도적·일시적 행위에 대한 처분은 경감하도록 함.

2) 축산물

- 유기·무항생제 등 축산관련 인증제 기준을 표준화하고 차별화를 추진하도록 함.
 - 친환경(유기·무항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등 축산관련 인증제의 공통기준을 표준화하여 인증 시 중복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며, 인증제의 개별기준을 차별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함.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무항생제 인증 사육밀도를 개선하도록 함. 또한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출하시기 단축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전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것을 제시함.
- 유기축산의 양적성장과 증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3) 가공식품 등

-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품 대상범위 확대 추진을 제시함.
 - 현행 규정상 제한적 유기표시 대상인 유기원료 함량 70~94% 제품을 유기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현행 규정: 유기원료 70% 이상 제품은 주표시면을 제외한 곳에 유기표시가 가능하고, 70% 이하 제품은 원재료·함량란에 유기표시가 가능함.
-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 수출용 유기원료의 수입통관 제출 서류 간소화, 2) 유기가공식품의 이중적 표시기준 개선, 3) 수출용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완화 등을 개선할 것을 제시함.
- 식당 등 대량소비처에 대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함.

- 단기: 제조·가공업, 제과점영업 등은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 대상으로 관리, 조리·판매업체는 원료사용 여부만 표시하도록 유도
- 장기: 친환경우수식당 보다 관리기준이 높은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관리제도 도입

나.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대상 확대

- 인증받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유기 표시용어는 “유기”로 통일하여 제시하도록 함.
 - (현행) 유기농, 유기축산, 유기가공식품 → (개선) 유기

다. 농가의 인증 편의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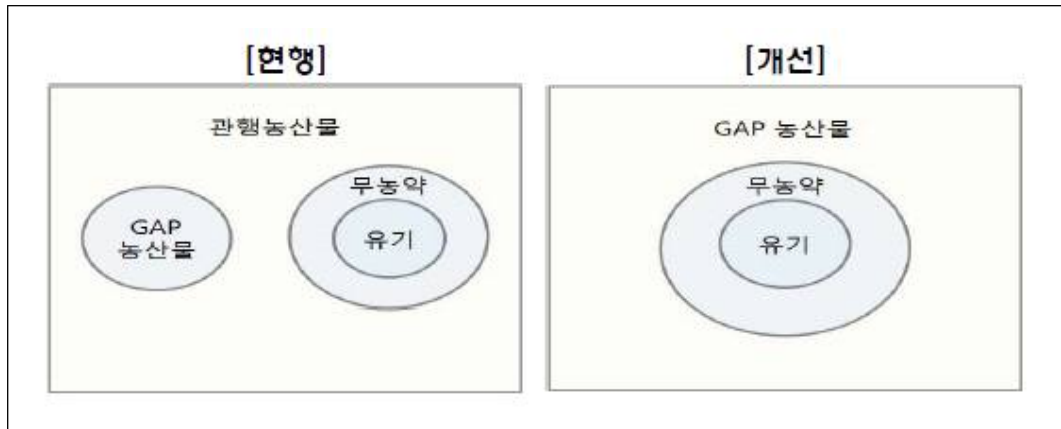
- 농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현행 시행규칙 및 고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 농식품 인증기준을 고시로 통합하고 허용물질 종류·선정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도 고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함.
- 인증 신청·갱신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도록 함.
- 또한 일반농가 및 가공업체가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가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 인증사업자별 인증기준,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내용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 해설집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함.
 - 인증기준 등에 대한 농가 현장교육을 연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유기·무농약 등 인증 농산물의 수확·선별과정에서 GAP 수준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관리하여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도록 함.
- 친환경 인증 신청농가의 GAP 취득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단기적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GAP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GAP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함.

<그림 4-4>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 간 관계 설정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16).

5.1.2. 성과 평가

가. 국내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1)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019년에는 상습위반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함. 또한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과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²²⁾
- 2016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농산물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 기간을 최근 1년으로 하되,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 가능하도록 함.

²²⁾ <부록 1> 친환경농어업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 참조 바람.

- 2020년 8월에는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입증되고,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처분기준을 개선함.
 - 기존에는 1차 시정명령 이후 2차 검출 시에는 인증을 취소하였으나, 시정명령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 여전히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증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인증신청 및 갱신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농가 부담을 일부 완화함.
 - 생산계획서를 10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으며, 기존 인증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을 제출하도록 함.

2) 축산물

- 2020년 3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였음.
- 친환경인증 축산물에 대해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축산물에서의 농약 검출을 금지함.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기존의 시정명령에서 인증 취소로 처분을 강화하였음.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강화하였음. 유기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전환기간 또는 휴약기간의 2배 중 더 긴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무항생제 축산물은 질병 취약시기 외에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금지함.
- 무항생제축산물의 전환기간의 경우,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축종(오리, 메추리)에 대해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가공식품 등

○ 2019년 8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8월 시행함.

- 동법 제2조(정의) 5의2항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으로 정의함.

○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함.

- 70% 이상 유기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단, 95% 미만 함량 제품은 인증 로고 표시가 불가능함.

- 향후 유기농 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임.

나.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대상 확대

○ “유기”라는 인증표시가 있으나 여전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가 사용되고 있음.

다. 농가의 인증 편의성 제고

○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취급자 등의 인증(신규,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단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로 일원화하였으나 제4차 계획에서 제시한 법체계는 여전히 시행규칙과 고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현장교육도 확대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가의 인증 관련 편의성 제고 관련 목표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라.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GAP 인증과 병행하는 친환경 인증기관을 33개소로 일부 추가 지정하였음. 그러나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 간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5.2. 민간 인증체계 확립

3.2.1. 주요 내용

- 제4차 계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업무 민간 이양을 통해 인증체계를 재정비하고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등급제 도입 및 지원·육성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세부 추진과제로 1) 이원화된 인증체계 정비, 2) 민간인증기관 역량 강화, 3) 인증심사원 전문성 제고, 4)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제시함.

가. 이원화된 인증체계 정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여 인증체계를 단일화할 것을 제시함.
- 민간 인증기관은 농가 인증 외에도 직불금 점검, 의무자조금 거출 등의 공공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도록 함.
 - 친환경의무자조금 거출기관을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 인증기관 주관 농가 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간 인증기관 관리 업무를 중점으로 하여 부실 인증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인증기관 업무 실태 등 지도·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부실인증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나. 민간 인증기관 역량 강화

-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농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함.
 - 민간 인증기관은 2015년 71개소에서 2020년 도별 2~3개소를 지정하도록 함.
- 민간 인증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제를 도입하도록 함.
 - 법령 개정,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을 통해 2017년부터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 평가 및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며, 이를 인증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 우수 민간 인증기관 육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화 기준(ISO/IEC 17065)에 부합하도록 평가 및 지원할 것을 제시함.
- 민간 인증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기준을 정비하도록 함.
- 인증수수료 등 인증 관련 비용을 현실화하여 인증기관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며, 농가 수 외 인증심사 난이도(필지 수, 면적 등)를 심사비용에 반영하여 인증관리 및 심사원 처우개선을 도할 것을 제시함.

다. 인증심사원 전문성 제고

-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우수심사원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 모든 인증심사원은 농식품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제시함.

라.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 인증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 농가 등 인증사업자의 위반 빈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인증기관 관리 기준 강화하도록 함.

-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 불합리한 인증기준을 완화·개선하여 인증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함.

-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단체인증 인증 취소 비율 조정 및 경미한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퇴비 유해성분 함량에 대해 「비료관리법」 규격을 적용하고 천연유래물질 불검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검출 규정을 완화하도록 함.

○ 생산자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인증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을 제시함.

- 인증품 유통정보 실시간 조회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기관별로 다른 인증신청 비용을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모두 공개하여 농업인 등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제시함.

5.2.2. 성과 평가

가. 이원화된 인증체계 정비

○ 2016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완전 이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2018년 전국 55개 친환경 인증기관을 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추가하여 일부 공공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나. 민간 인증기관 역량 강화

○ 민간 인증기관은 2020년 8월 기준 총 5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2개 이상의 인증기관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²³⁾). 또한 연속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음²³⁾.
- 인증비용의 경우, 면적,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4차 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전남대학교(2019)에 인증기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표준심사관리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다. 인증심사원 전문성 제고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폐지하고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및 수의사 자격 보유자로 지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함.

라.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 전술한 바와 같이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동일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2회로 제한함(단, 인증기관 평가 결과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은 적용을 제외함).
- 인증 신청 비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농업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 또한 인증번호를 통해 생산자, 인증기관, 사후관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²³⁾ 현재 평가등급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지는 않아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자재 분야 추진과제 및 평가

-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주요 내용은 1)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정비, 2) 자재 지원사업 개선, 3)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됨.

6.1.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정비

6.1.1. 주요 내용

-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정비를 위한 세부과제로 1) 허용물질 선정절차 개선, 2)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통합이 제시됨.

가. 허용물질 선정절차 개선

- 제4차 계획은 현행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재점검하고, 과학적 실증·이론에 근거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또한 농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시함.

– 당시 현행은 선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1차 전문가 위원회(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2차 전문가 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를 거친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1, 2차 심의회를 통합하고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허용물질 안전성 점검 및 재평가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도 제시됨. 구체적으로, 허용물질 90종에 대한 안전성·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각 허용물질의 사용 필요성, 위해성 등을 점검할 것을 제시함. 또한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끝으로 농가 자가 제조·사용 허용물질의 안전사용 지침을 설정하도록 함. 2017년 10종, 2019년 30종, 2021년 50종에 대해 설정할 것을 추진안으로 설정함.

나.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 공시·품질인증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 도형 및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통합

○ 농진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를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인증품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시함.

6.1.2. 성과 평가

가. 허용물질 선정절차 개선

○ 2017년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농관원 고시 제2017=38호)이 제정됨. 이 고시에서는 연 2회 정기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허용물질을 고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기존 허용물질에 대한 평가, 새로운 허용물질에 대한 실질적 검토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 자가 제조 유기농업자재 안전 사용 지침 설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임.

나.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 2017년부터 품질 인증제를 공시제로 통합하고 효능·효과 표시를 신설하였음.

○ 유기농업자재 표시는 효능·효과 표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표시내용도 일반 공시 제품과 효능·효과 표시 제품을 구분하여 설정함.

<그림 4-5>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http://organicpro.enviagro.go.kr/organic/B01/B010201V.action>>. 접속일 2020. 10. 26.

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통합

○ 2017년 농관원에서 공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시기관, 시험연구기관, 공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농관원에서 추진하도록 함.

6.2. 자재 지원사업 개선

6.2.1. 주요 내용

- 사업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공시·품질 인증 유기농업자재 사용을 확대할 것을 제시함. 또한 녹비종자 공급체계를 일괄 구매방식에서 친환경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여 경쟁을 유도하도록 함.
- 또한 유기농업자재 공급·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6.2.2. 성과 평가

- 2016년 비료의 원료 투입부터 생산, 판매까지 관리하는 비료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료 투입원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함.

6.3.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6.3.1. 주요 내용

-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로 1) 유기종자 사용 인증심사 기준 개편, 2) 유기종자 생산·공급 기반 마련이 제시됨.

가. 유기종자 사용 인증심사 기준 개편

- 국내 여건 및 국제 기준을 감안하여 유기종자 사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국내 유기종자의 정의가 국제기준(Codex)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증기준 종자 사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 처리(소독) 종자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2016년 종자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유기·무농약 종자 사용비율이 높은 품목군부터 소독종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나. 유기종자 생산·공급 기반 마련

- 유기농업에 적합한 종자를 육종하고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였으며, 유기종자 생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2018년까지 유기종자 전문 생산자 100개소를 육성할 것을 제시함.

6.3.2. 성과 평가

- 2016년 유기종자·묘에 대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종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친환경이 아닌 종자·묘에 대한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함.
 - 자가채종이 가능한 품목(곡류, 두류 등)은 인증필지에서 채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구입종자는 증명자료를 기록·보관하여 인증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원예작물의 유기종자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발간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8개 품목(무, 상추, 참외, 배추, 수박, 양배추, 순무, 비트)에 대한 유기종자를 생산함.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인삼, 콩, 들깨, 참깨, 마늘, 양파에 대한 유기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또한 유기종자 친환경 소독기술(배추, 상추, 양배추, 무, 참외, 순무, 비트, 수박)을 개발하고 관련 지침서를 발간함.
- 그러나 유기종자에 대한 DB 구축 및 농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7. 종합평가

7.1. 추진성과

7.1.1. 인증제도 개선

가. 인증관리 감독 강화에 의한 인증체계 확립

○ (투입)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2017), 상습 위반사업자·부실 인증기관 제재처분 강화(2020)

○ (영향) 평가 및 등급제와 제재처분 강화로 인증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음. 인증관리 감독 강화는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수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나. 인증범위 확대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

○ (투입) 반려동물 사료·벌꿀 유기인증제(2017)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2020) 도입

○ (영향) 사료 및 벌꿀 유기인증제 도입으로 유기인증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으로 무농약인증 농산물에 대한 수요처가 확대되었음.

7.1.2.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가.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유통 능력(케파) 증대

○ (투입) 2020년까지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7개소를 만들었고, 2017년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1개소(나주) 조성함.

- 산지 유통조직 7개소의 재정투입규모: 6,000백만 원

- (참고) '17년: 500백만원, '18: 2,000, '19: 2,000, '20: 1,500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1개소 조성의 재정투입규모: 100억원(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30~0%)

- (영향)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은 시장 교섭력을 개선시켰고, 유통의 효율화를 제고시켰음. 산지 유통조직화와 물류센터 건립은 전반적인 유통 능력 증대에 기여함.

나. 공공소비 활성화로 인증농가에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

- (투입) 전국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20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도입함.

- 2017년 기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5,024억 원(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39%)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해 27개 지역을 대상으로 135억 원 투입

- (산출)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중은 55.4%로 69,813톤(농림축산식품부 & aT, 2018)에 달하며, 임산부 80,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 4,800톤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하게 됨.

다. 교육 및 홍보 강화여건 조성

- (투입)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2016)하여 예산을 확보함. 확보된 예산은 2017~2020년까지 총 5,431백만 원

- (참고) '17년: 1,148백만 원, '18: 1,342, '19: 1,360, '20: 1,627

- (영향)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및 친환경농산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홍보함.

7.1.3.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평가

가. 유기면적 지속 확대

○ (투입)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영구 지급, 친환경지구 조성

- 친환경직불을 인증단계, 품목군(과수, 기타)에 따른 지급단가를 인상하였음.
- 2016~2020년까지 친환경직불금 지급액은 총 121, 505백만 원
- (참고) '16년: 25,893백만원, '17: 23,943, '18: 26,392, '19: 22,445, '20: 22,832
-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유기지속직불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부터 유기지속직불 영구 지급을 추진함. 2018~2020년까지 예산은 총 19,341백만 원
- (참고) '15년: 1,502백만원, '16년: 1,935, '17: 2,618, '18: 3,668, '19: 4,895, '20p: 6,225
- 2016~2020년까지 친환경지구를 68개소 신규 조성함. 2016~2020년까지 예산은 총 31,308백만 원
- (참고) '16년: 9,540백만 원, '17: 7,747, '18: 6,277, '19: 3,858, '20: 3,886

<표 4-10> 친환경농업 직불제 변화

단위: 천 원/ha

2017년			2018년			
유기 (5년)	논	600	유기 (5년)	논	-	700
	밭	1,200		밭	과수	1,400
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3년)	논	400	무농약 (3년)	논	-	500
	밭	1,000		밭	과수	1,200
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3년)	논	300	유기지속 (영구)	논	-	350
	밭	600		밭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자료:

<표 4-11> 친환경농업지구 성과

단위: 개, %

연도	개소 수		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신규	보완	목표	실적	달성률
2014	28	-	37.0	31.4	84.9
2015	18	3	37.2	29.9	80.4
2016	15	0	32.0	32.0	100.0
2017	13	3	32.2	32.8	101.9
2018	13	1	33.0	33.6	101.8

주: 제4차 계획에서 제시된 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저농약 인증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목표를 이용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보고서 내 목표를 이용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임영아 외(2018).

○ (산출) 2019년 기준 유기면적은 2015년 18143ha 대비 63.7% 증가한 29,711ha임.
또한 2015년에는 친환경인증면적의 22%였으나 2019년에는 36.4%로 확대되어 상위 인증 비중이 증가함.

나.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 (투입) 2008~2018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 이후 운영개시 된 센터는 충북센터, 의성기술보급, 전북, 충남 등 4개소이며, 경기도는 12월 개소 예정임.

<표 4-12>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운영개시	운영기관	센터명	운영개시	운영기관
(1) 경기센터	'20.12월(예정)	환경대	(6) 전남센터	'11.5월	전남대
(2) 강원센터	'12.6월	강원대	(7) 경북센터	'15.4월	경북대
(3) 충북센터	'16.7월	충북농업기술원	(8) 의성기술보급센터	'17.5월	의성군농기센터
(4) 충남센터	'18.7월	충남농업기술원	(9) 경남센터	'12.9월	고성군농기센터
(5) 전북센터	'17.11월	순창군농기센터	(10) 제주센터	'15.1월	제주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 (영향)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과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 강화,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7.1.4. 유기농업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가. 화학농약 사용량 소폭 감소

- (투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지원,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원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임. 재정투입규모는 2016년 160억 원, 2017년 155억 원, 2018년 155억 원, 2019년 155억 원, 2020년(계획) 155억 원임.
- (산출) 2014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량은 9.3kg/(ha)이었으나 2019년 9.0kg/(ha)으로 소폭 감소함.

나.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개선

- (투입) 공시·품질인증 관리시스템 통합
 - 2017년부터 품질인증제를 공시제로 통합하고 효능·효과 표시를 신설함.
 -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된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를 2017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함.
- (산출) 인증제 시 인증실적이 전체 3% 수준이었으나, 2020년 1월 기준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이 21.2%로 증가하여 제도가 활성화됨.

7.2. 미흡한 점

- (생산여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투입재 중심 생산시스템, 농업환경관리에 불리한 소규모 분산된 인증 농지
 - '09~'18년 조성 단지·지구(300개소) 내 인증면적 비율은 33.7%(단지 23.4, 지구 65.2)

-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친환경인증 수준이 30ha이상이면서, 친환경인증 비중이 5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법정리 190개소 정도로 전체 법정리 14,109개소(경지면적 30ha이하 제외)의 1.35% 수준만 집적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친환경농업 단지가 집적화되지 않을 경우 일반농업에서 유래하는 화학농약, 화학비료가 비의도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부실인증이라는 매우 큰 문제로 연계될 수 있음. 더 나아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일반농업 실천농가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유통·소비) 공적 소비 내 학교급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인증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부족, 민간 차원의 유통·소비 활성화 미흡.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및 소비자 인식 저조
- 공적 소비량을 보면 학교급식 69,813톤(농림축산식품부 & At, 2018),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4,800톤(임산부 80,000명 가정), 군대급식 2,485톤(2018년 기준 친환경 비 정부수매량) 등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소비자 조사결과, '인터넷 혹은 홈쇼핑'을 통한 구매 비중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3.6%, 친환경가공식품의 경우 7.8%로 매우 낮은 수준임. 즉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자재) 기존 허용물질에 대한 평가, 새로운 허용물질에 대한 검토 등 미흡, 농가 자가 제조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안전 사용지침 설정 부재
- (인증관리) 환경적 가치 향상을 위한 인증제 개선노력 미흡, 지속적인 인증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개선 요구 증가
- (연구개발) 유기쌀 중심의 생산으로 품목 다양화 미흡, 유기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확산 적용 미흡

- 원예작물 유기종자 대량 생산기술 개발 및 매뉴얼 발간을 8종에 대해서 추진함.
 - 생산기술 정립: 무, 상추, 참외('17), 배추, 수박('18), 양배추, 순무, 비트('19)
 - 매뉴얼 발간: 무, 상추, 참외('18), 배추, 수박, 양배추, 순무, 비트('19)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6~'20)에 따라 2020년부터 유기농업에서 유기종자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종자 연구개발 및 확산이 필요함.

5

주요국 유기농업 정책

1. EU 및 주요 회원국

1.1. 개황

○ 유럽 지역의 2000~2018년 기간 동안 유기농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그림 5-1> 참조).

- 유럽 전체 국가들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2000년 4,581천 ha에서 2018년 15,636천 ha로 연평균성장률(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CAGR) 7.06%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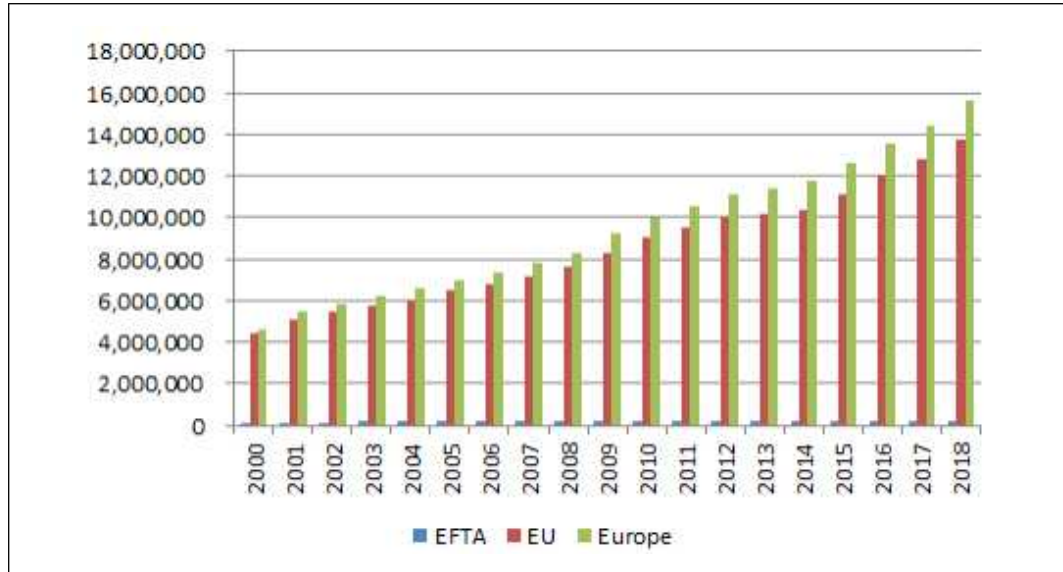
- 동 기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들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2000년 4,385천 ha에서 2018년 13,790천 ha로 연평균증가율 6.57%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럽 전체 지역보다는 소폭 낮지만 거의 유사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 회원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2000년 107천 ha에서 2018년 234천 ha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성장률은 유럽 전체 및 EU 회원국들보다 다소 낮은 4.41%로 예측됨.

- 2000년에 유럽 전체지역, EU 회원국, EFTA 회원국의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은 각각 0.89%, 2.3%, 2.44%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3.12%, 7.71%, 5.96% 수준까지 각각 상승함. 동 기간 연평균증가율은 유럽 전체 지역이 7.22%, EU 회원국이 6.95%, EFTA 회원국이 5.09% 수준으로 각각 계측되었음.

<그림 5-1> 2000~2018년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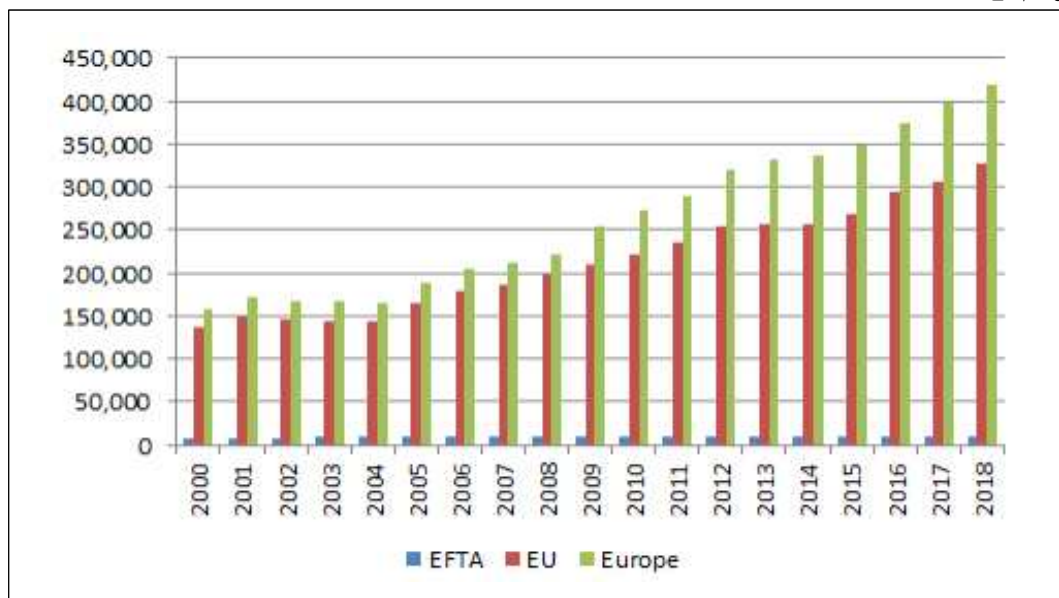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 유기농 생산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는 보여주고 있음(<그림 5-2> 참조).
 - 2000년 기준 유럽 전체지역의 유기농 생산자 수는 156,666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 418,610명까지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5.61%의 성장세를 보임.
 - 동 기간 EU 회원국 내 유기농 생산자 수는 2000년 135,714명에서 2018년 327,222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성장률은 5.01% 수준으로 계측됨.
 - EFTA 4개 회원국들의 경우 2000년 6,710명에서 2018년 9,164명으로 연평균성장률 1.7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EU 회원국 혹은 유럽 전체지역 단위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5-2> 2000~2018년 유기농 생산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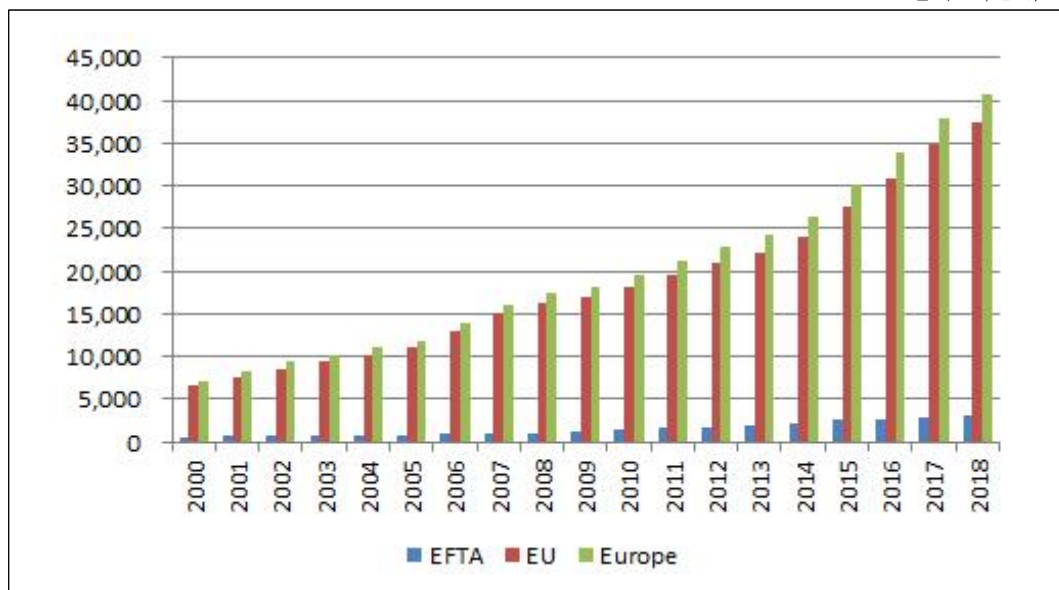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 유기농 소매 판매액 추이를 보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그림 5-3> 참조).

- 유럽 전체지역의 경우 2000년 유기농 소매 판매액은 7,037백만 유로였으며, 2018년에는 40,729백만 유로까지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10.25%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동 기간 EU 회원국 내 소매 판매액은 2000년 6,528백만 유로에서 2018년 37,412백만 유로 수준으로 증가하여 역시 연평균증가율 10.19%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아울러 EFTA 4개 회원국들의 소매 판매액은 2000년 509백만 유로에서 2018년 3,077백만 유로로 증가하여 10.51%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였음.

<그림 5-3> 2000~2018년 유기농 소매 판매액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 유기농업 재배면적과 유기농 재배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연평균성장률과 소매 판매액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표 5-1>과 같이 요약됨.
 - 이에 따르면 생산 및 공급 부문과 관련된 연평균성장률보다 소비 및 수요 부문의 소매 판매액의 연평균성장률이 약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즉, 유럽 및 EU에서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수요가 증가하는 수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EFTA 회원국들의 경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EFTA 회원국들의 유기농 소매 판매액 관련 연평균성장률 10.51%는 유럽 전체, EU 회원국들의 연평균성장률과 비교하여 소폭이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유기농 재배면적, 전체면적 중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 생산자 수 등 생산-공급 관련 지표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임을 알 수 있음.

<표 5-1> 2000~2018년 유기농 관련 주요 지표별 C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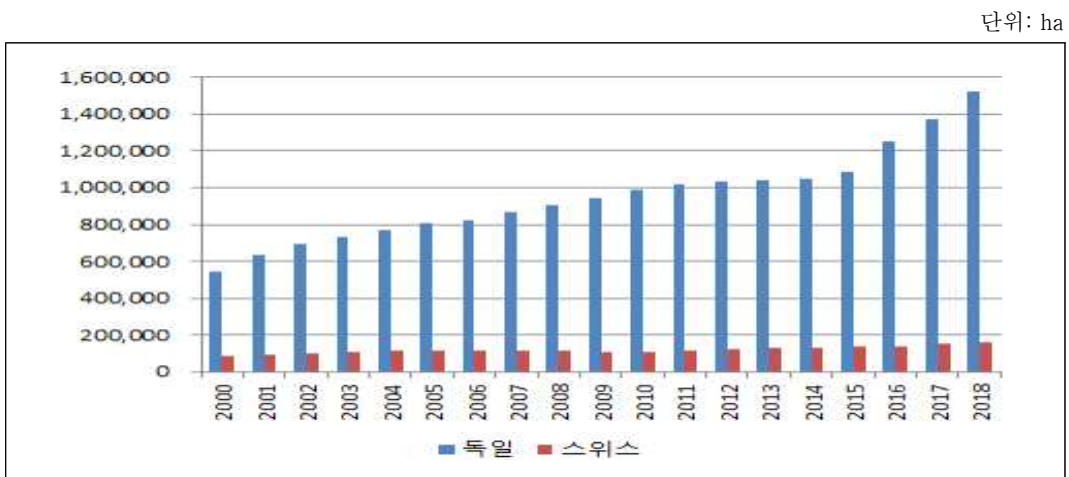
항목	단위: %		
	유럽 전체	EU	EFTA
유기농 재배면적	7.06	6.57	4.41
전체면적 대비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	7.22	6.95	5.09
유기농 생산자 수	5.61	5.01	1.75
유기농 소매 판매액	10.25	10.19	10.51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 한편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독일과 스위스의 유기농식품산업 관련 주요 지표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독일과 스위스의 2000~2018년 기간 동안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독일의 경우 2000년 546천 ha에서 2018년 1,521천 ha로 연평균증가율 5.9%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재배면적이 확대 추세를 보여 옴. 스위스의 경우 2000년 기준 83천 ha 수준이었으며 2018년에는 161천 ha까지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3.8%로 독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임(<그림 5-4> 참조).
- 2000년 기준 독일의 전체 면적 대비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은 3.2%였으며, 2018년 9.1%까지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6%를 보임. 반면 스위스는 2000년 7.7%에서 2018년 15.4% 수준으로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 3.9%를 보임.

<그림 5-4> 2000~2018년 독일 및 스위스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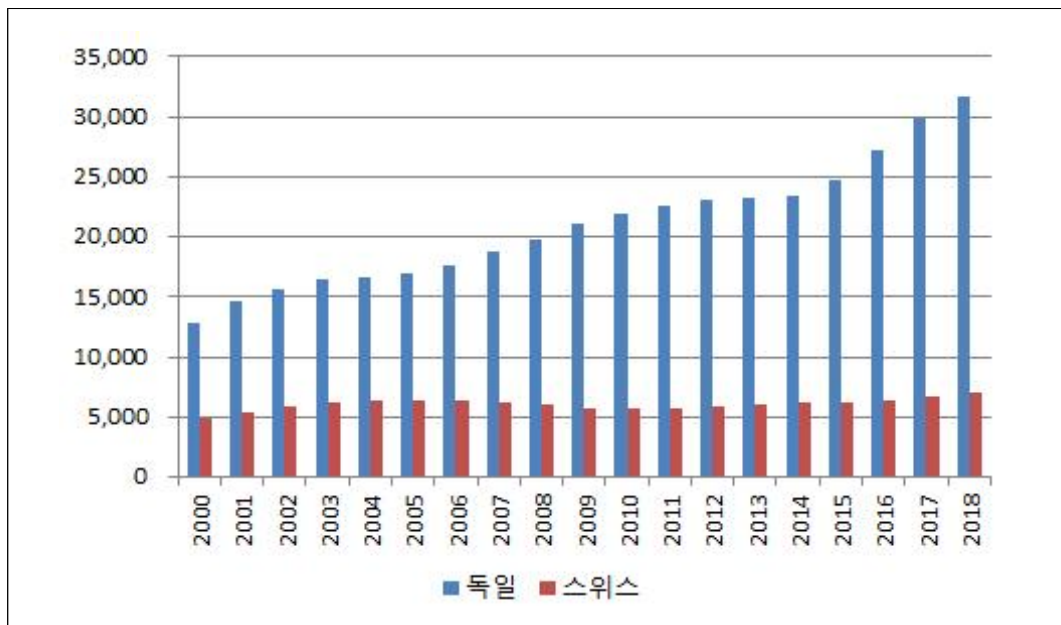
○ 독일과 스위스의 생산자 수 추이는 2000~2018년 기간 동안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5-5> 참조).

- 2000년 기준 독일 생산자 수는 12,740명이었으며, 2018년 31,713명 수준까지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5.2%의 증가세를 보임.

- 동 기간 스위스는 2000년 4,902명에서 2018년 7,032명으로 연평균성장률 2%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5> 2000~2018년 독일 및 스위스 유기농 생산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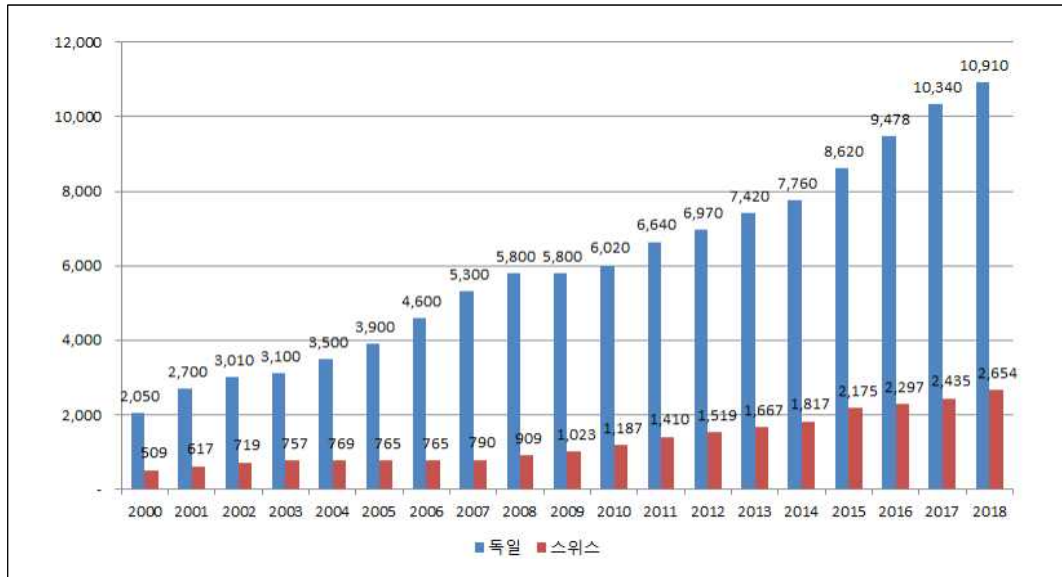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 2000년 기준 독일과 스위스의 판매액은 각각 2,050백만 유로, 509백만 유로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각각 10,910백만 유로, 2,655백만 유로로 연평균성장률이 9.7%, 9.6%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그림 5-6> 참조).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과 스위스 모두 유기농 수요가 공급보다 성장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2000~2018년 독일 및 스위스 소매 판매액 생산자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1.2. EU 및 주요 회원국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정책

1.2.1.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 EU의 농업정책 핵심은 EU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며,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정책 역시 CAP 틀 안에서 이루어짐.

○ CAP는 EU 내 주요 농업 현안 및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는 것은 CAP 2014-2020임(안병일 2014).

- 직불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기둥(pillar 1)과 농촌개발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기둥(pillar 2)으로 구분되며, 두 기둥이 CAP 2014-2020을 떠받치는 구조로 표현됨.

○ CAP 2014-2020을 통해 유기농업 정책은 보다 명확해지고, 유기농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CAP 2014-2020을 구성하는 pillar 1 및 pillar 2 내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됨.

- 먼저 직불제 관련 pillar 1에 따르면 유기농 생산 농가들은 자동적으로 ‘환경요소 (Greening component)’를 부여받음. 즉, ‘녹색화 직불금(Green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음. 이는 유기농 생산 농가들이 환경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로를 인정받음에 따라 환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함.

- 다음으로 유기농업은 농촌개발정책 관련 pillar 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농촌개발 관련 규칙인 EU No. 1305/2013²⁴⁾의 29항(Article 29) ‘유기농(Organic farming)’, 17항(Article 17 (3)) ‘자산투자(Investments in physical assets)’, 16항(Article 16(1a (ii))) ‘농산물 및 식품 관련 품질 제도(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15항(Article 15 (4g)) ‘자문 서비스, 농가 경영, 농가 구제 서비스(Advisory services, farm management and farm relief services)’, 55항(Article 55 (1a)) ‘농업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럽 혁신 파트너쉽(EIP(Europe Innovation Partnership)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 Aims)’에서 관련 사항이 언급됨.

- 김창길 외(2016)은 Stolze et al.(2016)을 참조하여 CAP 2014-2020 내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직접적 및 간접적 정책으로 구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음(<표 5-2> 참조).

²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R1305>

<표 5-2>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정책 지원 방식	세부 정책
직접적 지원	- Pillar 2: Measure 11 - Subsidies for organic farming (conversion or support payment) (기동 2: 조치 11 - 유기농 전환·지속 지원금)
	- Organic action plan(유기농 실행 계획)
간접적 지원	- Pillar 1: Green payment(기동 1: 녹색화 직불금)
	- Pillar 2: Measure 1(기동 2: 조치 1 - 지식 이전과 정보 활동)
	- Pillar 2: Measure 2(기동 2: 조치 2 - 자문 서비스, 농장 관리 및 농가 구제 서비스)
	- Pillar 2: Measure 3(기동 2: 조치 3 - 농업상품과 식품의 품질 제도)
	- Pillar 2: Measure 4(기동 2: 조치 4 - 물리적 자산 투자)
	- Pillar 2: Measure 6(기동 2: 조치 6 - 농장 및 사업 개발)
	- Pillar 2: Measure 9(기동 2: 조치 9 - 생산자 그룹 조직)
	- Pillar 2: Measure 10(기동 2: 조치 10 - 농업-환경-기후)
	- Pillar 2: Measure 12(기동 2: 조치 12 - Nature 2000과 용수프레임워크 지침 지원)
	- Pillar 2: Measure 13(기동 2: 조치 13 - 자연 제약 지원금)
	- Pillar 2: Measure 14(기동 2: 조치 14 - 동물 복지)
- Pillar 2: Measure 16(기동 2: 조치 16 - 협업)	
- Pillar 2: Measure 20(기동 2: 조치 20 - 기술 보조)	

자료: Stolze et al.(2016) 및 김창길 외(2016)를 기반으로 재정리.

○ CAP 2014-2020 하에 유기농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pillar 2의 조치 11(Measure 11)에 해당하는 ‘유기농 전환·지속 지원금(subsidies for organic farming(conversion or support payments)’과 ‘유기농 실행 계획(organic action plan)’의 두 가지 정책을 들 수 있음.

- 먼저 ‘유기농 전환·지속 지원금’은 농촌개발 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 RDS)이 속한 pillar 2 내 조치들(Measurements) 중 11번째 조치(Measure 11)에 해당하는 지원금 제도로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거나 지속적으로 유기농 생산을 할 경우 면적 기준으로 유기농가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 CAP 2014-2020의 pillar 2 내에 열거된 EU 농촌개발정책(RDR)의 예산은 ‘유럽연합 농촌개발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및 지역 혹은 국가 펀드에 의해 지원받는데, 유기농 전환·지속 지원금 역시 관련 예산에서 금액을 지원받음.
- 일례로 EAFRD에서 유기농업 지원금에 할당한 예산은 약 63억 유로로 해당 금액은 총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알려져 있음(Stolze et al. 2016).
- 다음으로 직접 지원 정책 중 ‘유기농 실행 계획(organic action plan)’은 유기농 부

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기농 관련 정책 및 수단을 통합하는데 이용되는 프레임 워크임(Meredith et al., 2018).

- 유기농 실행 계획은 유기농이 전체 재배 면적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거나 유기농식품이 전체 식품시장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등의 목적을 세우고 행해지며, 이 외에도 1) 환경 및 토지 관리에 대한 직접적 지원, 2) 유기농 생산자 자문, 훈련, 교육, 3) 공공재 조달 계획, 4) 소비자 교육 및 홍보, 5) 시장 개발 및 인프라 지원, 6) 유기농 연구 및 혁신, 7) 감염 및 인증 관련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유기농 실행 계획은 지역(region) 혹은 국가(national) 단위로 각 해당 주체에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수립됨. 2000년 이래로 EU 레벨에서 두 개의 유럽 유기농 실행 계획이 개발되었는데, 2004년 6월에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최초로 ‘유럽 유기농식품 실행 계획(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을 발표한 바 있음. 이어 2014년에는 ‘EU 유기농 생산 미래를 위한 실행 계획(the Action Plan for the Future of Organic Production in the European Union)’이 발표되어 2020년까지 18개 실행 계획을 수행 중에 있음. 해당 계획이 지향하는 바는 1) EU 유기농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 2)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3) 무역 및 수출 기회 확대임. 국가 단위로는 2007년에 스위스, 2010년에 체코, 2013년에 덴마크와 프랑스, 2015년에 독일과 스코틀랜드가 계획을 시작하여 수행 중에 있음(Schmid et al. 2015).

○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CAP 2014-2020의 pillar 1 내 직불금 중 한 종류인 ‘녹색화 직불금(Green payment)’이 대표적임.

- 앞서 기술하였듯이 농가가 유기농 생산을 할 경우 별도의 의무사항 없이 자동적으로 녹색화 직불금을 수령하게 됨.
- 이는 유기농 생산 자체가 녹색화 직불금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농 방식을 특별히 바꿀 필요 없이 녹색화 의무 준수에서 면제되기 때문임.
- 추가적으로 재배면적의 75% 이상을 영구 초지나 사료 작물 재배에 할당하는 경우 역시 녹색화 의무에서 면제됨.

- 농촌개발정책(RDPs)과 관련된 CAP 2014-2020의 pillar 2 내에서 직접적 지원에 해당하는 11번 조치 (Measure 11), ‘유기농 전환·지속 지원금’을 제외한 다수의 조치들이 간접적 지원에 해당됨.
 - <표 5-2>에 기술되었듯이 관련 조치는 총 12개로 회원국들이 유기농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경우 pillar 2 내의 해당 조치(measure)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함.

1.2.2. 독일

- 독일 정부는 1989년부터 공적 자금(public funds)을 조성하여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왔으며, 1992년까지 합성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의 사용을 금하는 EU의 다양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왔음.
- 1994년부터는 유기농 도입 및 유지에 있어 ‘농촌개발 프로그램(the Länder programmes for rural development, RDPs)’의 지원을 받음.
 - 현재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은 유럽 의회 규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연합 농촌개발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에 의한 농촌개발 지원 관련 규정인 EU No 1305/2013²⁵⁾ 및 EU No 807/2014²⁶⁾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외에도 법적 근거로 EU No. 808/2014 및 EU 2016/669²⁷⁾도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음.
 - 상기 규정들은 EU의 CAP 2014-2020의 지원 내용과 연관되며, EU 지원금 제공도 상기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농업 구조 및 해안 보호 개선을 위한 공동 과업에 대한 법률(The Act on a Joint Task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and Coastal Protection, GAK

²⁵⁾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R1305>

²⁶⁾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R0807>

²⁷⁾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16/669/oj

Act - GAKG)’에 따라 유기농 지원에 대한 국가 단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즉 독일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가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치(measures)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GAK가 법적 근거로 작용함.
- GAK 프레임워크 하에서 유기농에 대한 지원은 ‘B1 조치(Measure B1)’, 즉 “시장 및 토지 적응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토지 관리(market-adapted and site-adapted and ecologically compatible land management)”의 4번 항목(section 4)에서 다루어짐.
- 또한 GAK 조치(measures)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Land) 단위에서 수행되므로 유기농에 대한 지원은 주 정부 책임 하에 이루어짐.

○ 요컨대 유기농에 대한 지원은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통해 함께 이루어지며, 지원 자금(national funds)의 경우 연방정부 대 주정부의 재원 부담 비율이 60:40 수준으로 형성됨.

- EU No 305/2013 규정에 따라 EU 최대 기여율(maximum EU contribution rate)은 공적 지출의 75% 수준이며, 가장 외곽에 위치한 저개발 지역에서는 85% 수준임.

○ 직불금 배정과 관련하여 2015년 이래로 CAP 2014-2020의 제1기둥(pillar 1) 내 직불금의 4.5%(연간 약 226~231백만 유로)가 제2기둥(pillar 2) 부문으로 재배정되어 2016년부터 주 정부에서 새로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게 되었으며, CAP 2014-2020이 유효한 2020년까지 약 6%가 pillar 2 로 재배치될 예정임.

○ 한편 2013년 11월 4일에 개최된 주 정부 농무 장관 협의회(Conference of Agriculture Ministers of the Länder)의 결의에 따라 pillar 1로부터 pillar 2로 전이된 자금은 오직 지속가능한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쓰이기로 결정됨.

- 이때 지속가능한 농업은 다음과 같은 용도 하에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을 의미함.
 - 유기농(organic farming)

- 지역 기반 농업환경 조치(area-based agri-environmental measures)
 - 기후 보호 조치(climate protection measures)
 - 복지 지향적 농사 방식 조치(welfare-oriented husbandry methods)
 - 동물복지(animal welfare)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상 허용(compensatory allowance in naturally less-favoured regions)
- 위 활동에 대한 자금은 국가 단위에서 지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으며 100% EU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유기농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직불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농가는 EU No 1307/2013 규정의 9항(Article 9) 조건에 따라 반드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active farmers")이어야 함.

○ 유기농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지원은 EU, 독일 연방 정부, 주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공적 자금을 의해 이루어지며, GAK 2018년 프레임워크에 따라 예산 배정은 <표 5-3>과 같이 편성됨.

<표 5-3>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Type of Culture (경작 종류)	Introduction Payments per hectare (ha당 투입 직불금)		Maintenance Payments per hectare (ha당 유지 직불금)	
	2013	2015	2013	2015
Vegetable growing (채소 재배)	480 EUR	590 EUR(+23%)	300 EUR	360 EUR(+20%)
Arable land (곡물 경작지)	210 EUR	250 EUR(+19%)	170 EUR	210 EUR(+24%)
Grassland (목초지)	210 EUR	250 EUR(+19%)	170 EUR	210 EUR(+24%)
Land under permanent crops or nursery crops (영구작물 또는 종묘작물용 토지)	900 EUR	950 EUR(+6%)	720 EUR	750 EUR(+4%)

자료: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2020).

- <표 5-3>을 참조하면, 2015년 이래로 유기농을 시작하는 소작지에서 GAK 하의 지원 금액은 곡물 경작지 및 목초지의 경우 ha당 250유로까지 올랐으며, 유기농을 유지하려는 소작지는 ha당 210유로까지 올랐음.
 - 이는 2013년 경우와 대비해서 유기농 도입(introduction) 시에는 19%, 유지(maintenance) 시에는 24%가 오른 수치임.
 - EU의 유기농 관련 정책에 따르는 소작지의 경우 ha당 추가로 50유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소작지 당 최대 600유로까지를 더 받을 수 있음.
 - 또한 주 정부는 규정에 명시된 금액을 30%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음.
- GAK는 유기농 제품 가공 및 마케팅 개선을 위한 지원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1) 생산자 단체 설립 및 운영, 2) 유기농제품 가공 및 마케팅에 대한 투자, 3)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위 항목에 대한 지원 조건 및 방안은 GAK 프레임워크의 3항(Section 3) “마케팅 구조 개선(improving marketing structures)”에 담겨 있음.

1.2.3. 스위스²⁸⁾

- 앞서 기술된 독일의 경우와 달리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의 CAP 2014-2020에 명시된 유기농업 직불금 지원 체계와는 다른 방식을 취함.
 - 전통적인 농산물 순수입국인 스위스는 1980년대 말 농업 비용 상승과 고투입 농법에 따른 생태적 문제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1990년대 초반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함.
 - 1996년 6월 9일 ‘스위스 농업 헌법 권한(Constitutional Mandate of Swiss Agriculture)’에 공익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역할을 명시하여 농업 직불제 시행의 토대를 마련함(정학균 외 2014).

²⁸⁾ 본 절의 내용은 김창길 외(2016)를 참고하여 작성됨을 명시함.

○ 이후 스위스의 농업정책은 최근 2017년까지 5단계의 단계별 변화를 거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단계는 1993~1998년의 ‘농정개혁 착수’로 직접지불제 도입 환경서비스(생물다양성 등 장려)를 정의하고 WTO 가입에 따른 조직 개편과 관세보호의 감소를 꾀함.
- 2단계는 1999~2003년의 ‘농업정책 2002’로 가격과 판로 보장을 폐지하고, 환경 및 경관 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강화함. 아울러 낙농시장 개입도 폐지됨.
- 3단계는 2004~2007년의 ‘농업정책 2007’로 우유할당제가 폐지되고, 육류 수입 할당 입찰, 구조개선 추진 등이 이루어짐.
- 4단계는 2008~2011년의 ‘농업정책 2011’로 수출보조금이 폐지되고, 직접지불제 재원의 재배분, 국경보호조치와 시장개입 감소가 추진됨.
- 5단계는 2014~2017년의 ‘농업정책 2017’로 직접지불제의 개편 및 강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가장 최근에 수립된 농업정책 2017(2014~2017)은 스위스 연방농업청이 2010년에 발표한 2025 장기 전략의 4가지 방향에 맞추어 세부 내용이 마련되었으며, 4가지 방향은 1)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식량 생산과 공급 보장, 2)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3) 농촌지역의 활력과 자연경관 등 유지 강화, 4) 농업 및 식품 부문의 혁신 등이 제시됨.

○ 농업정책 2017은 그 유효기한이 2017년 종료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이후 마련된 농업정책 2018-2021(Politique agricole 2018-2021, PA 2018-21)에 따라 농업정책 2017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되었음.²⁹⁾

- PA 2018-21의 예산은 농업정책 2017과 비교하여 약 1.7% 가량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화로는 ‘일시적 직접지불금(transition payments)’의 점진적 감축을 들 수 있음.

²⁹⁾ <https://www.oecd-ilibrary.org/sites/05024436-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05024436-en>

- ‘일시적 직접지불금’ 중 감축된 양은 1) 생물다양성, 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3) 동물 복지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불금(direct payments)’ 분야로 재배정되어 친환경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스위스 농정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1월 1일에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이 폐지되었으며, 폐지에 따라 감축된 재원은 수출보조금 폐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우유 및 곡물 관련 직불금의 재원으로 재배정되었음.
- 2020년 2월 12일에 연방위원회(Federal Council)은 ‘농업정책 2022(Agricultural Policy from 2022, PA22+)’의 향후 개발을 선언하였음.
- PA22+의 초안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더 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업을 표방함.

○ 이상에서 스위스 농정은 친환경 및 지속가능 농업을 더욱 더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 생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강화하고 예산 재원을 확충해 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직불금의 경우 1) 식량공급보장 직불금, 2) 농지 직불금, 3) 생물다양성 직불금, 4) 경관품질 직불금, 5) 생산시스템 직불금, 6) 자원효율성 직불금, 7) 과도기 직불금 등으로 구분됨.
- 이 중 자원효율성 직불금은 생태학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 생산기술, 일제로 축분 시비법, 무경운 기반 토양보전법 등을 사용할 경우 수혜 받는 직불금으로 2014년부터 신설되었음.
- 전반적으로 스위스 농업에서의 직불금은 농가가 사회에 제공하는 다원적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친환경 및 지속가능 농업을 지향하는 농정 방향과 함께 스위스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유기농업에 대한 직불금은 생산시스템 직불금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관한 법령(Ordinance on Organic Farming and the Labelling of Organically Produced Products and Foodstuffs, Organic Farming Ordinance)’을 준수해야 함.

- 유기농 관련 ha당 직불금 규모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³⁰⁾, 유기농업 법령의 규정은 EU 규정과 동일함.

○ 앞서 기술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연방 국가이므로 연방 정부와 주(Kanton) 정부로 구분되어 있음.

- 주 정부 별로 자체적인 유기농업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함.

<표 5-4>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구분	내 용
유기농 인증 요건	스위스 기준과 ISO14000에 따른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비료	인광석을 제외한 화학비료 금지. ha당 2.5 가축단위(livestock unit)에 해당하는 최대 유기농 비료사용
생태보상영역	PEP에서 규정한 3.5%가 아닌 7%의 ECA가 특이 작물에 대해 요구됨.
종자	유기 종자만 허용됨. 시장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 인정.
화학 진균제 및 살충제	금지. 천연물질만 허용됨.
제초제	금지.
작물 제한 자격	모든 작물과 가축에 해당.
오니(汚泥)	금지
사료	GMO 사료 금지. 유럽연합 법령과 대조적으로 반추동물은 최대 20%까지 관행사료를 먹이는 것이 가능함. 2009년 5월 이후로 유럽연합 규정의 완전 준수가 요구됨.
가축 유기농 관리	스위스의 3개의 민간 기준(BioSuisse, Migros-Bio, Demeter)에서, 축산업은 인증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음. 1999년 이후로 모든 유기농가는 DEA Ordinance on Regular Outdoor Access for Livestock에 의해 가축을 관리해야 함.
단계적 전환 가능	점진적 전환은 최대 5년간 축산업만 가능.
교육 훈련 및 자문 제공	유기농 교육 및 훈련은 선택적이나 2가지 예외가 있음. 1) 스위스 몇몇 주의 유기 전환 보조금은 유기농업의 입문코스 참석이 요건임. 2) 1997년 이래 Bio Suisse는 새 유기농가가 인증받기 위해 2일간의 입문 코스를 수료할 것을 요구함.
다른 제약	환경법(예. 매년 최대 구리 4kg/ha 사용)과 토양보호규정 준수

자료: 김창길 외(2016) 재인용.

30) 과일·채소·포도: 1,600CHF/ha(한화 약 184만 2천 원), 기타 개활지: 1,200CHF/ha(한화 약 138만 원), 기타 200CHF/ha(한화 약 23만 원)(김창길 외 2016).

1.3.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2021~2027)³¹⁾

1.3.1. CAP 2021~2027 초안 작성 배경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가장 최근 개정안인 CAP 2014~2020이 2020년을 끝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0년 이후의 CAP 개정안(이하 CAP 2021~2027³²⁾)에 대한 입법 초안(proposal)을 발표하여 논의 중인 상황임.

- EC가 제시하는 2020년 이후 CAP 초안은 유럽 농민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재 및 미래 농업 분야 위협들에 대해 EU 농업 정책이 보다 더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보다 직관적(intuitive)이고 혁신적인(innovative)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수년 간 번창할 지속가능하고 경쟁적인(sustainable and competitive) 농업 부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CAP 2021~2027에 대한 EC의 입법 초안은 2018년 6월 1일에 발표되었으며, 초안의 목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 농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 번영과 고품질 식품 생산이 가능케 하는 데에 있음.

1.3.2.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CAP 2021~2027

○ EC는 2019년 12월 11일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적인 지속가능 경제 발전을 위해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음.

-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이 없도록 하는 기후 중립(climate

³¹⁾ European Commission. Future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future-cap_en>. 검색일: 2020. 12. 1.

³²⁾ 문헌에 따라 ‘CAP post 2020’으로 표기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시행 연도인 2021~2027년의 기간을 구체화하는 표기 방식을 따름.

neutral)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써 EU의 지속가능한 경제 창출에 그 근본적인 목표가 있음(김수현·김창훈 2020).

○ CAP 2021~2027 초안은 이러한 유럽 그린딜과 연계하여 그린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안됨.

– 유럽 그린딜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전략을 제시하는데, 크게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 ‘지속가능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지속가능 산업(Sustainable industry)’, ‘에너지 효율 건축 및 리모델링(Building and renovating)’, ‘지속가능 교통(Sustainable mobility)’, ‘오염 제거(Eliminating pollution)’, ‘기후 중립(Climate action)’ 등으로 구분됨.

– 이 중 식품 분야의 공정, 건강, 친환경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 전략,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전략, 환경·생태계 분야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전략과 연계하여 CAP이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CAP 2021-2027 초안이 작성됨.

○ CAP 2021~2027 초안의 핵심 요소는 기후 및 환경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과 연관되며, ‘환경 계획(eco-scheme)’³³⁾ 역시 이에 준하는 방향으로 설정됨(European Commission 2020b).

– CAP 2021~2027 초안의 ‘환경 계획’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펀딩 및 인센티브가 제공됨.

– 위원회는 ‘환경 계획’을 EU 회원국들이 의무 사항으로 취할 것과 농민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제시함.

³³⁾ Eco-scheme은 기존 CAP의 ‘녹색화 직불(Green payment)’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환경(생태) 직불금’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환경 계획’으로 번역함.

○ ‘환경 계획’은 유기농 생산(organic farming), 생태 친화적 농업(agro-ecological practices),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농림·탄소 농업(agro-forestry or carbon farming)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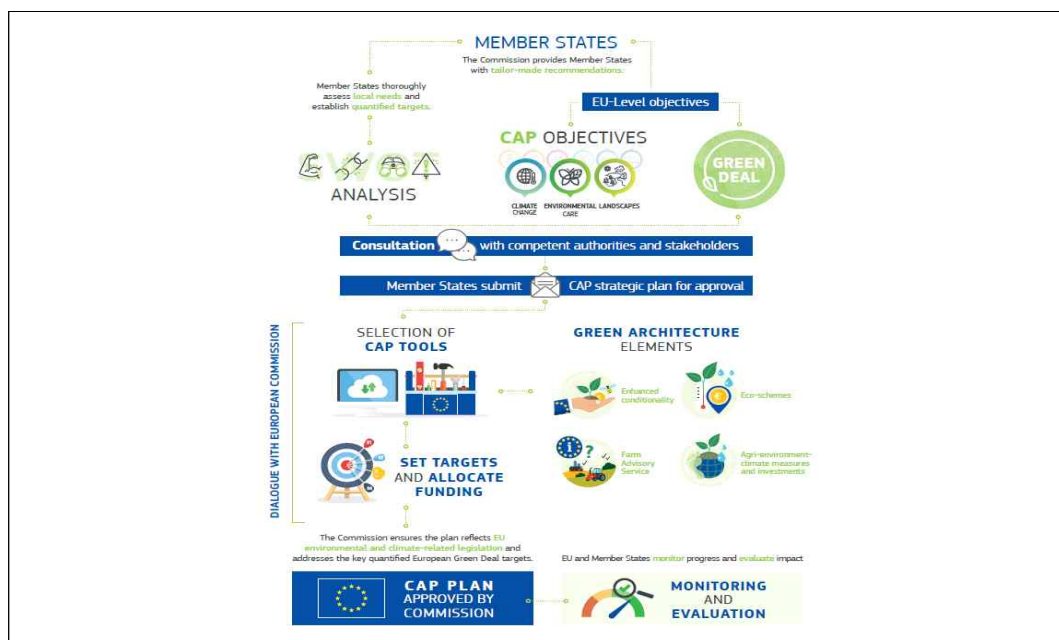
- ‘환경 계획’에 대한 2023~2027년 예산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경우 직불금의 최소 30%인 581억 유로가, 이사회(Council)의 경우 직불금의 최소 20%인 387억 유로가 각각 배정됨.

○ 특히 ‘환경 계획’에는 유기농 생산이 주된 사항으로 고려됨.

- ‘환경 계획(eco scheme)’ 및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EU 전역에 유기농 재배지를 현 수준 대비 2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요컨대 그린딜은 다음 절에 기술될 CAP 2021~2027의 주요 정책 목표(The 9 CAP OBJECTIVES)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EU 전체 단위의 목표라고 요약할 수 있음(<그림 5-7>).

<그림 5-7> CAP 전략 계획(CAP Strategic Plans)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a).

1.3.3. CAP 2021~2027 주요 정책 목표(The 9 CAP Objectives)

○ EC의 CAP 2021-2027 초안은 특히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됨.

- 1) 농민을 위한 공정 거래 및 안정적인 경제적 미래 보장(securing a fair deal and a stable economic future for farmers).
- 2) 보다 상위 수준의 기후 및 환경 행동 목표 설정(setting higher ambitions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action).
- 3) 유럽 사회 중심에서 농업의 지위 보호(safeguarding agriculture's position at the heart of Europe's society).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초안에 9가지의 구체적 목표(The 9 CAP Objectives)를 설정함(<그림 5-8>).

- 1) 소득 형평(fair income): 농민에게 공정한 소득을 보장함(ensure a fair income for farmers).
- 2) 경쟁력(competitiveness): 농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함(increase competitiveness).
- 3)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 식품 가치사슬 내에서 농민의 지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함(rebalance the power in the food chain).
- 4) 기후 변화(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climate change action)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 에너지 등에 기여함.
- 5) 환경 보호(environmental care): 수자원, 토양, 공기 등과 같은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효율적 경영을 장려함.
- 6) 경관(landscapes): 경관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함(preserve landscapes and biodiversity).
- 7) 세대교체(generational renewal): 세대 간 전환을 지원함(support genera-

tional renewal). 즉, 청년 농업인을 독려하여 농업 부문을 현대화하여 농산업 비즈니스를 개선시킴.

- 8) 농촌 지역(rural areas): 활기찬 농촌 지역을 조성함(foster vibrant rural areas). 농촌 지역에서의 고용, 성장,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지역 개발, 생명 경제(bioeconomy), 지속가능한 산림(sustainable forestry) 등을 촉진시킴.
- 9) 식품 건강(food health): 식품 및 건강 품질을 보호함(protect food and health quality).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지속가능 식품, 음식 쓰레기 저감, 동물 복지 문제 등을 포함하여 식품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EU 농업의 대응 방안을 향상시킴.

<그림 5-8> CAP 2021~2027 9대 목표(The 9 CAP OBJECTIVES)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Policy Objectives of the Future CAP.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future-cap/key-policy-objectives-future-cap_en#nineobjectives>. 검색일: 2020.12.1.

○ 위 9대 목표에 대한 내용 중 유기농 생산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3)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 7) 세대교체(generational renewal)임.

- 부수적으로 4) 기후 변화(climate change), 5) 환경 보호(environmental care), 6) 경관(landscape)에서는 유기농업이 토양에 유기물을 포집하여 탄소 저감 효과를 야기하거나(soil organic carbon, SOC) 화학 물질 및 합성 비료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 먼저 3)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 목표와 관련해서는 지역 개발 정책 및 부문별 조정안들이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 개발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가치사슬 내 농민의 지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AP 정책들이 설계됨.

- 유럽의 유기농 생산 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보다 자연에 가까운 식품(natural food)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특히 비가공 제품(unprocessed products)의 가격 형성에 있어 기존 공급망에서는 생산자가 소매가격의 약 6%~40%를 차지하는 반면, 유기농 생산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62%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기존의 관행농에 비해 유기농 생산의 경우 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성됨을 의미함(Sanders et al. 2016).

- EC의 CAP 2021~2027 초안에서는 기후 및 환경 목표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유기농 생산은 이러한 기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함. 이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 행위가 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9b).

○ 다음으로 7) 세대교체(general renewal) 목표와 관련해서는 농업 부문에 새로이 유입되는 젊은 세대 인력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기농업에 더 활발히 참가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함.

- 유기농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생산은 주로 소비자가 구매비용을 선지불하고 수확기에 농작물을 지급 받는 방식인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CSA)’ 참가자나 ‘귀농(back-to-the-land)’ 이주민들에게서 주로 성

행해 왔음이 확인됨(European Commission, 2019c).

- CAP 2021-2027 초안은 청년층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됨.

○ 이상의 9개 정책 목표는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3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표 5-5>).

- 경제 분야로는 1) 소득 형평(fair income), 2) 경쟁력(competitiveness), 3)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의 3개 목표, 환경 분야로는 4) 기후 변화(climate change), 5) 환경 보호(environmental care), 6) 경관(landscapes)의 3개 목표, 사회 분야로는 7) 세대교체(generational renewal), 8) 농촌 지역(rural areas), 9) 식품 건강(food health)의 3개 목표가 각각 포함됨.

<표 5-5> CAP 2021-2027 분야별 정책 목표

분야	목표		
경제			
	1. 소득 형평(fair income)	2. 경쟁력(competitiveness)	3.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
환경			
	4. 기후 변화(climate change)	5. 환경 보호(environmental care)	6. 경관(landscapes)
사회			
	7. 세대교체(generational renewal)	8. 농촌 지역(rural areas)	9. 식품 건강(food health)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Policy Objectives of the Future CAP. The Commission's Proposals.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future-cap_en>. 검색일: 2020.12.1.

1.3.4. 경제 분야 CAP 2021~2027 소득 지원 정책

- 기존 CAP의 정책 지향점과 동일하게 농업 소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은 CAP 2021~2027에서도 여전히 핵심 사안임.
 - CAP 2014~2020과 마찬가지로 기본 직불제(basic payments scheme)는 헥타르 단위의 농가 규모에 기초하여 지원됨.
 - 단, CAP 2021~2027에서는 중소 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업 부문에 젊은 세대가 유입되도록 청년농(young farmers)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차이점임.

- 위 기초에 맞추어 EC는 CAP 2021~2027 초안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포함함.
 - 영세 및 중소 규모 농가 대상 헥타르당 지원 금액 수준을 상향 설정함.
 - 직불액 분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농가 당 6만 유로 이상을 받던 직불금 몫을 감액하며, 농가당 10만 유로 이하로 제한함.
 - 각 EU 회원국에 할당된 직불금 지원액의 최소 2%를 젊은 농가(청년농) 지원에 배정하며, '지역 개발(rural development)' 및 '토지 간 이전에 대한 접근(access to land and land transfers)'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정된 재정 지원 금액을 활용하여 보완함.
 - EU 각 회원국들은 실제 영농을 하는 순수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리함.

1.3.5. 기후 및 환경 분야 CAP 2021-2027: 새로운 녹색 건축(a new green architecture)³⁴⁾

- 기후 및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CAP로 인해 1990~2014년 기간 동안 온실 가스 배출량이 21% 가량 감축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토양, 공기, 물 등 천연 자원 및 농림 분야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음.

³⁴⁾ European Commission(2019a)에 기초하여 작성됨.

- 이에 따라 CAP 2021~2027은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농업 분야가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초안이 작성됨.

○ 앞서 제시된 9대 정책 목표 중 4) 기후 변화(climate change), 5) 환경 보호(environmental care), 6) 경관(landscape)의 3개 항목이 기후 및 환경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1)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 및 완화(mitigation),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 기여함.

- 2) 토양, 공기, 물과 같은 천연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함.

- 3)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며,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식지 및 경관을 보전함.

○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CAP 전략 계획(CAP strategic plan)”을 수립함.

- 전략 계획 내에서 각 회원국은 자신이 처한 현황에 대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행함.

- SWOT 분석 후 목표에 적합한 대상(targets)을 설정하고 EU의 CAP 요구안에 부합하는 조정안(intervention(types of action))을 마련함.

- EC는 회원국이 설정한 대상 및 조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 시 해당 계획을 승인함.

- 사후 조치로 EC는 회원국들이 설정한 대상에 대해 연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 시 전략 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이상의 전반적인 사항은 CAP 내 두 기둥인 Pilar I(직불금)과 Pilar II(지역 개발)에 모두 적용됨.

○ 기후 및 환경 분야에 있어 CAP 2021~2027 초안이 기존 CAP 2014~2020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EU 전체 레벨보다는 회원국 단위에서 자국의 대상 및 전략에 보다 적합하도록 CAP

의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추구함.

- 이에 따라 기존 EU 전체 레벨에서의 CAP 관련 규칙 수 및 세부 사항은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단순화되며, 각 회원국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CAP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이 EU 전체 레벨에서 각 회원국 단위로 이동됨.

○ 아울러 CAP 2014-2020에서 기후 및 환경과 관련하여 주요 핵심 요소였던 ‘상호준수 의무(cross-compliance)’와 ‘녹색화(greening)’ 개념은 CAP 2021~2027 초안에서는 ‘조건성(condi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어 단순화됨.

- ‘조건성(conditionality)’은 Pilar I과 Pilar II에서 ‘지역 및 동물 기반 직불금(area- and animal-based CAP payments)’을 연결하는 시스템이자 이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됨.

- 직불금 수령자, 즉 농가 혹은 토지 경영자가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삭감되는 근거를 제시함.

○ EC는 CAP 2021~2027 제안서 초안에 친환경 농업(green farming)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의무 조건 및 증액된 자금 기회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녹색 건축(new green architecture)’을 수립하며, 해당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됨.

- 탄소가 풍부한 습지(carbon-rich wetlands)를 보호하고 작물 순환(crop rotation)을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토양을 보전함.

- 농민들이 농업 생산지역 내 수질을 개선하고 암모니아 및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레벨을 낮추도록 영양소 관리 관련 의무 조항을 구축함.

- 농민들로 하여금 기후, 생물 다양성, 환경 등에 유익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CAP 2021~2027 내에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불금 체계인 ‘환경 계획(eco-schemes)’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기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원으로 활용함.

- 이러한 방식을 통해 CAP 2021~2027이 앞서 기술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내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및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 전략과 연계되도록 함.

- ‘새로운 녹색 건축(new green architecture)’ 개념을 통해 CAP 2021~2027이 기존 CAP 2014~2020과 차별되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EU 수준의 의사결정이 아닌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후 및 환경 상황에 적합하게 지원 대상과 전략을 수립한다는 전제 하에 Pillar I과 Pillar II의 요소들을 새로이(new) 구축하도록 한다는 점임.
- 아울러 CAP 2014~2020에서 Pillar I과 Pillar II는 각각 직불제(direct payment)와 지역 개발 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과 관련된 항목에 해당되는데, CAP 2021~2027에서는 해당 개념들이 여전히 활용되기는 하지만 각각 ‘환경 계획(eco-scheme)’과 ‘농업-환경-기후 준수(agri-environment-climate commitments)’³⁵⁾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어 시행됨(<표 5-6>).
 - Pillar I과 Pillar II에 새로이 도입되는 두 개념은 CAP 2021~2027이 기존 CAP 2014~2020과 비교하여 기후 및 환경 이슈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CAP 2021~2027의 전반적인 기조와 같이 ‘환경 계획’과 ‘농업-환경-기후 준수’ 역시 EU 전체보다는 각 회원국의 상황에 맞도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기존 CAP 2014~2020에 비해 단순화되어 운영됨.

³⁵⁾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및 유지는 대표적인 ‘농업-환경-기후 준수’에 해당됨.

<표 5-6> CAP 2014-2020 내 유기농업 관련 정책

구분	환경 계획 (Eco-schemes)	농업-환경-기후 준수 (Agri-environment-climate commitments)
기둥 (Pillar)	Pillar I	Pillar II
자금원 (Source of funding)	Pillar I 예산 활용: 회원국으로부터의 공동 재원은 없음 (Pillar I budget - without co-financing by Member States)	Pillar II 예산 활용: 회원국과 공동 재원 활용 (Pillar II budget - with co-financing by Member States)
수혜 대상 (Possible beneficiaries)	농민 (Farmers)	농민 및 토지 경영자(예, 환경 NGOs) (Farmers, other land managers(e.g., environmental NGOs))
토지 연계 직불금 (Payments' link to land)	헥타르 당 지불: 대상 토지는 직불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³⁶⁾ (Payment per hectare Land concerned must be eligible for direct payments)	헥타르 당 지불: 대상 토지는 직불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음 (Payment per hectare Land concerned need not be eligible for direct payments)
의무 및 자발 여부 (Obligatory/voluntary)	회원국들은 관련 규정을 제정함: 농민은 자발적으로 참여 (Member States must make provision for them Participation voluntary for farmers)	회원국들은 관련 규정을 제정함: 농민 및 다른 수혜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 (Member States make provision for them Participation voluntary for farmers and other potential beneficiaries)
계약 기간 (Nature of Commitments)	1년 단위 계약 (Annual(i.e. "one year at a time"))	다년(5~7년) 계약 (Multi-annual contracts (usually of 5-7 years))
프리미엄 계산 (Calculation of premia)	추가 비용 보상 / 관련 계약에 따른 소득 손실 또는 추가적인 기본 소득 직불금(프리미엄 레벨에는 특별한 규칙을 부여하지 않음) (Compensation for additional costs / income losses arising from commitments concerned, OR Additional payment to basic income support(no particular rules over premium level))	추가 비용 보상 / 관련 계약에 따른 소득 손실 (Compensation for additional costs/income losses arising from commitments concer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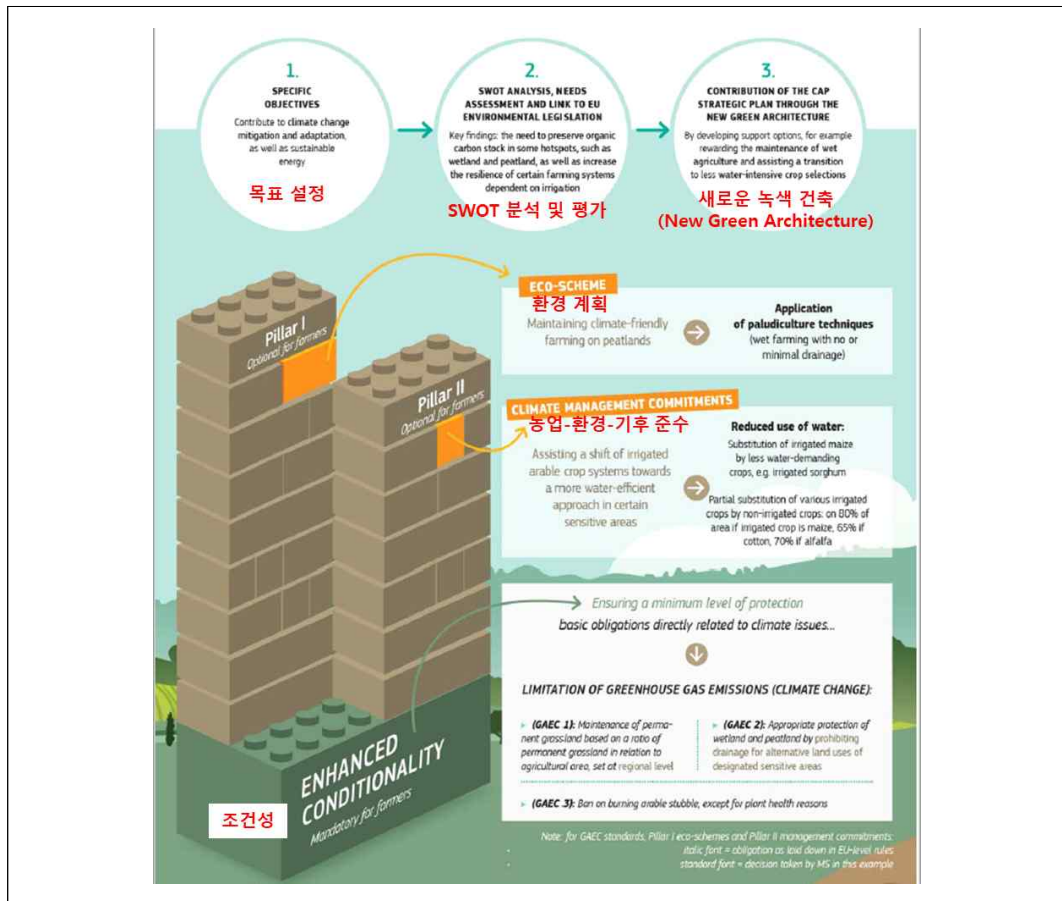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a).

○ <그림 5-9>는 이에 대한 가상적인 예시로 어떤 EU 회원국이 목적(objective)으로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를 설정할 경우 환경 관련 전략이 어떻게 새롭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도식하여 보여 줌.

³⁶⁾ 직불금은 CAP Pillar I을 통해 농민에게 제공되는 면적 기반 직불금으로 소득지지(income support)나 환경 계획(eco-schemes)과 같은 다양한 직불금 체계를 포함함.

- <그림 5-9>에서 정자체로 표기된 부분은 각 회원국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기울어진 이탤릭체(italic font)로 표기된 부분은 EU 레벨의 CAP 규칙을 의미함.
- 이렇듯 ‘새로운 녹색 건축(new green architecture)’은 기존 CAP 2014~2020과는 다르게 각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이 중요시되며, 기존 Pillar I과 Pillar II를 각 회원국 목표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그림 5-9> EU 회원국의 CAP 2021-2027 새로운 녹색 건축(new green architecture) 예시: 기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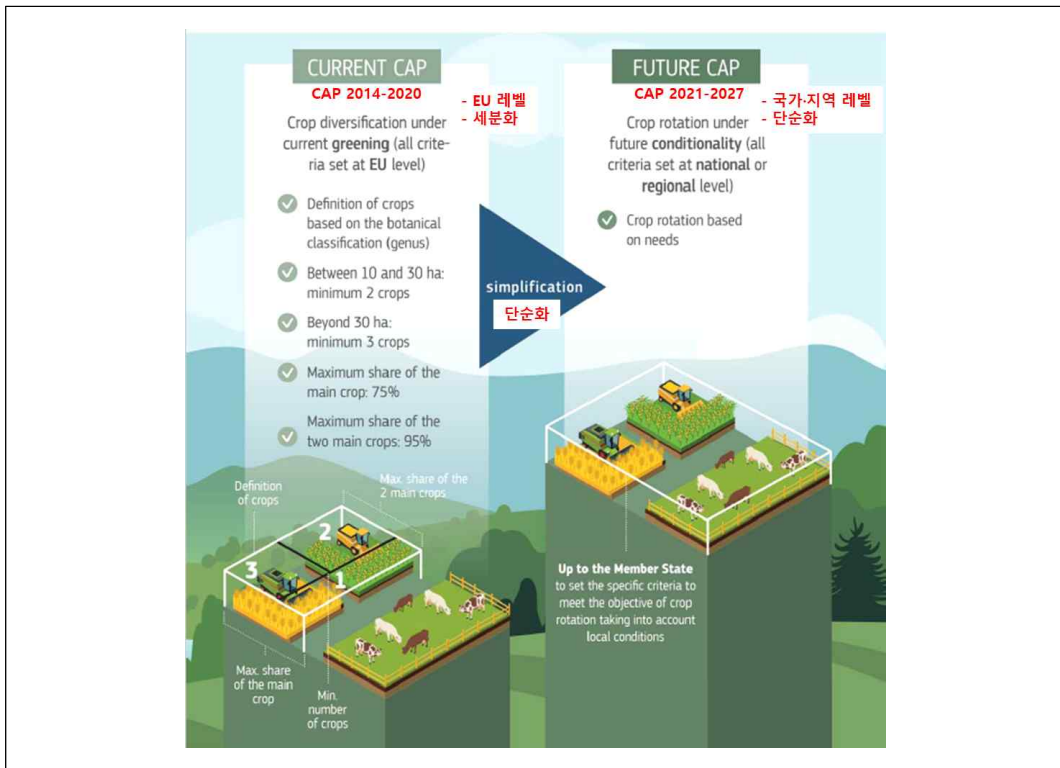
주: 기울임체(italic font) - EU 전체 기준, 정자체(standard font) - 회원국 의사결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a)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아울러 기존 CAP 2014~2020에서는 EU 전체 레벨에서 각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세밀하게 제정되었다면, CAP 2021~2027에서는 각 회원국별로 ‘조건성

(conditionality)’만 충족된다면 해당 상황에 맞게 단순화(simplification)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임.

- <그림 5-10>은 그 예시를 도식한 것으로 기존 CAP 2014-2020에서는 EU 전체 레벨에서 ‘녹색화(greening)’ 범주 아래 모든 국가가 작물 다각화(crop diversification)를 준수해야 했다면, CAP 2021-2027에서는 각 회원국별로 ‘조건성(conditionality)’에 부합한다면 국가 혹은 지역 레벨에서 해당 기준을 상당 부분 단순화(simplification)하여 ‘작물 윤작(crop rotation)’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5-10> CAP 2021-2027의 단순화(simplification) 예시: 작물 다각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a)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3.6. 사회 분야 CAP 2021-2027: 지역 사회 중심 구성원으로서의 농민

- 유럽 농촌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은 농민이며, 기후 및 환경 관련 측면에서 볼 때 농민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CAP 2021~2027은 농민 주도로 농촌 지역 사회를 개발, 지원, 투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포함함.
 - 농촌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 젊은 세대 농민(청년농)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 구체적으로 세대 간 지식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청년 농민의 토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함.
 - ‘바이오 경제(bio economy)’ 및 ‘지속가능 산림(sustainable forestry)’ 등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의 고용, 성장, 사회 통합 및 지역 개발이 촉진되도록 함.
 -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식품, 음식물 쓰레기, 동물 복지 등 식품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EU 농업의 대응 방안을 개선함.
 - EU의 지역 개발 정책인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s)’³⁷⁾ 및 ‘LEADER 프로그램’³⁸⁾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공함.
- 앞서 제시된 9대 정책 목표 중 7) 세대 교체(generational renewal), 8) 농촌 지역(rural areas), 9) 식품 건강(food health)의 3개 항목이 농촌 지역 사회 분야와 관련이 있음.

1.3.7. CAP 2021-2027 내 혁신 촉진: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AKIS)’ 구축

- 이상의 경제, 환경, 사회 분야 9개 정책(The 9 CAP Objectives)과 함께 CAP 2021~2027은 농업 부문이 스마트하고 회복가능하며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

³⁷⁾ https://enrd.ec.europa.eu/enrd-thematic-work/smart-and-competitive-rural-areas/smart-villages_en

³⁸⁾ https://enrd.ec.europa.eu/leader-clld_en#_edn1

- 이에 농업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더 강력한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AKIS)’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³⁹⁾
- CAP 2021~2027에서는 CAP 전략 계획(CAP strategic plans)에 국가 단위 AKIS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초안이 작성됨.

○ AKIS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사안이 고려됨.

- 1) 지식 흐름 및 연구와 실천 간 연결을 강화함(enhancing knowledge flows and strengthening links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 2) 모든 농가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AKIS 내에서 상호 연결을 촉진함 (strengthening all farm advisory services and fostering their inter-connection within the AKIS).
- 3) 주제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혁신을 강화함(enhancing cross-thematic and cross-border interactive innovation).
- 4)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suppor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agriculture).

○ EC는 식품, 농업, 농촌 지역 개발, 생명 경제 관련 연구 및 혁신을 위해 ‘Horizon 유럽 프로그램(Horizon Europe programme)’⁴⁰⁾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 또한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럽혁신파트너쉽(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EIP-AGRI)’⁴¹⁾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육성하기 위해 Horizon 유럽 및 지역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충당할 계획임.

³⁹⁾ <https://ec.europa.eu/eip/agriculture/en/tags/akis>

⁴⁰⁾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

⁴¹⁾ <https://ec.europa.eu/eip/agriculture/>

1.3.8. CAP 2021~2027 예산 규모

- 2020년 7월에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CAP 2021~2027 제안서 초안에 대한 예산액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제출되었음.
 - 이사회 결정에 따라 CAP 2021~2027은 강력한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 2021~2027년 전체 기간에 대해 CAP 자금은 3,870억 유로 규모임.
 - 2020년 7월 유럽 이사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CAP의 ‘유럽 농업 보증 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은 2,911억 유로로 설정되었으며, ‘차세대 EU 기금(Next Generation EU funding)’을 포함한 ‘유럽 지역 개발 농업 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는 950억 유로에 달함.⁴²⁾

- ‘차세대 EU 기금’으로부터는 최대 80억 유로가 지원됨.
 - 차세대 EU는 EAFRD 예산을 80억 유로 수준으로 강화하여 농촌 지역이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 소득 지원과 농촌 지역 개발 간의 이전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장함.
 - EU 국가들이 농업 부문 우선순위(priorities)에 CAP 정책을 보다 더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Pillar I)과 농촌 지역 개발(Pillar II) 간에 CAP 할당 중 최대 25 %를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
 - 또한 EU 국가는 환경 및 기후 목표 지원, 청년 농부 지원, 직접 지불금이 EU 평균 이하인 국가에 대한 지원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함.

⁴²⁾ https://ec.europa.eu/info/strategy/recovery-plan-europe_en

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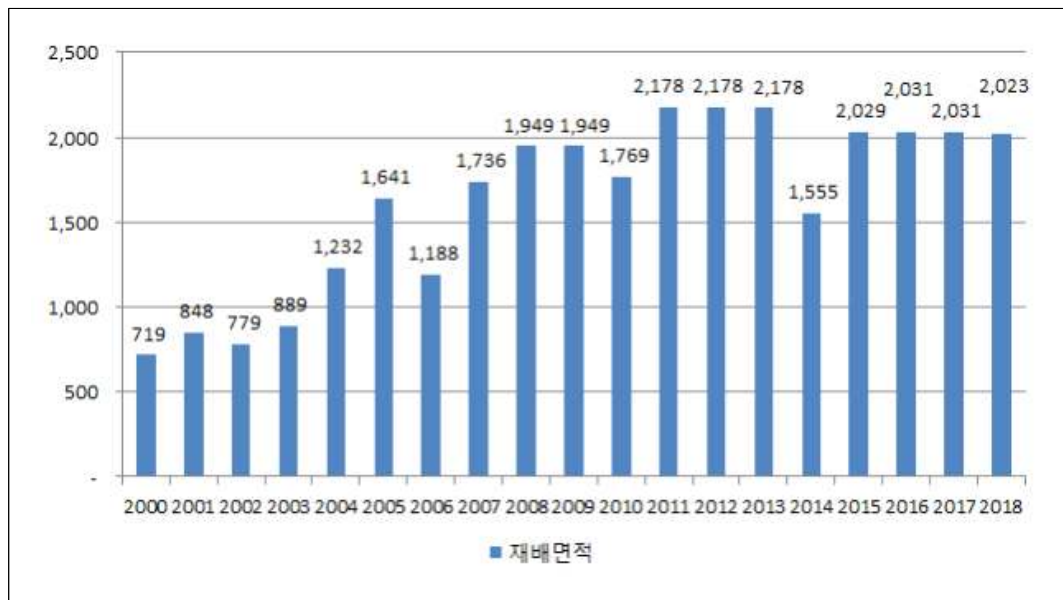
2.1. 개황

○ 미국의 2000~2018년 기간 동안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는 <그림 5-11>에 제시됨.

- 미국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2000년 719천 ha에서 2018년 2,023천 ha로 연평균성장률(CAGR) 5.92%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음.⁴³⁾
- 2000년에 미국의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은 0.22%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0.59% 수준으로 상승하여 연평균성장률 5.63%의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전체 재배면적의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임.

<그림 5-11>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재배면적 추이

단위: 천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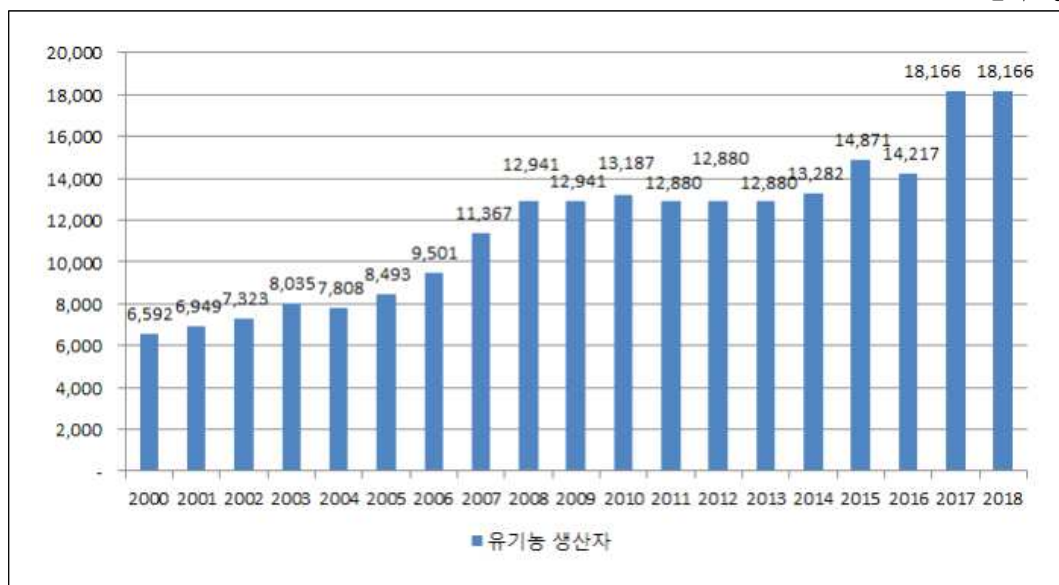
주: 2014년 하락, 2012~2013 및 2016~2018 동일 수치 등은 FiBL의 미국 자료 집계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 접속일: 2020. 10. 30.

43) 단, FiBL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미국 유기농 자료는 EU의 경우와 달리 다소 부정확해 보이는데 집계방식 및 EU만큼 정확한 수준으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함. 따라서 기계적인 해석에는 주의를 요함.

○ 2000년 기준 미국의 유기농 생산자 수는 6,592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 18,166명까지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5.79%의 성장세를 보임(<그림 5-12> 참조).

<그림 5-12>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생산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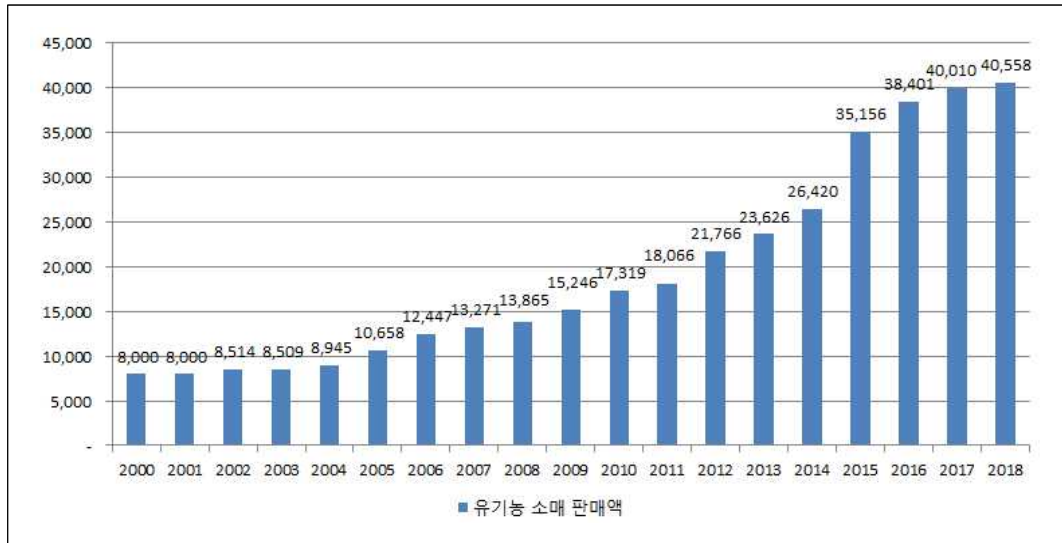


주: 2014년 하락, 2012~2013 및 2016~2018 동일 수치 등은 FiBL의 미국 자료 집계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 접속일: 2020. 10. 30.

○ 미국의 경우 2000년 유기농 소매 판매액은 8,000백만 유로였으며, 2018년에는 40,558백만 유로까지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9.44%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음(<그림 5-13> 참조).

<그림 5-13>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소매 판매액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 접속일: 2020. 10. 30.

○ 유기농업 재배면적과 유기농 재배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연평균성장률과 소매 판매액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표 5-7>과 같이 요약됨.

- 이에 따르면 생산 및 공급 부문과 관련된 연평균성장률보다 소비 및 수요 부문의 소매 판매액의 연평균성장률이 약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즉, 앞 장의 유럽 및 EU 사례와 유사하게 미국의 경우도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수요가 증가하는 수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5-7> 2000~2018년 미국 유기농 관련 주요 지표별 CAGR

단위: %

항목	CAGR
유기농 재배면적	5.92
전체면적 대비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	5.63
유기농 생산자 수	5.79
유기농 소매 판매액	9.44

주: FiBL의 미국 집계 자료는 다소 부정확함(2014년 하락, 2012~2013 및 2016~2018 동일 수치 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 접속일: 2020. 10. 30.

2.2.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정책

- 미국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은 주로 USDA가 주관 하에 유기농 생산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
 - USDA는 기술 교육(technical training), 재정(financial resources), 지도(extension)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기농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USDA, 2015).
 - <표 5-6>에는 USDA에서 시행하는 직접 및 간접 유기농 지원 프로그램이 분류됨.

- 먼저 유기농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하에서 지원되는 ‘(유기농)인증 비용 분담(Certification Cost Share)’ 정책을 들 수 있음.
 - 지원 대상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취급업자이며, 인증비용의 일부를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음.
 - 매년 인증비용의 75%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한 건의 인증 내에서 최대 \$750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음.
 - 또한 <표 5-8>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USDA 유기농 관련 연방 규정(7 Code of Federal Regulation 205)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 대상은 1) 연간 유기농 매출액이 \$5,000 이하인 유기농가 및 사업체, 2) 유기농 제품을 가공하지 않고 단지 취급만하는 소매 식품업체, 3) 유기농 성분이 70% 미만인 제품만을 취급하는 업체, 4) 성분 표시란에만 유기농 여부를 표시하는 취급 업체임.

- 유기농 생산자의 영농 활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미국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s, NRCS)’ 주관으로 친환경 기술을 장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유기농 환경개선장려시책(Organic Environment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과 ‘보전관리시책(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을 들 수 있음.

- EQIP에서 지원 가능한 활동으로는 1) 보전계획 개발, 2) 완충지대 구축, 3) 수분 매개체(pollinator) 서식지 조성, 4) 토양 유실 최소화 및 토양 지역·유기질 개선 활동, 5) 방목계획 수립, 6) 가축 영농활동 지원, 7) 관개(irrigation) 효율성 개선, 8) 작물 윤작(rotation) 및 양분 관리 개선 등이 포함됨.
- EQIP의 지원금액은 회계연도 당 최대 \$20,000으로 한정되며 농업법(Farm Bill) 적용 6년 동안 \$80,000 이상 지원이 불가함.
- CSP는 농업인들의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하도록 토지 여건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보조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 CSP의 지원 대상 규모는 7,000만 acre 경작지와 임지가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함.
- CSP의 계약은 5년 단위 체결이 기본이며 금전적 지원은 연 단위로 이루어짐. 또한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bundle 형식으로 묶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원금이 상향하는 방식을 취함.
- 아울러 CSP에 제시된 보전 활동(enhancement) 중 35개가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유기농 생산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기존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유기 전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는 미국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에서 제공하는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Transition Incentive Program, TIP)’과 ‘보전 융자 프로그램(Conservation Loan Program, CLP)’을 들 수 있음.

- TIP 지원 대상으로는 신규 농업인의 경우 농업을 시작한 지 10년 미만인 농업인 혹은 사업체가 해당되며, 사회적 약자(minor) 그룹으로 인종 혹은 소수 민족 차별을 겪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 CLP는 영세 농가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CLP의 지원 대상 리스트에 유기농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기농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혹은 유기농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외에 보험, 연구, 마케팅 등 유기농과 관련된 전 분야, 즉 유기농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걸쳐 지원 가능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표 5-8> 참조).

<표 5-8> USDA 유기농 지원 프로그램 분류

지원 대상	기관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내용
USDA Resources Targeting Organic Producers (유기농 생산자)	National Organic Program (NOP) (국가유기농프로그램)	Certification Cost Share (인증 비용 분담)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자연자원보호청)	Organic Environment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유기농 환경 개선 장려 시책)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보전 관리 시책)
	Farm Service Agency (FSA) (농업지원청)	Conservation Loan Program (보전 융자 프로그램)
		Transition Incentives Program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
	Risk Management Agency (RMA) (리스크 관리 기관)	Crop Insurance (작물 보험)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농업 마케팅 서비스)	Market News (시장 뉴스)	
Organic Research, Data, and Information (유기농 연구, 데이터, 정보)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국가농업통계서비스)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농업 연구 서비스)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국립 식품 및 농업 기관)	Organic Research & Extension Initiative (유기농업 연구 및 지도 계획)
		Organic Transition Program (ORG) (유기농 전환 프로그램)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 Education (SARE) (지속가능 농업 연구 및 교육)
		Specialty Crop Research Initiative (특용 작물 연구 기관)
		Beginning Farmer &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 (초보 농부 및 목장 경영자 개발 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중소기업 혁신 연구)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국립 농업 도서관)	Alternative Farming Systems Information Center (AFSIC) (대안 농업 시스템 정보 센터)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경제 연구 서비스)		
Cooperative Extension (협동조합 지도)	eOrganic	

(계속)

지원 대상	기관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내용
USDA Marketing & Infrastructure (마케팅 & 인프라)	Rural Development (RD) (지역 개발)	Value Added Producer Grants (VAPG) (부가 가치 생산자 보조금)
		Business & Industry Program (B&I) (비즈니스 & 산업 프로그램)
		Cooperative Service (협동조합 서비스)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농업 마케팅 서비스)	Federal-State Marketing Improvement Program (FSMIP) (연방-주 마케팅 개선 프로그램)
		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 (FMPP) (농민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Speciality Crop Block Grant Program (SCBG) (특용 작물 방제 보조금 프로그램)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해외 농업 서비스)	Market Access Program (MAP) (시장 접근 프로그램)	
USDA Resources Valuable to Organic (유기농 가치)	Center for Nutrition Policy & Promotion (CNPP) (영양 정책 및 홍보 센터)	
	Farm Service Agency (FSA) (농업지원청)	Conservation Programs (보전 프로그램)
		Loans & Loan Guarantees (대출 및 대출 보증)
		Disaster Assistance (재난 지원)
		Transition Incentive Program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동물 및 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	Pest Exclusion & Treatment (해충 차단 및 치료)
		Wildlife Management (야생동물 관리)
		Import Treatments (수입 처리)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천연 자원 보전 서비스)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환경 개선 장려 시책)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 (야생동물 서식지 장려 프로그램)
	Forest Service (FS) (산림 서비스)	National Agroforestry Center (NAC) (국립 임업 센터)
		Food & Nutrition Service (FNS) (식품 및 영양 서비스)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영양 보충 원조 프로그램)		

(계속)

지원 대상	기관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내용
USDA Resources Valuable to Organic (유기농 가치)	Forest Service (FS) (산림 서비스)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FMNP) (농민 시장 영양 프로그램)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FMNP) (고령화 농가 시장 영양 프로그램)
	Farm2School	
	Food Safety & Inspection Service (FSIS) (식품 안전 및 검사 서비스)	Meat & Poultry Safety Inspection (축산물 및 가금류 안전 검사)
	Grain Inspection, Packers &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 (곡물 검사, 포장, 가축사육장 기관)	

자료: USDA(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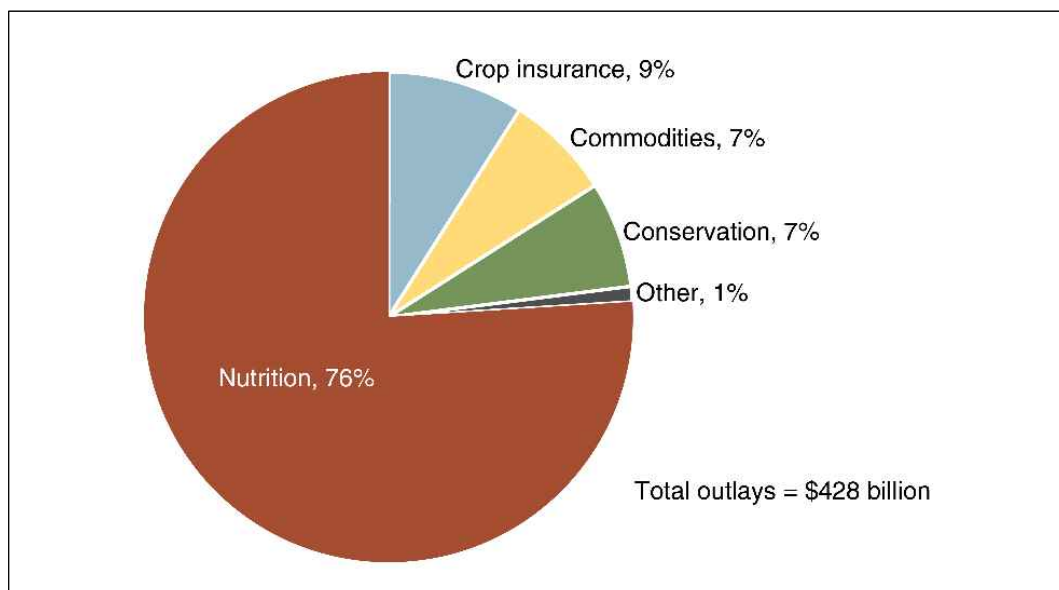
2.3. 2018 미국 농업법 내 유기농업⁴⁴⁾

2.3.1. 개요

- 2018년 12월 20일 서명된 미국 농업법(Farm Bill)은 2023년까지 유효하며, 일부 조항의 경우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 2018년 미국 농업법에 따라 연간 약 4,280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영양 관련 프로그램에 76%, 작물보험에 9%, 보전 프로그램에 7%, 그리고 품목 프로그램에 7%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⁴⁴⁾ USDA ERS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Highlights and Implications. <<https://www.ers.usda.gov/agriculture-improvement-act-of-2018-highlights-and-implications/>>. 접속일: 2020. 12. 1.

<그림 5-14> 2018년 미국 농업법에 따른 2019~2023년 항목별 예산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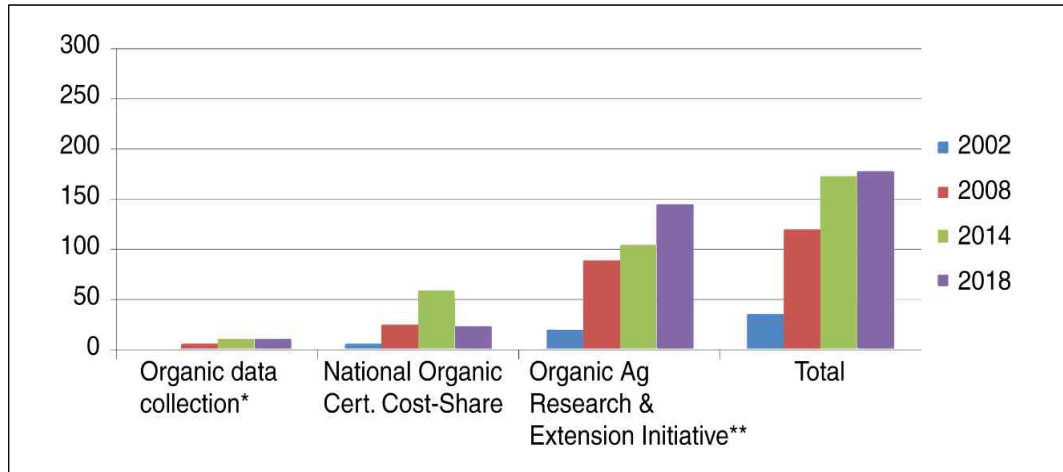


자료: USDA ERS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Highlights and Implications. <<https://www.ers.usda.gov/agriculture-improvement-act-of-2018-highlights-and-implications/>>. 접속일: 2020. 12. 1.

- 2018 농업법을 통한 친환경농업 관련 추가 사항은 미국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1) USDA 친환경 인증 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가, 2)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확대, 3) 친환경 생산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유기농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농업법은 유기농업 관련 연구에 대한 의무지출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지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함. 또한 국가유기농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수입 유기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을 추가함. 이외에도 친환경 농가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5-15>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무지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17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수치임.

자료: USDA ERS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Highlights and Implications. <<https://www.ers.usda.gov/agriculture-improvement-act-of-2018-highlights-and-implications/>>. 접속일: 2020. 12. 1.

2.3.2. 친환경농업 관련 변경 내용

○ 비보험 농작물 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NAP)

- NAP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비보험농작물지원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시장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포함하였음.

○ 유기농 환경개선장려시책(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Organic Initiative, EQIP Organic Initiative)

- 2008년 농업법 내 EQIP 조항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전환과 관련한 보전활동에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전환 농가에 대한 지원금 한도가 6년간 80,000 달러(2014 농업법 기준)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40,000 달러로 증가함.

- 유기농 EQIP의 지원한도는 일반 EQIP 보다 낮게 설정됨. 생산자는 일반 EQIP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유기농 EQIP의 경쟁률이 더 낮음.

○ 보전유보시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내 전환 인센티브

- 미국 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자가 CRP 계약이 종료되기 2년 전 (2014 농업법 기준, 1년 전)부터 친환경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보전관리시책(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내 자금 지원

- CSP 내 친환경 생산 및 전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주에 자금을 지원함. 주별 자금 배정은 각 주의 친환경 생산 및 전환 건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농산물 수출 시장 접근성

- 친환경 농산물이 미국 농산물의 수출시장 개발 및 확대를 지원하는 시장접근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 친환경 농가를 위한 중재 서비스

- 주 내 농업 중재 프로그램에 국가유기농프로그램, 가족농 전환, 농가-이웃 분쟁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친환경 연구에 대한 영구적 자금 지원

- 유기농업 연구 및 지도 계획(Organic Agriculture Research and Extension)에 대한 영구적 자금 지원이 마련됨. 2019년 연간 의무지출액은 2,000만 달러이며, 2023년까지 5,000만 달러로 늘어난 후 이후 연도에 계속 유지되도록 설정함.

- 2014~2018년까지는 매년 2,000만 달러가 지원됨.

○ 국가 친환경 인증 비용 분담 프로그램

- 친환경 농가와 취급자에 대한 인증 비용 지원이 의무지출로 포함됨.
- 예산은 2014 농업법상 5,75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2018 농업법)로 감소함.

○ 친환경 데이터 계획(Organic data initiatives)

- 친환경 분야에 대한 경제 데이터를 개선하는데 의무지출 예산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500만 달러로 설정됨.
- 친환경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과 검증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투자에 별도의 의무지출 500만 달러가 설정됨.

○ 국가유기농프로그램

- USDA 친환경 기준과 인증 시행 개선을 위한 신규 조항 일부가 추가됨.
- 세출 승인 금액은 2019년 1,650만 달러에서 2023년 2,400만 달러로 증가함.
- 이는 2019~2023년까지 총 1억50만 달러로 이전 5년간 7,500만 달러에서 증가한 규모임.

○ 국가유기인증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

- 2018 농업법은 농업인에 고용된 사람도 NOSB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기농 생산에 허용되는 재료 목록을 변경하기 위한 현재 NOSB 투표 절차를 명문화함

○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보험 개선

- 2014 농업법은 유기농 작물에 대한 보험을 위해 유기농 가격 설정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2018 농업법은 농작물보험사나 손해평가사에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방식, 보전활동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음.

3. 시사점

-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전환,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맞물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식품산업에 대한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해 EU와 미국 등 해외 유기농산업 현황과 유기농식품산업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먼저 유기농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EU와 미국 모두 생산, 소비에 있어 지속적으로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증대되어 온 것이 확인됨.
 - 단, 수요 측면의 성장 속도에 비해 공급 측면, 즉 재배면적 혹은 전체 재배면적 중 유기농 재배면적의 비율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미국과 EU의 산업 현황 규모를 비교하면 다음 <표 5-9>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미국과 EU를 비교할 때 생산 및 공급 관련 지표는 현저히 떨어지나 수요 관련 지표는 오히려 높게 추산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EU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국가, 예를 들어 독일을 비교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전체면적 대비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이나 유기농 생산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즉, 유기농산업 현황을 비교할 때 미국보다는 EU가 공급 측면에서 유기농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5-9> 2018년 미국 및 EU 회원국 주요 지표별 비교

단위: 천 ha, %, 명, 백만 유로

항목	(a)미국	(b)EU	(a)/(b)	(c)독일	(a)/(c)
유기농 재배면적	2,023	13,790	0.15	1,521	1.33
전체면적 대비 유기농 재배면적 비율	0.59	7.71	0.08	9.1	0.06
유기농 생산자 수	18,166	327,222	0.06	31,713	0.57
유기농 소매 판매액	40,559	37,412	1.08	10,910	3.72

주1: FiBL의 미국 집계 자료는 다소 부정확함(2014년 하락, 2012~2013 및 2016~2018 동일 수치 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2: 1EUR = 1.2USD

자료: FiBL Statistics. <<https://statistics.fibl.org/europe/>>. 접속일: 2020. 10. 30.

○ 유기농식품산업 지원 정책 측면에서 비교하면 EU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생태적 관점 등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직불금 및 지원금이 제공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상기 가치보다는 대출, 서비스, 등 시장지향적인 지원 정책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구, 데이터, 마케팅 등 유기농식품산업의 전·후방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점은 전주기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됨.

○ 이에 향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 시에는 EU가 추구하는 친환경적 및 지속가능성의 가치 측면과 미국이 제시하는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제고, 연구 및 데이터 확충 등 선순환 구조 구축 측면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됨.

6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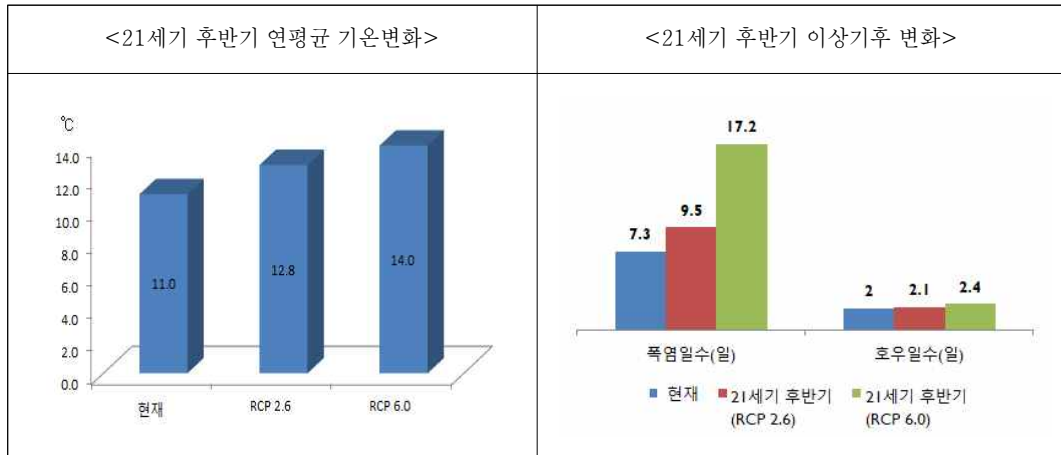
1. 비전 설정 배경

○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시키고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는 농업으로 알려짐.

-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연평균 기온 세계평균(0.85°C)보다 2배 이상 더 상승하였으며, RCP6.0 시나리오 상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기온 현재보다 3.0°C 도 상승하고, 폭염일수 9.9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가시화되고 있음.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됨. 농축산부문은 기후 취약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기 때문에 특히 적응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6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됨.
-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 양분수지 가운데 질소수지와 인수지가 OECD 국가들 중 각각 1위와 2위임. <그림 6-2>는 화학비료 사용량 및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분뇨 발생량도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양분 과잉에 따른 토양, 수질, 대기질 오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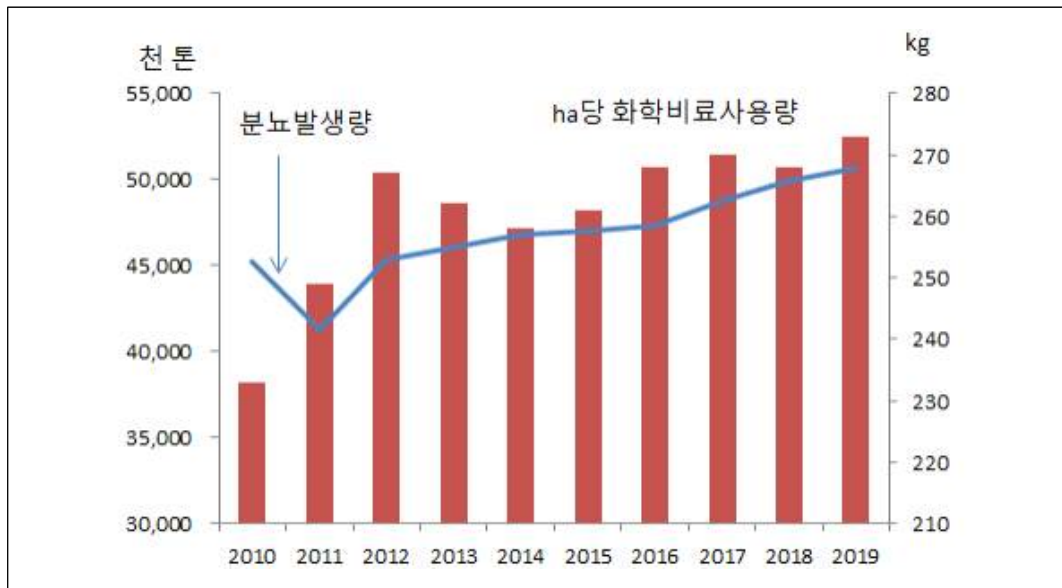
- 이러한 기후변화, 농업환경의 위기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 부문은 양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통해 미래의 식량안보를 지켜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도 이행해야 함.
- IFOAM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화학 질소비료를 사용되지 않고 양분 손실을 최소화하며, 화학비료 제조에 따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 또한 높은 유기물의 함량과 토양의 피복으로 인해 토양이 홍수, 가뭄으로부터 더 많은 회복력을 갖게 함. 우리나라 문헌에서도 친환경농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이 일반관행에 비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김창길 외 2016).

<그림 6-1> 한반도 연평균 기온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 기상청,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그림 6-2>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주: 분뇨발생량은 한우 사육두수에 분뇨발생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정학균(2020)에서 재인용함.

-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 및 농업환경 오염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경축순환농업과 같은 생태농업을 통해 양분을 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2018년 12월 27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삶에 힘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함.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을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연한 주체로서,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하는 것을 지향함.
- 친환경농업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수입산에 대한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인증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
 - 친환경농업을 은퇴하는 노령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집적화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체할 농업인 육성이 시급함.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젊음

농업인의 선호가 낮는데 미래세대인 젊은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요구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민간소비가 줄어들고 있음. 공공급식도 학교급식에만 치중함에 따라 공공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음. 미래세대인 임산부(태아, 신생아), 대학생, 군인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음.
- 코로나는 친환경농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었음.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반면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인식하면서 소비를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시켰음.
- 위기에 대응해서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의 발전, 수출 확대, 비식용가공 제품 생산 등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켰음.
- 기회에 대응해서는 인터넷 등 비대면 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 촉진 필요성을 증가시켰음.

○ 제1차~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비전

-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2001~2005)의 비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구현'으로 설정함.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조건·농가경영규모·작물 특성 등에 알맞은 친환경농업 배치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종·축산·임업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 증진'을 제시함.
-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2006~2010)의 비전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 농업의 실현'으로 설정함.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연순환형 농업 정착, 고품질 안전농식품 공급,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증대, 국토환경 보전 기여 등 네 가지를 제시함.
-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2011~2015)의 비전은 '국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으로 설정하고, 미션으로 생산자를 잘 살게 하는 친환경농업, 소비

자를 행복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등 3대 핵심가치를 설정함.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2016~2020)의 비전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함.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2021~2025)의 비전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농업, 공익적 가치 등 농정 키워드를 반영하여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으로 설정함.

2. 기본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의 집적화는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산지 유통 경쟁력 제고, 소비자와의 계약재배 여건 마련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하지만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의 집적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더욱이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기술의 부족, 친환경농업인의 노령화 등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협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가족 건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소비해 온 데 반해 가치소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친환경농산물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급식은 학교급식에 머물러 있으며, 가공 및 외식시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여 여전히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확산하고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함.

- 우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육성하여 산지 유통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유통·가공·외식 등 소비자와의 계약재배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력을 절감시키면서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인이 노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시킬 필요도 있음.

- 다음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를 조성해야 함. 소비문화는 생산자, 소비자, 기업이 서로 협력해야만 조성될 수 있음. 또한 친환경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치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식품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급식시장, 가공 및 외식시장으로 소비기반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3. 정책목표 설정

- 친환경농업의 확산지표로 친환경농업 인증 비율을 설정하고, 5차 5개년 친환경농업 정책추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생산면적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수요증가는 공공수요와 민간수요로 나누어 접근함.
-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목표는 4차 5개년 계획의 정책 효과가 2025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의 추세 연장 시나리오와 임산부, 학교급식, 군대급식 등 공공수요 증가 시나리오, 그리고 COVID-19의 영향, 가치 소비, 유통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가공 소비 등 민간수요 증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함<부표 3>.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19) 5.2% → ('25) 7.9~12.1%(약 10%)
- 제4차 5개년 계획이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한 데 비해 제5차 5개년 계획은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 분야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함. 구체적으로 제4차와 제5차 계획의 차이점은 아래 <표 6-1>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6-1> 4차 계획과 5차 계획의 주요 차이

구분	4차 계획	5차 계획
비전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여건 및 배경	부실인증, 내실화 요구, 공공급식 수요	노령화, 소비경제, 코로나 위기, 농업환경오염 심화, 기후변화 위기
정책 키워드	국민적 신뢰, 인증제도 개선, 산지유통조직화, 학교급식	미래세대, 집적화, 민간소비 활성화, 생태농업, 비대면 유통
주요 정책 방향	인증제도 개선,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
주요 추진 과제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조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젊은 인력 유입 촉진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확대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 시장 확대 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3>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비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목표	인증면적 비율: ('20) 5.2% → ('25) 7.9~12.1%(약 10%)	
주요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젊은 인력 유입 촉진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확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 시장 확대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친환경 외식·가공산업 활성화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관리 체계 개편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 데이터의 통합관리 친환경농업 통계시스템 개선 추진

자료: 저자 작성.

4. 분야별 추진 방향

4.1.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4.1.1.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가. 추진 방향

- 친환경농업 생산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면서 농업환경보전과 같이 친환경농업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그린뉴딜 정책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되 보다 집적화되도록 기존의 지구조성 지원을 집적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
- 송기선 외(2019)의 집적화 수준 진단 결과를 보면, 법정동(리) 단위에서 10ha 이상 인증을 받고, 인증면적 비중이 10% 이상인 곳은 1,584개소, 110ha 이상 인증을 받고 인증면적 비중이 90% 이상인 곳은 13개소였음. 송기선 외(2019)는 친환경인증 수준이 30ha 이상이면서, 인증면적 비중이 50% 이상을 적정 수준의 집적화로 보았음. 하지만 위의 친환경 인증 단지 사례가 보여주듯 집적화 수준이 높을수록 인증 취소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집적화 수준 90% 이상을 목표 수준으로 하여 점차 집적화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이를 위해 집적화 수준 50%를 기준(편의상 50%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며 반드시 50%일 필요는 없음)으로 지구를 구분해 볼 수 있음. 즉 2019년 기준 인증면적 30ha 이상이고 경지면적 대비 인증면적 비율을 10%이상인 법정리 기준으로 지구를 분류하되 집적화 정도가 10~50%인 경우(419개)를 예비지구, 50~90%인 경우(143개)를 기초 지구, 90% 이상(47개)을 선도 지구로 분류할 수 있음.
- 집적화는 비의도적 오염 방지, 체계적 농업환경 관리, 농작업 비효율성 제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활동 기반 조성 및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임. 따라서 집적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집적화 지원이 필요함. 집적화 지원을 받고자 하면 집적화 목표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집적화 수준 상향 목표(5% 확대, 10% 확대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나. 추진내용

- (1)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으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개념)농업환경관리를 전제로 친환경 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 추진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권역
 - 집적지구에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적용을 의무화하여 지구 내 관행농가의 쉬운 친환경농업 전환 환경을 조성, 친환경농업의 확대 구심점 기능

○ (지정) 現친환경농업지구 중에서 집적지구를 우선 지정*

* 친환경농업지구 외 새로운 지구 지정 가능성도 검토

- 친환경농업지구 중 연접 면적, 주변 환경, 경축순환 등 자원순환 구조, 안정적 판로 확보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 품목별(노지, 시설, 과수 등) 특성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 마련

○ (육성) 現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개편하여 집적지구의 규모 및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단계별 면적기준 예시 : (예비지구) 쌀 50ha/엽근,과채류 10ha → (기초지구)쌀 100ha/엽근,과채류 20ha → (선도지구) 쌀 200ha/엽근,과채류 30ha

- 집적지구의 단계를 예비, 기초, 선도지구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

- 사업 초기에는 SW 중심으로 지원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역량을 평가하여 HW 지원, 단년도 사업 보다는 3~5년 장기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

- 예비, 기초, 선도지구 단계별로 모두 적용 가능한 기본 사업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보완사업, 단체인증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모두 면적 확대 및 집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임.

•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일반농업을 하는 농가도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예비지구에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사업우선권을 부여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확대시키고, 일반농업을 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인증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친환경농업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거나 규모 증대로 시설이 부족하여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사업의 (보완)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 시설장비 확충 및 판매시설 등의 지원으로 인증면적 확대 기대 가능함.

- 예비지구 내 단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단체인증 절차 및 기준 간소화, 심사가 아닌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증심사방법론 구축, 생산자 조직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및 비의도적 농약검출 위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생산자 조직에 대한 단체 인증관리 관련 교육 강화 등 5차 5개년 계획의 '단체인증에 관한 인증 시스템 개선'과 연계되도록 함.

<표 6-2> 집적지구 단계별 목표 및 지원내용

단계	목표 및 지원내용
예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집적지구 규모화 추진 - 일반농가 대상 친환경농업 교육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보완사업, 단체인증 활성화
기초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제고,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집적지구 경쟁력 제고 - 영농단* 지원, 유기농업자재 활용 항공방제 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유통시설·장비 지원,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적용,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등 * 집적지구 내 젊은층 중심으로 농작업 대행·신규진입자 교육·생산관리 등 담당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보완사업, 단체인증 활성화
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지구 중심의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유기농인증면적 비중이 높은 지구의 경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연계 지원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보완사업, 단체인증 활성화

- (규모화)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보유 농지는 친환경농가 우선 임대, 쌀은 친환경 전환을 위해 들녘경영체 사업과 연계 추진

<글상자 2> 쌀의 친환경전환을 위한 들녘경영체 사업 연계

- 쌀 재배면적이 50ha이상인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받도록 함 (사업기간 1~2년, 2억 원, 총 3회까지 지원)

(2) 체계적인 집적지구 육성을 위한 법제화 및 새로운 인증체계 도입 검토

- 집적 지구 내 규제특례, 인증우대,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인상 등 법제화검토

<글상자 3> 집적화 지구 법제화 사례

- 행위제한: 비의도적 오염원 예방을 위해 집적화 지구에서는 항공방제 금지, 집적화 지구 수계 상류에 오염배출 업소 입지 제한
- 지원방안: 집적화 지구내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 완화 등 농지법 적용 특례, 지구 내 관행농지의 농지은행 매입 강화 및 친환경농업인 우선 임대

<글상자 4>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인상

- 친환경농업 집적화 지구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음. 직불금 단가 범위는 최소 추가비용과 소득감소분에서 최대 환경편익을 더한 부분으로 합산 가능함. 다만 유기농업에 대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집적화에 대한 환경적 편익을 계측하여 추가적으로 지불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을 단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지가 집적화된 지구의 유기재배 농가에게 지급단가의 얼마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집적화 인센티브를 줌. 이 때의 집적화지구란 인증면적이 30ha 이상이고 경지면적 대비 인증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법정리를 말함.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공익형직불제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불제를 신설하는 절차 없이 기존의 친환경농업 직불제도를 개선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추가함.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적화지구의 경제적 환경적 평가를 기초로 적정수준의 지급 단가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집적지구 내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 시범 도입 여부 검토

- 2019년 인증 취소 건수 중, 농약 사용 기준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에 이룸.
- 「친환경농어업법」 과 하위 법령들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친환경 인증 절차와 심사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 특히 잔류농약과 관련하여 현재의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심사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과정 중심의 인증심사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 혹은 구매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합리적인 인증심사방법론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자, 전문가, 소비자 간의 인식 공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시범사업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4.1.2.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강화

가. 추진 방향

- 젊은 농업인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연령 분포를 5년 전과 비교한 결과 30대 이하는 1.5%p 감소하였고, 60대는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 실천 농업인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미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 등 젊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농업인, 귀농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농지확보에 애로사항 존재함.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유통 관련 정보 제공 필요함. 앞서 농가조사결과에서 보았듯 친환경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병해충 관리 및 제초 등 생산 기술에 대한 어려움(48.8%)이 가장 크다고 함.
 - 한편 친환경농업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글상자 5> 친환경농업 교육실태, 친환경농업인 설문조사결과

-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농업 교육이 실질적인 영농기술 습득(47.7%)과 농가의 의식 전환(44.1%)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부분, 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함.
- 친환경농업 교육 실시기관으로는 시군청이나 기술센터(70.7%), 민간기관(10.3%), 대학을 통한 위탁 교육(7.2%) 등의 순으로 선호함.
- 친환경 농업 교육 중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농민 의식전환(38.3%), 영농기술 습득(29.2%),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23.1%)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청년농업인,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유통·판매 촉진 방법과 가격 및 유통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 인력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가를 확산할 수 있음.

○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대에 기여해 왔으나 농업인들은 여전히 생산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유통 관련 정보 제공 필요함. 앞서 농가조사결과에서 보았듯 친환경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병해충 관리 및 제초 등 생산 기술에 대한 어려움(48.8%)이 가장 크다고 함.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배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제13조에 의거 ‘친환경농업 기술과 자재’ 등의 R&D 및 보급 업무를 추진해 오⁴⁵⁾.

- 4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유기재배 매뉴얼 및 기술서 발간·보급(2016~2020), 유기벼 재배를 위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시스템 구축(2017),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유기종자 생산기술 개발(2017~2019),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한 수입유박 대체기술 개발(2018~2020), 자가제조 유기자재의 효과검증 및 현장 활용기술 개발(2018~2020), 온오프라인 친환경 유기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해 왔음.

- 기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재배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유기종자 생산기술 개발의 확대 및 유기종자 생산·보급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국내 부존자원의 현장 활용성 제고로 수입 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자원을 활용한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 및 화학살충제 사용 절감을 위한 해충방제용 천적의 현장 활용성 제고가 필요함. 더 나아가 현장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체계 구축 필요함.

나. 추진내용

(1) 지구 내 농지 임대차, 귀농교육 등을 통해 젊은 인력 유입 촉진 필요

○ 농지법 시행령 개정('20.8)에 따라 집적지구 내 농지 임대차 허용*

⁴⁵⁾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내부자료(2020).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추진 방향.”을 요약 정리함.

* 집적지구 지정연도부터 10년간 허용, 10년 경과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인정

○ 청년농업인·귀농인의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업 우대 방안 마련

- 농지은행은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은퇴 농업인, 이농·직업전환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청년층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여신 분야는 농지매매지원,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비축농지 임대는 고령 은퇴농, 이농·직업전환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임(임소영 외, 2020).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신청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데 선발 조건에 아래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 비축농지 임대 외에도 농지매매지원, 임차농지 임대의 경우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자에게 우선권 부여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임대 농지에 비해 지원자가 많은 경우 이러한 우선권 부여 조항은 우대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 환수 조치해야 함.

<글상자 6>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

- 고령 은퇴농, 이농·직업전환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임.
- 임대기간은 5년(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 임차료는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임차 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 함.
 - 단, 임대기간 만료년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 논에 벼 외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의 80%, 휴경 시 임대료의 100%를 감면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환수조치함).

○ 은퇴농업인의 농지가 유기전환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친환경농업 수행 시 토지임차 용자 지원 등 검토

- 미국의 유기농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보전유지시책을 약정하여 준수한 농지를 팔거나 임대할 때 지원하는 농지승계프로그램, 유기농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효과

<글상자 7>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

-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Transition Incentives Program: TIP)은 보전유보시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에 등록된 토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지 소유주에게 신규 농업인 혹은 사회적 약자 그룹에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는 조건으로 CRP를 통해 최대 2년간의 추가 임대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FSA n.da). 이는 은퇴한 농지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규 농업인 혹은 사회적 약자 그룹에 기회를 제공함.
- 신규농업인: 농업을 시작한지 10년 미만인 농업인 혹은 사업체
- 사회적 약자 그룹: 인종 혹은 소수 민족(ethnic) 차별을 겪은 이력이 있는 그룹의 회원.
- 이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게 된 농업인은 CRP에 등록되어 휴경상태였던 토지를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으로 경작하여야 함.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토지는 CRP 계약 만료 최대 1년 전부터 가능하며, 농지를 임대할 경우 최소 5년 단위로 장기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귀농자 대상 친환경교육 확대 추진

- 친환경자조금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제작·제공, 강사 풀 협조
-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을 안내하도록 하고,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과정에 친환경 농업 기술교육 포함. 기술교육의 경우 친환경선도농업인 농장의 방문 현장실습 교육 포함.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에 친환경 농업을 포함하고 친환경농업 교육 실시 학과를 지속 확대를 통해 청년층 참여 유도
- * 목표 : ('15) 3개학과/ 10과목 → ('20) 18/ 27 → ('25) 19/ 30
-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층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유도
- * 인증면적, 가격, 소득,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농업 지구 단지 내 농지 임대차 정보, 인증·지원 제도 등

(2) 관행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등으로 일반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 로컬푸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전국 10개) 등을 통한 지역별 맞춤 교육 지원

- 지자체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센터가 지역별 맞춤형 기술 개발 및 교육을 선도하도록 지원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을 통해 수요(지역, 품목 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과정 수립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술 관련 수시 상담 창구 마련

○ 일반·무항생제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실시, 인증 품목* 수 확대 등을 통해 유기 축산 활성화

* 현재 한우 및 육우(식육), 젓소(시유), 면양 및 염소(식육, 시유), 돼지(식육), 육계(식육), 산란계(알), 오리(식육, 알), 메추리(알), 사슴(식육) 등 11개 품목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탄소 감축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해 침투이행성 제재 개발 등 기존 자재의 효과 증진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기술 개발 추진

○ 2020년부터 유기농업에서 유기종자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른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우선 2017년부터 유기종자 생산·보급 효율화를 위한 산·학·관·연 협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유기종자 대량 생산기술 및 매뉴얼(소독, 채종, 보존 등) 발간작업이 필요하며 유기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유기종자 소독기술 고도화를 추진함.

- 유기농경지 관리기술로는 자원순환형 저투입 유기농업 기술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유기자원 활용한 적정 토양 및 양분관리 기술개발과 유기재배 토양 질 평가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연구가 필요함.
-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 및 천적의 현장적용 모델 개발을 위해 자가제조 농자재 활용 병해충관리기술 유기농가 현장적용모델 개발, 자가제조 농자재 활용 작물생육증진기술 유기농가 현장적용 모델 개발, 딸기의 주요 해충인 점박이응애 생물학적방제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교육이 실질적인 영농기술 습득(47.7%)과 농가의 의식 전환(44.1%)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부분, 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함<글상자 8>.

<글상자 8> 친환경농업 교육실태

-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농업 교육이 실질적인 영농기술 습득(47.7%)과 농가의 의식 전환(44.1%)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부분, 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함.
- 친환경농업 교육 실시기관으로는 시군청이나 기술센터(70.7%), 민간기관(10.3%), 대학을 통한 위탁 교육(7.2%) 등의 순으로 선호함.
- 친환경 농업 교육 중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농민 의식전환(38.3%), 영농기술 습득(29.2%),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23.1%) 순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0. 11. 19. ~ 2020. 11. 26.).

- 따라서 친환경농업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부분, 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인증 교육에 저탄소 농법 기술 교육을 포함시켜 친환경농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친환경농업 현장보급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30명씩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센터에서의 새해농업인 실

용교육에 친환경농업 교육을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친환경농업 기술이나 새로운 친환경농업 기술을 농가에게 보급할 때는 시각적인 효과를 살려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최신 트렌드를 살려 유튜브나 카드뉴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적 교육 방법도 개발해야 함. SNS나 줌을 통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4.2.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4.2.1. 친환경농식품 판로 확대

가. 추진 방향

- 학교급식, 생협·친환경전문매점 중심의 소비로 소비자 구매접근성 취약, 소비확대 한계
 - 2017년 국내 식료품소매업(99,795개소) 중 친환경판매장(5,723개소)은 5.7%에 불과함.
 - 학교 중심의 공공 소비에 의존하던 유통구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약성을 드러냄.
-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급식 확대와 민간소비로의 수요 다변화 및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임.
 - 초·중·고 학교급식 비중을 2025년에 100%로 가져갈 경우 면적은 현재보다 약 8,806ha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군대 급식을 2025년에 40,000톤으로 가져갈 경우 면적은 현재보다 약 5,878ha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유통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급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나. 추진내용

(1)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 내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

- 지역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연계하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수요·판매처 확대 추진

- 전국에 개설된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납품·판매
- 로컬푸드 정부·공공기관(혁신도시) 소비 확대 계획과 연계 친환경 수요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농산물 비중확대, 직거래 파머스 마켓 지원

* (예시) 중소농 협동조합의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지역 내 ‘직거래장터’ 개설 등

<글상자 9> 미국 유기농업의 직거래 비중

- 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 농장들 가운데 71%가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36%가 직거래, 22%가 소매시장 및 기관(institutions)을 통해 판매됨.
- 3/4의 농장들이 유기농산물 일부 혹은 전부를 100마일 반경 이내에서 판매함. 이러한 농장이 많은 주는 동부 및 남부 주들이며 알래스카와 하와이도 여기에 속함.

구분	해당 유형의 인증농장 비중(%)
농장에서 100마일 이내	75
100-499마일	35
500마일 이상	14
해외	3

단위: USDA(2016), 정학균(2017)에서 재인용함.

- 지자체는 지역 내 친환경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 수립 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지역 친환경농식품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등 판매 확대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자체는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2) 규격·제도개선 등으로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및 공공급식 공급처 다양화

○ 사업 대상자의 수요가 높고, 생산농가 등이 적극 지지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현재의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추진

- 본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은 1.85~5.56% 증가, 가격은 8.11~24.3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생산액 변화는 1,780~5,33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 시나리오에 있어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표 6-3> 시장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억 원

구분	효과
생산량 변화율(%)	1.85~5.56
가격 변화율(%)	8.11~24.34
생산액 변화(억 원)	1,780~5,339

자료: 정학균 외(2020).

-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률은 16.31~48.9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소득 변화는 1,417~4,25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 시나리오에 있어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표 6-4> 농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억 원

구분	효과
소득률(%)	16.31~48.95
소득 변화(억 원)	1,417~4,255

자료: 정학균 외(2020).

- 임산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360,233명에게 지원할 경우 131,739톤의 친환경농산물이 필요하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와 반드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정학균 외 2020). 또한 임산부들은 다양한 품목, 특히 과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만족도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임산부의 선호에 대응한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군대 급식에서의 친환경인증 쌀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 2020년 기준 친환경 벼 5천 톤에서 2022년 10천톤, 2025년 40천톤 등으로 확대
- 대학교, 공공기관 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시범사업 추진
 -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용 중 20%(국비10%, 지방비10%) 지원
- 초·중·고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 확대
 -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학교급식 품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 품위 기준이 일반농산물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유기와 무농약의 가격 차이를 학교급식 가격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유기와 무농약농산물 가격을 큰 차이 없이 책정하면서 유기농가들이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지역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농식품이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녹색제품’ 적용 추진
 - 친환경농식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입증(농진청)한 후에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 부여(녹색제품 지정시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녹색제품구매법 제3조)).
- (3) 생협과 친환경전문점의 판매역량 강화 및 대형유통업체·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의 친환경농식품 판로 확대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대형유통업체 및 편의점 등) 공동 판촉·홍보 강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용자 지원 한도 확대

○ 농가별 온라인 유통경로 맞춤* 설계, 입점 지원·상품페이지 제작·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모션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확대

* (출발형) 네이버 등 오픈마켓 진출 → (도약형)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4) 농산물 유통 방향에 맞춰 친환경농산물 유통 효율화 방안 수립

○ 유통정보조사 시스템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정책 수립을 뒷받침

- 친환경 소매가격 조사 품목 확대(44개 → 52개), 친환경농업 생산·출하·유통·소비 관련 빅데이터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5) 친환경농산물 수급조절 등 자조금의 역할 확대 및 강화(자조금)

○ 민간 부문간 협의를 바탕으로 가공 및 유통분야 자조금 거출 확대 검토, 수급조절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신사업 발굴, 자조금 관리체계 정비 추진

○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 및 가격 관측시스템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현황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소비 유도

-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적절한 예측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결정하는데 애로요인 존재

- 특히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미래의 가격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생산면적 및 생산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이는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며, 가격의 급격한 상승 혹은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농산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관측은 하지 않고 있음. 2025년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증가하고 그린뉴딜시대 핵심적인 농업으로 육성할 경우 관측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농산물 공급관련 품목별 자료(인증면적, 농가 수취 가격, 수입량 등)와 수요관련 자료(소비량, 소비자가격, 수출량 등)를 구축
- 수급전망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단기 관측 및 중장기 전망
- 월별 혹은 분기별 예상 가격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작기 및 재배면적 조절, 판매량, 저장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도
- 관측을 위해서는 자료 구축, 관측모형 개발, 관측 분기보 및 연보 작성 등에 예산이 소요됨. 우선 주요품목(쌀, 상추, 토마토, 버섯 등)을 대상으로 관측을 실시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감.

<표 6-5> 친환경농업 관측시스템 도입 추진 일정

달성 목표	추진일정				
	'21	'22	'23	'24	'25
수급 자료 구축	시행	시행			
관측모형 개발		시행	시행		
관측 분기보 및 연보 작성			시행	시행	시행

4.2.2.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

가. 추진 방향

-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환경가치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 친환경 농업 혁신 비전 2030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농업 혁신 비전 2030은 현재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음.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농약이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농산물’로 이해하고 있음(74.4%).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인지는 높아졌으나 그 이해도는 아직까지 다른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에 비해 떨어짐.

- 김상효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에 관한 O/X 퀴즈의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25.1%의 응답자만이 정답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높은 인지도를 차지한 원산지 인증(71.3%), 가공식품 KS(39.8%)의 이해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 소비자들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높은 가격은 친환경 농업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함.

- 소비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가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구입 동기로 '안정성 및 가족 건강'을 선택하였으며, 일반농산물보다 불품이 없거나 품위가 떨어지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견(35.2%)이 구입하겠다는 의견(29.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이 농축산물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친환경 농업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와 인식 개선이 절실함.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유기가공식품 수출 확대

○ 유기농식품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1,088억 원, 2017년 1,390억 원, 2018년 1,284억 원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수입유기농식품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수입 유기농식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한 국내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으로 치중되어있는 판로 때문에 팬데믹(pandemic)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완충 역할을 할 가공산

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대두됨.

- 가공품 원료생산 단지 및 유통·가공시설기반은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함. 따라서 이에 대응한 적절한 대응 정책이 요구됨.

-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두부, 과자 등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조업체는 해외로부터 원료조달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해외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비중도 적지 않음.

-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유기가공식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격을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과 유럽의 유기농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동등성 제도하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유기가공식품 위주로 수출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내용

(1)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친환경 농식품 구매 등 환경을 위한 소비자 실천 매뉴얼*을 제시하고, 환경 밥상 식단 등 개발·보급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장적은 제품 구매하기 등 소비자 실천을 탄소발자국으로 계산하여 제시

○ 친환경농산물 가치소비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생산자는 친환경포장재 적극 사용, 소비자·기업은 해당 제품 우선 구매 등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우수 단체·기업 등에 포상 추진

(2) 친환경농식품의 환경가치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 생협·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공동체지원농업 확대(자조금); 공동체지원농업은 조직화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생협이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 식생활교육기관(전국 65개소)를 통해 교사·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등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식생활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업 공익적 가치 확산
 -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를 위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
 - * “환경가치를 고려한 교육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추진이 명시되어 있음.
 - * 다만,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성과지표로 농업인 교육만을 고려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 개수” 대신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와 연관된 성과지표(예를 들어,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건수”)로 수정 보완 필요
 - 친환경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관련 콘텐츠 개발이 필요
 - *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식단 개발 및 식생활습관 개발 및 보급
 - * 미국과 영국의 Cool Food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요리와 식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그림 6-4> 영국과 미국의 Cool Food 위원회









자료: Cool Food 위원회 홈페이지. <<https://coolfood.org/>>. 접속일: 2020. 11. 25.

<글상자 10> NAITC의 유기농업 관련 교육 콘텐츠

- 미국의 경우, National Agriculture in the Classroom(이하 NAITC)은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식품·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교사센터”와 “학생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음⁴⁶⁾.
- 우선 교사센터에는 교육 내용 및 방법(Curriculum Matrix), 비대면 수업을 위한(eLearning), 수업 주제 및 전략(Theme for Learni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뿐만 아니라 수업관련 시험자료(Ag-Knowledge),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 구입(AgClassroomStore at USU)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https://www.agclassroom.org/teacher/>, 접속일 2020.11.30.).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자료로는 “What’s the Difference? A Look at Organic and Conventional Foods”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학생 수준, 목적, 예상 시간, 준비물, 자료, 수업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https://www.agclassroom.org/matrix/lesson/667/> 접속일 2020.11.30.).
- 학생센터는 농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https://www.agclassroom.org/student/> 접속일: 2020. 11. 29.). 예를 들어, Ag Smarts는 3단계로 이루어진 퀴즈 문제를 제공하며, Ag Games는 농업과 관련된 8가지 게임을 제공함. Ag Games 중 Journey 2050은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농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보여줌. 마지막으로 Virtual Tours는 농산물 각 품목의 생산현장에 대한 가상현실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 NAITC 학생센터의 콘텐츠>

<p>Ag Smarts</p>  <p>Check your Ag Smarts, compete with your friends, and learn more about where you get the stuff you use every day.</p>	<p>Career Seeker</p>  <p>Consider all the careers in agriculture. These jobs make a difference in the way we live - our food, clothing, shelter, health, and our environment!</p>	<p>Ag Today</p>  <p>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you and agriculture! Translation: The connection to the stuff you use every day!</p>
<p>Ag Games</p>  <p>Explore the best resources online to increase what you know about agriculture.</p>	<p>State Agricultural Facts</p>  <p>Learn more about agricultural production in all 50 states!</p>	<p>Virtual Tours</p>  <p>Can't get to a farm? Take a virtual tour!</p>

자료: <<https://www.agclassroom.org/student/>>. 접속일: 2020. 11. 29.

○ 친환경농업의 환경기여도 연구(농진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46) <<https://www.agclassroom.org/>>. 접속일: 2020. 11. 27.

(3) 학생, 가족 등 친환경농식품 잠재 소비층 대상 교육·체험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탄소중립 시범학교와 연계한 친환경 교육 확대

<글상자 11> 학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 학교 교육과정별(초·중·고)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정규화
-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
 - 친환경교육 정규화를 위해 필요한 교사용 교육 및 홍보 콘텐츠(대면, 비대면) 개발
 - 게임 등과 같이 접근성이 뛰어난 학생용 교육 및 홍보 콘텐츠(대면, 비대면) 개발
- 친환경 농업 교육 콘텐츠 보급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교사용 및 학생용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글 상자 참조)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 학습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설 및 자금 지원

○ 가족 단위로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등이 가능하도록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확대*

* 신규 조성 계획(개소수) : ('21) 1개소 → ('23) 3개소 → ('25) 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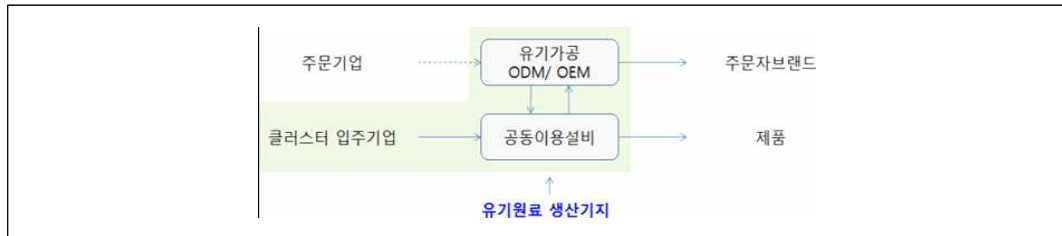
(4) 가공업체 원료구매 지원, 친환경소재 R&D 등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 유기가공식품업체에 가공원료 매입자금 금리 우대 지원(가점 적용), 시설 개보수 등 지원, 컨설팅 지원 확대(우대기업 적용) 등 추진

- 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과잉생산이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으로 학교급식이 중단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가격차이, 유기가공 인증식품으로 제품 생산시 별도의 가공라인 설치 등 원가 인상과 제조·관리 어려움으로 국내 유기농산물 원료 가공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유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원료 매입자금 금리 우대 지원(가점 적용), 시설 개보수 등 지원, 컨설팅 지원 확대(우대기업 적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기가공 원료농산물 차액지원 시범사업(국공립유치원, 대학생, 임산부, 국공립요양원 등)을 통해 수입 원료와의 가격차만큼을 지원해줌으로써 생산비 부담 완화 가능함. 더 나아가 과잉 유기농산물에 대해 수매안정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가공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음.

- 국내산 신선농산물 사용 비율이 높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밀키트, HMR 등 전략적 육성 제품 발굴
 - 유기농 스타상품 콘테스트('19년~)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상품 발굴
- 국내 소비자 계층별 수요·성향을 고려한 친환경 가공식품 개발 지원
 - (간편·신선): 밀키트, 즉석조리 식품, (유아) 유아식, 과자류, (환자·노인) 건강 기능성 식품
-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해 통합 마케팅과 원료공급 계약체결, 친환경 전용 공유 가공 플랫폼 구성을 통한 생산 지원

<그림 6-5> 플랫폼 구성 예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밀키트 수요 확대 등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 천연 원료 향미 소재 및 친환경 포장재 등 R&D 지원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원료 5% 인정, 무농약 원료 최소 사용기준 완화(50%→30)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개선 검토

(5) 비식용 친환경농산물 가공 인프라·기술 지원

-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식용 유기농 사료, 섬유류, 생활용품 제품 국산화 추진
 - 비식용 유기가공품 평균 구입 빈도는 5년 전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하였으나(<표 6-6>). 비식용 유기가공품 구입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구입 욕구를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이 비싸서'(43.2%),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저

하'(24.0%) 등으로 나타남.

- 국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제품화할 수 있는 유아용 의류, 세제·비누, 반려동물용 사료·간식류 등 비식용 유기농 제품 국산화 및 인증 추진

<표 6-6> 비식용 유기농품 평균 구입 빈도(2015년과 2020년 비교)

단위: %

구분	월 1~2회 이상		2~3개월 1회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유아용품	10.2	18.2	10.2	21.9
섬유·의류	7.4	10.2	16.5	25.1
화장품	7.4	7.5	24.4	25.7
치약·비누·세제	11.4	10.6	34.7	38.4
애완견사료	10.8	8.2	12.5	42.6

자료: 저자 작성.

(6) 해외 농식품 정보 제공 및 동등성인정협정 등 수출 기반 조성

○ 앞서 친환경가공식품업체 조사결과를 보면, 기회가 된다면 향후 수출의향이 있다는 응답(46.6%)이 수출의향이 없다는 응답(22.0%)보다 높게 나타남. 수출의향이 없는 이유로 '소규모 생산(40.3%)', '낮은 가격 경쟁력(26.9%)'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 정보(25.2%), 제도현황(21.7%), 인증비용(18.9%) 등으로 나타남(2014).

○ 수출국 시장·통관·유통업체 정보 제공, 해외 네트워크(aT, 바이어 등) 연계 홍보 강화, 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 등으로 수출 확대 추진

- 미국, EU 등을 대상으로 시장·통관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입 바이어 협의회를 확대함으로써 현지 소비자 및 유통업체 정보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미국·EU 등 동등성협정 체결국 및 수출 유망국에 상주하는 공관·공기업(aT, kotra 등) 등과 연계함으로써 유기식품 수출 확대 기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유기식품 인증 취득비용 및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한 중견·영세업체의 유기 수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체 수요가 높은 국가 중심으로 유기농식품 동등성인정협정 체결
 - 수출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 동등성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K-푸드가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소속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음.

(7) 친환경음식 표시, 음식점인증제 활성화 등으로 외식시장 소비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에 ‘친환경’ 표기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 예시 : 친환경(유기 또는 무농약) 토마토를 사용한 샐러드

- 농가·외식업체·지자체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친환경음식점 인증제 활성화 검토

4.3. 제도 개선

4.3.1. 인증 관리 체계 개편

가. 추진 방향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과 하위 법령들의 개정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친환경 인증 절차와 심사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
 - 특히 잔류농약과 관련하여 현재의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심사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과정 중심의 인증심사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 혹은 구매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따라서 제 5차 친환경육성계획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와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증심사방법론 도출이 필요한 실정임.

- 우선,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인증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단체인증이 가지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인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인증에서 단체 인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65.1%임. 단체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인증 참여 농업인의 심사관리비와 행정적 업무량은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한옥수 외 2019).
 - 하지만 현재 단체 인증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의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2015년 2.3개→2019년 1.6개), 이는 효율적인 인증 심사·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업인 조직화, 과정중심의 인증 도입,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확보 및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자주인증제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주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 초록마을, 아이쿱과 같은 생활협동조합과 지역별 대학 생협, 공공급식 등을 이용한 소비자단체 주도형 자주인증제 도입 필요
 - 생산자 조직화 유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유통망 확보, 교육을 통한 자주인증제의 비전과 필요성 공유
 - 다만 자주인증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증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전문성 부족, 국가 인증과 자주인증 간의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을 무농약이 아닌 유기농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무농약농산물의 시장규모 변화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변화의 주요원인이 됨.
 -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향상,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 단순화 필요
 -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재편 필요

나. 추진내용

(1) 단체인증에 관련 인증 시스템 개선

○ 단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시스템의 재정비

- 단체인증 절차 및 기준 간소화, 심사가 아닌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증심사방법론 구축

<글상자 12> 단체인증의 내적관리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의 내적 심사(internal inspection)와 외적 심사(external inspection)에 대한 FiBL의 권고 사항

- 단체인증 관리자의 내적 심사
 - 1) 내적 심사는 반드시 생산자 인터뷰와 재배지 방문이 포함되어야 함.
 - 2) 내적 심사는 연중 다양한 시점에 여러 번 이루어져야 함.
 - 3) 재배여건의 변화에 따른 생산자들의 재배방법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파악해야 함. 또한 이러한 위험을 인증 심사 기관과 공유하여 내적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는 관련 정보를 얻고, 인증심사기관은 관련 단체의 위험 관리 노력을 인지하도록 함.
- 인증기관을 통한 외적 심사
 - 1) 인증기관을 통한 외적심사는 내적관리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임. → 자료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등을 통합 시스템에 대한 입체적 평가가 필요
 - 2) 외적 심사는 철저해야 하며, 생산자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3) 인증기관의 농가 방문 횟수와 시간은 외적 심사의 완전함과 인증기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의 농가 방문 횟수는 위험요소와 농가 수 곱의 제공근으로 정함. 단, 철저한 현장 조사와 현장 조사 빈도는 반비례할 수 있음.
 - 4) 외적 심사는 위험평가와 위험을 중심으로 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물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여러 번 시행하여야 함.
 - 5) 단체인증의 내적 관리 시스템의 부실을 결정하는 기준과 부실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및 처벌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자료 : Meinshausen et al.(2019)

- 생산자 조직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및 비의도적 농약검출 위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 생산자 조직에 대한 단체 인증관리 관련 교육 강화

(2) 국가인증제와 자주인증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단체를 주체로 한 자체 점검·관리 중심의 자주인증체계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공적 소비를 중심으로 한 연계한 지역 단위 자주인증제 활성화
- 지역 생산자 조직의 자주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예를 들어 공적 소비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 생산 및 마케팅 조직 지원 등)

- 지역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활용한 농업인 및 소비자 대상 기술 및 교육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 강화
- 지역단위 자주 인증 시스템 구축: 표준과 규범, 라벨, 생산자 준수 확인 매커니즘, 인증 관리 시스템 및 절차, 비준수에 대한 정의 및 처벌, 농민 지원 수단

○ 인증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단체들을 위한 자주인증제 관련 정보 제공 및 법·제도적 지원

- 지역 푸드플랜을 활용한 지역 단위 자주인증제 기반 마련 → 지역 푸드플랜의 안전성 확보의 수단으로 자주인증제도 활용 가능
- * 서울을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가 지역 푸드 플랜을 발표하였으며, 지역 푸드플랜의 주요 정책으로 안정성 관리를 선정함.

<표 6-7> 지자체별 먹거리 기본권 및 지역 푸드플랜 선언의 주요 정책

지자체	주요 정책 범위						
	취약계층 지원	안전성 관리	노인·아동 급식 지원	식생활 교육	중소농가 지원	통합 먹거리 체계 구축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	√	√	√		√	√
전북 완주군	√	√			√	√	√
경기도	√	√	√	√	√	√	
전남 나주시	√			√	√	√	
전북 상주시	√			√		√	
전남 장성군	√	√	√		√		

자료: 정은미 외(2019)

* 최근 충남도의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광역단위의 로컬푸드 자주인증제도 도입 및 브랜드 개발을 명시함(충청남도·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9).

- 지역단위 자주인증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
- 미국의 Certified Naturally Grown⁴⁷⁾과 같이 소비자 및 생산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 구축.

- 단체인증제도를 바탕으로 한 자주인증시스템의 국가인증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자주인증제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 필요 → 국가인증보다 열등한 인증 시스템이라는 인식 불식 필요, 지역의 자주인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통한 신뢰도 확보

<그림 6-6> Certified Naturally Grown의 농업인,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자료: Certified Naturally Grown 홈페이지. <<https://www.cngfarming.org/>>. 접속일: 2020. 12. 7.

(3) 유기농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유기농 재배 관련 기술 및 제반 여건이 충분한 경우, 무농약 농업인들에 대한 유기농 인증 상향 의무화
- 유기농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공적 소비를 통한 유통망 제공
 - 유기와 무농약 간 친환경직불금의 차등 지급 확대
 - 유기전환지불 도입: EU와 같이 유기전환 기간 중 낮은 생산성과 유기농 인증의 시장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는 농가들을 지원

47) <https://www.cngfarming.org/> (접속일: 2020. 12. 7.)

4.3.2.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가. 추진 방향

○ 유기농업자재 효과·효능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

-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유기농업자재의 낮은 효과·효능과 효과·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임.
- 유기농업자재 사용 농가는 효과·효능 표시 제품을 보다 선호하며, 비표시제품과 효과·효능의 상대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역시 효과·효능 표시제의 시장 확대 기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유기농업자재 원재료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필요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조사 결과,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유기농업자재 원재료의 약 40%를 해외에서 조달하며, 수입업체의 50%가 수입원재료 사용 이유를 국내 원재료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부족, 원재료에 안정적 조달이라 응답함(성재훈 외 2020).
- 원재료 가격과 공급의 불안정성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허용물질에 확대와 허용물질 사용과 관련된 품질 관리가 필요.

- 국내 유기농업자재 허용 물질(90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적음. 또한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를 통한 유기농업자재 신규 허용 물질 전무함.
- 유기농업자재는 새로운 허용물질뿐만 아니라 기존 물질의 조합과 허용물질과 보조제 조합에 대한 심사 역시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와 같은 국가유기표준 위원회를 통해 5년 마다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과 금지물질을 재검토하고 갱신하며, 유기인증법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 권고함.

○ 유기농업자재 효과적 활용 위한 정보 전달 체계 개선 필요

- 현행 시비처방전은 질소, 인산, 칼리의 시비추천량, 토양개량제(석회, 퇴비) 살포량에 대한 정보만 제공 → 부산물비료와 토양개량 및 작물생장용 유기농업자재에 사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친환경농업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 성재훈 외(2020)에서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들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를 주로 구입처나 지인으로부터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나. 추진내용

(1) 제품의 효능·효과 향상을 위한 공시제도 보완

- 유기농업자재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니즈에 맞춘 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된 효과·효능 표시제 도입 및 표시제 관리 방안 설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효과·효능에 관한 품질 기준 추가 및 새로운 공시제도 관리 방안에 설정
- 독일의 식물강화제 등과 같이 시비나 방제 목적이 아닌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 설정

(2) 저비용·고효율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관리 강화

- 유기농업자재 원재료에 대한 기술 개발 강화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 수입원재료의 국산화를 통한 유기농업자재 원가 절감
 - 제한적인 국내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의 확대
 - 유기농업자재 제품화 전반에 이르는 기술 개발 → 현재 진행 중인 농축산용미생물효

능평가지원사업 확대

- 유기농업자재 허용 물질 추가 및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 역할 확대
 - 유기농업자재허용물질전문가 심의회를 유기농업자재 전문가 위원회로 격상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갱신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과 허용물질 간의 조합, 보조제 활용뿐만 아니라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이슈에 대응이 필요

(3) 효과적 유기농업자재 활용을 위한 정보전달 체계 개선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비처방전 개선
 - 유기농업자재 활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 시비처방전의 콘텐츠 개발 및 가독성 향상을 통한 농업인들의 이해도 증진
 - 친환경농업인용 시비처방전 개발
- 유기농업자재 활용을 위한 정보전달 체계 개선
 - 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제품 표시정보 세분화 및 규격화
 - 유기농업자재의 거래 및 활용, 자가제조 방법 및 사용법, 원재료 관련 정보와 거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유기농업자재 활용을 관련 지도사업 활성화
 - 유기농업자재 활용에 관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농협 등의 지도사업 활성화
 -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자재 활용 관련 컨설팅 사업 활성화
 - 지역의 영농자재백화점 혹은 농협의 유기농업자재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4.5. 정보 제공

4.5.1. 추진 방향

-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는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정책관련 정보를,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에서 재배기술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 정보를, 농식품유통공사에서 가격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렇게 친환경농업 관련정보 제공은 산재해 있으며, 생산이면 생산, 기술이면 기술 등 개별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통합정보 제공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움. 또 농민 중심의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보가 부재함.

4.5.2. 추진내용

가. 친환경농업 데이터센터의 통합관리 필요

- 현행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통합정보 제공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 친환경농업 관련 데이터(생산, 유통, 소비, 가공, 수출입 등)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농민, 산지거점 유통조직(광역사업단, 통합마케팅 조직 등), 연구자, 업체(유통, 판매, 가공, 외식, 수출입, 자재 등)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농민, 산지거점 유통조직(광역사업단, 통합마케팅 조직 등), 연구자, 업체(유통, 판매, 가공, 외식, 수출입, 자재 등)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보다 풍부한 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기술 연구기관(농진청, 도농업기술원)에 데이터를 중계 및 유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통합 관리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 가공물을 제공할 수 있음. 풍부한 시각화 자료로 일반 사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공으로 앱 개발자 또는 농업 컨설팅 업체들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대효과로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유통공사 등에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중복 생산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업 데이터 분석 연구, 실용화기술 연구 등을 지원하게 됨. 통합관리 플랫폼은 친환경정책과의 연계성 증대 및 정책적 효과 제고 가능하며, 정보의 통합관리로 연구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즉 드론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기술,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 응용할 수 있음. 생산자·단체의 구독경제(정기배송 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미국·EU 등 동등성협정 체결국 및 수출 유망국에 상주하는 공관·공기업(aT, kotra 등) 등과 연계하여 주요 수출 유망국 대상 시장조사 및 통관 관련 정보 제공함으로써 유기식품 수출 확대 기반 마련 가능함. 또한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소비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거래 가능해짐.

나. 친환경농업 통계시스템 개선 추진

○ 친환경농업 현황 파악을 위해 향후 생성해야 할 정보는 기존의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또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표 6-8>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시스템 개선점

분야	개선되어야 할 점
생산정보	인증면적, 농가수, 인증량 등이 품관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품목구분이 안되고 있음. 따라서 품목별 자료 생성 및 제공이 필요
가격정보	주요 품목(약 15개 품목)가격 정보 이외에 제공되는 품목을 계속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가공 정보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가공식품, 비식용유기제품 등의 생산량, 가격 등이 품목별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수출입정보	품목별 수출입정보 제공 필요, 주요 수출 유망국 대상 시장조사 및 통관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자료: 저자 작성.

7

요약 및 결론

- 정부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음.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경지면적 비중이 7.3%까지 확대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완만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농업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돌아보고 효과적인 친환경농업 발전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인 제 4차 5개년 계획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제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16~2020)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가공, 자재 등의 실태 분석을 기초로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21~2025) 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자료 분석, 생산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 위탁원고 추진, 친환경

경농업 비전기획단 TF 운영지원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 첫째,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2015~2019)에는 유기농산물이 늘어나(13.1%)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2015~2019) 인증 건수와 출하량도 각각 2.1%,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친환경농식품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식품에 대해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의향이 있지만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74~96%, 적정 프리미엄은 44~56%로, 약 35%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낮춘다면 소비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구입 장소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대형할인점, 전문매장, 백화점의 비중은 줄어들고, 농협계통, 인터넷 및 홈쇼핑, 일반 슈퍼마켓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특히 인터넷 및 홈쇼핑, 일반 슈퍼마켓의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유통, 비밀집 장소를 선호한 결과로 보임.
 - 향후 구입을 확대할 의사가 가장 큰 친환경 가공식품은 '신선반찬류'(33.2%), '밀가공식품'(23.0%), '쌀 가공식품'(12.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친환경 가공식품 구입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37.2%), '인증제도 관리 강화로 신뢰 제고'(3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와 소비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친환경가공식품의 경우 증가했다는 비중이 18.0%p 높게 나타나 향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량 증가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비식용 유기가공품 평균 구입 빈도는 5년 전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했으며, 비식용 유기가공품별 구입 경험은 '치약, 비누, 세제'(56.8%), '화장품'(50.6%), '섬유, 의류'(37.4%) 등의 순으로 많았음. 구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가격(43.2%)을 꼽았으며, 이어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저하'(24.0%)를 선택함.

○ 셋째,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반응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의 어려움’(48.8%),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18.3%) 등을 친환경농업 실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음. 이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보급, 판매촉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54.0%), ‘낮은 판매가격’(33.8%) 등을 꼽았음.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함.

–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교육 확대’(27.5%), ‘판매처의 확대 및 판로 다양화’(25.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17.8%),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 확대(도농교류 확대)’(14.6%) 등이 제시됨.

–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 수익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5.9%로 (매우)증가했다는 비율(1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친환경농업 교육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농민 의식전환(38.3%), 영농기술 습득(29.2%), 유통·판매 촉진 방법 습득(23.1%) 등으로 나타남. 교육체계 정비를 통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농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제4차 추진 실적을 보면, 친환경농업 인증, 소비, 생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인증범위 확대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유통 역량 증대, 공공소비 활성화로 인증농가에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강화여건 조성,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개선 등이 주요 성과로 나타남.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2017), 상습 위반사업자·부실 인증기관 제재처분 강화(2020)

- 반려동물 사료·별꿀 유기인증제(2017)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2020) 도입
- 2020년까지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7개소를 만들었고, 2017년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1개소(나주) 조성함.
- 전국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20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도입함.
-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2016)하여 예산을 확보함. 확보된 예산은 2017~2020년까지 총 5,431백만 원임.
-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영구 지급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관리시스템 통합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투입재 중심 생산시스템, 농업환경관리에 불리한 소규모 분산된 인증 농지, 공적 소비 내 학교급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인증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부족, 민간 차원의 유통·소비 활성화 미흡,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및 소비자 인식 저조 등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됨.

○ 다섯째, EU, 미국 등 선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증대되어 왔고, 서로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와 미국 모두 지속적으로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증대되어 옴. 다만 수요 측면의 성장 속도에 비해 공급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식품산업 지원 정책을 비교하면 EU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생태적 관점 등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직불금 및 지원금이 제공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상기 가치보다는 대출, 서비스, 등 시장지향적인 지원 정책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여섯째,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의 비전으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으로 설정하고,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분야별 핵심과제 등이 제시됨.

-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과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으로 설정됨.
- 정책목표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공공 및 민간 수요 증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9년 5.2%에서 2025년 10%로 제시됨.
-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젊은 인력 유입 촉진,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확대 등이 요구됨.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 시장 확대,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친환경 외식·가공산업 활성화 등이 요구됨.

부록 1

「친환경농어업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⁴⁸⁾

1. (시행령) 개정사항

* ①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 ②과태료 법률 개정('20.2.)에 따라 시행령 정비 등

<부표 1> 시행령 개정 내용

하위법령		주요 내용
시행령	<신설>	
	①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 유사입법례를 참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 위반 시 판매물량 × 판매가격 × 50%
	<개정>	
	①과태료 금액 세분화	과태료 금액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 (현행) 500만원 상한액 → (개정)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②위임 규정 정비	각 기관별 권한 위임(농업 자원 및 환경 실태조사 보고, 교육훈련기관 등) 규정	

자료: 친환경농업과 주요 업무 보고(2020).

2. (시행규칙) 개정사항

* ①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 ②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등 요구사항 반영, ③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 후속조치, ④자체 발굴한 제도의 미비점 등 보완사항 등

⁴⁸⁾ 친환경농업과 주요 업무 보고(2020)의 자료를 인용함.

<부표 2> 시행규칙 개정 내용

	하위법령	주요 내용
시행규칙	<신설>	
	①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 신청 제한 예외 범위	인증기관 평가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우수”, “양호”)을 받은 인증기관은 예외 적용
	② 재검사 세부절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의 재검사 신청 조건 등
	③ 압류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	인증(공시)사업자등 압류증 발급, 조치명령 공표 방식 등 세부사항
	④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신규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마련
	⑤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기준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⑥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금지 세부기준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금지, 다만 친환경농어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보증의 표시는 제외
	⑦ 재심사 요청에 따른 규정 보완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재심사 요청에 따른 심사권자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등) 보완
	<개정>	
	① 유기농함량 70%이상 인증제 도입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주 표시면 유기농 표시 가능, 다만 인증마크 사용 불가)
	②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시간 개선	신규·갱신 인증사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교육 이수시간 기준을 통일
	③ 인증기관 평가 후 등급 결정 결과 공표	(현행) “우수” 등급만 공표 → (개정) “우수”, “양호” 등급까지 공표
	④ 취급자의 자체 품질관리 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농관원 및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현황조사 등 사후조치
	⑤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기준 개선	제조일자별 모집단(로트 단위) 방식에서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기준을 보완

자료: 친환경농업과 주요 업무 보고(2020).

부록2

정책 시나리오별 2025년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

<부표 3> 정책 시나리오별 2025년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

단위: ha, %

구분		2025년 면적	전체면적	면적 비중		
베이스라인		2019년 면적 유지	81,717	1,582,788	5.2	
(1)추세연장	S1	전체 추세 반영	14,235	1,582,788	0.9	
	S2	유기 최근 증가 추세 반영	24,284	1,582,788	1.5	
공공 수요	(2)임산부	S1	시범사업 유지(8만 명 지원)	4,138	1,582,788	0.3
		S2	본사업 추진(36만 명 지원)	20,641	1,582,788	1.3
	(3)학교급식	S1	학교급식 비중 10% 확대	1,974	1,582,788	0.1
		S2	학교급식 비중 30% 확대	5,923	1,582,788	0.4
	(4)군대급식	S1	군대급식 비중 10% 확대	645	1,582,788	0.0
		S2	군대급식 비중 30% 확대	1,930	1,582,788	0.1
민간 수요	(5)코로나19 영향	S1	금년과 같은 팬데믹 수요증가 13.1%(KREI 조사치 반영)	10,146	1,582,788	0.6
		S2	금년보다 높은 팬데믹 수요증가 28.1%	21,763	1,582,788	1.4
	(6)가치소비 증가	S1	2019년 출하량의 5% 증가	3,872	1,582,788	0.2
		S2	2019년 출하량의 15% 증가	11,617	1,582,788	0.7
	(7)가격하락(유통효 율화 및 생산비 절감)	S1	2019년 출하량의 5% 증가	3,872	1,582,788	0.2
		S2	2019년 출하량의 15% 증가	11,617	1,582,788	0.7
	(8)가공소비 증가	S1	2019년 출하량의 5% 증가	3,872	1,582,788	0.2
		S2	2019년 출하량의 15% 증가	11,617	1,582,788	0.7
	전체	베이스라인+시나리오1		124,473	1,582,788	7.9
		베이스라인+시나리오2		191,110	1,582,788	12.1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 2. 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결과”.
- 김상효·이계임·홍연아·허성윤. 2018.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현·김창훈. 2020.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 김창길·김태영. 2003.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소득차이 비교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오세익·김태영. 2003.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김태영·신용광·허장. 2005.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 200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의 평가와 발전 방향.” 『친환경농업연구』 7(1): 33-55.
- 김창길, 이해진, 정학균, 2016, 주요국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연구자료 D4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정학균·장정경·권희민·문동현. 200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 및 환경기준 준수조건 지원정책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정학균·김정승·문동현. 2012.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정학균·임영아·이혜진·김용규. 20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방안』. 김태곤·정호근·채광석. 2009.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채광석·허주녕. 2010. 『공익형직불제 세부실시 프로그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19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보도일: 2019.8.27.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016. 『2016~2020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내부자료. 2020.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추진 방향.”
- 박동규·김창길·임송수·송미령·김배성·박경철. 2004. 『중장기 직접 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훈, 윤인선, 2005, 정책자료집-유기식품 인증제도 해외사례, 한국식품연구원.
- 서환석·황재현. 2019. “AHP와 IPA 분석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정책우선순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6(3): 444-469.
- 성재훈·김태훈·추성민. 2020.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2020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2019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 안병일, 2014, “EU 2014-2020 CAP 특징과 평가,” 세계농업, Vol 1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성범·김호. 2015. “친환경농산물 유통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42(1): 111-125.

영농자재신문 기사. 2017. 1. 11. “유기농업자재 부가세 영세율 드디어 적용.”

오호성·이해춘·나기수·오세철·류수영·김태영·김종규·권기창·양근일. 2000. 『저투입 환경농산물의 수요개발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진채·공기서·여순식·서명철. “유기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실험선택법을 적용하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8(3): 291-313.

윤석원·문태훈·이정희·이재학·조인성·한용희·황성혁·김병준. 1999.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유통·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규천 외 8인. 1998.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환경보전직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이현정·추성민·김기현·박은희. 2018. 『친환경농업 정책성과 평가와 패러다임 전환 연구』. 임영아·정학균·김부영·이현정. 2018. 『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 정책 도입 방안 연구』. 전태갑·송문갑·조창완·윤선·김덕현·서정원·방은재·임민철. 2000.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정상택·김햇살·노순웅·허재욱·유진현·이정로·권재현·이희재·차경준. 2020. 『2019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용역』.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정학균·김창길·김종진. 201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김창길·김종진. 2015. “친환경농업 환경보전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농촌경제』 38(3): 61-82.

정학균·성재훈·이현정. 2019. 『2019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실태와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유기가공식품기업 실태조사』.

허승욱·김호·이지은. 2011.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행태별 WTP 분석 및 친환경농업의 환경 개선효과 추정.” 『농업경영·정책연구』 38(1): 40-5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7 - Agriculture, Chapter I, Subchapter M: Organic Foods Production Act Provision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807/2014 of 11 March 2014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0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introducing transitional provisions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669 of 28 April 2016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808/2014 as regards the amendment and the content of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the publicity for these programmes, and the conversion rates to livestock units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808/2014 of 17 July 2014 laying

-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FARD).
- Council Regulation (EEC) No 2092/91 of 24 June 1991 on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ications referring thereto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stuffs.
-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092/91.
- European Commission, 2013,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Agricultural Policy Perspectives Brief, available a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farming/documents/agri-policy-perspectives-brief-05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19a. Brochure on the environmental benefits and simplification of the post-2020 CAP a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key_policies/documents/cap-post-2020-environ-benefits-simplification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19b. CAP specific objectives: Farmer position in value chains. available a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key_policies/documents/cap-specific-objectives-brief-3-farmer-position-in-value-chains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19c. CAP specific objectives: Structural change and generational renew, available a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key_policies/documents/cap-briefs-7-structural-change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20a. How the future CAP will contribute to the EU Green Deal, available at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910.
- European Commission. 2020b. Working with Parliament and Council to make the CAP reform fit for the European Green Deal, available a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key_policies/documents/factsheet-cap-reform-to-fit-european-green-deal_en.pdf.
-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2020, Organic Farming in Germany.
- Hanson, J.C., E. Lichtenberg, and S.E. Peters. 1997. "Organic versus Conventional Grain Production in the Mid-Atlantic: An Economic and Farming System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Alternative Agriculture*, Vol. 12, No. 1: 2–9.
- Lohr, Luanne and Lennart Salomonsson. 2000. "Conversion Subsidies for Organic Production: Results from Sweden and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Agricultural*

- Economics, 22: 133–146.
- Meredith, S., N. Lampkin, and O. Schmid, 2018, Organic Action Plans: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econd Edition, IFOAM EU, Brussels.
- Organic Produce Network, 2020, 2020 Q1 Organic Produce Performance with March update, Category Partners, available at <https://www.organicproducenetwork.com/amass/doc-get-pub/document/19/2020%20Q1%20Update%20v1%204-15-2020%20FINAL.pdf>
- O'Riordan, T. and D.Cobb. 2001.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Converting to Organic Agricultur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52, No.1:22–35.
-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 REGULATION (EU) No 130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
- Sandhu, H.S. ,S.D. Wratten. ,R. Cullen, andB. Case. 2007. "The future of farming: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in conventional and organic arable land. An experimental approach". *Ecological Economics* 64: 835–848.
- Sanders, J, D. Gambelli, J. Lernoud, S. Orsini, S. Padel, M. Stolze, H. Willer, and R. Zanolli. 2016. Distribution of the added value of the organic food chain. Braunschweig: Thünen institute of Farm Economics.
- Schader, C. 2009. "Cost-effectiveness of organic farming for achieving environmental policy targets in Switzerland." PhD thesis, Institute of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Rural Sciences, Aberystwyth, Aberystwyth University, Wales. FiBL.
- Schmid O., S. Padel, N. Lampkin, and S. Meredith, 2015, Organic Action Plans: A Guide for Stakeholders, IFOAM EU, Brussels. Available at: www.ifoam-eu.org/sites/default/files/ifoameu_organic_action_plans_guide_report_2015.pdf
- Śpiewak, R. 2016. 『Multifunctionality of organic farming. Polish case.』 .
- Stolze, M., J. Sanders, N. Kasperczyk, G. Madsen, and S. Meredith, 2016, CAP 2014–2020: Organic Farming and the Prospects for Stimulating Public Goods, IFOAM EU, Brussels.
- United States Code, Title 7 – Agriculture, Chapter 94: Organic Certification.
- USDA, 2015, USDA Organic Resource Guide 2015, Your Guide to Organic and organic Related USDA Programs.
- Verschurr, G.W. and E.A.P. van Well. 2001. Stimulating Organic Farming in the EU: With

Economic and Fiscal Instruments. Center for Agriculture and Environment. Netherlands.

Willer H., B. Schlatter, J. Trávníček, L. Kemper, and J. Lernoud. 2020.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20,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FiBL) and IFOAM – Organics International.

<기사>

노컷뉴스. 2016. 7. 17. “친환경농산물 비싼 진짜 이유..‘뒤죽박죽 유통구조’.”

<사이트>

국가인증농식품 블로그 “우리가족 건강식탁”. <<https://blog.naver.com/k-goodfood>>. 검색일: 2020. 1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 <<https://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검색일: 2020. 11. 7.

aT KAMIS. 친환경농산물 유통정보.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eco/summary.do>>. 검색일: 2020. 12. 1.

European Commission. Future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future-cap_en>. 검색일: 2020. 12. 1.

European Commission. Key Policy Objectives of the Future CAP.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future-cap/key-policy-objectives-future-cap_en#nineobjectives>. 검색일: 2020 .12. 1.

European Commission. Key Policy Objectives of the Future CAP. The Commission’s Proposals.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future-cap_en>. 검색일: 2020 .12. 1.